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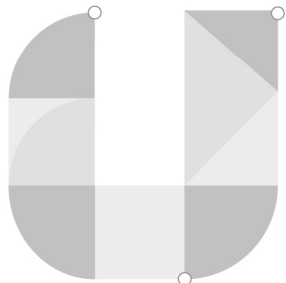


황수환 | 최규빈 | 강우철 | 김지현
문경연 | 이해정 | 이효정 | 홍석훈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연구책임자

황수환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규빈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우철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지현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문경연 (전북대학교 교수)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석훈 (창원대학교 교수)

연구지원

홍예선 (통일연구원 연구원)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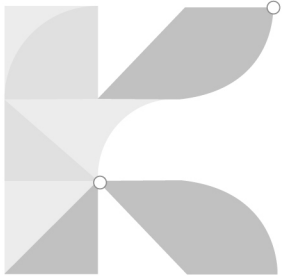
통일준비 및 북한사회개발 이슈와 연계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지표개발 및 역량 구축 KINU 연구총서 21-16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저자	황수환, 최규빈, 강우철, 김지현, 문경연, 이해정, 이효정, 홍석훈
발행인	고유환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장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주)(02-2275-6894)
인쇄처	(주)계문사(02-725-5216)
I S B N	979-11-6589-073-5 93340
가격	16,000원

© 통일연구원,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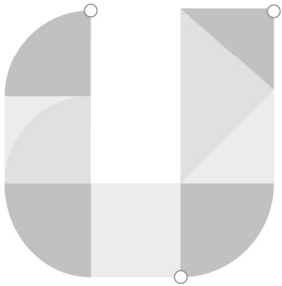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례

요약	15
I. 서론	2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2. 연구 내용과 구성	28
II. 유엔의 SDGs 논의 동향 및 북한의 연계 가능성	33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발전 논의	35
2. 북한의 유엔 SDGs에 대한 입장	41
3. 유엔 SDGs의 북한개발협력 연계	54
III.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및 분석	59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61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71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152
4.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233

IV. 북한의 SDGs 지표 현황과 북한 적용 가능 지표	
모색	275
1.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VNR 지표 현황	278
2.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제출 지표에 대한 분석	306
3.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미제출 지표 도출 가능성	318
4. 소결: 북한의 SDGs 지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함의	340
V. 결론	343
참고문헌	35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71

표 차례

〈표 I-1〉 연구분야 및 내용	30
〈표 II-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SDGs)	36
〈표 II-2〉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 관련 세부 목표	38
〈표 II-3〉 주요 공여국/공여기관의 취약국 정의	42
〈표 II-4〉 ‘유엔전략계획(2017-2021)’ 내용 요약	44
〈표 II-5〉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변화	45
〈표 II-6〉 유엔의 SDG와 북한의 NDG 간의 연계	50
〈표 III-1〉 SDG 2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63
〈표 III-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2 지표 수집 가능성	65
〈표 III-3〉 북한의 SDG 2 지표별 달성 현황	66
〈표 III-4〉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67
〈표 III-5〉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2번 목표 현황	69
〈표 III-6〉 SDG 8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73
〈표 III-7〉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	88
〈표 III-8〉 북한의 사실상 소규모 사유화 진전 수준	94
〈표 III-9〉 북한의 SDG 8 지표별 달성 현황	101
〈표 III-10〉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102
〈표 III-11〉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04
〈표 III-12〉 SDG 9 세부목표 및 지표	111
〈표 III-13〉 SDG 9 세부목표의 재구성	113

〈표 Ⅲ-14〉 SDG 9 사회기반시설 (9.1, 9.a, 9.c) 관련 지표 현황	119
〈표 Ⅲ-15〉 9.1.2 운송 수단별 여객 운송량(국제기구)	122
〈표 Ⅲ-16〉 9.1.2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국제기구)	122
〈표 Ⅲ-17〉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 (ODA와 기타 공적지원)	122
〈표 Ⅲ-18〉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국제기구)	122
〈표 Ⅲ-19〉 SDG 9 산업화 (9.2, 9.3) 관련 지표 현황	124
〈표 Ⅲ-20〉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25
〈표 Ⅲ-21〉 SDG 9 과학기술 (9.5, 9.b) 관련 지표 현황	125
〈표 Ⅲ-22〉 9.5 연구개발 관련 지표 현황	127
〈표 Ⅲ-23〉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27
〈표 Ⅲ-24〉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28
〈표 Ⅲ-25〉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138
〈표 Ⅲ-26〉 SDG 11 도시 인프라, 교통체계, 도시계획 (11.1, 11.2, 11.3) 관련 지표	139
〈표 Ⅲ-27〉 SDG 11 문화, 자연유산(11.4) 관련 지표	142
〈표 Ⅲ-28〉 SDG 11 환경보호(11.5, 11.6, 11.7) 관련 지표	143
〈표 Ⅲ-29〉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145
〈표 Ⅲ-30〉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145
〈표 Ⅲ-31〉 SDG 11 지표 현황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146

〈표 III-32〉 유엔의 SDG 7와 K-SDG 7의 세부목표	157
〈표 III-3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7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	158
〈표 III-34〉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RISE) 지표	162
〈표 III-35〉 남북한 발전전력량(단위: 억 kWh)과 1차 에너지 소비량 (단위: 천Toe)	164
〈표 III-36〉 북한의 SDG7 목표와 소관기관	167
〈표 III-37〉 북한의 SDG 7 지표와 수치	167
〈표 III-38〉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7의 지표 성과	170
〈표 III-39〉 북한의 에너지 지표 격차: VNR과 통계청	173
〈표 III-40〉 SDG 12 세부목표 및 지표	176
〈표 III-41〉 재자원화 품종 및 제품개발 현황	191
〈표 III-42〉 북한의 SDG 12 지표별 달성 현황	198
〈표 III-43〉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199
〈표 III-44〉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00
〈표 III-45〉 파리협정의 특징	206
〈표 III-46〉 유엔 SDG 13과 K-SDG 13의 세부목표	209
〈표 III-4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3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211
〈표 III-48〉 남북한 재해 사망자수 및 실종자수	215
〈표 III-49〉 북한의 SDG 13 목표와 소관기관	217

〈표 III-50〉 북한의 SDG 13 지표와 수치	218
〈표 III-51〉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13의 지표 성과	218
〈표 III-52〉 SDG 15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223
〈표 III-5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5 지표 수집 가능성	225
〈표 III-54〉 북한의 SDG 15 지표별 달성 현황	228
〈표 III-55〉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28
〈표 III-56〉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15번 목표 현황	232
〈표 III-57〉 SDG 16 개요	233
〈표 III-58〉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235
〈표 III-59〉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6 지표 수집 가능성	238
〈표 III-60〉 SDG 16 북한 가용지표	240
〈표 III-61〉 북한 16.2.1과 16.9.1의 지역별 현황	241
〈표 III-62〉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41
〈표 III-6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 현황	244
〈표 III-6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9.1 지표 현황	245
〈표 III-65〉 SDG 17 개요	255
〈표 III-66〉 SDG 17 세부목표와 지표	257
〈표 III-67〉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7 지표 수집 가능성	259
〈표 III-68〉 SDG 17 북한 가용지표	261
〈표 III-69〉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261

〈표 III-70〉 17.3.1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현황	264
〈표 III-71〉 17.9.1 기술협력 ODA 지역별 현황	266
〈표 III-72〉 17.19.1 통계역량강화로 사용된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지역별 현황	268
〈표 III-7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 현황	269
〈표 III-7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6.1 지표 현황	269
〈표 IV-1〉 SDGs 지표 분류	279
〈표 IV-2〉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79
〈표 IV-3〉 SDG 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83
〈표 IV-4〉 SDG 8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85
〈표 IV-5〉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88
〈표 IV-6〉 SDG 11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90
〈표 IV-7〉 SDG 1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93
〈표 IV-8〉 SDG 13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96
〈표 IV-9〉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297
〈표 IV-10〉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300
〈표 IV-11〉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	303
〈표 IV-12〉 북한 SDG 2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6
〈표 IV-13〉 북한 SDG 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8
〈표 IV-14〉 북한 SDG 8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09

〈표 IV-15〉 북한 SDG 9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0
〈표 IV-16〉 북한 SDG 11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1
〈표 IV-17〉 북한 SDG 13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4
〈표 IV-18〉 북한 SDG 15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5
〈표 IV-19〉 북한 SDG 16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7
〈표 IV-20〉 북한 SDG 1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317
〈표 IV-21〉 북한 SDG 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19
〈표 IV-22〉 북한 SDG 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0
〈표 IV-23〉 북한 SDG 8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1
〈표 IV-24〉 북한 SDG 9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3
〈표 IV-25〉 북한 SDG 11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5
〈표 IV-26〉 북한 SDG 1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28
〈표 IV-27〉 북한 SDG 13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30
〈표 IV-28〉 북한 SDG 15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31
〈표 IV-29〉 북한 SDG 16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32
〈표 IV-30〉 북한 SDG 1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337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추진체계도(2021~2023년)	29
〈그림 II-1〉 전 세계 취약국 분류(Fragile States Index Heat Map)	43
〈그림 II-2〉 북한의 SDGs 추진체계	49
〈그림 III-1〉 대륙별 영양결핍 유병률(PoU) 변화추이(2005-2019)와 2030년 전망치	61
〈그림 III-2〉 북한의 개인투자 비중	88
〈그림 III-3〉 북한 내 아동(5~17세) 노동 지표: SDG 8.7.1	90
〈그림 III-4〉 북한의 경제성장률	92
〈그림 III-5〉 북한의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국제비교	93
〈그림 III-6〉 북한의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DMC) 국제비교	96
〈그림 III-7〉 최근북한은행체계(2016년)	99
〈그림 III-8〉 북한 무역원조 공식 금액	100
〈그림 III-9〉 북한의 최근 SDG 8 현황 및 추이	101
〈그림 III-10〉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율(남북한 비교)	190
〈그림 III-11〉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장기계획(2014~2044년)	193
〈그림 III-12〉 남북한 물질 발자국 비교	194
〈그림 III-13〉 남북한 국내 자원 소비량 비교	194
〈그림 III-14〉 북한의 최근 SDG 12 현황 및 추이	198
〈그림 III-15〉 전 세계 연평균 기온 변화(1880~2020년)	204

〈그림 Ⅲ-16〉 SDG 목표별 2015년 이후 진행수준	220
〈그림 Ⅲ-17〉 북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265
〈그림 Ⅲ-18〉 기술협력 ODA 총지출	266
〈그림 Ⅲ-19〉 평균 과세, 최혜국대우	267
〈그림 Ⅲ-20〉 평균 과세, 일반대우	267

본 연구는 통일준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유엔의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이행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물론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유엔 차원에서도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수준에서 대안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연구는 총 3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에 해당하며, 북한의 SDGs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21년 7월 북한이 제시한 VNR(Voluntary National Review)과 기존 SDGs의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기존 연구자료와 성과물들을 정리, 분석하여 지표를 발굴하고자 했다. 북한 SDGs 연구와 관련하여 파편화된 지표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169개 세부지표별로 북한의 현황을 정리하여 유엔이 제시하지 못한 지표의 경우 대안적 지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유엔의 SDGs 관련 논의 동향과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엔 SDG 17개 목표 중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목표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빈곤,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 안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7: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이 대표적이다. 최근 북한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III장에서는 SDGs 지표 현황과 평가 및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SDGs 지표 이행에 관한 분야를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환경과 생태계 분야,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에서는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구축’, ‘SDG 17: SDG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V장에서는 북한의 SDGs 지표에 대해 VNR에 제출한 목표를 분석하고 제출하지 않는 목표에 대해서는 지표 도출 가능성을 탐색했다. IV장은 III장에서 논의한 SDG 2, 7, 8, 9, 11, 12, 13, 15, 16, 17번 목표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북한의 SDGs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했다. SDGs 10개 목표와 관련하여 그 지표들의 특징 분석과 함께 북한이 2021년 7월 공개한 VNR 상의 지표 현황을 매칭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특징을 분석했다. SDGs 10개 목표에서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의 신뢰성을 북한의 통계 역량, 북한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시한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선별화 작업을 시도했다.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표의 지속적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측정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북한이 VNR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에 대해서

해당지표의 특성을 분석하여 원조를 받는 개도국으로서 북한이 지표 측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했다. 또한 북한이 금번 VNR에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의 중요성, 북한의 역량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적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SDGs 10개 목표와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을 비교하면, 북한에 제시한 지표의 신뢰성과 정교화 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향후 SDGs를 활용한 남북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특히 북한이 VNR에서 제시한 지표보다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지표들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계 및 지표 측정 역량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겠다.

주제어: 비핵화, 평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협력외교

Introduction to North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Indicator Analysis for Unification Preparation

Hwang, Soohwan et al.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indicators that integrate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with cooperative activities with North Korea in relation to development, and of devising a North Korean implementation system, which can contribute to preparing for unification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search results of the first year of a three year project are provided in this study, the focus of which was to identify and collat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country-specific SDG indicators for North Korea. To do so, North Korea's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report, submitted in July 2021, and its existing SDG implementation status, were compared, and existing relevant research data and results were analyzed.

Components of North Korea's SDG implementation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for analysis: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prospe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and ecosystems, and peace and global partnership. In relation to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the analysis focused on “SDG 2: Zero hunger.” In terms of prospe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analysis focused on “SDG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SDG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and “SDG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For environment and ecosystems, the analysis focused on “SDG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SDG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DG 13: Climate action” and “SDG 15: Life on land.” In relation to peace and global partnership, the analysis focused on “SDG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and “SDG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After comparing the ten UN SDGs analyzed in this study with the indicators used by North Korea in its VNR report, it was found that the latter should be refined in order to improve their reli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liable indicators that can continuously integrate the UN SDGs with cooperative activities with North Korea aimed at development should be elaborated, and methods of strengthening inter-Korean cooperation on the basis of the SDGs should be sought.

Keywords: Unific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United Nations (UN), North Korea, Indicators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표개발을 위해 북한과 관련된 SDGs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한국의 SDGs의 지표개발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019년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의 보고서를 발표한 뒤 매년 SDGs 이행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¹⁾ 2021년 4월에는 통계청에서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을 발간하여 SDGs 지표 중 가용한 지표 136개를 공개하여 국내의 SDGs 이행현황을 점검했다.²⁾ 북한에서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와 SDGs 등 유엔에서 제시한 목표물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북한판 SDGs 이행계획서로 알려진 유엔-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SF, 이하 ‘유엔전략계획’)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수립했다. 북한은 2006년에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프로그램 보고서 2007-2009’를,³⁾ 2010년에 ‘유엔전략계획 2011-2015’를,⁴⁾ 2016년에 ‘유엔전략계획 2017-2021’⁵⁾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그리고 2021년 7월

1) 박영실·이영미·김인겸,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2)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대전: 통계청, 2021), pp. 8~15.

3) UNDP, “UNDP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53835136D4F411494925726A00627717-Full_Report.pdf> (Accessed October 4, 2021).

4) United Nations DPR Korea,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https://dprkorea.un.org/en/10157-un-strategic-framework-2011-2015>> (Accessed October 4, 2021).

5) United Nations DPR Korea,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Accessed October 4, 2021).

에는 북한이 SDGs의 이행사항과 방향을 작성한 자발적 국별 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를 발표했다.⁶⁾ 북한은 VNR을 발표하면서 과거 공개하지 않았던 SDGs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VNR 발표를 통해 SDGs의 전반적인 이행방향과 운영구상을 제시하여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임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VNR에서 SDGs 달성과 관련하여 17개 목표와 95개의 세부목표, 132개의 이행지표를 공개하여 그동안 비공개된 여러 통계자료를 공개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다수 존재한다.⁷⁾ 북한이 VNR에서 공개한 GDP 경제성장률 수치에 대한 신뢰성이 낮고 2020년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해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북한의 SDGs 이행현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SDGs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은 2015년 종료한 MDGs를 대신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분야를 망라하는 SDGs를 제시했다.⁸⁾ SDGs는 MDGs가 추진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 등 8개 의제를 연장하고 확장하여 평화, 환경, 인권 등 17개 분야에서 포괄적인 인류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했다. SDGs 실행을 위해

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14, 2021).

7) 정유석, “VNR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SDGs 현황,” 『Weekly IBL 경제브리프』, 781호 (2021), p. 3; 양운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No. 2021-18 (2021), p. 10.

8) UN SDGs, <<https://sdgs.un.org/es/goals>> (Accessed September 23, 2021).

유엔은 인도주의 및 개발지원 기관이 분절화된 업무방식을 지양하고 하나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⁹⁾ 중요한 점은 SDGs의 3차원인 경제, 사회, 환경(Biosphere)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이들 간 원활히 통합될 때 SDGs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경제, 사회, 환경관련 목표들은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상호 목표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복합적인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SDGs는 유엔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글로벌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경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 정의, 제도 등 광범위한 발전 목표를 설정하면서 전 분야에서 역량 개발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북한이 SDGs 이행현황과 지표를 공개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도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엔 SDG 17개 목표 중 정치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 교육, 성평등, 평화·정의·제도 등의 목표보다는 국제사회와의 실용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빈곤,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7: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이 대표적이다. 빈곤, 환경, 기후변화, 식수 등의 이슈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벗어나 북한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이슈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공동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9) 김수진, “인도적 지원-개발-평화연계(triple nexus) 논의 현황 및 한국 ODA 시사점,” 『개발과 이슈』, 제44호 (2018), pp. 43~45.

정부는 코로나19 등 초국적으로 발생한 전염병의 확산을 계기로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의 북한 참여를 제안하여 SDGs의 이행을 통해 남북협력을 형성하는 한반도 생명공동체 건설을 제시했다.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의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 간 협력의 공감대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으로 SDGs 이행에 대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3.1절 경축사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 등 북한과의 방역보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했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도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남북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차원의 '생명공동체' 논의를 확장시켜 진정한 평화공동체를 형성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남북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초국적 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생명·평화공동체의 형성은 인류공동의 협력과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간에는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멈추면서 보건과 방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한반도 생명공동체 형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북한은 2020년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어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발표한 VNR에서도 대북제재 장기화,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난이 심각하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85만 8000톤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가 지속될 경우 8월

부터 10월까지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¹⁰⁾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남북의 경제 협력은 보편적 인권 가치와 적극적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사업을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단순한 긴급구호 형태의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실질적으로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농업, 재생에너지, 보건의료사업 등의 구체적인 분야에서 북한과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¹¹⁾ 대북 인도적 지원도 결국 북한 주민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기본적 인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간 공통점을 연계하여 이를 활용한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¹²⁾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북한개발협력과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SDGs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DGs의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에 대한 현황과 통계지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SDGs 이행을 통한 협력과 사회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엔의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북한과 관련된 통계 현황을 파악하고 그 통계지표의 평가를 진행한다. 물론 17개 목

10) “세계식량기구 “북한, 식량 86만 t 부족…8~10월에 어려움 예상”, 『연합뉴스』, 2021.6.15., (검색일: 2021.10.1.).

11)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19.

12) 위의 글,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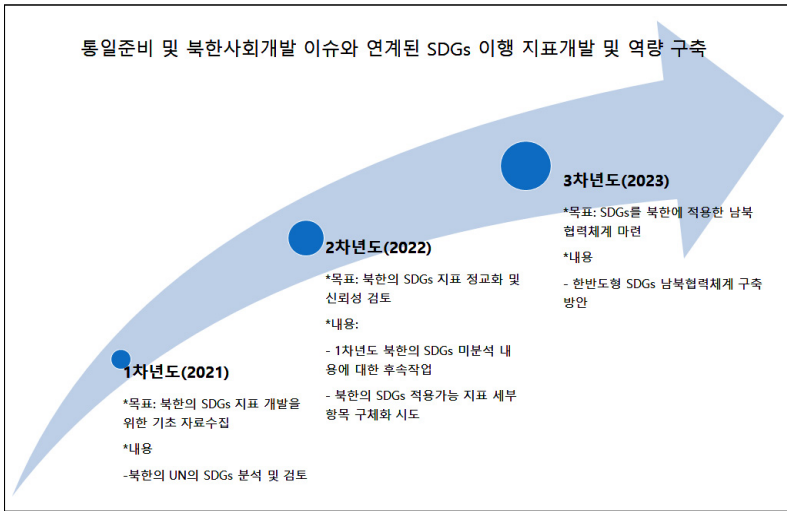
표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유엔 차원에서도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를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수준에서 대안적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각 연구진, 연구소, 학계에서 SDGs를 북한에 적용하여 관련 목표별 현황과 지표 현황을 분석하는 노력을 전개하여 왔으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북한의 현황을 정리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전문연구자, 연구소, 학회 등이 실시한 북한 SDGs 연구와 관련하여 파편화된 지표 자료와 169개 세부지표별 북한의 현황을 정리하여 유엔이 제시하지 못한 지표의 경우 대안적 지표를 발굴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한 지표를 개발하고 향후 SDGs를 활용한 남북협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북한 SDGs 관련 기초자료들이 향후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연구 내용과 구성

본 연구는 ‘통일준비 및 북한사회개발 이슈와 연계된 SDGs 이행 지표개발 및 역량 구축’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되는 3년차 연구 중 1년차 연구에 해당한다. 2차년도에는 SDGs를 북한에 적용하여 남북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SDGs 지표를 보다 정교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이번 1차년도에서 분석하지 못한 SDG 7개 목표에 대한 추가 정리를 진행하고 북한의 SDGs에 적용가능한 세부 항목들을 구체화하여 정리할 예정

이다. 3차년도에는 1~2차년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SDGs 연계협력 사업체계를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위 한반도형 SDGs 남북협력체계를 통해 북한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한반도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림 1-1〉 연구추진체계도(2021~2023년)



출처: 저자 작성.

이번 1년차 연구에서는 북한의 SDGs 지표개발의 기초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가능성을 토대로 향후 북한과의 개발협력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살펴본다. 유엔의 SDGs 담론 형성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북한의 유엔의 SDGs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우선, 1차년도 연구에서 SDGs 지표 이행에 관한 연구 분야를 사회, 경제, 환경, 제도 분야 등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환경과 생태계 분야,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재구분했다.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에서는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번영과 경제 발전 분야에서는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에서는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구축’, ‘SDG 17: SDG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 3장에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이상의 SDGs의 17개 목표 중 선정된 10개 목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한다. SDGs의 10개 목표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북한개발협력과 접목된 SDGs를 추진할 때 중요하다고 판단된 목표들로 선정했다. 나머지 SDGs 7개 목표는 2차년도에 분석할 예정이다.

〈표 1-1〉 연구분야 및 내용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주요 내용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형성
환경과 생태계 분야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SDG 13: 기후변화 대응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구축
	SDG 17: SDGs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출처: 저자 작성.

선정된 목표들의 분석 작업은 기존 연구자료와 유엔 자료 및 국제 개발협력, SDGs, 평화, 발전의 상호관련성을 다룬 보고서 등을 포함하는 각종 문헌분석을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주제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최신 북한 SDGs 자료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구에 적용하고자 시도했다. 특히 2021년 7월 북한이 제시한 VNR과 기존 SDGs의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SDGs 목표별로 이행방안과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차례 공동연구자(co-work)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진 간 연구과정을 공유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분석의 질적 심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밝힌다.

II. 유엔의 SDGs 논의 동향 및 북한의 연계 가능성



1.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발전 논의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개발이론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주요국가에는 원조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행정체계가 존재한다.¹³⁾ 대북지원을 비롯한 한국의 개발지원 역시 오랫동안 수원국(recipient country) 경험을 갖고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국제사회 역시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상호 연계성 문제를 고민해 왔다. 인도적 지원이 저개발 국가의 근본적 안전, 존엄성과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원국의 취약성과 니즈(Need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가 대두되었다. 원조 주체인 공여국(donor country), 국제기구, NGOs 등은 인도적 지원과 개발지원의 틀에서 각각 벗어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책임 프레임워크(Accountability Framework)’를 이행하는 다년간 사업으로 공여·수원대상의 평등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¹⁴⁾

유엔은 2015년 종료한 MDGs를 승계하여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총 망라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종식을 위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SDGs를 제시하였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SDGs의 특징은 MDSs에서 다루지 않았던 평화, 인권, 민주주의, 효과적 제도 등을 강조하는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SDGs가 본격화된 것은 2015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제70회 유엔 개발 정상회의 이후이다. SDGs는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13) 박형중 외,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8.

14) 김수진,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triple nexus) 논의 현황 및 한국 ODA 시사점,” p. 4.

“우리 세계의 전환: 2030까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SDGs로 채택되었다(〈표 II-1〉 참조).¹⁵⁾

〈표 II-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SDGs)

No.	목표 내용
1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3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에 복지 증진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6	식수와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리 능력 확보
7	적당한 가격의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강화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양질의 일자리 제공
9	회복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10	국내적 또는 국가 간 불평등 경감
11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양식 보장
13	기후변화와 대응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고와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의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지파괴 방지 및 복원,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
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출처: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or Sustainable Development”, p. 14, 재인용: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빅서스』, pp. 68~69.

15) 위의 글, pp. 1~52.

유엔은 MDGs에서 17개의 목표를 갖는 SDGs로 전환하였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양질의 교육 보장, 보건과 복지, 양성 도모, 물과 위생, 클린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대응, 해양 생태계 보존, 육상 생태계 보전은 MDGs를 확대한 개념이며, 여기에 일자리, 경제성장, 산업 및 혁신, 불평등 완화, 평화·정의·제도 발전 등은 SDGs에서 추가되었다.¹⁶⁾ SDGs가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항목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목표 1~5는 사회영역의 목표들로 빈곤종식, 기아 종식, 보건과 복지, 양질 교육, 양성평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목표 6~10은 경제 분야의 목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11~15는 환경과 관련한 사안들이며, 목표 16~17은 SDGs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구축과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내용을 규정하였다.¹⁷⁾ 이러한 내용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도 구축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공여국의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SDGs 체제는 국내의 민간재원, 국제무역 등 재정적 수단과 공공 재원을 포함하고 비재정적 수단인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여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활용하여 각각의 원조기관과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핵심 사업을 연계하여 수여국의 기아와 빈곤퇴치와 물과 위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글로벌 포용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목표 16’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사법 접근성 확보,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

16)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p. 69.

17) 위의 책, p. 69.

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 구축”은 ‘평화로운 사회’ 개념을 포함하고 제시하는 것으로 국제개발협력의 평화와 직접적 연계성을 부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표 II-2〉 ‘목표 16: 평화로운 사회’ 관련 세부 목표

<p>Goal 16.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p> <p>16.1 Significantly reduce all forms of violence and related death rates everywhere</p> <p>16.2 End abuse,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nd torture of children</p> <p>16.3 Promote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nd ensure equal access to justice for all</p> <p>16.4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illicit financial and arms flows, strengthen the recovery and return of stolen assets and combat all forms of organized crime</p> <p>16.5 Substantially reduce corruption and bribery in all their forms</p> <p>16.6 Develop effect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institutions at all levels</p> <p>16.7 Ensure responsive, inclusive, participatory and representative decision-making at all levels</p> <p>16.8 Broaden and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e institutions of global governance</p> <p>16.9 By 2030, provide legal identity for all, including birth registration</p> <p>16.10 Ensure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agreements</p> <p>16.a Strengthen relevant n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building capacity at all levels, in particular in developing countries, to prevent violence and combat terrorism and crime</p> <p>16.b Promote and enforce non-discriminatory laws and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p>

출처: UN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on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2030agenda>> (검색일: 2021.10.4.) 참조.

결과적으로 이러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은 유엔 및 경제협력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등 다양한 국제기구의 정책기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성장 혹은 분배라는 이분법적 접근법을 벗어나 성장과 형평성(equ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을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해 채택하고 있으며, ILO의 경우 임금주도 성장이론(Wage-led Growth Theory)을 제시하며 포용적 성장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¹⁸⁾ 쿠즈네츠 모델 및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한 빈곤종식 정책에 있어 불평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지만, 낙수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의 혜택이 하층계급으로 점차 전달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트리클 업(Trickle up) 접근법의 경우 빈곤종식과 불평등 해소가 소득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⁹⁾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번영의 필수요소로 지속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서 청년고용, 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통한 인간 중심의 경제 구축을 강조한다. 동시에 사회, 경제발전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의해 좌우됨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의 이행을 위해서 해양, 산림 등의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태계 보호, 물 부족 및 수질오염 방지, 사막화 방지 등과 같은 자연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²⁰⁾

18)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p. 184; 허장, “OECD: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 어떻게?”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4 (2016), pp. 68~70.

19) 송철중 외, 위의 책, p. 184; Era Dabla-Norris,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Evridiki Tsounta,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Discussion Notes*, No. 15/13 (June 2015), p. 4.

20)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서울: 도서출판 오름, 2020), pp. 42~43.

이처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새로운 의제 채택을 통해서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의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재확인하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은 경제·사회·환경의 서로 다른 개념이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가능하며 상호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때 지속가능발전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보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multi-dimension) 관점을 전제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내포하며 이는 현세대-후세대 간 필요자원의 지속적인 소비와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¹⁾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도 국제개발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SDGs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0년 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고 규정했다.²²⁾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규정했다.²³⁾ 이러한 한국의 국

21) 위의 책, pp. 43~44.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02호), <<https://www.law.go.kr/LSW/l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AD%EC%A0%9C%EA%B0%9C%EB%B0%9C%ED%98%91%EB%A0%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검색일: 2021.10.4.).

23) 위의 자료.

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SDG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북한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유엔의 공동 목표 실현을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제는 향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다.

2. 북한의 유엔 SDGs에 대한 입장

대북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을 취약국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와 지속적인 대북개발협력을 도모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북한개발협력은 취약국 지원 전략을 기반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 북한개발협력 접근 방식에 있어 북한의 내부 사회경제 특수성과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를 감안하여 대북 개발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⁴⁾ 또한, 특정 취약국에 대한 개발수요에 기반을 둔 지원 전략은 2005년 OECD 개발원조 위원회(DAC)의 파리 원조효과성 5대 원칙에서 주인의식(ownership)과 “원조 일치(aid alignment)”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²⁵⁾

24) 손희상·김선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59집 1호 (2019), pp. 128~129.

25)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p. 63.

〈표 II-3〉 주요 공여국/공여기관의 취약국 정의

공여자	취약국 정의
OECD	국가 내의 사회아 상호 건설적인 관계 형성이 부족하면, 기초적인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국가
World Bank	제도적 역량과 거버넌스가 부족하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팽배한 국가 (사회 내 존재하는 그룹들 간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CPIA 기반 취약국 판단)
USAID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실패하고 있는 실패한,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 국가
DFID	정부가 빈곤층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역할을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제공할 수 없는 국가
AusAD	정부가 효과적 통치역량을 보유하지 않아 지역사회와 내실있는 관계형성이 부족한 국가
ADB	거버넌스가 약하며 공공행정, 법규가 효과적 작용을 하지 않고 불안정성이 팽배한 국가
KOICA	사회·경제·정치·환경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량 부족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도전에 직면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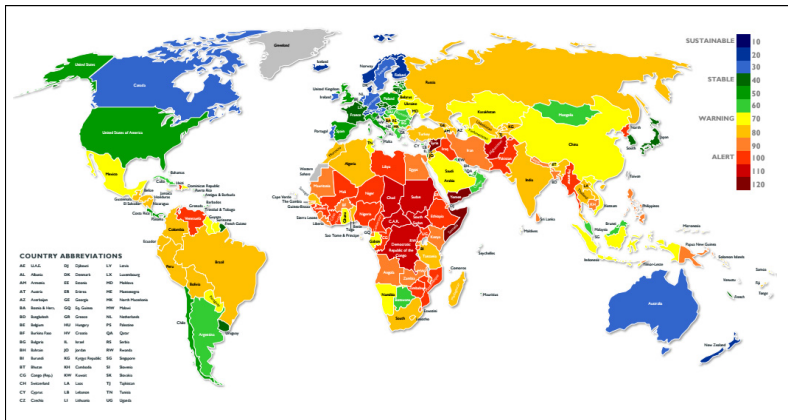
출처: 손혁상·김선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133.

우리 정부도 취약국에 대한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취약국 지원 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협력을 추진 중이다.²⁶⁾ 취약국은 취약성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각 사례에 따른 중점 지원 분야 및 대상을 제안한다: 1) 분쟁/폭력: 초기 복구 지원, 사회 재통합 역량 및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소외 취약국 여성 및 아동 등을 중점 지원 대상; 2) 재난: 긴급구호 후 발전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재난 영향국, 군소 도서국, 지역체 주민을 중점 지원 대상; 3) 제도 미비: 포용적 정치 거버넌스 구축, 부패 척결, 재정 및 행정 기반 지원에 초점·경제 개방 및 정치체제 전환국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26) 기획재정부·외교부, “취약국 지원 전략,” (제2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안건, 제 29-3호, 2017.6.30.).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북한을 취약국으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우려 대상으로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 가치의 기준에서 북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경제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북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요구와 수요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을 단지 국제적인 취약국가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출발하여 북한 사회의 복지 증진과 경제발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대북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고려하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1〉 전 세계 취약국 분류(Fragile States Index Heat Map)



출처: The Fund for Peace, “Fragile States Index,” <<https://fragilestatesindex.org/analitics/fsi-heat-map/>> (Accessed May 10, 2021).

유엔 기구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맥락에서 2006년에 ‘유엔-북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이하 유엔 전략계획) 2007-2010’을 수립했다. 2010년에는 기존의 전략계획을 대체하는 ‘유엔 전략계획 2011-2015’를 수립했고, 2016년에는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했다. ‘유엔 전략계획 2017-2021’에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적 기준에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와 내용을 북한에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대북 제재 하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의 SDGs 지표들을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14개 유엔기구와 북한의 외무성 국가조정위원회는 2016년에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4대 우선전략’으로 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복원력(resilienc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데이터의 개발 관리를 설정하고 각각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채택하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표 II-4〉 참조).

〈표 II-4〉 ‘유엔전략계획(2017-2021)’ 내용 요약

우선순위	SDGs	선택적 목표
1. 식량 및 영양안보	2, 9	1-1.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생산성 및 농업, 원예, 어업, 축산업 공정과정 강화 1-2. 취약계층의 생계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 향상 1-3. 노인, 5세 미만 아동, 여성뿐만 아니라 여타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개선
2. 사회개발 서비스	3, 4, 6	2-1. 지속적이며 동등한 보편적 보건서비스 보급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2-2. 전염성/비전염성 질병, 모성 및 아동기 질환 치료를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2-3. 보건 관련 위기대응능력 강화 2-4. 가정, 교육기관, 보건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동등한 식수 위생 보급 2-5.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 및 기술/직업교육과 훈련 수준 개선
3.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7, 11, 12, 13, 15	3-1. 재난과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사회(특히 취약 계층 집단)의 대응능력 향상 3-2.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지역사회(특히 취약계층 집단)의 접근성 향상 3-3. 환경 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재난위기관리에 대한 정부기관의 통합적이고 공정한 접근법 적용

우선순위	SDGs	선택적 목표
4. 데이터 및 개발관리		4-1. 프로그램 개발과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사용과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 제고 4-2. 국제기술규범과 적용 능력 향상 4-3. 국제협약 및 국제 매커니즘에 대한 북한의 준수 강화 및 증거기반보고 체계 강화

출처: 손혁상·김선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p. 151; UN and DPRK, “Towards sustainable and resilient human development: The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7), p. 12의 내용 요약.

북한과 유엔의 합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였고, 2005년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해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유엔은 일방적 원조제공이 아닌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²⁷⁾ 북한 역시 시장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엔을 비롯한 해외 민간단체 등의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II-5〉 유엔전략계획의 주요 내용 변화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
중점 분야	1. 경제관리: 해외직접투자, 무역, 경제발전 제고 2. 지속가능한 에너지 3. 환경관리 4. 식량가용성 향상 5. 기본적 사회서비스 (사회개발)	1. 사회개발 2.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 3. 영양 4. 기후변화 및 환경	1. 식량 및 영양안보 2. 사회개발 서비스 3.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4. 데이터와 개발관리
이행·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이행측면에서 국가역량, 파트너십,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어린이와 여성 강조(모니터링 및 평가 언급 불포함)	• ‘No Access, No Assistance’의 통상적 유엔 모니터링 원칙 확인	• ‘사업 관리 및 평가 원칙’으로 아래 요소를 제시 • 지속가능발전목표 적용 • 인권중심접근법 채택 • 성평등과 여성권리 강화 지원 • 환경 지속가능성 추구 • 제도의 지속가능성 추구 • 성과기반 관리적용

27) 정구연, “SDG와 대북 개발협력 전망.”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2021.7.1.).

	유엔전략계획 2007-2010	유엔전략계획 2011-2015	유엔전략계획 2017-2021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역량, 재정관리, 무역 및 투자, 제도 및 기술 역량 강화를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지원보다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적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변경 인도적 지원에 이어 개발 지원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사업명, 필요 예산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리스트 미제시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 지원에 초점 단기적 지원보다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지식협력 강조

출처: UNDP, “UNDP Country Programme document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07–2009),” <https://reliefweb.int/sites/reliefweb.int/files/resources/53835136D4F411494925726A00627717-Full_Report.pdf> (Accessed October 4, 2021); United Nations DPR Korea,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https://dprkorea.un.org/en/10157-un-strategic-framework-2011-2015>> (Accessed October 4, 2021); United Nations DPR Korea,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7–2021,” <<https://dprkorea.un.org/en/10156-un-strategic-framework-2017-2021>> (Accessed October 4, 2021)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유엔전략계획 변화 과정을 분석해 보면 북한은 내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여전히 중요한 지원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2007년 이래로 인도적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북한은 2005년 국제사회에 개발협력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제시한 ‘유엔전략계획 2007-2010’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 및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 경제개발 관리 방안을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무역, 해외투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²⁸⁾ 이후 ‘유엔전략계획 2011-2015’에서는 보건 및 교육지원 사업을 최우선 분야 사업으로 상정했고, 그 다음 우선 분야로는 ‘지식 및 개발관리를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협력을 강조했다.²⁹⁾

28) 임원혁 외,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2019), p. 253.

29) 위의 글, p. 253.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SDGs의 목표를 적극 반영한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이 특징인데, ‘유엔전략계획 2007-2010’과 ‘유엔전략계획 2011-2015’가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제시하고 필요한 지표와 검증수단, 재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우선순위 내 해당 사업의 방향성과 이행방안, 모니터링과 평가 방안 등 거시적인 방향성과 추진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³⁰⁾ 특히,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과 유엔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서 유엔 기구와 국제사회가 가진 기술과 지식, 경험 공유 등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을 통한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 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전략계획과의 차별성이 두드러진다.³¹⁾

아울러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기존의 두 전략계획과 달리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과 기술표준, 관행, 국제협력의 준수를 위한 협력과 이를 위한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러한 규범을 습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북한이 노력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은 전략문서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다 하겠다.³²⁾

또한, 2016년 4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서명식’ 참석차 뉴욕 유엔 본부를 방문한 리수용 외무상은 유엔 지속개발목표 달성 고위급 토의 연설을 통해 SDGs 참여를 선언한 이후 각급 회의에서 목표 달성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 당국은 2019년 9월, 유엔 보편적 의료 보장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대표 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보건사업에 큰 힘을 넣어 유엔지속개발보건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2019년 9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

30) United Nations DPR Korea, “DPRK Needs and Priorities 2018,” <<https://dprkorea.un.org/en/10158-dprk-needs-and-priorities-2018>> (Accessed October 4, 2021).

31) *Ibid.*

32) 문경연·정구연, 『SDGs와 한반도 평화』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p. 14.

는 “자립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³³⁾

특히, 지난 2021년 7월, 북한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 고위급 정치포럼의 VNR보고서를 통해 ‘2030 아젠다(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³⁴⁾ 북한은 에너지, 농업, 식수 위생, 환경 등 목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엔이 제시한 글로벌 지표의 53%를 수용했다고 발표한 것이다.³⁵⁾ 이번 북한의 VNR은 2020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한을 1년 연장하여 화상 회의를 통해 66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SDGs 초기부터 이행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으며, 관련 TF를 구성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VNR 작성을 위해 상당한 사전 준비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2018년 8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획팀(National Task For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발족하고 사회인구, 과학 및 교육, 공중보건, 식수위생, 경제 및 에너지, 환경 및 생태계, 재난 및 위기관리 등 6개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TC)를 구성하여 SDGs 국내 이행체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해온 정보로 인해 체계적인 대북 개발협력 사업 현황 파악과 지원 계획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VNR 발표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분야의 통계와 SDGs 추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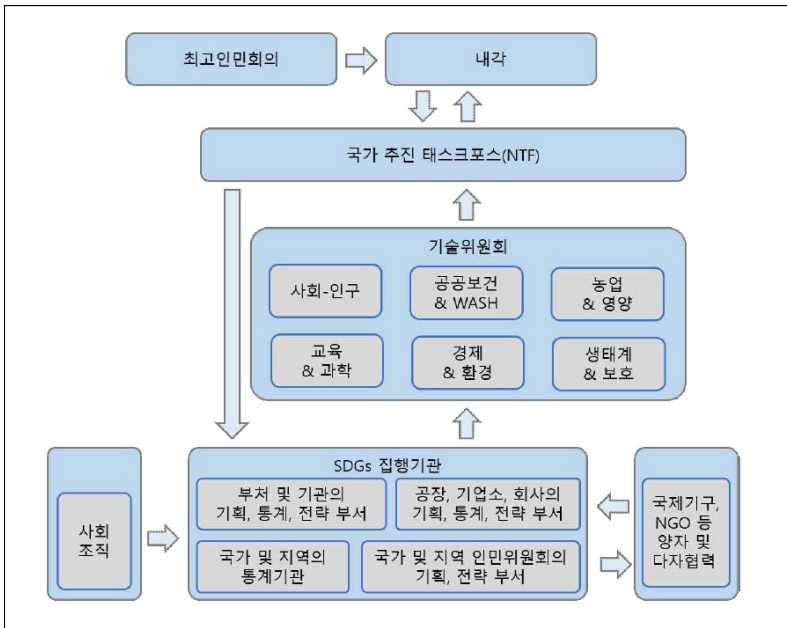
33)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제1호 (2020), p. 98.

34) 북한 당국이 ‘2030지속가능발전아젠다’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테스크포스(TF) 의장인 박정근 부총리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3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8.

계를(〈그림 II-2〉 참조)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SDGs 이행 지표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북한의 SDGs 이행에 관한 목표와 우선순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표한 공식적 문건으로 북한 경제, 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당국의 경제 정책의 방향과 각 부문별 국가발전계획의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II-2〉 북한의 SDGs 추진체계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2를 재구성.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강국 건설을 위한 경제발전5개년 전략(2016-2020) 달성을 위해 유엔 SDGs를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와 연계시켜 ‘우리식 SDGs’를 표방하고 통합시켰다는 점은 SDGs를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이다(〈표 II-6〉 참조).³⁶⁾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0)을 발표했는데, 이 시기는 유엔이 추진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시작되는 시점과 동일하며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에 부분적으로 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들을 포함시키고 있다.³⁷⁾ 또한, 지난 2021년 초 8차 당대회 이후 제시된 북한의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통합하여 연계한 점에서 북한의 SDGs 이해와 이행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다.

〈표 II-6〉 유엔의 SDG와 북한의 NDG 간의 연계

지속가능 개발목표	UN(유엔)	DPRK(북한)
NDG 1: 국민의 정부강화 및 국민우선주의 발휘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지능인으로써 모두 준비
9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촉진	국가 경제를 주체사상과 현대 인프라로 근대화시킴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활성화, 모두를 위한 정의의 접근권 제공, 책임 있고 포괄적인 사회 체제 구축	사회당 체제 통합
NDG 2: 과학 및 교육에 기반한 모든 부문 개발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모두를 지능적 노동자로 준비
5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힘을 실어줌.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성평등과 권리를 강화
9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국가 경제를 주체사상과 현대 인프라로 근대화시킴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14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해서 사용	연안 및 해양 자원 지속적 보존 및 사용
1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활성화	우호 파트너십 개발

36) 최규빈·홍계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KINU Online Series CO 21-22, 2021, 7, 20.), p. 3,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a0774f72-dded-4c48-aaf9-451f3fdbc200>> (검색일: 2021, 10, 1.).

37)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66.

지속가능 개발목표	UN(유엔)	DPRK(북한)
NDG 3: 자체 자원 및 지식 기반 경제 구축		
1	모든 형태의 가난 종결	민생개선
2	굶주림 해소, 식량안보 달성 및 영양 개선,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및 자금자족 실현
3	모든 연령대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두의 복지를 증진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모두를 지능적 노동자로 준비
6	모두에게 물 및 위생 시설의 가용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물 및 위생 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7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지속가능한 최신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8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촉진	자립형 지식기반경제 구축 및 고용지원
9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국가 경제를 주체사상과 현대 인프라로 근대화시킴
10	국가 간 불평등 감소	국가 및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
11	도시와 거주지의 안전,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보장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13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기후변화와 그 영향 감소에 대응
14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해서 사용	연안 및 해양 자원 지속적 보존 및 사용
15	육상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산림 지속적 관리, 토지 황폐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산림의 지속적 관리, 토지 비옥성 복원, 생물다양성 유지

지속가능 개발목표	UN(유엔)	DPRK(북한)
NDG 4: 완전히 발달된 사회주의 문화 구축		
1	모든 형태의 가난 종결	민생개선
3	모든 연령대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두의 복지를 증진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모두를 지능적 노동자로 준비
9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및 혁신 촉진	국가 경제를 주체사상과 현대 인프라로 근대화시킴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	기후변화와 그 영향 감소에 대응
14	해양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해서 사용	연안 및 해양 자원 지속적 보존 및 사용
모든 NDG와 연계된 공통 목표		
4	포괄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	모두를 지능적 노동자로 준비
5	성평등을 실현하고 모든 여성과 소녀에게 힘을 실어줌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성 평등과 권리를 강화
9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국가 경제를 주체사상과 현대 인프라로 근대화시킴
1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활성화	우호 파트너십 개발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2를 재구성.

북한이 VNR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힌 주요 사업은 대부분 통계와 관련한 내용으로 국제기준의 통계원칙 설명, SDGs 통계시스템 교육, 북한의 통계시스템 점검, 데이터 통계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VNR에는 인민생활개선, 식량, 성평등, 수자원, 위생 관리, 에너지, 기후변화 등에 관한 내용과 대북제재 및 봉쇄 조치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VNR을 통해 북한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첫째, 과학과 교육 분야 우선 기조 유지 및 자립형 국가경제의 기초 마련, 둘째, 에너지와 농업, 물과 생활 위생, 환경 분야에서의 노력 경주, 셋째, 인민중심 정책을 통한 부유한 삶 제공 등을 들 수 있으며, ‘2030년 의제(agenda)’를 인지하고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가운데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유엔의 SDG에 대한 이행을 준비하면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와 관계를 맺고 북한의 내부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북한이 유엔의 SDGs를 국내 경제발전 전략과도 연계시키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발전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북한이 ‘수령체제’ 중심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고수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고 정당화하는 방식에 유엔의 SDGs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적극적 이행의 한계를 지적하는 입장도 견지해야 할 것이다.³⁸⁾

38)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p. 93~119.

3. 유엔 SDGs의 북한개발협력 연계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개발협력 방안을 SDGs 접근법을 활용하여 각 목표들과 연계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유엔의 SDGs는 취약국의 빈곤 문제와 경제개발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접근법을 활용한 정치적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Index of State Weakness (SW), Peace and Conflict Instability(PC), Failed State Index(FSI) 등 대부분의 평가척도에서 북한은 취약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 인권, 안보 등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에서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개입이 절실한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SDGs 이행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가로서 가지는 취약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시설 및 인프라를 구비하는 방식을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은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한다. 실행 주체가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 시민단체(NGOs) 등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된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난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대북개발협력의 비국가행위자의 역할은 보다 중립적이며 비정치적 입장에서 북한 당국과의 파트너십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북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기구와 민간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해왔고 비정치적인 보건과 위생, 빈곤퇴치, 교육 등의 비정치적인 사회개발 분야에 집중해 왔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개발협력과 국제사회의 SDGs 연계에 있어, 이러한 목표들을 실행하는 정책적 추진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발생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서 유엔의 SDGs 실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으며, 평화에 대한 개념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추진 문제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SDG 16 및 17의 글로벌 기준을 북한이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당국은 이번 VNR 보고서에서도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방해하는 심각한 장애가 지속적인 제재와 봉쇄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유엔의 SDGs와 북한개발협력 연계 추진에도 정치적 문제가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3중고(대북제재 장기화, 코로나19,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GDP·식량사정 등의 구체적인 통계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SDGs 이행을 통한 개발협력 사업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인 대북제재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 이후의 북한의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에너지·식량·식수위생·기후 등의 비정치적인 빈곤퇴치와 민생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지원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즉, 저개발 국가인 북한은 체제 특성상 내부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평가받아 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개발협력 지원은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대북개발협력 사업은 민생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대규모 경제기반 시설이나 제조업 같은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는 북한 민생과 관련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과 빈곤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위한 식량안보 문제, 보건·의료, 주거 환경,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북한은 빈곤친화적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대규모 경제 기반 시설이나 제조업 같은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보다는 식량, 농업,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의 인간다운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빈곤친화성장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시 한국은 다른 공여국과는 달리 추가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즉 대북 통일정책과 이와 같은 빈곤친화적 성장의 정합성에 대해서 고민해야하며, 그 궁극적 지향점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위와 같은 빈곤친화적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구축’의 과제와 맞닿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궁극적으로 북한 내 빈곤감소형 경제 질서로의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 변화 동력에 주목한다. 이는 발전권에 포함되어있는 ‘참여(participation)’의 세부목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 내 권리증진을 위해 단순히 사회권과 자유권 간의 이분법적 선택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³⁹⁾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간안보’와 ‘생명공동체’ 논의 측면에서 식량 지원 및 보건분야를 중심으로 SDGs와 연계한 북한개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이 현재 최빈국이기는 하지만 경제발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인 대내외 경제 개혁·개방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저소득 국가군에 속하는 북한은 (선진국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정부 개발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기준에 따라 더 높은

39) 정구연, “SDG와 대북 개발협력 전망.”

양허조건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SDGs 체제는 공공 재원과 더불어 국내 민간재원과 국제무역 등 재정적 수단 뿐 아니라, 제도 개선을 포함한 비재정적 수단도 함께 활용하여 파트너십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⁴⁰⁾ 유엔의 SDGs를 추진하고 있는 공여기관과 민간사회 및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민생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빈곤퇴치 및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포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간안보 개념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SDGs 활용을 통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과의 특수관계와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또한, SDGs의 북한개발협력 연계와 관련하여 남북 간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북한 식량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는 메카니즘 구축이 요구되며, 정치적인 문제와 분리하여 중장기적인 차원의 북한 식량난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북한 인도적 협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⁴¹⁾ 또한, 남북 당국 차원에서 확대하여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확산 및 통합거버넌스 추진과 활용 등의 다자적 대북 개발협력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동시에 다자 차원의 정책 제안으로는 젠더 이슈, 환경 및 기후 관련 등을 포함한 평화, 안보 정책 틀 안에서 적절하게 통합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정세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긴 교착국면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북한

40) 홍석훈 외,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p. 85.

41) 위의 책, p. 83.

개발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남북협력은 제한적인 사업이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추진과정에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북개발협력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III. 분야별 SDGs 지표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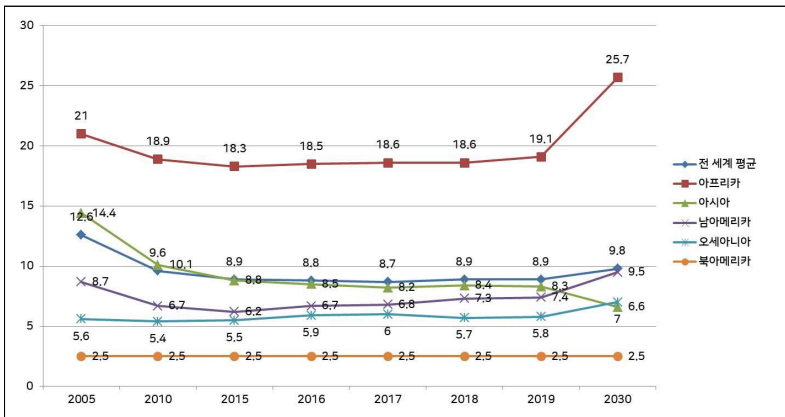
1.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가. SDG 2: 기아 종식 및 식량안보

(1) 목표 및 지표 개관⁴²⁾

SDG 2번은 기아 종식을 위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영양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적으로도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종료 시점인 2015년까지 전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Prevalence of undernourishment: PoU)은 9%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6억 9천만 명이 영양부족으로 2014년보다 거의 6천만 명이 증가했다. 또한 FAO 등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30년에 9.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5.7%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⁴³⁾

〈그림 III-1〉 대륙별 영양결핍 유병률(PoU) 변화추이(2005-2019)와 2030년 전망치



출처: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affordable healthy diets* (Rome: FAO, 2020), p. 9.

42) UN SDGs 홈페이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hunger/>> (Accessed June 4, 2021).

43)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affordable healthy diets*, p. 9.

한편, 기아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식량안보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충분한 영양가 있는 식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2019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9%(20억 명)가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었는데, 이는 2014년의 22.4% 보다 3.5% 증가한 수치이다. 경제적인 수입이 줄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심각한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약 7억 5만 명)은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악의 경우 하루 또는 며칠 동안 먹지 못한다. 최근 식량 불안의 증가는 주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6~2019년 추정에 따르면 모든 지역의 남성보다 성인 여성의 식량 불안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 기후변화는 난민과 빈곤층의 구매력과 식량 생산 및 유통 능력을 직간접적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아프리카지역의 곡식을 초토화하고 있는 메뚜기 떼의 발생,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등 농업 생산에 직접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위기와 더불어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 채널이 중단되거나 줄어들어 식량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최대 1억 2,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다.⁴⁴⁾

SDG 2번의 주요 개념인 식량안보(Food security)는 “모든 사람이 항상 활동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식이 요구와 식품 선호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⁴⁵⁾ 이는 충분한 양의 식량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불필요한 손실과 낭비를 줄이며, 지속가능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⁴⁶⁾.

44) *Ibid.*, p. 17.

45) World Food Summit,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Rome: FAO, 1996), <https://www.fao.org/3/w3613e/w3613e00.htm> (Accessed November 12, 2021).

SDGs 2번의 이행점점을 위한 주요 성과지표로는 영양결핍 유병률, 5세 미만 아동의 저신장·저체중,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경작되는 농지의 면적,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있다(〈표 III-1〉 참고).

〈표 III-1〉 SDG 2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구분	세부목표	측정지표
2.1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영유아 포함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높으며, 충분한 양의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1.1. 영양결핍 유병률 2.1.2. 식량 불안정 경험치
2.2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과 체력 저하와 관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2025년까지 달성하고, 여성 청소년, 임신부, 수유 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 필요성에 대응하며,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불량을 종식시킨다.	2.2.1. 5세 미만 아동 중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값으로부터 -2미만의 표준편차를 보이는 발육 부진 현황 2.2.2. 5세 미만 아동 중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값으로부터 >+2 또는 <-2인 표준편차를 보이는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2.3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공평한 접근을 통하여 소농,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 및 어업인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을 2030년까지 두 배로 증가시킨다.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임업 각 사업체 규모별) 2.3.2. 소농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 상태별)
2.4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고,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며, 기후 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등 여러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인 토지개량을 위한 회복력 있는 농업 원칙을 2030년까지 이행한다.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농지면적 비율
2.5	2020년까지 국가, 지역, 국제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종자 및 식물은행을 포함하여 종자, 농작물, 가축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한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 활용을 촉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한다.	2.5.1. 식량 및 농업용 종자기 보유 시설에 확보된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의 수 2.5.2. 멸종 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기에 있지 않거나 혹은 멸종 위기에 처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는 토착품종의 비율

46) United Nations DPR Korea, "The UN Strategic Framework 2011-2015," (<https://dprkorea.un.org/en/10157-un-strategic-framework-2011-2015>) (Accessed October 4, 2021).

구분	세부목표	측정지표
2.a	개발도상국 중 특히 최빈국의 농업분야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농촌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 및 지원서비스, 기술개발, 식물,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2.a.1. 정부 지출의 농업 지향 지수 2.a.2.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b	도하개발라운드(DDR)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 조치의 제거를 통해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바로잡고 예방한다.	2.b.1. 농업수출 보조금
2.c	식품품 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이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식량가격이 과도하게 변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식량 저장과 같은 시장 정보에 접근성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출처: UN SDGs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goal2>> (Accessed June 10, 2021).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DG 지표별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⁴⁷⁾ 동 연구에 따르면 50%가 넘는 대상 국가들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두 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추세 양호(Trend OK)’, 50% 이상 국가들이 오직 하나의 지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면 ‘현황 양호(Status OK)’, 50% 이하 국가들이 최소 하나의 지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면 ‘현황 제한(Status Limited)’, 모든 대상 국가에서 지표 가능성 수집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자료 없음(No Data)’으로 구분하였다.⁴⁸⁾ 이러한 기준에 따라 SDG 2의 세부목표별 이행지표를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47)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Bangkok: UNESCAP, 2018), pp. 30~34.

48)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p. 78.

〈표 III-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2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14)	티어 그룹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2.1.1. 영양결핍 유병률	1	√			
2.1.2. 식량불안정경험치	1		√		
2.2.1. 5세 미만 아동 중 발육 부진 현황	1	√			
2.2.2. 5세 미만 아동 중 영양 불량 현황	1	√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	3				
2.3.2. 소농의 평균 소득	3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방식의 농지면적 비율	3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2			√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		√		
2.a.1. 정부 지출의 농업 지향 지수	2	√			
2.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1	√			
2.b.1. 농업수출 보조금	1				√
2.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2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4.

SDG 2의 전체 13개 지표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수집 가능성은 ‘추세 양호’ 5개, ‘현황 양호’ 2개, ‘현황 제한’ 2개, ‘자료 없음’ 4개로 수집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식량안보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들은 거의 티어(Tier) 1에 속하고 있어 국가별 식량안보 달성도는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상황이다.

(2) 북한 현황

〈표 III-3〉에서는 북한의 SDG 2번 목표의 지표별 달성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영양결핍 유병률 지표는 2018년 47.6%로 국민

의 절반가량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19.1%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탁아소 급식으로 인해 성인보다는 식사 제공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지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생산과 배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이며,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성인 인구의 비만율, 영양수준, 곡물 생산성 지표는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질소의 시비량⁴⁹⁾ 지수는 0.5로써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것이 증가해야만 농지의 비옥도가 좋아져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표 III-3〉 북한의 SDG 2 지표별 달성 현황

지표명	수치	연도	현황	추이
영양결핍 유병률(PoU) (5)	47.6	2018	부진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	19.1	2017	부진	→
5세 미만 아동의 저체중(%)	2.5	2017	달성	↑
비만율 (BMI ≥ 30, 성인인구의 %)	6.8	2016	달성	↑
영양 수준(최고 2- 3 최악)	2.1	2017	달성	↑
곡물 생산성 (수확면적 ha 당 톤)	3.6	2018	달성	↑
지속가능한 질소 시비 지수(최고 0-1.41 최악)	0.5	2015	유지	→

출처: SDG Dashboard 홈페이지,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rk>〉 (Accessed October 18, 2021).

〈표 III-4〉는 SDG 2의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지표 보유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SDG 2번 지표는 국제적으로 FAO,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유엔아동기금(United

49) 공급하는 비료의 양. 저자 주.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관련 지표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K-SDG로 발표하고 있다.

〈표 III-4〉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관리 기구	파트너 기구	북한 보유 여부
2.1.1 영양결핍 유병률 (POU)	1	1		FAO		0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2019 (티어 2 → 티어 1) Reviewed at Webex meeting in 2017 following 6th IAEG-SDG meeting (티어 1 → 티어 2) 	FAO		X
2.2.1 5세 미만 아동 중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1	1		UNICEF, WHO		0
2.2.2 5세 미만 아동 중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 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1	1		UNICEF, WHO		0
2.3.1 노동단위 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in 2018 WebEx meeting (티어 3 → 티어 2) IAEG-SDG 6th meeting: Needs additional work on definition of "small scale food producers" 	FAO		0
2.3.2 소농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in 2018 WebEx meeting (티어 3 → 티어 2) IAEG-SDG 6th meeting: Needs additional work on definition of "small scale food producers" 	FAO	World Bank	X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vision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revision of metadata: change in "use of biodiversity-supporting practices" subindicator Reviewed at 8th IAEG-SDG meeting (티어 3 → 티어 2) 	FAO	UNEP	0

SDG 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6th meeting: Review of results of pilot studies necessary and more testing needed before indicator can be reclassified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 유전자원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2017 (티어 2 → 티어 1) IAEG-SDG 4th meeting: There is an agreed methodology, but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티어 3 → 티어 2) 	FAO	UNEP	X
2.5.2 멸종 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기에 있지 않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vision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2019 (티어 1 → 티어 2)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2017 (티어 1 → 티어 2) 	FAO	UNEP	X
2.5.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2018 (티어 2 → 티어 1) IAEG-SDG 3rd meeting: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티어 1 → 티어 2) 	FAO		X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1	1		OECD	FAO	O
2.5.b.2 농업 수출지원금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48 refinement: Formerly 2.b.2; Removed original 2.5.b.1 	WTO		X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PA)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st Track; Reviewed at 5th IAEG-SDG meeting (티어 3 → 티어 2) 	FAO		O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Accessed May 21, 2021);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

2021년 7월 북한이 발표한VNR 보고서에서는 SDG 2번 목표의 13개 세부 지표 가운데 6개의 현황만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I-4>에서는 총 7개의 세부지표(2.1.1, 2.2.1, 2.2.2, 2.3.1, 2.4.1, 2.5.a.2, 2.5.c.1)를 국제사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표로 설명했으나, VNR에서는 총

6개(2.1.1, 2.2.1, 2.2.2, 2.4.1, 2.5.1, 2.5.2)를 발표했다. 자료의 신뢰성은 차치하고서라도 북한 스스로 SDG 2번 지표에 대해 수치를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III-5〉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2번 목표 현황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2.1.1. 식량 부족분	1,000t	1,147	1,486	-
2.2.1. 5세 미만 아동의 저신장	%	27.9	19.1	17.4
2.2.2. 5세 미만 아동의 영양결핍	%	- (2012)	4.8 (2017)	4.5
2.4.1.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면적 비율	%	95	96	95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종	168	265	-
2.5.2. 멸종 위기에 있거나 멸종 위기에 있지 않은,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 품종의 비율	종	60,374 (2014)	86,268	-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15~17.

(3) 목표 및 지표 평가

북한이 발표한 SDG 2번 목표 중 2.1.1. 식량 부족분의 경우 2018년 1,486,000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1,140,000톤보다 346,000톤 증가한 양이다. 또한 이는 FAO와 WFP가 2019년 조사한 '공동 긴급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제시한 159만 톤보다 적은 수치로,⁵⁰⁾ 당시 1인당 1일 식량 배급량은 2018년 380g에서 2019년 300g으로 감소한 수치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0) FAO and 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Rome: FAO and WFP, 2019), p. 4.

동 보고서에서는 2019년 당시 총 1,010만 명(인구의 40%) 이상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며, 긴급하게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특히, 적절하고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없다면 5월부터 9월까지의 춘궁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농업 생산 사이클에 따라 매해 유사하게 발생할 우려가 높다.

5세 미만 아동의 저신장 비율(2.2.1)은 2015년 27.9%에서 2018년 19.1%, 2020년 17.4%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며,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세 미만 아동의 영양결핍(2.2.2) 지표는 2017년 4.8%에서 2020년 4.5%로 감소했다. FAO에 따르면, 2017~2019년 북한 전체 인구의 영양결핍 유병률은 47.6%로 조사되었는데,⁵¹⁾ 아동의 영양결핍 상태가 낮은 것은 공동 탁아소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면적 비율(2.4.1)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화학 비료의 공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95%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품종을 등록하고 종자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업인데, 북한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품종이 2014년 60,374종에서 2018년 86,268종으로 조사되었다. 자연 환경의 특성상 국가별로 양적인 목표를 정해놓는다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한 지표로, 해당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1)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food security, improved nutrition and affordable healthy diets for all* (Rome: FAO, 2020), p. 134.

2021년 VNR에서 발표되지 않은 지표 중 ‘2.3.1 노동단위당 생산량’, ‘2.3.2 소농의 평균 소득’,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 등은 북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표이다. 이는 특히 북한 농장의 지배 구조나, 북한의 경제 체제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국제사회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여건임을 감안하여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2.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가. SDG 8: 지속가능 성장

(1) 목표 및 지표 개관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빈곤의 ‘감축’을 목표로 했던 데 반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빈곤의 ‘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²⁾ MDGs의 경우 빈곤·의료·교육 등 사회개발 목표들이 중심이었던 반면, SDGs는 사회개발뿐 아니라 경제성장, 환경보호 등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분야를 포괄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 8번은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추구

52)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5 September 2015 (A/RES/70/1), 재인용: 김태균·김보경·심예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16), p. 94.

한다.⁵³⁾ 즉, 양적인 소득 증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포용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목표 8번에 언급된 개념은 다시 사회개발(사람, People), 경제성장(번영, Prosperity), 환경보호(지구환경, Planet), 파트너십(Partnership)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SDG 8은 총 12개의 세부목표와 17개의 이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세부목표를 위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개발과 관련된 세부목표는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노동 동일 임금 달성(8.5), 청년 실업률 경감(8.6), 아동 노동 종식(8.7), 이주노동자 포함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8.8), ILO 세계고용협약 이행(8.b)이다. 경제성장 관련 세부목표는 1인당 경제성장 지속(8.1), 고부가가치 산업 및 노동집약적 산업 등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8.2),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금융서비스 접근 확대 및 중소기업 성장 장려(8.3)이다. 환경보호 관련지표는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에서 자원 효율성 개선, 환경 악화와 경제성장을 분리(8.4), 2030년까지 지속가능 관광 진흥 정책의 개발 및 이행(8.9)이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관련 세부 목표는 모두를 위한 국내 금융역량 강화(8.10), 개도국 무역 원조 지원 확대(8.a)이다.

53) 환경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세종: 환경부, 2020), pp. 60~61.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 (검색일: 2021.5.4.).

〈표 III-6〉 SDG 8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세부목표(12개)	이행지표(17개)
8.1 국가별 상황에 맞게 1인당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특히 최빈개도국은 최소한 연간 7% GDP 성장을 유지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것을 포함하여 다변화, 기술 향상 및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8.3 생산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독려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성별)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10개년 계획에 따라,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소비와 생산에 있어 전 세계전 세계전 세계적으로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8.4.1 재료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8.5.2 실업률(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15~24세)의 비율
8.7 강제노동 근절, 현대식 노예 및 인신매매 종식, 소년병 동원 및 징집 등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 금지 및 근절,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성별, 연령별)
8.8 이주 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8.8.2 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성별, 이주자 상태별)

세부목표(12개)	이행지표(17개)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와 제품들을 증진하는 지속 가능 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들의 설계 및 시행	8.9.1 전체 GDP와 성장을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을 중 관광 산업 관련 일자리의 수(성별)
8.10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독려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역량 강화	8.10.1 성인 100,000명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15세 이상) 성인 비율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강화된 통합체계를 통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원조 지원의 증대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 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 이행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출처: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세종: 환경부, 2020), p. 10,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검색일: 2021.5.4.).

(가) 사회개발(사람, People)

SDG 8의 세부목표 8.5, 8.6, 8.7, 8.8, 8.b는 MDGs의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의 하위 목표 b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세부목표 8.5는 모든 남녀의 완전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자 기본권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언급한 전 지구적 경제 및 사회발전에 있어 고용과 직업교육, 노동환경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⁴⁾ 동 보고

54) ILO 홈페이지 참고, <<https://www.ilo.org/declaration/lang--en/index.htm>> (Accessed May 18, 2021);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18.).

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와 사회정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세부목표 8.5는 SDG 10의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와 연계되며, 특히 차별적인 법, 정책 및 관행 등을 철폐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입법, 정책, 조치를 강화하여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과에서 불평등 감소를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0.3, 재정, 임금,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 등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평등 확대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목표 10.4와 연계된다.⁵⁵⁾

세부목표 8.6은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청년 비율의 대폭 감소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15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을 소위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영국의 사회적 배제기획단(Social Exclusion Unit)에서 199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MDGs에서도 1.b의 달성을 측정하는 통계 지표로 15~24세 청년 실업률을 활용한다. SDGs도 8.6의 이행지표로 NEET족의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⁵⁶⁾

세부목표 8.7은 2025년까지 모든 아동노동의 철폐를 목표로 삼고 있다. 1926년 국제연맹이 채택한 노예조약(Slavery Convention), 1930년 ILO의 강제노동 협약(Forced Labour Convention) 1956년 유엔의 노예제도, 노예매매, 그리고 노예제도의 유사 제도와 관행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the 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등을 반영하여 1957년 ILO는 강제노동 폐지 협약(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동 협약과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

55) 이상미,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5), p. 165.

56)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18.).

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을 고려하여 1999년 ILO에서 최악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 협약(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이 채택되었다. 제임스 고든 브라운(James Gordon Brown) 前 영국 총리가 유엔특별대사로 MDGs 목표 2번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의 세부목표 ‘2015년까지 전 세계 전 세계 모든 아동에게 초등 교육의 기회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노동의 철폐가 필수적임을 발표하면서, 2012년 유엔은 2020년까지 아동노동 철폐를 선언하였다.⁵⁷⁾ 세부목표 8.7은 2030년까지 모든 여아와 남아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하고자 하는 세부목표 4.1, 이주노동자 특히, 이주여성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세부목표 8.8,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을 추구하는 세부목표 16.2와 연계된다.⁵⁸⁾

세부목표 8.8은 이주노동자, 여성 이주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추구한다. ILO는 1939년에 취업 이주 협약(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을, 1951년에 동등보수 협약(Equal Remuneration Convention)을, 1952년에는 모성보호 협약(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1981년에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 협약(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을 채택하였다.⁵⁹⁾ SDGs에서는 ILO가 앞서 마련한 개념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성이

57) 위의 자료.

58) 이상미,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p. 165.

5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LO 홈페이지 내 Labour standards 참고,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 (Accessed May 18, 2021).

주자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상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한다.⁶⁰⁾

세부목표 8.b는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 개발 및 운용과 ILO의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⁶¹⁾ 이행을 도모하고자 한다. 1995년 유엔 세계사회개발정상회담(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데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ILO는 2009년 제98차 총회에서 세계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세계금융위기가 초래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위기의 심각성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9년 유엔 수장회의(UN Chief Executive Board)에서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ILO의 세계일자리협약 추진을 결정하였다.

(나) 경제성장(번영, Prosperity)

경제성장과 관련된 SDG 8의 세부목표는 8.1, 8.2, 8.3이다. 세부목표 8.1은 1인당 소득증가 유지 및 최빈개도국의 연간 GDP 성장률 최소 7% 유지를 목표로 한다. 1961년 유엔 총회에서 제1차 유엔 개발 10년(United Nations Development Decade: UNDD, 1961-1970)이 선포되었다. 유엔은 개도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5%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 차원에서 개발 원조를 진행하고 선진국들은 GNP의

60)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18.).

61) 세계일자리협약은 ILO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취할 수 있는 14개 과제를 제시. ① 중소기업 등 기업 유동성 지원, ②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③ 실업급여를 통한 구직자 지원, ④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강화, ⑤ 효율적 고용 보장, ⑥ 청년고용 지원책, ⑦ 고용집약적 공공인프라 투자 강화, ⑧ 녹색성장 부문 투자, ⑨ 식량안보·농촌개발 부문 투자 강화, ⑩ 저소득층 및 비공식 근로자 대상 사회보호 도입 및 확충, ⑪ 이주근로자 지원, ⑫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 강화, ⑬ 근로자 기본권 및 국제노동기준 증진·보호, ⑭ 민간·공공·국제기금 등을 활용하여 각국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 및 사용자 결정 등임. ILO “Report of the Director-General: Tackling the global jobs crisis Recovery through decent work policies,” Conference paper, 08 May 2009, <https://www.ilo.org/ilc/ILCSessions/previous-sessions/98thSession/ReportssubmittedtotheConference/WCMS_106162/lang--en/index.htm> (Accessed May 19, 2021).

1%를 개도국 원조에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⁶²⁾ 1971년 제2차 유엔 개발 10년(UNDD, 1971~1980)은 개도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6%를 목표로 설정하고, 선진국은 GNP의 1%를 개도국 개발 원조에 투입하도록 권장하였다. 1981년 제3차 유엔 개발 10년(UNDD, 1981~1990)은 개도국의 연평균 성장률 7%를 목표로 선진국들이 GNP의 0.7%를 개발원조로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⁶³⁾ 1990년 제4차 유엔 개발 10년(UNDD, 1991~2000)에서도 개도국 성장률 7% 목표를 유지하였다. 이후 이러한 목표치는 SDGs로도 이어지고 있다. 세부목표 8.2는 산업 다변화, 기술발전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빈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1년 개최된 유엔 최빈개도국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DCs)에서 최빈개도국을 위한 새로운 행동 계획(UN Substantial New Programme of Action(SNPA) for LDCs for the 1980s)을 채택하고, 10년마다 최빈개도국 회의를 개최하였다.⁶⁴⁾ 1990년 개최된 제2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and the Programme of Action for LDCs for the 1990s), 2001년 개최된 제3차 최빈개도국 회의에서는 브뤼셀 행동 계획(Brussels Programme of Action: BPoA), 2011년 제4차 최빈

62) 이러한 논의에 따라 1960년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로 확대개편되었으며, 1961년 선진국의 원조 문제를 논의하던 개발협력그룹(Development Assistance Group: DAG)은 OECD의 상설 개발원조 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로 자리 잡았고, 1964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1965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1966년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1967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등이 설립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p. 49.

63)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성남: 시공미디어, 2007), p. 109.

64) 남수정, “제4차 유엔 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국제개발협력』, 제6권 3호 (2011), p. 91.

개도국 회의에서 이스탄불 행동계획(Istanbul Programme of Action: IPoA)을 채택하였다.⁶⁵⁾ 여기에는 최빈개도국의 연평균 성장률 7%를 목표로 인프라, 에너지, 과학·기술·혁신, 민간부문 개발 등 생산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SDGs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세부목표 8.3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형성과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지향 정책의 촉진을 목표로 한다. ILO는 1988년 고용촉진과 실업방지 협약(Employ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Convention)을 통해 중소기업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촉진을 권고한 바 있다.⁶⁶⁾ 또한, 2003년에는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고용 창출 프로그램(InFocus Programme on Boosting Employment through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IFP/SEED),⁶⁷⁾ 2009년에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기업 프로그램(Sustainable Enterprise Program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⁶⁸⁾ 등을 추진하였다. SDGs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장려하는 개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⁶⁹⁾

65) 권을 외,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p. 75, p. 81.

66)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과천: 고용노동부, 2012), p. 887.

67) “InFocus Programme on Boosting Employment through Small Enterprise Development,”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mas/---eval/documents/publication/wcms_083425.pdf> (Accessed May 19, 2021).

68) “Sustainable Enterprise Programme—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emp_ent/documents/publication/wcms_108413.pdf> (Accessed May 19, 2021).

69)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19.).

(다) 환경보호(지구환경, Planet)

환경보호 관련 SDG 8의 세부목표는 8.4와 8.9이다. 세부목표 8.4는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ear-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10 YFP, 2012~2022)’⁷⁰⁾에 따라 소비와 생산의 자원효율성을 2030년 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생산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Earth Summit 또는 리우회의라 불림)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the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과 이에 대한 행동 계획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⁷¹⁾ 의제 21은 전문(preamble)과 4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의제 21에서 취급되는 의제는 38개이다. 의제 21은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 해양, 폐기물, 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계 각층의 역할 그리고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70) 유엔 회원국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채택한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Earth Summit)’ 개최 20주년을 기념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회의가 개최되어 Rio+20 정상회의라고 부름)에서 녹색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을 채택. 이 계획은 향후 10년 동안 우선 추진할 5대 과제로 ‘관광(생태관광 포함)’, ‘생활 방식 및 교육’, ‘공공 조달’, ‘건축’, ‘소비자 정보’를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을 ‘지속가능한 관광’ 주도국으로 선정.” 2014.9.30.,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775> (검색일: 2021.5.20.).

71) 외교부,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그 역사와 주요내용,” 2003.2.1., <https://www.mofa.go.kr/www/brd/m_20152/view.do?seq=3392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bitm_seq_1=0&b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84> (검색일: 2021.5.22.).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 총회에서 ECOSOC 산하에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O)를 설치하였다. 2012년 UNCSO에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을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SDGs에도 동 계획이 포함되었다. 세부목표 8.4는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조치를 취해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과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세부목표 9.4와 연계되며,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⁷²⁾ 세부목표 8.4의 이행지표인 8.4.1 재료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 당 자원의 범위는 세부목표 12.2의 이행지표 12.2.1과 중복되며, 이행지표 8.4.2 국내 물질 소비량, 1인당 국내 물질 소비량, GDP 당 국내 물질 소비량은 이행지표 12.2.2와 중복된다.

세부목표 8.9는 2030년까지 지역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관광 진흥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추구한다.⁷³⁾ 2002년 개최된 ‘세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유엔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와 함께 생태관광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 관광 촉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⁷⁴⁾ 동 회의에서는 관광을 수용하는 지역사회의 문화 및 환경을

72) 이상미,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p. 165.

73) UNWTO는 지속가능 관광을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관광지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광산업에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관광과 관광지의 지역사회, 자연환경, 관광산업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관광으로 정의. UNWTO with UNE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stainable Tourism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IDS) and other Islands*, Lanzarote, Spain, 25-28 October 1998, <<https://webunwto.s3-eu-west-1.amazonaws.com/2019-07/lanzarote.pdf>> (Accessed May 20, 2021.).

74) 강신겸 외,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안양: 국토연구원, 2004), p. 7.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관광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 관광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과 공공 및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증진하고, 개도국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관광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기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 2012년 UNC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⁷⁵⁾을 바탕으로 2014년 관광 부문에서는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 YFP Sustainable Tourism Programme: 10 YFP STP)’이 채택되었다.⁷⁶⁾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 YFP STP)은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정책으로의 신속한 전환, 여행패턴 변화에 기초한 관광개발 모델 발굴, 에너지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파괴 및 자원 사용 최소화, 저개발 국가 빈곤 퇴치, 정보 공유를 통한 인식 제고 및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한다.⁷⁷⁾ 유엔은 SDGs의 실천을 위해 2017년을 지속가능 관광의 해(International Year of Sustainable Tourism for Development)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세부 목표 8.9는 세계의 문화·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1.4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75)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16/5&Lang=E> (Accessed May 19, 2021.).

76) UNWTO, *UNWTO Annual Report 2014* (Madrid: World Tourism Organization, 2015), p. 38, <<https://www.e-unwto.org/doi/book/10.18111/9789284416905>> (Accessed May 19, 2021.).

77) 2012년 9월에 개최된 제67차 유엔총회에서는 10 YFP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전담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을 지정. 이에 UNEP는 UNWTO와 함께 10개년 계획의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10 YFP STP)을 구체화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국 관광 관련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성태, 『10 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아젠다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참고.

지역의 고유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지속가능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 및 이행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12.b와 연계된다.

(라) 파트너십(Partnership)

파트너십 관련 SDG 8의 세부목표는 8.10, 8.a이다. 세부목표 8.10은 모든 사람의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접근이 장려·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 역량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 2002년 제1차 개발재원 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몬테레이 합의(Monterrey Consensus)가 도출되었다. 동 합의에서 국내 재원의 조성이 처음 제시되었으며, 개도국 내 개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저축 확대, 안정적인 투자 유치, 인적역량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액금융 활성화를 언급하고 있다.⁷⁸⁾ 2008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발재원 후속회의(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도하회의에서는 개도국들의 조세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개도국 참석자들은 해외노동자들의 국내 송금이 빈곤국들에게 있어 중요한 개발재원임을 설명하고 해외노동자들의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및 본국 송금 시 수수료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⁷⁹⁾ 2010년에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중소기업 등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이 논의되는 등 ‘금융 포용’이 의제로 채택된 바 있으며,

78) 정지원·정지선,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p. 24~25.

79)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도하 개발재원 평가회의 결과: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개발재원 관련 후속 국제회의,” 『국제개발협력』, 제4권 1호 (2009), pp. 131~132.

2013년에 세계은행은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금융 접근성(Universal Finance Access) 비전을 발표하였다.⁸⁰⁾ 2014년 호주 브리스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금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금융소외계층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중소기업의 금융기회 확대, 국제송금비용 감축 등이 논의되었다.⁸¹⁾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는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이 채택되었는데, 금융이해도(financial literacy) 증진과 금융포용을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 평균거래비용을 2030년까지 거래금액의 3%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⁸²⁾ 세부목표 8.10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유를 추구하는 이행목표 1.4, 적합한 가격의 대출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소규모 기업의 접근성 증진을 도모하는 이행목표 9.3과 이주노동자 본국송금 비용을 3% 이하로 감축 및 5% 이상 비용 폐지를 목표로 하는 이행목표 10.c 등과 연계된다. 세부목표 8.a는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 지원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 80) 세계은행은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을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송금,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제도권 금융 시스템(formal financial system)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정의. World Bank,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Report 2014: Financial Inclusion*, 2013,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225251468330270218/global-financial-development-report-2014-financial-inclusion>> (Accessed May 20, 2021); 오수현·임한나·이경선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7), p. 9.
- 81) 이일형 외,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 G20을 통한 우리의 역할』(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250; 송금 비용 감축을 위해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장기적 관점에서 모바일, ATM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송금 비용 감축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이상미, “Goal 8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그리고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p. 165.
- 82) 박수영·오수현,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개발과 이슈』, 제24호 (2015), p. 9.

DDA) 협상에서 AfT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WTO 홍콩 각료 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 이니셔티브’가 채택되었다. AfT 이니셔티브는 무역을 돕는 개발원조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성장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³⁾ ‘무역을 위한 원조’는 ① 무역 정책 및 규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 ② 경제인프라 ③ 생산역량 구축 ④ 무역 관련 조정 등의 4개 분야로 분류되며 관련 통계가 OECD에서 제공된다.⁸⁴⁾ 한편, 1997년 WTO는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을 위해 통합체계(Integrated Framework: IF)를 구축하고, 2008년에는 AfT의 후속조치로 개선된 통합체계(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EIF)를 마련하였다. EI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고, 재원조달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관리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⁵⁾

83) 주 오이시디 대표부, “개도국 무역역량 강화를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2019.8.9.,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8/view.do?seq=30> (검색일: 2021.5.20.).

84) 정지원·유애라,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 19.

85) 강인수·송유철·유진수,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p. 71.

(2) 북한 현황

북한은 SDG 8 관련 국가 목표를 ‘자립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를 설립하고,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보장으로 정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라고 주장⁸⁶⁾하고 있어 SDG 8의 ‘지속적·포용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북한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자립경제 및 지식기반 경제 설립’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SDG 8 관련 현황을 앞 절에서와 같이 사회개발(사람, People), 경제성장(번영, Prosperity), 환경보호(지구환경, Planet), 파트너십(Partnership)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사회개발(사람, People)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한 중요 요소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지 여부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지 여부이다(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제7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실업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선포하고(사회주의노동법 제5조)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고 주장하고 있다. VNR에도 북한이 남녀 모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어 목표 8.5와 8.6은 이미 오래전에 달성되었으며, 청년 실업, 강제 노동, 아동 노동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 8.7 역시 이미 달성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으나,⁸⁷⁾ 실태는 그렇지 않다.⁸⁸⁾ 북한에는 공식적으로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86)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2016.5.8.

8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 p. 31.

않는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 임금 수준 등이 국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⁸⁹⁾ 그러나 1990년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과 소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장화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노동시장도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⁰⁾ 일거리가 부족한 국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일정한 금전을 기업에 납부하고 출근 의무를 면제받아 시장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8·3노동자’가 이러한 노동시장의 주요 공급원이다. 양문수·윤인주의 연구는 지방산업공장, 중앙공업공장, 상점, 식당, 개인서비스업체, 외화별이사업소 등 6개의 범주에 대하여 2005년, 2009년, 2015년 등 3번에 걸쳐 실시한 탈북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북한 사기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⁹¹⁾ 그러나 이러한 영세 자영업이나 사적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존재하고 있어 자영업자 간 과잉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적 고용은 대체로 일용직과 같은 단기 일자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 소득원은 아니기 때문이다.⁹²⁾ 노동시장에는 북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여전히 미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법제도 장치가 부재하다는 것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⁹³⁾

88)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 290.

89) 북한 「사회주의노동법」 제5조는 “모든 로동자들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음. 위의 책, p. 279.

90) 오상봉 외,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8), p.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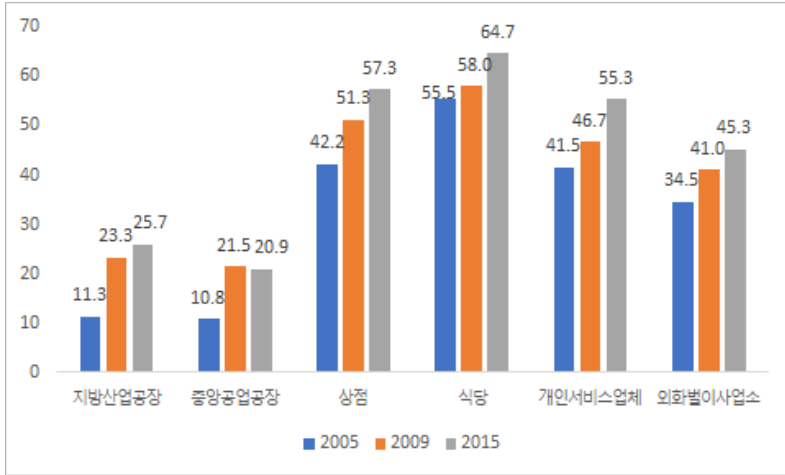
91)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p. 63.

92)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340.

93) 김경원 외, 『2020 북한의 산업 I』 (서울: KDB산업은행, 2020), p. 112.

〈그림 III-2〉 북한의 개인투자 비중

(단위: %)



출처: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p. 63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II-7〉 북한의 사적 고용 수준

(단위: %)

설문 문항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다른 사람의 밑에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는 사람	16.5	35.0	45.9	49.4
개인이 하는 고깃배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37.6	53.1	34.9	26.9
개인이 하는 국수 생산기지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40.4	44.4	24.8	43.1
화물차에 실을 짐을 날라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	45.0	68.1	43.1	27.5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하는 식당의 종업원	17.4	28.8	28.4	49.4
개인이 하는 편의봉사시설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	18.3	30.6	51.4	50.0

출처: 위의 글, p. 76.

한편, UNICEF가 2017년 북한에서 실시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아동노동의 비율은 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격차는 거의 없었으나 도농 간 격차는 나타나 도시의 아동노동 비율은 3%에 불과했으나, 농촌은 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아동노동 비율은 11%로 나타난 반면, 상위 40% 가구의 아동노동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노동은 위험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상해와 사망 발생 가능성도 문제이나 아동노동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다. 소득계층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계층에 따른 아동발달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⁹⁴⁾ 이러한 북한의 아동노동 비율은 전 세계 평균 9.6%, 아시아·태평양 평균 7.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⁹⁵⁾ 그러나 북한 아동의 경우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학생들은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봄철 김매기와 모내기를 위해, 가을철 감자캐기와 강냉이 따기를 위해 수업을 중단하고 한 달 정도 농촌작업에 동원되기도 한다.⁹⁶⁾ 따라서 MICS 보고서의 결과 및 VNR에 보고된 내용만 보고 북한의 아동노동 실태가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동 노동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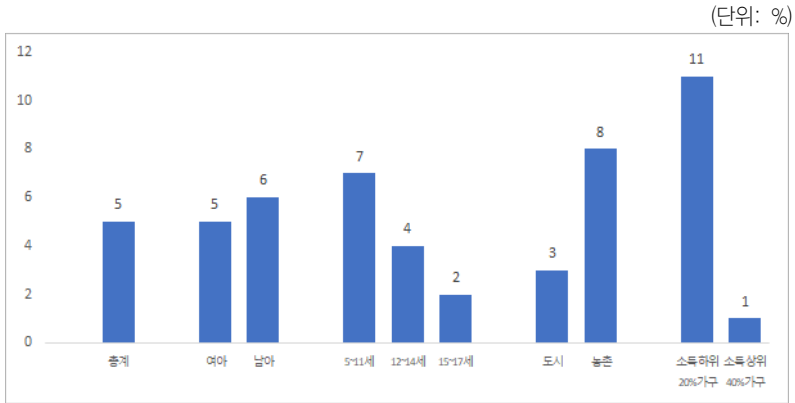
94)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p. 210.

95) ILO, *Global estimates of child labour: Results and trends, 2012-2016* (Geneva: ILO, 2017), p. 9.

96)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1』, pp. 369~371.

97)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343.

〈그림 III-3〉 북한 내 아동(5~17세) 노동 지표: SDG 8.7.1



출처: UNICEF, “2017 DPR Korea MICS Child Labour,” <https://mics-surveys-prod.s3.amazonaws.com/MICS6/East%20Asia%20and%20the%20Pacific/Korea%2C%20Democratic%20People%27s%20Republic%20of/2017/Snapshots/Korea%20DPR%20MICS%202017%20statistical%20snapshots_English.zip> (Accessed June 3, 2021).

노동권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은 규약 당사국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노조가 부재하다.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근로자 단체가 있으나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의 노동관련 법규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⁹⁸⁾

한편, 북한은 VNR에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2014년 53.8%에서 2019년 55.3%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계의 정확성은 확신하기 어렵다.⁹⁹⁾

98)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1』, pp. 288~289.

99) DPRK,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나) 경제성장(번영, Prosperity)

세부목표 8.1은 최빈개도국의 연간 GDP 성장률 7%를 목표로 한다. 북한은 유엔이 선정한 최빈개도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엔은 1인당 국민총소득, 인적자산지수(Human assets index: 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conomic and Environmental Vulnerability Index: EVI) 등을 합산하여 최빈개도국을 선정한다. 2021년 기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660달러로 143개국 가운데 130위이나, 인적자산지수는 49위,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는 38위로 나타나 최빈개도국에 포함되지 않았다.¹⁰⁰⁾ 그러나 북한은 1인당 총소득 기준으로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므로 연간 GDP 성장률 7%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¹⁰¹⁾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북한은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적이 없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2019년 8년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1%로 추정된다. 다만, 북한은 VNR을 통해 2015~2019년 동안 국민총생산이 연평균 5.1%, 1인당 국민소득이 연평균 4.6%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¹⁰²⁾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1인당 실질 GDP는 2018년 4.0%, 2019년 4.3%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은행의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제공한 통계에는 제재로 인한 외부 충격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 역량 구축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북한 스스로도 VNR을 통해 “국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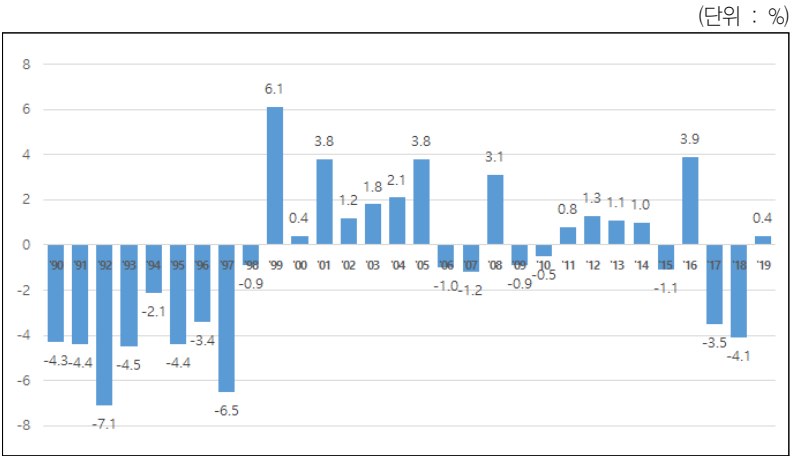
100) UN 홈페이지 참고,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pad/least-developed-country-category/ldc-data-retrieval.html>> (Accessed June 3, 2021).

101)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총소득을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를 저소득, 중저소득, 중상위 소득, 고소득 등 4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북한은 1인당 국민총소득 1,035달러 이하로 저소득 국가로 분류. 세계은행 홈페이지 참고,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world-bank-country-and-lending-groups>> (Accessed June 4, 2021).

10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9.

의 경제성장 측정지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⁰³⁾

〈그림 III-4〉 북한의 경제성장률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 2021.8.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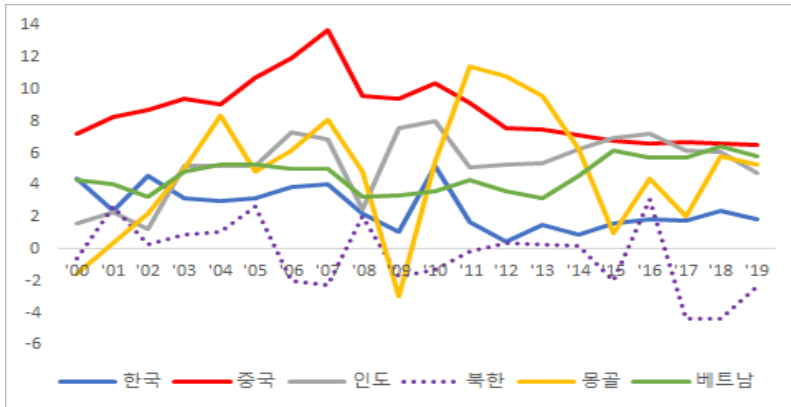
세부목표 8.2의 이행지표인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은 유엔에서 제공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성장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의 SDG 8 관련 목표인 ‘지식기반 경제 설립’을 통해 세부목표 8.2에서 추구하는 산업 다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VNR을 통해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2016년 7.4%, 2018년 4.0%, 2019년 1.4%라고 밝히고 있으며, 정부 지출 가운데 R&D 투자 비중이 2015년 8.8%, 2018년 9.3%, 2020년 9.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의 정확성은 담보하기 어렵다.¹⁰⁴⁾

103) 위의 글, p. 31.

104) 위의 글, p. 61.

〈그림 III-5〉 북한의 취업인구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국제비교

(단위: %)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wcod=MT_B UKHAN&menuid=M_02_02&outLink=Y&entrType=#content-group> (검색일: 2021.6.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북한은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해 국영기업이 주요 생산활동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세부목표 8.3에서 추구하는 소규모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1990년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배급제가 기능을 상실하고, 국영기업을 통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¹⁰⁵⁾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등장한 신흥부유층인 돈주(錢主)들은 비공식적으로 국영

10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의 70% 정도로 추정. 김병연, “북한경제의 시장화: 비공식화 가설의 평가를 중심으로,” 윤영관·양운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서울: 한울, 2009); 이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이종규는 북한이탈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1년 이후 전체 가구 소득에서 비공식 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3.5%를 차지한다고 밝힘. 이종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p. 57.

기업에 생산수단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거나, 기관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사업을 하거나, 비공식 사영기업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의 소규모 사유화를 촉진하고 있다.

〈표 III-8〉 북한의 사실상 소규모 사유화 진전 수준

(단위: %)

설문 문항		매우 많았다		어느 정도 있었다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2012년 조사	2015년 조사
명의·대여	고깃배를 사서 기관·단체 재산으로 해놓고 고기 잡는 사람	27.5	45.0	29.4	27.5
	화물차를 사서 기관·단체에 등록해놓고 돈을 버는 사람	33.9	56.3	36.7	37.5
	기관·기업소의 이름을 빌리고 수매상점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	30.3	41.3	37.6	44.4
	(상업)관리소에 적을 걸고 집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	14.7	50.6	45.0	36.9
	(편의봉사)관리소에 적을 걸고 개인이 하는 숙박소	14.7	25.6	19.3	23.8
명의·생산수단·대여	기관·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광물을 캐는 개인광산	15.6	27.5	16.5	35.6
	개인이 기계를 구해서 꾸며놓은 국수 생산기지	41.3	53.8	28.4	36.9
	(공업)관리소로부터 국가 건물을 빌려서 개인이 하는 식당	30.3	48.1	47.7	38.1
생산수단·대여	돈을 주고 수산사업소 고깃배를 빌려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	19.3	29.4	39.4	28.1
	돈을 주고 기관·단체의 화물차를 빌려 쓰는 사람	33.9	55.6	34.9	33.1
	수매상점의 종업원 중에 물건을 직접 들여와서 파는 사람	12.8	47.5	41.3	39.4
대부·투자	농장 작업반에 돈을 빌려주고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	12.8	28.1	44.0	40.6
	개인 농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농산물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사람	10.1	23.1	39.4	40.6
사영기업	기관·단체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몰래 광물을 캐는 개인광산	13.8	18.8	11.0	37.5

출처: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pp. 69~73.

(다) 환경보호(지구환경, Pl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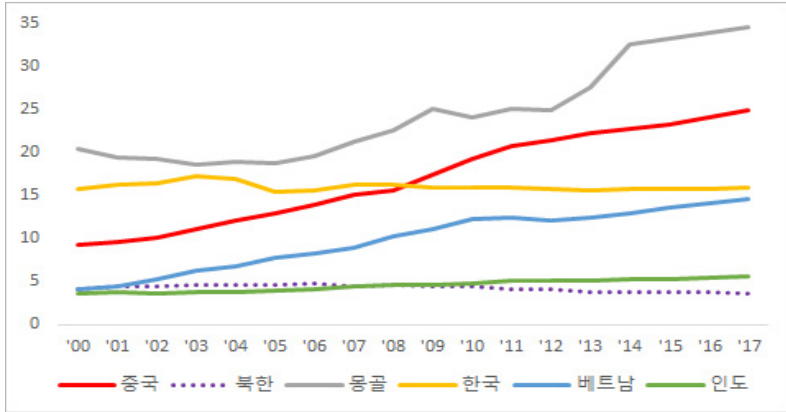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원생산성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져야 한다. 자원생산성은 실질 GDP를 국내 자원 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며,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자원생산성은 높아지게 된다. DMC는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 자원량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채취(생산)되는 자원의 총량(국내사용채취량, Domestic Extraction Used: DEU)+상품수입-상품수출로 계산한다. 결국 자원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는 DMC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¹⁰⁶⁾ 북한의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은 2000년 4.2톤에서 2006년 4.8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3.6톤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은 15.9톤 수준이다. 다만, 북한은 자원생산성이 양호하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아직 본격적인 경제성장 궤도에 들어서지 않았음에 유의하여 지표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⁰⁷⁾ 한편, 최근 북한은 2020년 재자원화법을 제정하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경공업 부문의 재자원화를 강조하는 등 순환경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106) 이희선 외,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I)』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p. 39.

107)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338.

〈그림 III-6〉 북한의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DMC) 국제비교

(단위: 톤)



출처: UN SDG, “Country profiles: Indicator 12.2.2 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per capita by type of raw material tonnes.”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12>> (Accessed June 4, 202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김정은 시대 북한은 적극적으로 개방적인 관광정책을 통해 외화 획득 창구를 확보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등 3대 자체 관광지 개발 사업에도 나서고 있으며, 관광 전문학교가 신설되거나 평양, 원산 등 대도시의 대학과 각 도의 사범대학에 관련 학과가 신설되고 있다.¹⁰⁸⁾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서는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이 보다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나날이 변모되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세상에

108)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통제되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없음에도 호텔리어 등 관광서비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평양상업봉사대학을 새롭게 신설하고, 외국어 학습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관광업 힘신는 북한, 호텔리어 키운다... 평양상업봉사대학 신설,” 『연합뉴스』 2020.5.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0089300504?input=1195m>> (검색일: 2021.5.17.); “북한, 호텔리어 키우는 대학서 '주 4일 외국어학습,’” 『연합뉴스』 2021.6.10.,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00639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1.6.10.).

널리 떨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하였다.¹⁰⁹⁾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과 관련한 생태관광에도 주목하고 있다. 리명일은 생태관광을 “무질서한 관광개발과 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해소하고 인류공동의 요구에 맞게 관광생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전망성이 큰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¹¹⁰⁾ 한편, 리금별은 생태관광을 “관광객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키고 자연 그대로의 생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주는 환경교육 위주의 관광에 중심을 두고 진행하며, 해당 지역의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관광형태”로 정의하고 있다.¹¹¹⁾ 또한, 생태관광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태관광이 일반관광과는 달리 관광 봉사(서비스) 시설과 수단들에 대한 투자가 적게 들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북한은 VNR을 통해 정부가 관광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마식령 스키장을 조성하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¹¹²⁾ 또한, 평양시와 묘향산, 금강산 등 여러 지역에서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도 낮고 관광 잠재력도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관광 산업의 GDP 기여도는 2016년 0.16%, 2018년 0.23%, 2020년 0.0063%를 기록하였는데,¹¹³⁾ 이는 북한에서 3대 자체관광지

109)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110) 리명일, “생태관광의 일반적 특징,” 『우리나라 무역』 제1호 (2015), p. 52, 재인용: 이해정·김성환·강성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 62.

111) 리금별, “현 시기 생태관광을 발전시키는 것은 관광업 발전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제2호 (2018), p. 38, 재인용: 위의 책, p. 62.

11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1.

113) *Ibid.*, p. 61.

개발로 2018년 관광의 GDP 기여도가 상승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파트너십(Partn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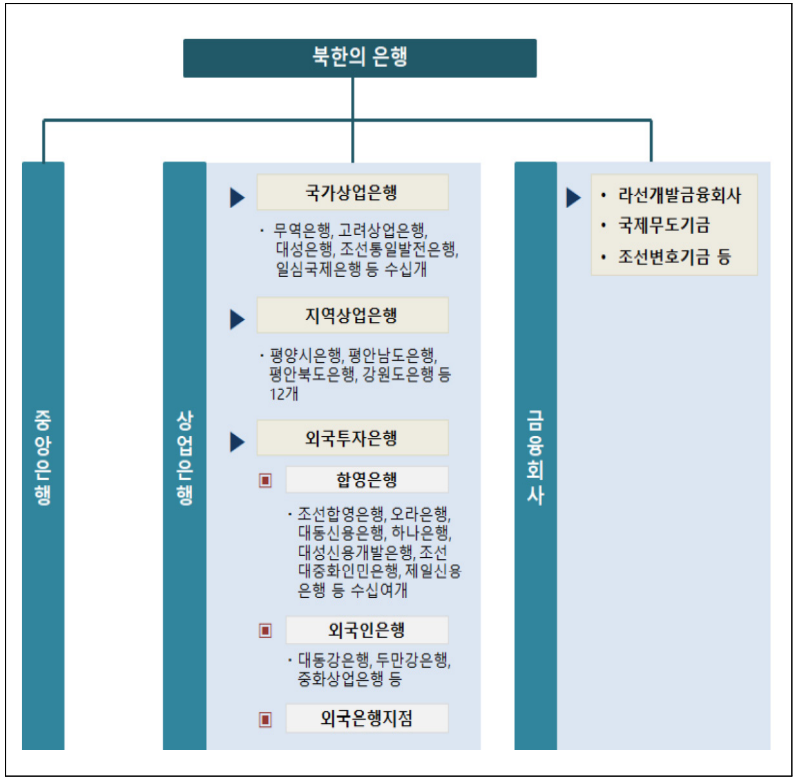
국내 금융기관의 역량 강화를 추구하는 세부목표 8.10에 관한 북한의 이행지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기존의 일원적 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이원적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하고, 2015년 이를 개정하였으며, 동년 함경북도은행, 자강도은행, 양강도은행 설립을 시작으로 12개의 지역상업은행도 설립한 것으로 전해진다.¹¹⁴⁾

또한, 가계부문에서 전자결제카드 사용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결제카드가 2010년 조선무역은행 발행한 나래카드와 2015년 조선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전성카드이다.¹¹⁵⁾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개설 가능한 계좌가 저축성 계좌에 국한되었던 데에서 최근에는 결제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유선전화 사용 시 카드결제를 통한 납부를 요구하고, 각 도별 은행에 ATM 기계를 설치하여 송금이 가능하게 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14) 책자가 발간된 2016년을 기준으로 북한의 도(직할시 및 특별시 포함) 단위 행정구역이 12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지역상업은행은 도(직할시 및 특별시 포함) 단위에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음. 2019년에는 개성이 특별시로 승격되어 13개 도(직할시·특별시)가 됨. 김경원 외, 『2020 북한의 산업 I』, p. 347;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 2021-6호 (2021), p. 14.

115) 나래카드는 외화충전식으로 외화상점, 백화점,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발급 시 신상정보를 요구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 카드라는 점이 특징. 전성카드는 내화충전식으로 국영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망을 기반으로 결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은행계좌와 연동된 직불카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김민정·문성민, 위의 글, p. 18.

〈그림 III-7〉 최근북한은행체제(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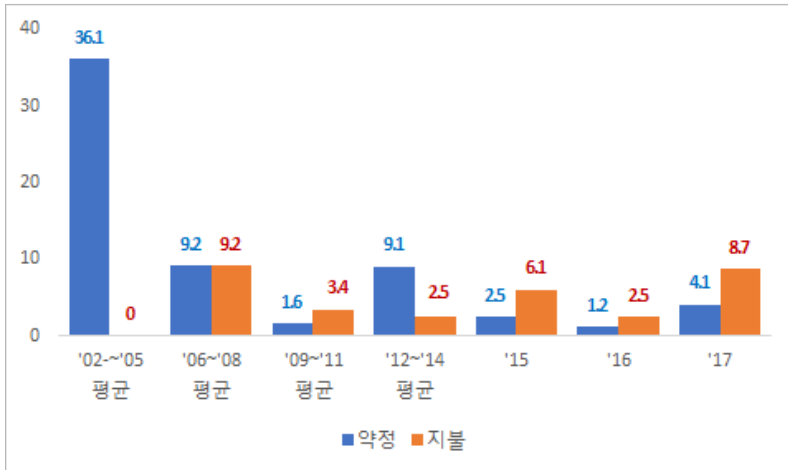


출처: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p. 14.

한편, 공여국들이 ‘무역을 위한 원조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여를 약정한 금액은 2005년 3,610만 달러(2002~2005년 평균치)에서 2017년 41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누적적으로 강화되면서 AfT를 통한 공여국들의 지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8〉 북한 무역원조 공식 금액

(단위: 백만 달러, 2017년 불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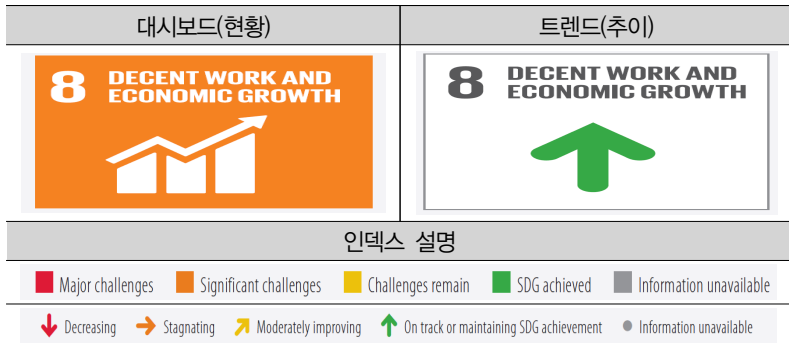
출처: OECD/WTO,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9: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Paris: OECD Publishing, 2019), p. 465.

(3) 목표 및 지표 평가

북한은 데이터 가용성이 부족하여 2021 SDG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에 속해있으며, 결측값(Missing Values)은 25개, 결측값의 백분율은 27%를 차지하고 있다.¹¹⁶⁾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SDG 8은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SDG 목표를 향해서는 작년 대비 “SDG 성과를 추적 또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평가되었다.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의 희생자 수는 인구 천 명당 104.6명으로 위험한 상황이며, 실업률과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SDG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6)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p. 69.

〈그림 III-9〉 북한의 최근 SDG 8 현황 및 추이



출처: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274.

〈표 III-9〉 북한의 SDG 8 지표별 달성 현황

지표명	수치	연도	현황	추이
조정된 경제성장률(%)	NA	NA	●	●
현대판 노예제의 희생자(인구 천명당)	104.6	2018	●	●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15세 이상 성인 비율, %)	NA	NA	●	●
실업률(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2.8	2020	●	↑
기본적 노동권의 효과적 보장(최악 0-1 최선)	NA	NA	●	●
치명적 산업재해 수(근로자 10만 명당)	0.0	2015	●	↑

출처: *Ibid.*, p. 275.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SDGs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자 2017 아시아태평양 통계연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¹¹⁷⁾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50%가 넘는 대상 국가들이 데이터

117)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https://www.unescap.org/publications/statistical-yearbook-asia-and-pacific-2017#>) (Accessed May 20, 2021)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두 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추세 양호’, 50% 이상 국가들이 오직 하나의 지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면 ‘현황 양호’, 50% 이하 국가들이 최소 하나의 지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면 ‘현황 제한’, 마지막으로 모든 대상 국가에서 지표 가능성 수집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자료 없음’으로 분류하였다.¹¹⁸⁾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 8의 세부목표별 이행지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DG 8 지표 17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집 가능성은 Trend OK 지표 9개, Status Limited 지표 5개, No data 지표 3개로 수집 가능성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II-10〉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17)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8.1.1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의 연 성장률	√			
8.3.1 비농업부문으로의 비공식 취업 비율(성별)			√	
8.4.1 물질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			
8.5.1 여성과 남성 근로자의 평균 시간 수당(직업별, 연령별 및 장애인별)			√	
8.5.2 실업률(성별, 연령별, 장애인별)	√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소년 (15~24세)의 비율			√	
8.7.1 아동 노동을 하고 있는 5~17세 아동들의 수와 비율 (성별, 연령별)			√	

118)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p. 78.

지표 (17)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8.8.1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빈도 비율(성별 및 이주자 상태별)			√	
8.8.2 ILO 원문과 국가 법 조항에 의거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 교섭의 자유)을 준수하는 국가의 증가(성별, 이주자 상태별)				√
8.9.1 전체 GDP와 성장률 중 관광 직접 GDP 비율	√			
8.9.2 전체 일자리 및 일자리 성장률 중 관광산업 관련 일자의 수(성별)				√
8.10.1 성인 100,000명 당 상업적인 은행 지점들과 ATM의 개수	√			
8.10.2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가지거나 개인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15세 이상) 성인 비율	√			
8.a.1 무역거래 및 대금지급 원조	√			
8.b.1 국가예산 및 GDP 대비 사회보장 및 고용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 지출액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Appendix II : List of SDG indicators by tier classification and availability status, pp. 30~36.

SDG 지표는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바탕으로 네 가지로 구분된다. 유엔은 지표를 ‘티어 1: 수집 방법론이 이미 존재하며 일정 수의 국가로부터 데이터 수집 가능’, ‘티어 2: 수집 방법론은 존재하나 실제 수집되지 못함’, ‘티어 3: 수집 방법론 부재’, ‘티어 4: 기타’로 나누었다. 더하여 유엔은 지표별로 가능한 국제기구 차원의 관리 기관과 파트너 기관을 명시하였으며 국가들이 데이터 수집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은 티어 설정 이후 검토를 통해 티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¹¹⁹⁾

119) 위의 책, p. 74.

SDG 8의 목표에 따른 지표는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¹²⁰⁾ 이들 목표는 지표별 수집 가능성에 따라 티어 1그룹 9개 (8.1.1, 8.2.1, 8.4.2, 8.5.2, 8.6.1, 8.10.1, 8.10.2, 8.a.1, 8.b.1), 티어 2그룹 7개 (8.3.1, 8.4.1, 8.5.1, 8.7.1, 8.8.1, 8.8.2, 8.9.1)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를 통해 SDG 8 16개 지표는 수집 가능성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지표 가운데 8.4.2는 티어 2에서 티어 1로, 8.b.1은 티어 3에서 티어 1로 변경되어 수집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8.7.1, 8.8.1, 8.8.2는 티어 1에서 티어 2로 변경되어 데이터 수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SDG 8에 대해 북한은 8.1.1, 8.2.1, 8.2.2, 8.4.2, 8.5.2, 8.6.1, 8.9.1, 8.10.1, 8.10.2, 8.a.1, 8.b.1 총 11가지 지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는 주로 유엔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 UNSD), ILO, UNEP, OECD를 통해 수집 가능하다. SDG 8에 관련된 북한의 데이터는 타 지표에 비해서는 데이터가 적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티어 2로 분류되어 많은 개도국에서 실제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8.4.1 물질 발자국 관련 데이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한편, VNR에서는 8.1.1, 8.2.1, 8.2.2, 8.5.1, 8.9.1 등 5가지 지표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¹²¹⁾

〈표 III-11〉 SDG 8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8 지표(16)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1	1		UNSD	World Bank	0	•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KOSS 국제통계)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1	1		ILO	World Bank, UNSD	0	•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간 성장률 (KOSS 국제통계)

120) 지표는 17개이나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에서 제공하는 지표 16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1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SDG 8 지표(16)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복합	
						보유 여부	비고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vision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ILO		X	자료 부재
8.4.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 당물질 발자국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at 9th IAEG-SDG meeting. Agreed methodology only at global level. Not for country level monitoring (classified as 티어 2) Reviewed at Jan, 2019 WebEx meeting: request UNEP to do additional methodological work and await approval as international standard before indicator reclassified. (classified as 티어 3) IAEG-SDG 3rd meeting: There is no established methodology for the indicator (classified as 티어 3) 8.4.1/12.2.1 are repeats 	UNEP	UNEP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 발자국 (https://country-profiles.unstats.un.org/prk#gca-12)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 내 자원 소비량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8.4.2/12.2.2 are repeat 	UNEP	OECD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유형별 1인당 국내 산원료소비량 (KOSIS 국제통계) 원료 유형별 GDP 단위당 국내산원료 소비량(KOSIS 국제통계) 원료 유형별 국내산 원료소비량(KOSIS 국제통계)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 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ILO		X	자료 부재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1	1		ILO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KOSIS 국제통계)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 세)의 비율	1	1		ILO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24세 실업률 (KOSIS 국제통계)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2) 	ILO, UNICEF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및 허드레 가사일 참여 아동 비율(KOSIS 국제통계)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아동 비율(KOSIS 국제통계)

SDG 8 지표(16)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 적 산업 재해 건수 (성 및 이주 상태별)	1	2	• UNSC 51 refinement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2)	ILO		X	• 자료 부재
8.8.2 ILO 협약과 국내 입법에 기초한 노 동권(집회 및 단체 교섭의 자유)의 국 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	1	2	• Reviewed at Dec. 2018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 UNSC 48 refinement, Reviewed at 5th IAEG-SDG meeting: Internationally agreed methodology and standard needs to be approved (classified as 티어 3)	ILO		X	• 자료 부재
8.9.1 총 GDP 및 성장률 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2	2		UNWTO	UNEP	X	• 자료 부재
8.10.1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 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1	1		IMF	UNCDF	X	• 자료 부재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1	1		World Bank	UNCDF	X	• 자료 부재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1	1		OECD	WTO- EIF	O	• 수혜국가별 무역원조 공식 금액(KOSIS 북한 통계)
8.b.1 별도 계획 혹은 국 가 계획의 일부로 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 발 운영 여부	3	1	• Reviewed at Dec. 2018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 UNSC 48 refinement: Reviewed at 5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3)	ILO	World Bank, OECD	X	자료 부재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Accessed May 21, 2021); UN (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나.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1) 목표 및 지표 개관

SDG 9의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는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SDG 9의 세부목표로서 이 세 부문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SDGs의 포용적인 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적 경제발전의 기반으로 기능한다. 특히, 그중 산업화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학과 개발학의 주요 관심 주제 중 하나였다. 그 연장선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로 여겨졌다.

본 절은 SDG 9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발학의 흐름 속에서 산업화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산업화, 혁신, 인프라의 특징을 살펴본 후 SDG 9의 세부목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 경제발전 및 인간개발을 위한 산업화

산업화는 개발학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식민지학이 대두되던 시기부터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강조되어 왔다. 195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주도의 공업화는 유럽의 전후 재건을 위해 실시된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및 1960년대 구식민지 국가들이 신흥독립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1960년대 종속이론을 기초로 개도국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과정에서도 산업발전은 핵심적인 가치로 평가되었다. 1970년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들이 채택한 국가 주도형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의 성과는 오늘날에도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국가재정 적자,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정부 주도의 국가 경제개발의 한계로 지적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0년대부터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가 개발학의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 갔다. 그리고 1990년대 개발학은 탈냉전과 더불어 냉전체제 하에서 이데올로기 확장의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에 국가 중심의 산업화·공업화에 기초한 양적 경제성장이 강조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빈곤, 교육, 보건 등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는 MDGs에서 사회발전 분야가 경제발전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개발학의 접근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ODA에서 산업화와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개발학의 흐름 속에서 산업화의 변화를 요약하면, 전통적인 개발학에서 산업화가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가 사회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산업화, 혁신, 인프라

전통적인 개발학과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산업화, 혁신, 사회기반 시설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을 역임한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에 따르면, SDGs의 규범적 목표는 “단지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사회(1인당 소득이 높은 사회)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

하며 잘 통치되는 사회”로 정의된다.¹²²⁾ 이러한 맥락에서 SDG 9의 차별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산업화, 혁신, 사회 기반시설이다. 전통적인 개발학에서 경제성장의 척도는 개인보다는 국가에 초점을 두었다. SDGs가 표방하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류 전체의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SDG 9의 세부목표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SDG 9.2, 9.a에서는 최빈 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LDC), 아프리카 국가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y)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¹²³⁾ 9.1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목적이 경제발전과 인간의 웰빙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를 촉구하고 있다. 9.3에서는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강화를 세부목표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신자유주의가 채택한 ‘대규모 사업체가 성장하면 소규모 사업체에도 그 효과가 전달될 것’이라는 낙수효과(trickle-down economics)와는 차별성을 지닌다.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관심 축은 ‘국가’의 경제발전보다 ‘개인’의 빈곤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사회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한국의 신남방정책 그리

122) 제프리삭스 지음, 홍성완 옮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파주: 21세기북스, 2015), p. 39.

123) OECD DAC List에서 북한은 LDC의 차상위 그룹인 기타 저소득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기타 저소득국가의 기준은 1인당 GNI 1005달러 이하. OECD DAC, “DAC List of ODA Recipients,” <<https://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DAC-List-of-ODA-Recipients-for-reporting-2020-flows.pdf>> (Accessed June 1, 2021).

고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¹²⁴⁾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공여국들의 외교, 경제, 개발협력 정책의 핵심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의존성이다. 구체적으로, SDG 9는 산업화 분야의 환경적 요소를 대립적 가치로 인식하지 않고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SDGs는 경제발전, 사회개발, 환경보전의 세 가지 요소를 개별적인 요소로 구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려면 이 세 요소의 상호의존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²⁵⁾ 과거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존을 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였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보전의 일정 부분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전개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된 후부터 인류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지구환경의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로 인한 지구온도의 상승으로 강우량 증가, 가뭄, 홍수, 초대형 폭풍 등 지구 기후 시스템의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¹²⁶⁾

이에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환경적 요소는 SDGs 논의의 기초가 된 유엔 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새천년정상회의(The Millenium Summit),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등의 국제회의를 거치면서, 더 이상 경제발전의 추가적이거나 대립적인 요소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써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24) 2021년 6월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해 합의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125) SDGs는 3가지 측면(경제, 사회, 환경), 5P 원칙(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 Partnership), 17개 목표(Goal)와 같이 다양한 레벨에서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126) 제프리삭스 지음, 홍성완 옮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p. 234.

SDG 9의 세부목표도 산업화 달성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산업화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9.1은 경제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있어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9.4에서는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하고 있다. 별도로 설정된 9.a도 지속가능한 기술혁신과 회복 탄력성을 갖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9.b에서도 세부목표를 환경정책의 보장이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 SDG 9 세부목표 및 지표

〈표 III-12〉 SDG 9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지표
9.1 경제 발전 및 인간의 웰빙을 위한 고품질, 신뢰성 높은, 지속가능한 탄력적 기반시설 구축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9.2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2030년까지 산업 부문의 고용률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배로 증가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 소규모 산업체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 및 금융서비스 접근 가능성 강화 (특히 개도국)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9.4 자원사용 효율 제고와 청정/환경 친화 기술 및 산업공정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과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속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 및 개조하고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 이를 이행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부목표	지표
9.5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 종사자의 수와 공공/민간 연구개발 지출 대폭 증가 및 혁신 장려 등을 통해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과학 연구 강화,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 향상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원 수
9.a 아프리카 국가들, 최빈개도국들, 소규모 도서 개도국에 대한 강화된 금융, 기술, 전문적 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인프라 개발 촉진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9.b 산업 다각화, 상품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 환경 정책을 보장해 개도국에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부가치 비율
9.c ICT 접근성을 상당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 달성을 위해 노력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 (기술별)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문 번역은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5를 참고하여 작성.

SDG 9는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혁신의 3가지 부문, 8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 부문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각 세부목표 및 지표를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과학기술 혁신 세 가지로 재구성하여 살펴본다.

〈표 III-13〉 SDG 9 세부목표의 재구성

구분	세부목표		
사회기반 시설	9.1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인프라 구축 9.a 아프리카, 최빈국, 소규모 도서 개도국 인프라 개발 촉진 9.c ICT 인프라 접근성 향상	환경의 지속 가능성	9.4 자원이용 효율성 및 친환경 기술 적용하도록 인프라와 산업 재편
산업화	9.2 산업화 촉진, 고용 확대 9.3 소규모 산업체 육성		
과학기술 혁신	9.5 기술역량 향상 9.b 개도국 기술 혁신 지원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문 번역은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5를 바탕으로 재구성.

1)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이란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기반시설,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공공서비스 관련 시설 등 넓은 범위의 시설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¹²⁷⁾ 그러나 SDG 9는 교통과 ICT 분야의 탄력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¹²⁸⁾

9.1은 교통 인프라에 관한 내용이다. 교통 인프라는 여객과 화물을 더 빠르게 멀리 이동시킴으로써 생활권 범위의 확장 및 접근성 향상, 도시화 촉진에 기여한다. 교통 인프라는 빈곤, 보건·의료, 교육, 일자리, 경제성장, 도시, 불평등 등 SDG 9 이외의 다른 세부목표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9.1의 지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9.1.1은 상대적으로 고

127)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 기반시설로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재할용 등, 둘째, 사회 서비스 제공 시설로 교육, 보건·의료, 문화시설 등, 셋째, 공공 서비스 관련시설로 공공청사, 방재시설 등이 있다.

128) 교통과 ICT 이외의 인프라에 관해서는 다른 SDGs 세부목표에서 다루고 있다.

통 인프라의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촌인구’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도로의 중요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9.1.2는 국가 단위의 승객 및 화물 운송량을 지표로 삼고 있다.

9.1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목표이지만, 9.b 및 9.c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와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한다. 9.a는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소규모 도서 개도국과 같이,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국가예산을 충분히 투자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9.a는 국제사회의 공적지원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통적인 개발재원이라 할 수 있는 ODA 외에 기타 공적재원까지도 포함된다.

9.c는 ICT 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우 2020년까지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에 주목하고 있다. ICT 접근성은 교통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의 하나로, 파급 효과가 매우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SDGs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최빈개도국의 인터넷 접근성의 목표 기한이 2020년으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이다. SDGs가 2015년부터 설정된 점을 고려하면, 최빈개도국의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9.c는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을 반영하여 2G, 3G와 같은 데이터 송신량의 기술별 인구에도 주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회복탄력성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2020년 전 인류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경제·사회 분야의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위험 요소로 인해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에 경험한 흑사병, 말라리아, 사스, HIV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물론, 교통 인프라의 발달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ICT를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수송한 점도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은 뉴노멀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산업화

SDG 9의 산업화와 관련된 세부목표 9.2 및 9.3은 산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목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SDGs에 있어 산업화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써의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이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산업화 논의에서 주목한 경제성장의 대표적인 척도는 1인당 소득이었지만 9.2에서는 고용률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으로 이동할 경우 소득수준의 개선과 동시에 기술과 노동 조건 등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9.2의 이행은 SDG 1의 빈곤, SDG 8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나아가 SDG 10의 불평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9.2는 최빈개도국의 경우 고용률을 2배로 증가시킬 것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최빈개도국일수록 전체 산업에서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별 인구를 보더라도 농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큰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9.2.1은 산업화의 가장 상징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GDP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란 어떤 기업이 총생산액을 전부 생산해서 얻은 것이 아닌 원재료,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로 얻은 것도 포함되는 개

념이다. 하지만 여기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생산액(output)에서 중간 투입물을 제외한 값으로,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 부가가치(net value added)를 의미한다.¹²⁹⁾ 9.2.2는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을 지표로 삼고, 제조업의 역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9.3은 소규모 산업체의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소기업 육성은 9.2의 고용률 제고 및 경제성장의 다양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단일 국가 내 전체 기업 가운데 약 95%를 차지하며 고용의 60~70%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9.3은 소규모 산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치사슬(value chain)에 통합되는 것과 금융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는 국내의 시장에서 소규모 산업체가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설비투자를 위한 자원 확보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은 기업이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소규모 산업체는 초기 단계에 개인 자금, 자산매각 등 내부 자금을 의존하지만, 성장 단계 이후에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외부 자금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소득 수준이 낮고 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서비스 접근이 기업 경영의 제약요소로 작용한다.¹³⁰⁾ 이러한 맥락에서 9.3은 개도국의 소규모 산업체 육성을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9.3.1은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이 담당하는 비율을, 9.3.2는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의 비율을 지표로

129) 김대환·김병은, “Goal 9 회복(복원) 가능한 인프라 건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및 혁신 촉진,”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 185.

130) 이시욱·최석준·차용석, 『개도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ODA 전략』 (세종: 산업연구원, 2016), p. 23.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9.3.1은 소규모 산업이 총 산업 부가가치에서 담당하는 ‘현재’의 역할에 주목하고, 9.3.2는 소규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기반으로써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외신용도 및 재무제표의 성과가 낮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규모 산업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금융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혁신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은 MDGs에서조차 주목하지 않았던 개발협력 이슈였지만, SDGs의 등장과 함께 범분야 이슈로써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밑거름으로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환경보존의 병행에 필요한 전제 요소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9.5는 연구개발 종사자를 증가시키고 공공/민간 연구개발의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이는 과학 연구를 강화하여 산업 부문의 기술 역량을 향상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9.5.1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9.5.2는 인구 100만 명당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개발은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초연구는 현상과 관찰 가능한 사실의 기초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수행되는 실험적 혹은 이론적 작업이고, 응용연구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수행되는 독창적인 조사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응용연구는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이나 공정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작업이다.¹³¹⁾ 이 두 가지 지표는 9.5에 따라 증가되는 연구개발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9.b는 산업의 다각화와 상품 가치를 부가시키는 산업에 주목하며 국제사회가 개도국의 국내 기술 개발, 연구 및 혁신을 돕도록 촉구하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입할 국가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협력을 통한 개도국 대상 과학기술 혁신 지원은 개도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의 관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발전을 통해 보통 천연자원 및 저기술 활동 중심에서 중·고기술(Medium High Technology)의 비중이 커지는 형태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³²⁾ 9.b.1은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의 부가가치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9.2.1에서 주목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율에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상세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4) 환경의 지속가능성

SDG 9가 주목하는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들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를 기초로 발달하였다. 환경 관련 목표는 SDG 13 기후변화, SDG 14 해양 생태계, SDG 15 육상생태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9.4에 자원 이용 효율성 및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도록 산업 재편에 대한 사항이 언급된 것은, SDGs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SDG 9 이행과정에 있어 환경적인 고려는 유엔기후변화 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1) UN Statistics, "E-Handbook on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wiki/display/SDGeHandbook/Indicator+9,5,1>> (Accessed September 30, 2021).

132)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359.

즉, 개별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제한하여 과거의 발전 패러다임과의 차별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9.4.1은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온실가스 중 가장 큰 비중인 약 7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³⁾

(2) 북한 현황

1) 사회기반시설

〈표 III-14〉 SDG 9 사회기반시설 (9.1, 9.a, 9.c) 관련 지표 현황

	지표	단위	북한 VNR		국제기구 지표
			항목	지표	
유엔 북한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	○	×	○
유엔 북한	9.1.2 여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ton/km	○	×	○
유엔 북한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USD	×	×	○
유엔 북한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	%	×	×	○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교통을 ‘불비’, ‘불편’, ‘민망한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 현황

133) 온실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있으며, 이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가 온실효과의 99%를 차지한다. 제프리삭스 지음, 홍성완 옮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p. 440~442.

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 이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교통의 안정성, 신속성, 정시성, 대량성, 경제성, 쾌적성, 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개선, 운송수단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으나, 오늘날 북한의 교통은 만성적인 경제침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 수단을 넘어 북한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¹³⁴⁾

1990년대 이후로 북한의 교통물류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북한은 공식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지 않고, 국제기구에서도 일부 자료에 관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1990년대 이후의 통계 자료는 대부분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북한의 언론기사를 종합하거나 인공위성 자료를 갱신하여 추정한 결과이다.¹³⁵⁾

북한은 주철종도(主鐵從道)를 표방하여 철도가 여객과 화물의 중심을 담당하고 도로가 보조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교통인프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에 큰 영향을 끼친 배경에는 모든 물자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북한 특유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산악지형이 많은 자연 조건, 일제강점기의 철도 중심의 개발 경험과 초기 조건 등이 있다.¹³⁶⁾

북한의 철도는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유지, 보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 속도의 6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¹³⁷⁾ 또한, 이에 더해 반자동으로 낙후된 통신·신호체계, 교량과 터널의 부식, 전력난과 차량 노후화로 인한 열차 지연이 지적되고 있다.¹³⁸⁾ 북한의 도로는 150~200km의 단거리 수송 기능을 담당하며 지역 내 혹은 지역의 철도가 없는 지역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¹³⁹⁾ 고속도로의 포장률은 아스팔트(30%), 콘크리트(62%), 콘

134) 안병민,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와 한반도 교통망 구축방향,” 『국토』, 제443호 (2018), p. 36.

135) 서종원,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통계의 이해와 한계』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6), p. 1.

136)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9), p. 58.

137) 위의 책, p. 62.

138) 위의 책, p. 62.

139) 위의 책, p. 63.

크리트와 아스팔트(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도로는 대부분 흙, 자갈 등으로 되어 있어 매우 열악한 편이다. 또한 산악 지역에서는 그 특성상 시속 50km 이상의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¹⁴⁰⁾

한편, 북한 주민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은 내부 인트라넷망인 광명망이며, 인터넷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속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해 연구, 교육,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국제 인터넷 사용이 일부 허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¹⁾ 국제 인터넷 사용자는 약 2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0.06%에 불과하다. 즉, 사실상 일반 주민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¹⁴²⁾ 또한 북한의 이동통신은 주요 도시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동 통신사의 가입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¹⁴³⁾ 2017년 UNICEF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69%에 이르며, 특히 평양은 90.6%로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지방은 50.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¹⁴⁴⁾ 이처럼 북한의 무선네트워크 이용은金正은 정권의 과학기술 정책의 강조 및 시장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무선네트워크의 이용에 중앙정부의 감시와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시장화와 더불어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이동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¹⁴⁵⁾

140) 위의 책, pp. 66~67.

141)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2호 (2019), p. 9.

142) 위의 글, p. 9.

143)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p. 9.

144) UNICEF,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17 Survey Finding Report: DPRK,” (<https://www.unicef.org/dprk/media/156/file/MICS.pdf>.) (Accessed September 30, 2021).

145)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pp. 33~34.

〈표 III-15〉 9.1.2 운송 수단별 여객 운송량(국제기구)

(단위: Revenue passenger kilometres)

구분	2017	2018	2019
항공	64,862,836	64,862,836	300,191,980
철도	N/A	8,428,469,743	2,100,200,000
도로	N/A	45,168,338,062	85,300,800,000
합계	64,862,836	53,661,670,641	87,701,191,980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표 III-16〉 9.1.2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국제기구)

(단위: ton/ km)

구분	2017	2018	2019
항공	251,493	251,493	487,101
철도	N/A	N/A	87,437,400,000
도로	N/A	N/A	705,190,000,000
합계	251,493	251,493	792,627,887,101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표 III-17〉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 (ODA와 기타 공적지원)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DA	0.23	0.05	0.56	4.16	0.89	7.95	1.50

자료: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주: 총지출 기준, 2018년 USD 기준

〈표 III-18〉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국제기구)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G	N/A	N/A	N/A	95	95	95
4G	N/A	N/A	N/A	0	0	0

자료: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2) 산업화

최근 북한의 제조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하면 그 회복세가 다소 느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9.2 지표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경제에 있어 제조업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까지는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화 전략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이 발달하였다.¹⁴⁶⁾ 그러나 1990년대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디폴트선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자연재해 등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닥쳐 붕괴 수준의 경제난을 겪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의 기저 효과, 경제관리시스템의 부분적인 기능, 기존 설비의 가동률과 효율성 제고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해 시장경제 요소의 확산 등을 기반으로 제한적이거나 회복세를 보였다.¹⁴⁷⁾ 여기서 북한경제 및 제조업의 ‘회복’이란 표현은 1980년대까지 경제적 성장이 있었기에 사용함을 밝힌다. 이처럼 북한이 공업화를 경험한 것은 다른 저개발 개도국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OECD 및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르면 북한은 최빈개도국과 유사한 경제수준이지만 다른 개도국과 달리 공업화를 경험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기본적으로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의 4대 선형부문을 정상화시킴으로써 농업과 경공업 생산량을 늘리고자 한 산업정책의 기본 노선을 계승하였다.¹⁴⁸⁾ 제조업 분야에 있어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중화학공업 정책에 대한 투자중단 혹은 감소와 같은 기본 노선으로, 그들은 이의 변경 없이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가동률 제고 및 현대화 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¹⁴⁹⁾

146) 김경원 외, 『북한의 산업 I』 (서울: KDB산업은행, 2020), pp. 57~60.

147) 이석기, “북한산업의 현황과 관련 연구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12. (2016), p. 13.

148)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pp. 22~35.

149) 위의 책, p. 44.

즉, 중화학공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보다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과학기술 정책을 중시하며 이의 국산화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국내재원, 불안정한 원자재 수급, 제한적인 선진기술 도입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제조업이 단기간에 회복 혹은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서비스업, 농림어업,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건설업, 광공업, 제조업 가운데, 제조업의 회복이 가장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생산액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약 50%의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⁵⁰⁾

국제기구와 북한이 제시한 9.2.1의 지표 값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9.2.1의 지표 값을 취합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북한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약 20%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에 따르면 이는 약 40%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19〉 SDG 9 산업화 (9.2, 9.3) 관련 지표 현황

구분	지표	단위	북한 VNR		국제기구 지표
			항목	지표	
유엔 북한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	△	△	○
유엔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	N/A	N/A	N/A
유엔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	N/A	N/A	N/A
유엔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	N/A	N/A	N/A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을 바탕으로 재구성.

150)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별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기준. 이석기, “북한산업의 현황과 관련 연구 동향,” p. 14.

〈표 III-20〉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단위: %,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대비	국제기구	20.95	20.95	20.9	20.43	20.62	19.88	18.85	18.58	18.33
	북한	N/A	N/A	N/A	40.18	N/A	N/A	40.06	38.60	N/A
1인당 제조업 대비		136.2	137	137.4	132.1	137.8	127.6	115.4	113.7	111.7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Accessed September 30, 2021).

주: 2015 USD 기준

3) 과학기술

〈표 III-21〉 SDG 9 과학기술 (9.5, 9.b) 관련 지표 현황

구분	지표	단위	북한 VNR		국제기구 지표
			항목	지표	
유엔 북한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	○	X
유엔	9.5.2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	명	○	○	X
유엔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	X	X	X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을 바탕으로 재구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추세를 통해 과학기술이 북한 국가 정책의 핵심적인 분야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군수산업을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기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들의 필수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정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통합시키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과학기술을 다루고 있다.¹⁵¹⁾ 북한은 개도국 가운데 교육 수준이 높은 편에 속하고, 과학기술 분야는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 교육에서 중요시하는 분야에 속한다.¹⁵²⁾ 김정은 정권의 과학기술 중시는 핵심 경제정책인 경제특구, 경제개발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중 경제개발구의 한 형태인 첨단기술개발구는 과학연구 교육, 산업화가 결합되어 과학기술 교류가 촉진되는 경제개발구로서, 국가의 기술발전, 선진기술 도입, 기술무역 발전, 지식경제시대의 경제일군 육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¹⁵³⁾ 이는 과학기술과 생산이 연결되어 연구-개발-생산-판매가 결합된 지역의 거점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과학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은 9.5의 세부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9.5.1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율 및 9.5.2의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가 소폭이긴 하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VNR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인재육성, 관기체계 수립, 연구결과 공유를 통한 사회-경제개발을 지향하며, 평양교원대를 교육기관의 대표로 소개하고 있다.¹⁵⁴⁾ 인재육성의 계획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복합단지 구축을 강조하며 일종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연구 및 개발 비중을 확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¹⁵⁵⁾

151)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제230호 (2019), p. 5.

152) 김석진,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2020년 3월호 (2020), p. 7.

153) 사회과학출판사, 『일군들을 위한 경제개발구 지식』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p. 28, 재인용: 임을출,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2019), pp. 12~13.

15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33~34.

155) *Ibid.*, p. 34.

〈표 III-22〉 9.5 연구개발 관련 지표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	2018	2020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8.2	8.7	9.6
9.5.2 인구 100만 명당 연구원 수	2326	2534	2966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분야를 강성대국과 같은 거대담론에서 사회주의 건설 등으로 완화해 표현하고 있다. 그들의 주력 분야도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에서 IT, 에너지, 경공업, 제철, 비료생산 등의 민수 분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⁵⁶⁾

4) 환경의 지속가능성

〈표 III-23〉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kg/\$)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6.57	4.362	5.021	4.024	4.722	3.533	2.857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UNIDO MVA 2021 Database, Available at <https://stat.unido.org>. IEA (2020), CO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https://www.iea.org/statistics>> (Accessed September 30, 2021).

북한의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비교적 낮은 수치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량 감소, 산업 생산능력 저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¹⁵⁷⁾

156)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제언,” pp. 2~5.

157)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p. 453~456.

〈표 III-24〉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9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3	2	• 2018년 12월 WebEx 회의에서 검토 (티 2로 분류)	World Bank	UNEP, UNECE, ADB	×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 (운송수단별)	1	1		ICAO, ITF-OECD	UPU, UNEP, UNECE	○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	1		UNIDO	World Bank	○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1	1		UNIDO		×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3	2	• IAEG-SDG 6차회의에서 검토 (티어 2로 분류) • 패스트트랙; 5차 IAEG-SDG 회의: 소규모 산업 정의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 요구 (티어 3으로 분류)	UNIDO	UNCDF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3	1	• 6차 IAEG-SDG 회의에서 검토(티어 2로 분류) • 패스트 트랙: 5차 IAEG-SDG 회의에서 검토: 소규모 산업 정의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 요구 (티어 3으로 분류)	UNIDO, World Bank	UNCDF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	1		UNIDO, IEA	UNEP	○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	1		UNESCO-UIS		×	
9.5.2 인구 100만 명당 (상근직) 연구원 수	1	1		UNESCO-UIS		×	
9.a.1 인프라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OECD		○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 산업부가가치 비율	1	1	2017년 11월 데이터 접근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UNIDO	OECD	×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1	1		ITU		○	

출처: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September 30,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 보고서 2021』, p. 9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목표 및 지표 평가

SDG 9는 SDGs의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People),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Prosperity), 환경과 생태계 분야(Planet)의 세 분야 가운데, 번영과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SDG 9의 목표와 지표에 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DG 9에 관한 북한의 내재화이다. UN의 SDGs와 2021년 발표된 VNR에서 북한이 설정한 SDG 9의 목표, 세부 내용, 지표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UN의 경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를 설정한 데 비해, 북한은 ‘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로 설정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규범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체계의 근간이 되는 주체사상의 강조와 경제 분야에 있어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강조이다.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는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기업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SDG 9에서 주목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소기업 시스템을 북한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인 것이다.¹⁵⁸⁾ 고난의 행군 이후 등장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는 기업체 당위원회의 지도하에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기업의 시스템과는 구별된다.

둘째, 지표 부족과 신뢰도이다. SDG 9가 제시한 지표는 총 12개이다. 북한이 VNR에서 채택한 지표는 총 6개이며, 여기서 구체적인

158) 김정은 정권의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기업 관리 방식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2019), pp. 115~142; 박후진,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현대북한연구』, 제21권 제2호 (2018), pp. 94~127.

수치를 발표하지 않은 것이 2개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총 12개 지표 가운데 4개만 발표한 것인데, 이 수치의 대부분이 2015년, 2018년,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관련 추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앞으로 일부 지표에 한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9.2.1의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을 들 수 있다. 국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는 이를 약 20% 내외로 추정하고 있지만 북한 VNR의 발표에 따르면 약 40%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북한 통계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이 표면적인 수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은 2G의 경우 95%인 것으로 나타났다. 2G로는 음성통화와 문자메세지 수준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3G로는 영상통화와 인터넷까지 가능하다. 언젠가는 북한에 3G 무선네트워크 기술이 보급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에게 국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북한의 국가발전전략과 SDGs의 연계, 그리고 향후 북한개발협력의 과제이다.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에 기초하여 SDG 9에서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비롯한 주체사상에 근거한 경제발전 계획, 경제활동 및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 등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관련 법·제도도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개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 SDG 9에서 북한은 철도,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평양-신의주, 평양-남양 라인을 포함한 동해안과 서해안 국제 철도의 현대화를 언

급한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은 통계 역량과 관련해 9.1.1의 데이터의 수집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다.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개발협력 이슈로서의 도시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는 개발 이슈로 ‘도시’에 주목한다. 오늘날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도시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서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로 인해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등 도시화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양면성을 지닌다. 도시와 주거지에 관한 이슈는 유엔 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MDGs에서는 이에 관한 이슈가 환경 관련 하위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으나 SDGs에서는 이것이 기후대응 이슈와 결합해 독립적인 목표로 설정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도시화는 20세기 중반까지 중요한 개발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총인구의 1/3 정도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른 빈곤, 취약계층, 불평등 등의 문제보다 국가 경제 발전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1976년 유엔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최초의 인간정주회의인 해비타트회의(HABITAT I)를 개최하고 인간정주(Human Settlement)에 관한 밴쿠버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발전전략에 있어 주택과 도시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동시에, 국제협력의 필요성

에 대한 공감을 얻었다. 1977년에는 인간정주를 주관하는 유엔산하 기관으로 인간정주위원회(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를 설립하였다. 이후 동 위원회는 지금의 유엔인간정주계획(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으로 발전하였다.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HABITAT II에서는 20년 동안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주목받았다. HABITAT II는 주거권(Housing right)을 가장 핵심적인 목표로 제시하며 해비타트의 의제(Habitat Agenda)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를 보장하고 거주지를 안전과 건강, 평등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⁵⁹⁾ 또한 주거권과 관련해 불량거주지(slum)와 비공식 주거지의 문제가 다뤄진 반면 도시화에 따른 문제는 종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개도국의 도시화 비율이 여전히 낮았기 때문이다.

HABITAT II가 개최된 이후 도시화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개도국에서 발생하였다. 이에 MDGs는 목표 7 환경의 지속가능성 추구의 하위 목표를 ‘7.D 2020년까지 최소 1억 명의 도시 슬럼 인구의 삶을 개선한다’에서 ‘도시 슬럼 인구의 삶을 개선한다’로 변경하였다.¹⁶⁰⁾ 하지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불량거주지 인구의 비율은 2000년 39%에서 2010년 33%로 감소하였으나 슬럼 인구수는 1990년 약 6억 6천명, 2000년에는 약 7억 6천명, 2010년에는 약 8억 2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¹⁶¹⁾ 불량거주지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159) 박세훈, “해비타트 III와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 내용과 의의,” 『국토』, 제421호 (2016), p. 7.

160) 정지원·송지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p. 42~45.

불구하고 절대 인구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명시적으로 도시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 협약과 관련된 여러 활동 가운데 특히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ICLEI),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SDSN)는 기후변화의 대응에 있어 도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¹⁶²⁾ 2010년대에 들어서는 기후변화의 대응이 중요한 글로벌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도시화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도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일으켜 그 부산물로 다량의 온실가스과 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즉 인구의 증가와 개도국의 급격한 도시화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새로운 도전과제로 인식되었다.¹⁶³⁾ 도시를 별도로 분리된 세부 분야(sector) 또는 이슈로 보고 접근했던 기존 MDGs의 방식에서 벗어나 SDGs는 이를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또는 조정자로 보며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¹⁶⁴⁾

(나) SDG 11의 구성

SDG 11은 ‘포용적(inclusive)이고 안전하며 회복력(resilience)을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의 조성’에 주목한다. SDG 11은 7개의 실행목표와 3개의 이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1)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주거와 교통체계, 도시계획, 2) 문화 및 자연유산,

161)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p. 62.

162) 박세훈,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성립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2016), p. 20.

163) 정지원·송지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p. 41.

164) 방설아·신유승,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 221.

3)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후와 자연재해, 4) 이를 추진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방법으로 구분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주거와 교통체계이다. 11.1은 Habitat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정주권과 관련된 항목으로 이의 목표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정주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불량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11.1.1은 불량주거지에 거주하는 도시의 인구 비율을 지표로 삼고 있다. UN-Habitat에 따르면 도시 불량주거지는 용수 취득의 접근성, 위생환경의 접근성, 토지 소유권 보장, 주택의 내구성, 충분한 거주 공간의 다섯 가지 조건이 결핍된 상황으로 정의된다.¹⁶⁵⁾

11.2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항목으로, 이의 목표는 대중교통체계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경제성장과 포용적 개발(inclusive development)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11.2는 개인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도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중교통은 운송 효율성이 높은 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낮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1.2.1은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령별, 성별, 장애별 인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11.3은 도시화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165) 불량주거지를 판단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①기본적 용수 취득의 접근성(가족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 적절한 가격, 어렵지 않게 가족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 ②기본적 위생환경의 접근성(정화 처리시설이 있고, 적당한 인원이 사용할 수 있고, 공동 화장실 내 개별 부스가 설치되어야 함), ③토지 소유권의 보장(토지 소유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보유하거나, 퇴거로부터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④주택의 구성(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영구적이고 적합한 구조로 건축되어야 함), ⑤충분한 거주 공간(같은 방을 2명 이상이 공유하지 않음). 방설아·신유승,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p. 225~226.

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화는 특히 개도국에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 사회,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도시화의 주요 행위자가 국가로 제한되어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11.3.1은 인구 성장과 토지 이용의 비율을 제시하며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데 주목한다. 11.3.2는 도시계획에 있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국가 중심 발전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문화와 자연유산이다. 11.4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SDG 11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항목은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도시 개발 시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11.4.1은 UNESCO에서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 이외에도 보편적인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에 역점을 둘 것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후와 자연재해이다. 11.5는 도시의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도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하수도, 도로, 소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도시의 경우 국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인구비율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GDP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의 자연재해 경감은 국가 차원의 손실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1.5.1은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구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11.5.2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관련된 지표이다.

11.6은 대기오염과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동시에 열쇠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가 경제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신 온실가스와 폐기물도 배출하기 때문이다.¹⁶⁶⁾ 도시는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난방기구나 교통수단을 통해 대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산업시설과 생활시설을 통해 폐기물도 배출하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수거, 분리,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기오염과 폐기물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보호의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11.6.1은 지자체의 고형 폐기물의 비율에 관한 지표이고, 11.6.2는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기준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11.7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장소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일차적으로 공공을 위해 조성된 공공 공간이나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 설사 공원 및 광장 등과 같은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복잡한 도로망과 교통 체계로 인해 접근성이 결여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불편이 없는 일반 사람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¹⁶⁷⁾ 이에 11.7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공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1.7.1은 도시의 공공장소 비율을, 11.7.2는 도시의 취약계층 현황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7가지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이행수단이다.

166) UN-Habitat,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Nairobi: UN Habitat, 2016).

167) 방설아·신유승, “Goal 11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 231.

11.a는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 역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통계 역량의 부족으로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11.a.1은 인구 다양성, 토지균형개발, 지방 재정강화를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11.b는 재난위기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재난대응 관련 논의는 자연재해 구호와 같은 사후 대응에서 예방 조치 수립 등의 사전 대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¹⁶⁸⁾ 예컨대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of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를 채택하고 재난위험 경감을 위한 국제사회, 회원국,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¹⁶⁹⁾ 효고 행동강령이 재해 대비 및 예방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프레임워크는 재난 예방 조치뿐만 아니라 복원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와는 차이가 있다.¹⁷⁰⁾ 여기서 재난대응과 관련된 복원력이란 재난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지역의 역량을 의미한다. 11.b에서는 이러한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프레임워크의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11.b.1은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프레임워크에 따라 국가 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한 국가의 수를 명시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대응을 강조하고 11.b.2는 지자체 수준의 전략 수립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168) 유엔에서 재난감소는 유엔 재난위험경감사무국(UN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DRR)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69) 센다이 재난위험감소 프레임워크는 7개 성과달성목표, 13개의 지도원리, 4개의 우선 순위를 제시한다. 전략의 목표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이재민 감소와 신체손실 감소, 경제생활 및 보건의료환경 악화 감소, 인류의 사회·과학·문화·환경적 자산 및 기업과 공동체, 국가의 실질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이다. 김명희,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 및 전략의 시사점,” 『한국융합학회논문집』 제11권 제1호 (2020), p. 215.

170) 위의 글, p. 216.

〈표 III-25〉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지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충분하고 안전·저렴한 주택 및 기본 서비스 제공, 그리고 불량거주지(slum) 개선	11.1.1 불량거주지(slum),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1.2 2030년까지 모두에게(특히, 취약계층,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안전·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체계 제공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별, 성별, 장애별)
11.3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통합 및 지속가능한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11.4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노력 강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 [지금 원천별(공공, 민간), 유산 종류별(문화, 자연), 정부 유형별(중앙, 광역, 시군)]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를 대폭 줄이고 세계 총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대폭 감소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하거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6 대기질과 지체체 등의 폐기물 특별 관리를 포함해, 2030년까지 도시화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인구 1인당)을 감소	11.6.1 지체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별)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별, 발생장소별)
11.a 국가 및 지역개발계획을 강화해 도시, 근교도시 그리고 농촌 간의 긍정적인 경제, 사회 및 환경적 연결지 지원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 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 정책 및 계획을 채택·시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2015~2030년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에 맞추어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재난위험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시행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 감축전략에 따라 지체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Global%20Indicator%20Framework%20after%202021%20refinement_Eng.pdf> (Accessed December 14, 2021)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국문 번역은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을 참고하여 작성.

(2) 북한 현황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도시 인프라의 절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통합과 대기오염, 폐기물 관리 등의 환경적인 요소도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세부목표의 연장선 상에서 지표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주거지에 관한 기초 정보와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도시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데다가 취약계층에 관한 통계 자료도 전무하기 때문에, SDGs의 지표를 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SDG 11과 관련된 전반적인 북한의 상황,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 보고서, 국제기구 및 국내 연구기관의 추정치 등을 종합하여 북한의 현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해 관련 지표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I-26〉 SDG 11 도시 인프라, 교통체계, 도시계획(11.1, 11.2, 11.3) 관련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유엔	11.1.1 불량거주지(slum),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N/A	N/A	N/A	N/A
북한	11.1.1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	0.8	0.6	0.5 (2019)
유엔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별, 성별, 장애별)	N/A	N/A	N/A	N/A
북한	11.2.1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구 비율	%	N/A	N/A	N/A
유엔 북한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율	%	1.26	0.67	0.67
유엔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N/A	N/A	N/A	N/A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61~62를 바탕으로 재구성.

첫째, 도시의 인프라와 관련된 주거와 교통체계이다. SDG 11.1.1은 불량거주지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에서는 북한의 일반적인 주택보급률만 추정 가능할 뿐 SDG 지표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VNR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한다.¹⁷¹⁾ 이에 최근 주택 공급의 절대량과 SDG 11.1.1 지표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가구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언론보도 자료 기준 58.8%, 조선중앙연합의 연도별 실적 자료 기준 약 80~90%인 것을 알 수 있다.¹⁷²⁾ 그러나 실제 주거 현황과 통계 수치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주택 공급이 가구 수 증가 규모의 약 20% 수준으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노후 주택을 활용하거나 기존 가구와 동거하는 형태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¹⁷³⁾

북한의 살림집법 제30조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국가 유공자, 사회 핵심노동자)뿐만 아니라 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철거민(도시계획 조치로 철거된 세대), 가구 특성(가족 수, 출퇴근 조건, 거주 조건) 등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배분 비율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¹⁷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획경제에 따라 주택 배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주택의 시장화가 가속되면서, 현재는 돈주에 의한 주택거래 시장의 형성 및 보편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

17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6.

172)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p. 66.

173) 위의 책, p. 66.

174)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392.

이다.¹⁷⁵⁾ 따라서, 경제상황 악화 및 시장화에 따른 불량거주지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SDG 11.2.1는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에 관한 지표이다. 북한의 교통 인프라의 경우,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적정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대적인 의미의 인적, 물적 수송로로서 기능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¹⁷⁶⁾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의 교통에 대해 ‘불비’, ‘불편’, ‘민망’한 수준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교통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관련 시설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¹⁷⁷⁾ 교통 인프라의 경우, 단기간에 급격히 확충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2020년 VNR에서 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국 내에서 현대식 지하철, 철도 트램, 트롤리 버스를 제작해 여러 도시에 공급하고 있으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¹⁷⁸⁾ 또한 교통량의 증가와 과도한 하중으로 도로와 교량이 손상되어 수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 시스템을 형성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SDG 11.3.1과 11.3.2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표이다. 북한의 도시 계획·개발행정은 외견상으로 계획적·중앙집권적 체제에 따라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사실상 ‘민관협력체제’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⁹⁾ 이는

175) 최상희 외,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p. 109.

176) 안병민·성원용,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 연구』(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6), p. 15.

177) 안병민,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와 한반도 교통망 구축방향,” p. 36.

178)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6.

179) 박세훈 외,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안양: 국토연구원, 2016), p. 137.

부동산의 개발, 임대 등에 있어 신흥상인계층(소위 ‘돈주’)의 역할이 증대되고, 이들이 행정과 결탁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⁰⁾ 국가권력과 신흥상인계층은 각각 ‘허가권’과 ‘투자금’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공식적 민관협력’ 관계라고 할 수 있다.¹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가 토지이용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도시계획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의 역할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¹⁸²⁾

〈표 III-27〉 SDG 11 문화, 자연유산(11.4) 관련 지표

구분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유엔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 [자금원천별(공공, 민간), 유산 종류별(문화, 자연), 정부 유형별(중앙, 광역, 시군)]	N/A	N/A	N/A	N/A
북한	11.4.2 자연보호구역 수	개수	4	4	4
북한	11.4.3 천연기념물 수	개수	415	429	429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61~62를 바탕으로 재구성.

둘째, 문화와 자연유산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세 차례 문화유산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¹⁸³⁾ 특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우수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

180) 위의 책, p. 138.

181) 위의 책, p. 138.

182) 박세훈·송지은,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계획행정의 변화,” 『국토계획』, 제52권 제7호 (2017), p. 68.

183)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p. 364.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유네스코에 자국의 문화유산을 등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¹⁸⁴⁾ 또한 2020년 VNR에서는 국가문화유산과 국가경관, 천연기념물이 보호되는 점을 강조하며 자연보호 구역 수(4개), 천연기념물 수(429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¹⁸⁵⁾

북한의 문화유산은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협력 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의 관리체계와 현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SDG 지표에서 설정한 관련 예산과 정부 유형별 (중앙, 광역, 시군)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표 III-28〉 SDG 11 환경보호(11.5, 11.6, 11.7) 관련 지표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유엔 북한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하거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전체	명	0.43	0.59	0.47
		사망	명	0.34	0.29	0.42
		실종	명	0.09	0.3	0.05
유엔 북한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N/A	N/A	N/A	
유엔 북한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 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	N/A	N/A	N/A	
유엔 북한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인구수 가중)	m³당	N/A	N/A	N/A	
유엔 북한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별)	%	N/A	N/A	N/A	
유엔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별, 발생장소별)		N/A	N/A	N/A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61~62를 바탕으로 재구성.

184) 위의 글, p. 364.

18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6.

셋째,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후와 자연재해이다. 북한은 홍수, 태풍,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탓에, 이로 인한 인명피해, 도로·철도 등의 사회 기반시설의 파손과 손실이 심각한 편이다. 최근 발생한 자연재해만 살펴보다라도, 2019년 아시아에서 인구 1천 명당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⁸⁶⁾ 북한은 VNR에서도 2016년 8월과 9월 태풍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2018년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업생산량이 감소했으며, 2019~2020년에는 주택,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기반 시설이 파손되었다고 언급하였다.¹⁸⁷⁾

이처럼 북한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원인으로는 조기 경보 및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취약한 복구 능력 등이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해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회복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에 북한은 체제의 특수성으로 법률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연재해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마련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즉, 북한 스스로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⁸⁸⁾ 현시점에서 국제기구의 통계를 기반으로 SDG 11.5.1, 11.5.2에서 제시한 지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모습은 그들이 VNR에서 UN SDG와 동일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86) “북한, 2019년 인구당 자연재해 피해 아시아 최대,” 『VOA Korea』, 2021.1.26., <https://www.voakorea.com/a/korea_korea-economy_dprk-disaster-damage/6055407.html> (검색일: 2021년 9월 15일).

18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7.

188) 황수환,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2017), p. 264.

〈표 III-29〉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단위: mgr/m³)

구분	전국	도시	농촌
2011	39,1299	40,02476	36,6567
2012	41,44309	42,39938	38,74311
2013	45,08754	46,16151	42,0864
2014	43,35604	44,38065	40,58827
2015	43,2484	44,29544	40,3935
2016	38,8939	39,73871	36,64211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Accessed September 30, 2021); WHO 추정치.

11.6.2는 지역별 미세먼지의 수준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WHO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지역에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비롯해, 주 산업 에너지원인 화석연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가정에서 주 연료로 사용하는 나무, 산림 황폐화로 인한 정화능력 저하 등이 지적된다.

〈표 III-30〉 SDG 11 세부목표 및 지표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유엔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균형개발, (c)지방 재정강화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춘 국가의 수		N/A	N/A	N/A
북한	11.a.1 도시 거주 인구 비율	%	61	62.3 (2019)	N/A
유엔 북한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년도	N/A	2019	N/A
유엔 북한	11.b.2 국가의 재난위험 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	0	0	100

출처: UN DESA Statistics, <<https://unstats.un.org/sdgs/UNSDG/IndDatabasePage>> (Accessed September 30, 20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61~62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III-31〉 SDG 11 지표 현황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1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1.1.1 불량거주지(slum),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가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	1		UN-Habitat	UN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북한 국가 인구조사 • 조선중앙년감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 (연령별, 성별, 장애별)	2	2		UN-Habitat	UNEP, UNECE	×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2	2		UN-Habitat	UNEP	×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춘 도시의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viewed at 8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 8차 IAEG-SDG회의에서 검토(티어 2 구분) • 2017년 11월 Webex 회의에서 검토 후 6차 IAEG-SDG 회의: 도시 정의 분석방법, 시범연구 요구 • 패스트트랙: 5차 IAEG-SDG회의에서 메타 데이터 및 시범연구 요구(티어 3으로 분류) 	UN-Habitat		×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 [자금 원천별(공공, 민간), 유산 종류별(문화, 자연), 정부 유형별(중앙, 광역, 시군)]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C 51 개선 • 2019년 11, 12월 Webex회의에서 검토 (티어 2로 구분) 	UNESCO -UIS	IUCN	×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하거나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다이 조정: 5차 IAEG-SDG 회의에서 검토 (티어 2로 구분) • 1.5.1/11.5.1/13.1.1 반복 	UNDRR	UN-Habitat, UNE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재난 보고서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1월 회의 데이터 접근성 검토(티어 2로 구분) • 2017년 11월 데이터 접근성 검토(티어 1로 구분) • 센다이 조정: 5차 IAEG-SDG 회의(티어 2로 구분) 	UNDRR	UNEP	×	

SDG 11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종합검토에 UNSC 51 개정 내용을 포함 	UN +Habitat, UNSD	UNEP	X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 (인구수 가중)	1	1		WHO	UN- Habitat, UNEP, OECD	O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 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 하는 평균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차 IAEG-SDG회의 검토(티어 2로 구분) 2017년 11월 Webex 회의 검토 후 6차 IAEG-SDG 회의 : 도시의 정의, 분석 방법, 시범사업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 요구 패스트트랙: 5차 IAEG -SDG회의 검토 분석방법 개발 및 시범연구 결과 작업 완료 요구 IAEG-SDG 3차회의: 지표 분석방법의 부재 (티어 3으로 구분) 	UN +Habitat		X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별, 발생장소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차 IAEG-SDG회의 검토(티어 2로 구분) 	UNODC	UN Women, UN- Habitat	X	
11.a.1 (a)인구다양성, (b)토지군 형개발, (c)지방재정강화 를 고려한 국가 도시정책 혹은 지역개발계획을 갖 춘 국가의 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종합검토에서 UNSC 51 대체 2017년 Webex 회의 에서 검토 후 IAEG- SDG 회의: 도시의 정의, 분석방법, 시범 연구에 관한 추가적인 작업 요구 	UN +Habitat	UNFPA	O	

SDG 11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데이터 접근성 검토(티어 2로 구분) • 2017년 데이터 접근성 검토(티어 1로 구분) • 센다이 조정: 5차 IAEГ-SDG회의 (티어 2로 구분) • 1.5.3/11.b.1/13.1.2 반복 	UNDRR	UN-Habitat, UNEP	X	
11.b.2 국가의 재난위험 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차 IAEГ-SDG회의에서 검토(티어 2로 구분) • 센다이 조정: 5차 IAEГ-SDG회의 (티어 3으로 구분) • 1.5.4/11.b.2/13.1.3 반복 	UNDR	UNEP, UN-Habitat		

출처: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September 30, 2021);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p. 9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61~62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목표 및 지표 평가

SDG 11는 SDGs의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People),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Prosperity), 환경과 생태계 분야(Planet)의 세 분야 가운데, 번영과 경제발전에 있어 도시와 관련된 목표이다. 앞서 검토한 북한의 SDG 11의 목표와 지표에 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SDG 11에 관한 북한의 내재화이다. UN은 SDG 11의 목표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을 지닌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의 조성으로 설정하였고, 북한은 '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정보장'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UN SDGs와 북한이 VNR에서 발표한 SDG 11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VNR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다소 부족하다. 북한이 VNR에 포함시키지 않은 세부목표와 지표는 차치하더라도 내재화, 즉 북한의 실정에 맞게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북한이 VNR에서 채택하고 있는 SDG 11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먼저 유엔이 11.1에서 불량주거지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지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및 정주공간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은 개도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경우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총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경제발전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이 VNR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11.2.1에서 유엔은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을 '연령별, 성별, 장애별'로 나누어 지표로 제시한 데 비해 북한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인구 비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개발협력 이슈에서 성평등은 범분야 이슈(cross-cutting issue)로써 모든 분야에 걸쳐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주목받고 있다. 덧붙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가 요구되므로 이에 관한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유엔은 11.4.2, 11.4.3에서 문화 및 자연유산 관리와 관련된 예산을 재원별, 유산 종류별, 정부 유형별로 나누어 지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자연보호구역 및 천연기념물의 수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도시 단위가 아닌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SDG 11에서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부목표로 포함된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문화 및 자연유산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북한이 설정한 지표에는 유엔에서 설정한 지표의 목적과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UN SDGs는 이의 이행 과정에 있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중심 발전 패러다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교훈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의 부족이다. UN SDG 11가 제시한 지표는 총 14개이다. 그러나 북한이 VNR을 포함해 지금까지 발표한 지표는 11.3.1, 11.5.1, 11.a.1, 11.b.1, 11.b.2로 총 5개에 불과하다.

VNR 발표 이전 북한의 도시와 정주화 분야의 1차 자료가 매우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SDGs 규범에 맞춘 정성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중 일부 지표를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SDGs를 이행하려 노력한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시한 SDG 11의 지표 값은 여전히 부족하여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4.2, 11.4.3의 지표에서 그들이 국가 단위의 수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 단위의 지표를 제시한 유엔의 의도와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1.b.2의 경우 과거 데이터의 부재, 세부내용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국가정책에 적용된 지역재난경감 계획 비율의 신뢰도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환경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다. SDG 11과 태풍,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 발표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62.3%로, 여기에 도시의 경제력까지 고려하면 북한 도시의 자연재해는 그들의 경제 상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와 함께 ‘삼중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1.5.1의 지표에도 나타나 있듯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개발협력 이슈 가운데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VNR에서도 환경을 SDGs 4대 우선순위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SDG 11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 관련 지표를 VNR에 포함시켜 앞으로 이에 관한 발표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였다. 또한 11.6.1의 도시별 적정 최종 배출량 및 고형 폐기물 비율에 관한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협력할 것을 암시했으며, 11.6.2의 도시별 미세먼지 파악을 위해 측정 장비를 전국적으로 설치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¹⁸⁹⁾

189)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7.

3. 환경과 생태계 분야

가. SDG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목표: Goal 7과 세부목표

SDG 7은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에 관한 것으로 ‘적정한 가격에 믿을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 에너지 접근을 보장’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의 증대와 청정에너지 기술투자,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적으로도 업그레이드할 것을 제시한다.

에너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조리과 난방 등 가장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경제를 촉발하는 자산으로 사용되어 왔고,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던 인구가 2010년 12억 명에서 2019년 7억5천9백만 명으로 줄었으며, 깨끗한 가정용 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는 30억 명에서 26억 명으로 감소했다. 이들은 여전히 목재, 석탄, 목탄, 그리고 동물 배설물을 사용한 연료에 의존하고 있다.¹⁹⁰⁾

재생에너지 소비량은 같은 기간 16.4%에서 17.1%(2018년)로 늘었고, 개발도상국으로의 청정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제재정흐름은 106억 달러에서 140억 달러(2018년)로 증가했으며, 에너지 원단위는 5.6MJ/USD에서 4.8MJ/USD(2018년)로 절감되었다.¹⁹¹⁾ 에너지의 혜택이 확대되

190) 국제기구 공동보고서(IEA, IRENA, UNSD, The World Bank, WHO), “Tracking SDG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1” (2021), p. 2, <<https://trackingsdg7.esmap.org/>> (Accessed June 2, 2021).

191) *Ibid.*, p. 2.

고 에너지 효율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에너지에 대한 ‘아무도 뒤처지지 않도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차분히 다가가고 있다. 동시에 에너지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늘도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에너지를 생산·소비한다는 것은 에너지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유발을 야기한다. 또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에너지 접근성이 불량하여 에너지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지역별 에너지 자원의 편중은 국제사회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서 전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가연성 연료를 가정용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내 공기오염으로 2012년에 430만 명이 사망했으며 여성과 소녀가 10명 중 6명을 차지하고 있다.¹⁹²⁾

인간 생활에 있어서 생존과 밀접한 에너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효율이 높은 에너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SDG 7의 세부목표는 총 5개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세부목표 7.1은 2030년까지 적절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1976년 밴쿠버에서 개최된 제1회 HABITAT의 인간정주선언은 위생, 물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기초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고는 개도국의 거주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점과 함께 최초로 에너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였다.¹⁹³⁾ 2000년 채택한 MDGs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05년 유엔개발계획, 세계은행에서 공동 발간한 「MDGs

192) 지속가능발전포털, 17개 목표와 방향, <<http://www.ncsd.go.kr/unsdgs?content=2>> (Accessed June 10, 2021).

193) “The Vancouver Declaration On Human Settlements,” From the report of Habitat: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Vancouver, Canada, 31 May to 11 June 1976, pp. 2~3, <https://unhabitat.org/sites/default/files/download-manager-files/The_Vancouver_Declaration_1976.pdf> (Accessed June 3, 2021).

달성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는 8개 MDGs 달성에 현대적 에너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있다.¹⁹⁴⁾ 특히 빈곤과 기아를 종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에너지 서비스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보건, 환경 등의 목표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다만 개발계획과 종종 분리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⁹⁵⁾ 이에 2010년 제65차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이들이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고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청정 기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유엔기구에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이듬해인 2011년, 반기문 총장과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SE4All(Sustainable Energy for All, 지속가능한 에너지)을 공동 발족하였다.¹⁹⁶⁾

보편적 에너지 접근 보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SE4All의 목표는 SDGs에 그대로 이어졌다.

두 번째 세부목표 7.2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원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의 진전이라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집중 조명되었다.¹⁹⁷⁾ 당시 2가지 획기적인 조취를 취

194) Vijay Modi, Susan McDade, Dominique Lallement, Jamal Saghir, *Energy Service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D.C.: ESMAP Report, 2005), pp. 2~4. 주요 내용으로 에너지 서비스 문제를 MDGs와 동등하게 배치할 것,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가정용 연료의 경제성·가용성·안전성을 개선할 것,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제도적·재정적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 있음.

195) *Ibid.*, pp. 73~74.

196) 김재형,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배가를 위한 2030년 로드맵,” 『KOSEN Expert Review』, 2013, p. 1, <<https://www.kosen21.org/info/kosenReport/reportView.do?articleSeq=760759>> (검색일: 2021.9.15.).

197) 최장은, “우리나라의 산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와 향후대책,” 『전기저널』, 통권 제330호 (2004), p. 22.

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 그간 EU국가들이 주도한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높이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EU가 201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비율의 15%로 늘리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미국과 개도국 모임인 77그룹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신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을 신속히 늘리도록 협력하는 수준에서 합의된 것이다.¹⁹⁸⁾ 즉, 빈곤퇴치 수단 중 하나로 새롭게 개선된 기술 활용, 장작의 효율적 사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자원관리와 같은 기존에너지 사용 패턴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제안한 것이다.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는 1981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엔 신재생에너지원 회의에서 국제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탄생하였다. 이후 2004년 본회의와 2009년 창립컨퍼런스에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5차례 준비위원회를 거쳐 2011년 발족하였다. 현재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는 180개 이상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SE4All의 이니셔티브와 함께 SDG 7.2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바이오에너지, 지열, 수력, 해양, 태양열 및 풍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가능 의 광범위한 채택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¹⁹⁹⁾

세 번째 세부목표 7.3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을 두 배로 개선하는 것이다.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반면 에너지 공급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의 우려는 에너지 효율을 적극적으로

198) 위의 글, p. 22; WSSD 요하네스버그, “Plan of Implementation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p. 5, p. 9, pp. 11~12, <https://www.un.org/esa/sustdev/documents/WSSD_POI_PD/English/WSSD_PlanImpl.pdf> (Accessed June 15, 2021).

199) Irena History, <<http://irena.org/history>> (Accessed September 15, 2021).

높여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에 관해서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서 기술발전과 적절한 가격의 청정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것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SDG 세부목표에서는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을 2배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네 번째 세부목표 7.a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증강하고, 에너지 관련한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술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연료 생산비보다 경제성이 높아지면 산림훼손과 자원고갈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SE4All은 2014년 6월 포럼을 개최하여 2024년을 목표로 한 ‘유엔 지속가능한 에너지 10년’을 공표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역에너지 파트너십과 현대적 에너지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지역협력을 논의하였다.²⁰⁰⁾ 즉,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책효과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소기업, 농촌 등의 인큐베이션 센터들은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세부목표 7.b는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및 내륙 개도국이 국제사회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도입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은 1차 산업의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통해 적정가격의 에너지 서비스가 지원되면 농업 생산성과 경제활동을 증대시켜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00) Sustainable Energy for All Forum, “Report,” June 4~6, 2014, pp. 5~6.

유엔의 SDG 7 대비 우리나라의 SDG 7은 신규로 7.4 목표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운송 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두고 있다.

〈표 III -32〉 유엔의 SDG 7와 K-SDG 7의 세부목표

UN SDG 7		K-SDG 7	
7.1 2030년까지 적정가격으로 믿을 수 있고 현대적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	7.1.1 전기이용률/전기보 급률 7.1.2 청정에너지 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 는 인구비율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 (신규)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수(만호)
7.2 2030년 자치 전 세계 에너 지 공급원 구성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 준으로 증대	7.2.1 에너지 소비의 최종 단계에서 신재생에 너지의 비율	7.2 국가 에너지 공급원에 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 재생에너지 발 전 분담률(%) - 1차 에너지 대 비 신재생에너 지 비중(%)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 지 효율을 2배 개선	7.3.1 GDP 대비 1차에너 지 집약도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 지 효율을 향상시킨다	- (신규) 국가에 너지효율지표 (Toe/백만원) - (신규) 건물에 너지효율지표 (Toe/m ² ·년)
		7.4 (신규)운송분야의 에너 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 염을 최소화한다	- (신규) 친환경차 확대수(만대) - (신규) 친환경 버스 확대수
7.a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 지 에너지 효율성 및 향상 된 청정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을 증진하기 위해 국 제협력 강화, 에너지 기반 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 투자 확대	7.a.1 1천 억달러 투입대 비 실제 동원 금액 (2020년~, 연도별)		

UN SDG 7		K-SDG 7	
7.b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및 내륙개도국에 각국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 기반시설 확대 및 기술 증진	7.b.1 GDP대비 지속가능 발전위한 기반시설과 기술에 투입되는 해외투자금액과 에너지 효율성 투자 금액 비율		

출처: UN SDGs, <<https://sdgs.un.org/goals>> (Accessed July 1, 202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서울: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p. 45.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DGs 지표들에 대한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²⁰¹⁾ 보고서에 의하면 50% 이상의 국가에서 특정 지표의 2개 이상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추세 양호’는 4개로 파악되며 모두 티어 1에 속한다. 나머지 2개 지표는 티어 3의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

〈표 III -3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7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지표	티어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7.1.1 전기 접근성	1	√			
7.1.2 청정에너지 의존율	1	√			
7.2.1 신재생에너지 공유	1	√			
7.3.1 에너지 집약도	1	√			
7.a.1 청정에너지 재정투입	3				√
7.b.1 에너지 효율성 투자	3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201)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나) SDG 7의 지표

SDG 7의 지표는 총 6개로 세부목표 7.1은 2개, 기타 세부목표는 각 1개씩 포함한다.

세부목표 7.1의 지표 7.1.1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서 전기접근성 혹은 전기보급률로도 정의되며, 지표 7.1.2는 청정 연료와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을 백분율로 제시한다. 국제 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IRENA, UNSD, WHO와 함께 세계은행이 유엔 통계위원회를 통해 SDG 7과 관련하여 지역·글로벌 집계와 데이터를 수집·처리·배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배포하는 협의 조직으로써 내부 이해 관계자, 국가 통계 기관 및 유엔 지역위원회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전기보급률은 48.5%이며 우리나라는 1990년 100%에 도달했다.²⁰²⁾

지표 7.1.2는 가정에서 조리, 난방 또는 조명을 이용하는 인구 대비 청정연료와 기술을 사용한 조리, 난방 또는 조명을 이용하는 인구 비율로 산출한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모니터링은 WHO가 맡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조리용 에너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1960년부터 170개국과 1개 지역을, 난방용 에너지 데이터는 1963년부터 125개국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있다.²⁰³⁾

글로벌 데이터는 가정용 연료를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현대적이지 않은 고체 연료와 청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비고체 연료 나누어 수집되며 이를 통해 가정용 청정연료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02) 전기보급률 수준은 100% 최적질, 98%이상 녹색, 89%이상 노랑, 80%이상 옐로우, 50%이하 레드수준으로 평가함.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p. 83, p. 275.

203) SDG Indicator Metadata중 SDG 7 지표 7.1.2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Accessed June 15, 2021).

가정에서 야기되는 여타 실내공기질을 오염시키는 에너지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WHO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정 내 미가공 석탄과 등유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가정용 에너지를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청정 연료와 기술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한다. 전 세계의 가정용 청정연료 사용비율은 약 10.8%(2016년)이며,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95%를 달성하고 있다.²⁰⁴⁾

세부목표 7.2의 지표는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이며 글로벌 모니터링을 책임지는 국제기구인 IEA, UNSD, IRENA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수력, 풍력, 태양열, 고체 바이오 연료, 액체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지열, 해양 및 재생 폐기물에서 파생된 에너지를 모두 포함한다.

IEA는 SDG 7.2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가데이터와 국제 비교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기관이다. UNSD는 1950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며 고품질의 에너지 통계와 균형잡힌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국가통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⁰⁵⁾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2019년 기준 2,537GW, 신재생에너지 성장률은 7.43%(전년대비 176GW 증가), 그리고 순 증가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0%이며,²⁰⁶⁾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은 1990년 19.75%에서 차츰 증가하여 2019년 26.62%에 이

204) 조리용 청정연료 및 기술사용 인구비율이 100% 최적질, 85%이상 녹색, 67.5이상 노랑, 50%이상 오렌지, 50%이하 레드 수준임.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p. 83.

205) SDG Indicator Metadata중 SDG7의 지표7.2.1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Accessed June 15, 2021).

206) IRENA, "Renewable capacity highlights", IRENA, March 31, 2020, p. 1, <https://www.irena.org/-/media/Files/IRENA/Agency/Publication/2021/Apr/IRENA_RE_Capacity_Highlights_2021.pdf?la=en&hash=1E133689564BC40C2392E85026F71A0D7A9C0B91> (Accessed June 1, 2021).

르렀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6.04%에서 2007년 1.4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미미한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지만 2019년 5.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²⁰⁷⁾

세부목표 7.3의 지표 7.3.1은 1차 에너지와 GDP의 측면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약도이며, 세부목표 7.a의 지표 7.a.1은 1천억 달러 투입대비 연도별 실제 동원금액(2020년~), 그리고 세부목표 7.b의 지표 7.b.1은 지속가능발전의 기반시설과 기술에 투입되는 해외투자액과 에너지 효율성 투자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유엔의 SDG 7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네 가지의 세부목표를 재설정하였는데 유엔의 세부목표 7.a 및 7.b를 채택하지 않고 ‘7.1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안정적이고 적절한 접근을 보장한다’, ‘7.2 국가 에너지 공급원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증대한다’, ‘7.3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것과 신규로 ‘7.4 운송분야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는 세부목표를 추가하였다.

에너지 및 에너지 통계와 관련한 국제기구로는 IEA, IRENA, UNIDO, UNDP, 세계은행 등이 있다. 또한 IEA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2018년부터 ‘에너지 진행 보고서(Energy Progress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에너지 부문 관리지원 프로그램(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 ESMAP)은 국가별 SDG 7에 대한 정책과 규제지표를 모니터링한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²⁰⁸⁾

207) Enerdata, “세계 에너지 통계 2021 : 국가별 내역(%)” <<https://yearbook.enerdata.co.kr/renewables/renewable-in-electricity-production-share.html>> Accessed September 1, 2021).

208) World Bank and ESMAP, *2020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Washington, D.C.: World Bank, 2020).

〈표 III-34〉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RISE) 지표

구분	규제 지표
전기보급률 /전기이용률	전력화 계획, 독립형 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 전력화 계획의 범위, 소비자 구입가능성, 그리드 전력화 프레임워크, 유틸리티 투명성 모니터링, 미니 그리드를 위한 프레임워크, 유틸리티 신용도
청정 연료	계획, 계획범위, 표준과 라벨링, 청정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재생 에너지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연결 및 사용, 재생 에너지 확장 계획, 거래상대방 리스크,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 및 규제 지원, 탄소 가격 책정과 모니터링, 재정 및 규제 인센티브의 속성
에너지 효율	국가 에너지 효율화 계획, 교통 부문, 에너지 라벨링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인센티브 및 의무: 공공 부문, 에너지 효율 기관, 탄소 가격 책정 및 모니터링, 건물 에너지 규정,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인센티브 및 위임: 유틸리티, 인센티브 및 위임: 산업 및 상업 최종 사용자

출처: World Bank, ESMAP, 2020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p. 5.

우리나라는 유엔 SDG 7.1.1 지표인 전기보급률이 이미 100%이며 지표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복지정책인 에너지바우처²⁰⁹⁾ 수급 가구수로 수정하였다. SDG 7.2.1의 지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담률(%)과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율(%)로 이원화하였으며, 세부목표 7.3의 경우에도 국가 에너지효율지표(Toe/백만원)와 건물에너지효율지표(Toe/m²·년)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세부목표로 신설한 7.4에 대한 지표로는 친환경차 확대수(만대), 친환경 버스 확대 현황을 적용하고 있다.

209)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복지RO,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이용권(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소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원정책과임.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2015년 겨울에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 여름 바우처를 신설하여 여름/겨울 모두 지원함. 보건복지부,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2021.9.3.,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2393>> (검색일: 2021.9.10.).

우리나라는 K-SDG 7의 데이터구축을 위해 국가에너지통계종합 정보시스템(www.kesis.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너지 밸런스, 주요 에너지 지표, 1차 에너지공급, 최종에너지 소비를 비롯해 석유/석탄/가스/신재생/전력·열/온실가스/소비효율 등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UNSD는 SDG 7과 관련하여 ‘에너지 데이터 통계연감 2020’에서 에너지 생산총량, 에너지 소비총량, 에너지 무역수지, GDP 대비 에너지 강도, 원유생산, 원유 무역수지, 정유제품생산, 석유제품 무역수지, 석유제품 국내 소비, 천연가스 생산, 천연가스 무역수지, 천연가스 국내소비, LNG무역, 석탄/무연탄 생산량, 석탄/무연탄 무역수지, 석탄/무연탄 국내소비, 전력생산, 전력 무역수지, 전력 국내 소비, 전기 발생 중 신재생 전기 분담률, 풍력/태양열 전기생산 분담률, 연료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강도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2) 북한 현황

북한은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수력·화력 발전소의 설비가 노후하고 비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 등으로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에너지 이용률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다. 주요 에너지 공급원 가운데 수력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은 석탄생산량 감소로 부수적인 발전 공급원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수력발전소는 가뭄이 길어지는 동절기에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기후적 영향이 커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²¹⁰⁾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과 주민에 대한 에너지 공급 수준은 1990년 이전보다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210) 가뭄이 심했던 2015년 수력 발전량은 100억kWh로 전년의 3/4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총발전량과 1인당 전기이용량도 상대적으로 감소함.

북한의 발전전력량은 2010년 237kWh에서 2019년 238kWh로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18.6% 증가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23.7배에 이를 만큼 발전전력량의 격차가 크다.

에너지 소비량에 있어서도 북한은 2010년 대비 10년간 오히려 12.1% 감소한 실정이며, 특히 2015~2016년에는 재해피해로 인한 수력발전 감소로 에너지 소비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4.8%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북한 대비 약 22배 가량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실정이다.

〈표 III-35〉 남북한 발전전력량(단위: 억 kWh)과 1차 에너지 소비량(단위: 천Toe)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전량	남한	4,747	4,969	5,096	5,171	5,220	5,281	5,404	5,535	5,706	5,630
	북한	237	211	215	221	216	190	239	235	249	238
에너지 소비량	남한	264,053	276,997	278,325	279,623	282,423	286,921	293,778	302,066	307,557	303,092
	북한	15,662	12,598	12,284	10,630	11,050	8,700	9,910	11,240	13,850	13,770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do>> (검색일: 2021.10.10.).

북한은 에너지, 즉 전력에 대한 국가적인 확충의지로 1995년 전력 생산 원칙, 전력 시설과 공급 등에 관한 「전력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 「에네르기관리법」을 제정하여 에너지 공급계획과 소비계획 수립, 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규정, 중소형 발전소 건설,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 관리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중소형 발전소와 총 발전용량 950MW 규모의 대규모 다단계 수력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화력발전소의 기술을 개선하고 증설을 추진했다. 국가 전력망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구축하고 모든 단위 및 가구에 LED 전구를 도입하는 등 이행을 독려해 왔으나 2016년 이후 계속

던 폭염과 가뭄은 북한의 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²¹¹⁾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면서 2013년에 「재생에너지관리법」을 제정하였고 풍력 발전의 비중을 10%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강조하면서 ‘자연에너지연구소’와 ‘조선 녹색후원기금’을 설립해 해외투자를 유도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²¹²⁾ 특히 2044년 기준 500만k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려는 의지를 표방하였다.²¹³⁾ 실제로 지리적으로 유리한 풍력자원을 활용하고자 단천, 신의주, 심지연, 라선 특구 등을 중심으로 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과 100kW급 중규모 풍력발전 터빈과 300W~10kW급 풍력발전기를 개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업이 외자 유치를 기반으로만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최근의 국제여건상 실질적인 건설로 추진하는 것은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에너지 여건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만큼 열악한 수준으로 북한 당국도 SDG 7과 연계하여 에너지 문제를 중요한 국가 이슈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SDG 7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되었던 제7차 조선로동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중기경제계획인 국가경제발전5개년

211)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너지관리법」(1998.2.4. 채택 제108호 1998.12.3. 개정 제182호), <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21&bbsSubId=007> (검색일: 2019.7.1.).

212) “北 김정은은 왜 ‘자연에너지’를 강조하나?” 『프레시안』, 2015.4.1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5548#0DKU>> (검색일: 2021.8.30.).

213) 곽태중, “북한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향,” 『KIET』, 18-27 (2018), p.24;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후 ‘재생에너지 확대할기,’” 『전기신문』, 2019.3.4.,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551684069174617097>> (검색일: 2021.6.10.).

전략(2016-2020)에서 접목해 볼 수 있다.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은 북한의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인민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 부문 간의 균형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²¹⁴⁾ 이 때 에너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적시하면서 인민경제 선행 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 세우고 농업,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²¹⁵⁾ 또한, 2019년 10월 개최된 UNESCAP에서 SDGs에 관하여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6개국이 참여한 ‘동북아 이해관계자 포럼’이 개최되어 SDGs 이행현황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알려졌으나,²¹⁶⁾ 공식적인 북한의 SDGs 이행실태보고서인 VNR은 2021년 6월 25일에 처음 보고되었다.

북한의 VNR에 따르면 SDG 7은 ‘모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으로 정하고 있어 유엔 SDG 7의 세부목표를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²¹⁷⁾

첫 번째 세부목표 7.1은 2030년까지 수력과 화력을 합리적으로 결합한 전력생산과 원자력·조력 발전 비율을 제고하는 등 국가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소관 기관은 전력공업성(Ministry of Electric Power Industry: MoEPI), 채취공업성(Ministry of Mining Industry: MoMI) 및 국가과학원(State Academy of Sciences: SAoS)으로 지정하고 있다.

214) 김기섭 외,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3집 1호 (2020), p. 90.

21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4&koreanChrctr=&dicaryId=238>> (검색일: 2021.9.15.).

216) Sangmin Nam, “SDGs Implementation in DPRK,”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ctober 15~16, 2019, p. 7.

21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3.

둘째 세부목표 7.2는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발전 용량을 증가하고 천연 에너지 자원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북한의 국가 여건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었으며 채취공업성과 국가과학원에서 담당한다.

세 번째 세부목표 7.3은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배 향상시키는 것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는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ssion: SPC) 및 국가과학원 등의 수준에서 소관함으로써 정책 및 연구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다.

〈표 III-36〉 북한의 SDG7 목표와 소관기관

국가 SDG 7 Goal	세부목표	소관기관
7. 모두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 보장	7.1 2030년까지 수력과 화력을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원자력 및 조력 발전의 비율을 높여 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 (NDGs와 통합한 세부목표임)	MoEPI MoMI SAOS
	7.2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발전 용량 증가 및 천연 에너지 자원 사용 확대(NDGs와 통합한 세부목표임)	MoMI SAOS
	7.3 2030년 목표의 전 세계 에너지 효율 개선율 2배 향상	SPC SAOS Each level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3.

〈표 III-37〉 북한의 SDG 7 지표와 수치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7.1.1 전기이용 인구비율	%	36.6	36	34.6 (2019)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비율	%		10.3 (2017)	
7.2.1 최종에너지소비 총량중 신재생에너지 분담률	%	14.5(2015) 12.1(2016)	9.3	10.8
7.3.1 GDP 대비 1차 에너지 집약도	GJ/1,000\$	35	31.5	28.7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북한의 SDG 7의 지표는 유엔 SDG 7의 지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표 7.1.1 전기이용 인구비율이 2015년 36.6%, 2018년 36%, 2019년 34.6%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북한은 2017년 전국의 99.7%를 커버하는 국가전력망을 구축했지만,²¹⁸⁾ 에너지 생산설비가 제한적으로 가동되거나 가동 중단 상태에 있는 등 전력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전기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²¹⁹⁾ 북한의 총 발전량은 우리나라의 약 4.2%에 불과하다.²²⁰⁾

무엇보다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력 에너지 공급원인 수력·화력발전소의 비효율적인 발전공정과 노후 설비를 개선해서 발전설비의 출력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지표 7.1.2의 청정 연료와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은 여전히 낮고 발전 속도 역시 더딘 실정으로 2017년 기준 국가 10.3%, 도시 15.8%, 그리고 농촌에서 1.5%로 제시되었다. 도시 지역은 대다수 조리·난방용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반면, 농촌의 가정은 대부분 땔감과 농작물에 의존하고 있어 깨끗한 연료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은 신재생에너지 장비와 기술도입을 장려하고 태양광 발전기술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지표 7.2.1의 북한의 전체 에너지 대비 신재

218)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27.

219) 2018년 에너지공급규모는 1,422만TOE로 1990년 2,396만TOE의 59% 수준에 불과함. 북한정보포털, “전력개요,” <<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 (검색일: 2021.10.4.).

220) 2019년 기준 북한의 발전량은 238억 kWh, 우리나라는 5,630억 kWh임. 북한정보포털, “남북한 비교통계: 발전전력량,”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do>> (검색일: 2021.9.20.).

생에너지 비중은 2015년 14.5%로 세계 평균 18%보다 낮으며 2019년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적잖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²²¹⁾

정부 차원에서는 2014년, 875kW 용량의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시범 운영하고 국가 풍력자원 지도와 풍력자원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태양열 난방, 바이오 가스 발생, 지열 난방 시스템 및 왕겨 가스 발생 시스템이 개발 및 도입되었다. 1,200kW 규모의 파일럿 조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300MW 규모의 조력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지표 7.3.1 GDP 대비 1차 에너지 집약도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생산에 사용되는지를 파악해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 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2015년 35 GJ/1000\$에서 2020년 28.7GJ/1000\$로 감소하고 있어 다소 개선되었다.

북한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는 전력공업성(MoEPI)와 중앙통계국(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BS)에서 지역별 배전소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전력 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북한의 SDG 7과 관련한 정책적 전략은 첫째, 5개년계획의 발전목표를 달성할 것, 둘째, 국가의 발전 기지를 선구적으로 건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것, 셋째, 국가통합전력망 관제시스템 구축과 에너지제로·탄소제로 등과 같이 국민경제를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할 것, 넷째, 청정 연료 및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담겨있는 관련지표로는 1차 에너지 총공급량 및 1차에너지 1인당 공급량(2019년), 전기이용률(2018년), 원유수입량/정제능력(2019년)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하는 북한통계지표에는 원유수입량 미 정제능력, 1차

2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에너지 공급(열량), 1차에너지 총공급량 및 1인당 공급량, 발전설비용량, 발전전력량 등이 있다.

UN SDG 홈페이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SDG 7 지표의 이행 실태에 따르면 전기접근성의 현황은 열악한 수준, 즉 ‘중대한 도전’에 속하며 추이는 ‘적당히 향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리용 청정연료 및 가전 접근성은 ‘중대한 도전’과 ‘정체’상태로 분석하였다. 반면 총전력대비 전력/난방 연소시 CO2배출량에 있어서는 현황상 ‘도전유지’, 추이상으로는 ‘SDG 성취’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국가정책과 실행의 결과라기보다 전력발전량,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8〉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7의 지표 성과

지표	수치	연도	현황	추이
전기 접근성(인구율%)	48,5	2018	●	↗
조리용 청정연료&가전 접근성(인구율%)	10,8	2016	●	→
총 전력량 대비 전력/난방의 연소시 CO ₂ 배출량 (MtCO ₂ /TWh)	1,0	2018	●	↑

출처: DPRK, “Performance By Indicator,”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rk>> (Accessed September 5, 2021).

(3) 목표 및 지표평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지역과 국가의 산업경제를 운용하는 기반이며 개인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지지하는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IT 기반의 전기자동차,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IoT), AI 등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그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에너지 공급원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CO₂, 미세먼지, 온실가스의 발생은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청정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에너지의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에너지 목표와 지표에 관하여 평가하면 첫째, 북한의 SDG 7 데이터가 2015년, 2018년, 2020년의 3개년도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정연료와 기술의존 인구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2017년도만 제시되고 있는 등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보기는 힘들다.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통계전담기구인 중앙통계국을 중심으로 국가주요지표에 대한 정례적인 통계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공식적으로 제출한 북한의 첫 번째 VNR상 에너지 관련 지표의 통계수치는 그간 국제기구와 연구자료를 통해 발표된 북한의 에너지 지표 데이터와 적잖은 괴리가 있다. 전기이용률과 신재생에너지 분담률의 지표를 사례로 들면 북한의 VNR 자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로 제시되어,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확보한 데이터와 북한 당국이 보고한 데이터 간의 정확성과 신뢰도가 현저히 낮다. 향후 북한 중앙통계국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재정지원과 교육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IEA, IRENA, OECD, 세계은행 등이 일관성 있는 통계자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한의 친환경적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 지표 데이터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한다. 지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력공급량과 이용률, 전력설비 노후 등으로 인한 에너지 접근성,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낙후된 실정이다.

SDGs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인 ‘아무도 뒤쳐지지 않도록’ 북한 주민의 에너지 결핍에 대하여 몇가지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전력설비 노후도 지표’, ‘전력시설의 생산성 지수’, ‘에너지 그리드 효율성 지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에너지 복지수준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적용한 3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지표를 중장기 과제로 신설하여 적용하되 단계별로 추진함으로써 현실적인 부담은 줄이고 장기적인 국가에너지계획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종합계획인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에 에너지 정책방향을 설정했지만 ‘에너지’중심전략은 아니며, VNR에서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은 소관기관 외의 국가계획위원회와 국가과학원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적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에너지 계획은 자체 계획으로서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전담기관인 전력공업성이 주도하여 ‘중장기 국가에너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장기 비전과 전략이 계획으로 수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 주거, 환경, 기후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과 연계하여 연차별 사업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와 관련한 유엔의 세부목표는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달성된 목표로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 모두 새로운 목표와 지표로 대체되었다. 우리나라는 친환경적 에너지의 공급은 충분히 달성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소비와 지속가능한 에너지관리 시스템의 측면에서 세부목표와 지표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축적된 에너지 정책과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북한의 친환경적 에너지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필요하다.

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 차원의 봉쇄와 더불어 에너지 분야의 부문별 봉쇄로 이어졌다. 이는 국가별, 계층별 에너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에너지 효율을 위한 청정에너지와 연구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현재 에너지 산업의 큰 흐름은 디지털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에너지 산업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III-39〉 북한의 에너지 지표 격차: VNR과 통계청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전기이용률	북한의 VNR	%	36.6	36	34.6 (2019)
	우리나라의 통계청	%	41.2	48.5	-
신재생에너지 분담률	북한의 VNR	%	12 (2016)	9.3	10.8
	우리나라의 통계청	%	23.1	-	-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통계청, “북한통계자료” 각 년도,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dctChartMain.do?menuId=M_01_02> (검색일: 2021.6.30).

나. SDG 12: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1) 목표 및 지표 개관

SDGs의 목표 12는 SDGs의 사람(People), 지구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 가운데 지구환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이다. 환경 관련 목표는 다시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육상생태계를 내용으로 하는 자연 및 자원 관련 환경지속성과, 물과 위생, 도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내용으로 하는 인간 정주 관련 환경지속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목표 12는 이 가운데 정주 환경에 포함되는 가치를 추구한

다.²²²⁾ MDGs의 목표 7은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의 세부목표 7.a의 지속가능발전원칙을 국가 정책 및 계획에 통합시키고 환경자원 손실을 복원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계된다. 인간 정주 환경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 12번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을 추구한다.’²²³⁾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은 지속적인 환경파괴의 원인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과 소비 패턴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소비 양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994년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한 오슬로 원탁회의(Oslo Roundtable on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SCP란 ‘서비스와 제품의 사용이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며, 서비스와 제품의 전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및 폐기물과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미래세대의 요구충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²²⁴⁾ 2002년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SSD)에서는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JPoI) 채택을 통해 ‘모든 국가가 소비와 생산 양식을 바꾸어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는 것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하였다.²²⁵⁾ 2012년 Rio+20 정상회의에서

222) 홍은경, “SDGs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국제개발협력』, 제11권 2호 (2016), pp. 20~21.

223) 환경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pp. 70~71;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unsdgs>> (검색일: 2021.5.21.).

224) 이효정, “식량 손실과 낭비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SDGs 12) 달성,” 『Sectoral Issue Report』, 2017-3호 (2017), p. 5.

225)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행계획, <https://www.un.org/esa/sustdev/documents/WSSD_POI_PD/English/WSSD_PlanImpl.pdf> (Accessed May 21, 2021); 김지현,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p. 240.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을 채택하였는데 목표 12는 이와 연계되어 있다. 목표 12번에 언급된 개념은 목표의 이행 주체에 따라 다시 생산자 및 소비자, 정부, 국제협력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SDG 12는 총 11개의 세부목표와 13개의 이행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11개의 세부목표를 생산자 및 소비자, 정부, 국제협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자 및 소비자와 관련된 세부목표는 전 세계 인구 1인당 음식물 폐기물 절반 감량 및 식품 손실 감소(12.3), 화학물질 및 유해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감소(12.4),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감축(12.5),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활동 및 주기적 정보 보고(12.6)이다. 정부와 관련한 세부목표는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12.2), 지속가능 공공조달 시행 촉진(12.7),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12.8)하는 것이다. 국제협력과 관련한 세부목표는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에 관한 10개년 계획(10YFP)을 이행(12.1),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을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12.a),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행(12.b), 개발도상국의 여건을 고려하면서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개선과 폐지(12.c)이다.

〈표 III-40〉 SDG 12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11개)	이행지표(13개)
12.1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10년 주기 프로그램 이행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화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	12.2.1 물질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12.2.2 국가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가 자원 소비량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식량낭비를 1/2로 줄이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식량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량 손실 감소	12.3.1 (a) 식량 손실 지수 (b) 식량 낭비 지수
12.4 2020년까지 합의된 국제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에 대해 생애주기 동안 친환경적인 관리를 달성하고, 이들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 물, 토양으로의 배출을 크게 감소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12.4.2 (a) 1인당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b)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12.6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채택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주기에 통합하도록 독려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12.7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 촉진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들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세부목표(11개)	이행지표(13개)
12.a 개발도상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을 지행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12.b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 및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12.c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상황에 따라 시장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	12.c.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출처: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세부목표 및 지표』, p. 14;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검색일: 2021.5.4.);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을 활용하여 일부 수정.

(가) 생산자 및 소비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관련된 SDG 12의 세부목표는 12.3, 12.4, 12.5, 12.6이다. 세부목표 12.3은 전 세계 인구 1인당 식품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고, 식품 손실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최초의 국제회의인 ‘인류 환경에 관한 유엔 제1차 회의’를 통해 유엔은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Human Environment)’을 채택하고, 인류 환경에 관한 행동 계획(Action Plan for the Human Environment)을 승인하는 한편, UNEP 설립을 권고하고, 회의 개최를 기념해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하였다.²²⁶⁾ 동 행동계획 22조에서는 FAO의 폐기물과의 전쟁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FAO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FAO/World Food Summit)에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과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 있는 음식에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언제나 접근가능한 상태’로 정의하였다.²²⁷⁾ 나아가 식량안보의 네 가지 구성 항목은 ① 가용성(Availability), ② 접근성(Access), ③ 유용성(Utilization), ④ 안정성(Stability)이며, 이 가운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급망(Food Supply Chain)을 갖추고 수확 후 식량 손실 및 국가와 각 가정에서 식량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²⁸⁾ 이에 FAO는 식량안보위원회(Committee on Food Security: CFS)를 통해 식량손실 및 낭비(Food Losses and Waste: FLW) 감축을 추진하고, 식량손실지수(Food Loss Index), 세계 식량손실지수(Global Food Loss Index) 산출법과 함께 1년 단위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²²⁹⁾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는 식량 손실과 폐기물 의정서(Food Loss and Waste Protocol) 캠페인을 실시하여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인 식량 손실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챔피언

226) UN,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 Stockholm, 5~16 June 1972, <<https://undocs.org/en/A/CONF.48/14/Rev.1>> (Accessed May 27, 2021).

227) 임영훈 외,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정책구상』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p. 9.

228)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27.).

229) FAO, “Metadata of Indicator 12.3.1 Global Food Loss Index,” <<http://www.fao.org/3/CA2593EN/ca2593en.pdf>> (Accessed May 28, 2021).

12.3 이니셔티브(Champions 12.3 initiative)를 발표하기도 하였다.²³⁰⁾ 세부목표 12.3은 기아 종식, 식량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과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를 목표로 하는 SDG 2 전체와 연계된다.

세부목표 12.4는 2020년까지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의 친환경적 관리와 감소를 목표로 한다. 1989년 UNEP의 후원 하에 채택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엄격히 규율하는 최초의 범세계적 환경협약으로 당사국들에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²³¹⁾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도 유해폐기물 발생 최소화가 포함되었다. UNEP는 2004년부터 UNSD와 함께 2년마다 인당 유해폐기물과 유해폐기물의 처리비율 및 처리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²³²⁾ 세부목표 12.4는 2030년까지 유해화학물질, 대기, 수질, 토양의 공해와 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 건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3.9와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6.3과 연계된다.

230) UNEP, “‘챔피언 12.3’ 이니셔티브, 세계적인 식량 손실과 낭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촉구.” <https://unep.or.kr/sub/sub04_02.php?boardid=news&mode=view&idx=1225> (Accessed May 28, 2021).

2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제환경협약.” <https://www.konetic.or.kr/dataroom/dataroom_view.asp?unique_num=1778&tblcode=EUN_ENV_MORGUE> (검색일: 2021.5.28.)

232) UNSD, “Questionnaire on Environment Statistics.” <<https://unstats.un.org/unsd/envstats/questionnaire>> (Accessed May 28, 2021).

세부목표 12.5는 2030년까지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소를 목표로 한다. 유엔은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초 원칙을 제시하면서 자원의 재생가능성을 주요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02년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제품 설계에 적용하여 산업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요람에서 요람으로(C2C)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중요성이 본격 강조되기 시작하였다.²³³⁾ UNIDO 역시 기존의 ‘채취-생산-소비(take-make-waste)’로 이루어지는 선형 경제(Linear Economy)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역설하고 있다.²³⁴⁾ 한정된 천연 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는 순환경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세부목표 12.5는 2030년까지 오염 감소, 유해 화학물질 투기 근절 및 배출 최소화를 통해 미처리된 하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 및 안전한 재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6.3과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하여 물 및 위생 관련 활용과 프로그램에 있어 국제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6.a와 연계된다.

세부목표 12.6은 기업이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을 도입하고 지속가능성 정보를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독려할 것을 목표로 한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을 위해 선

233) 이인식, “자연에서 답을 찾는 순환경제,” 『나라경제』, 2014년 11월호 (2014), p. 65.

234) UNIDO, *Rebooting Quality Infrastructure for a Sustainable Future*, (Vienna: Department of Trade, Investment and Innovation (TII), 2020), p. 86, <https://tii.unido.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Rebooting%20QI%20for%20a%20Sustainable%20Future_Korean.pdf> (Accessed May 28, 2021).

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업 간 장기적 협력 협정 추진을 권고하면서 다국적기업이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술력의 이전과 훈련된 인적 자원 및 인프라 구축에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²³⁵⁾ 1997년 UNEP와 미국의 NGO인 CERES가 공동으로 암스테르담에 유엔 협력기관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창설하고, 2000년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1999년 다보스포럼에서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엔 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2000년 7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를 창설하였다.²³⁶⁾ 한편,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2010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발표하였다.²³⁷⁾ 이는 공공 및 민간분야의 모든 형태의 조직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최초의 국제표준이다. 'ISO 26000'은 세계인권선언, ILO협약, 기후변화협약, OECD 소비자분쟁해결권고, 유엔 글로벌콤팩트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기존의 국제지침들을 통합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합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또한, 2006년 유엔 산하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ing: PRI)이 제정되면서 국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져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ESG 논의도 본격화되었다.

23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Agenda21.pdf>> (Accessed May 30, 2021).

236) 유엔 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5.30.).

237)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2013), p. 5.

(나) 정부

정부와 관련한 SDG 12의 세부목표는 12.2, 12.7, 12.8이다. 세부목표 12.2는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질 발자국(Material Footprint)은 이러한 자원 생산성(resource productivity)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질 발자국은 최종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 추출된 총 원자재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특정 국가의 자원에 대한 최종 수요(소비와 자본투자)가 국제적인 자원 추출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물질적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이다. 세계 물질 발자국은 인구와 경제 성장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이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 자원 소비량(Domestic Material Consumption: DMC)이란 1년 동안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총자원량을 의미한다. DMC는 국내 환경에서 투입되는 자원의 총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계산한다.²³⁸⁾ 세부목표 12.2는 2030년까지 국경 간 협력을 포함하여 통합된 물 자원 관리를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6.5, 2030년까지 모든 국가가 역량에 따라 자원효율성이 높고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기술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자하는 세부목표 9.4와 연계되며, SDG 14 해양생태계, SDG 15 육상생태계와도 관련성이 깊다. 세부목표 8.4와는 이행지표가 중복된다.

세부목표 12.7은 국가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 관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 정부는 스스로도 소비자인 동시에 기업과 일반의 소비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시하면서 환경친화적

238)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20 국가지속가능 보고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세종: 환경부, 2020), pp. 144~145.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정책 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²³⁹⁾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행 계획(JPoI)에서도 환경친화적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공공조달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⁴⁰⁾ 2003년 JPoI 이행 지원을 위한 마라케쉬 회의(Marrakech Process Meeting)에서 SCP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해 마라케쉬 테스크포스(Marrakech Task Force on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MTF on SPP)를 구성하여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종료되었다.²⁴¹⁾ 이는 지속가능 공공조달 협의회(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Initiative: SPPI)로 이어져 운영되고 있다. 한편, 2012년 UNC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의 일환으로 2014년 지속가능 공공 조달(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 SPP)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²⁴²⁾ SPP 프로그램은 UNEP, ICLEI, 한국환경산업기술원(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KEITI)이 공동 주관하여 지속가능 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²⁴³⁾

239)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Agenda21.pdf>> (Accessed May 30, 2021).

240)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행계획, <https://www.un.org/esa/sustdev/documents/WSSD_POI_PD/English/WSSD_PlanImpl.pdf> (Accessed May 31, 2021).

2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제74-2호 (2012), p. 3.

242)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전 과정에 걸쳐 가격에 합당한 가치를 충족시키며, 구매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환경부하는 감소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16/5&Lang=E> (Accessed June 2, 2021).

243) UNEP 한국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unep.or.kr/sub/sub05_01.php?boardid=planet&mode=view&idx=1176&sk=&sw=&offset=30&category=>> (검색일: 2021.5.31.).

세부목표 12.8은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77년 UNESCO와 UNEP는 세계 최초의 정부 간 환경교육회의를 공동주최하여 환경교육의 역할, 목표, 지도원칙 등을 담은 환경교육 선언인 트빌리시(Tbilisi) 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에서는 이 트빌리시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쇄신과 공공인식의 증진 및 훈련의 촉진을 제안하였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선언 이행 계획(JPoI)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2012년 UNC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에는 소비자 정보 프로그램(Consumer Information Programme)과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교육 프로그램(Sustainable Lifestyles and Education Programme)이 포함되어 있다.²⁴⁴⁾ 한편, 세부목표 12.8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의 기여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세부목표 4.7과 이행지표가 중복된다.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 관련 SDG 12의 세부목표는 12.1, 12.a, 12.b, 12.c이다. 세부목표 12.1은 개발도상국의 개발역량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에 참여하되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을 이행하는 것을 추구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UNEP는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우선 추진할 5대 과제로 ‘관광

244) 유엔 글로벌컴팩트 홈페이지 참조,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6.1.).

(생태관광 포함), ‘생활방식 및 교육’, ‘공공 조달’, ‘건축’, ‘소비자 정보’를 제시하고, 국가별 수요에 따른 구체적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UNEP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11년에는 전 세계 관광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통합시키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 간 정보공유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을 출범시키기도 하였다.²⁴⁵⁾ 또한, 녹색 여권 캠페인(green passport campaign)을 통해 여행자들이 여행지의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여행자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배포하였다.²⁴⁶⁾ UNEP는 생활방식 및 교육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의 책자 발간 및 UNESCO와 공동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속 가능한 공공조달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조달 우수 사례 확산 및 개도국 역량강화를 위해 2012년 지속가능 공공조달 협의회(SPPI)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⁴⁷⁾ UNEP는 지속가능 건축을 위해 2006년 ‘지속가능 건축과 기후 이니셔티브(Sustainable Building and Climate Initiative: SBCI)’를 출범시키고,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건축 시스템을 촉진하고 있다.²⁴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 주택 계획(Sustainable Social Housing Initiative: SUSHI)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45) UN SDGs 홈페이지 참고,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7411>> (Accessed June 2, 2021).

2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환경부 제출 최종보고서, 2013. pp. 9~10.

247) UNEP 홈페이지 참고, <<https://www.unep.org/explore-topics/resource-efficiency/what-we-do/sustainable-public-procurement-initiative>> (Accessed June 2, 2021).

248) UNEP 홈페이지 참고, <<https://www.unep.org/explore-topics/resource-efficiency/what-we-do/cities/sustainable-buildings>> (Accessed June 2, 2021).

UNEP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으로의 행동 변화를 독려하기 위해 에코라벨링(Eco-labelling) 확산을 촉진하는 등 소비자 정보 관련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²⁴⁹⁾

세부목표 12.a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지향할 수 있게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UNEP는 2012년 UNCSD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계획(10 YFP)’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탁기금 운영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개발도상국에서 10YFP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²⁵⁰⁾

세부목표 12.b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와 상품을 홍보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발전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3년 JPoI 이행 지원을 위한 마라케쉬 회의(Marrakech Process Meeting)에서 SCP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2009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속가능 관광 개발에 관한 국제 태스크포스(International Task Force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TF-STD)를 마련하였다. 이후 이는 UNEP 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²⁵¹⁾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Tourism)으로 발전하였다.²⁵²⁾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세부목표 8.9 및 세부목표 11.4와 연계된다.

249) UNEP 홈페이지 참고, <<https://www.unep.org/explore-topics/resource-efficiency/what-we-do/responsible-industry/eco-labelling>> (Accessed June 2, 2021).

250)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6.2.).

251) 10YFP 지속가능 관광 프로그램은 자원 효율화 및 저탄소 관광계획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기후 현실에 적응하는 생활과 생태계 및 문화유산 보존, 빈곤 완화 지원을 목적으로 함. UN 홈페이지, <https://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CONF.216/5&Lang=E> (Accessed June 2, 2021).

252) UN SDGs 홈페이지 참고,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artnership/?p=7411>> (Accessed June 2, 2021).

세부목표 12.c는 개발도상국의 특정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면서 빈곤층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발도상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환경 영향을 반영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국가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는 것을 추구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부터다. 동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²⁵³⁾ 2011년 유엔사무총장 글로벌지속성 고위급 패널(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Global Sustainability)이 발간한 ‘회복력 있는 사람, 회복력 있는 지구: 선택할 가치가 있는 미래 (Resilient People, Resilient Planet: A Future Worth Choosing)’ 보고서²⁵⁴⁾에서 빈곤층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 왜곡을 제거해나가면서 2020년까지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채택된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에도 과도한 에너지 소모를 초래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합리적 개선을 재확인하였다.²⁵⁵⁾

253) 외교부, “2009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결과,” <https://www.mofa.go.kr/www/brd/m_3953/view.do?seq=33886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 (검색일: 2021.6.2.).

254) UNESCO 홈페이지, <https://en.unesco.org/system/files/GSP_Report_web_final.pdf> (Accessed June 2, 2021).

255) 유엔글로벌콤팩트 홈페이지 참고, <<http://unglobalcompact.kr/>> (검색일: 2021.6.2.).

(2) 북한 현황

북한은 SDG 12 관련 국가 목표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보장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은 VNR을 통해 경제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²⁵⁶⁾

이하에서는 북한의 SDG 12 관련 현황을 앞 절에서와 같이 생산자 및 소비자, 정부, 국제협력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생산자 및 소비자

세부목표 12.3의 이행지표인 식품손실지수와 관련한 북한의 지표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북한은 VNR에서 농업 분야에서 유기농법 및 보호농법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차 당대회에서는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의 농업 부문의 중심 목표는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다지는 것”이라며 과학농사를 강조한 바 있다.²⁵⁷⁾ 또한, 지난 7월 국제환경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농업 부문에서 “보호농법·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농사 열풍을 힘있게 일으키는 한편, 화학비료와 농약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있다”며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²⁵⁸⁾ 이는 세부목표 12.4와도 연계된다.

세부목표 12.4는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의무 이행률과 관련된다. 1987년에 채택되어 1992년에 발효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25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8.

257)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1.9.

258) “북, 국제환경협약 회의서 연설...‘환경보호 사업에 깊은 관심,’” 『연합뉴스』, 2021.8.1., <<https://www.yna.co.kr/view/AKR202108010419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1.8.2.).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해폐기물의 교역 최소화 및 수출입국 간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⁵⁹⁾ 2010~2014년 남북한의 바젤협약 준수율은 16.67%, 2015~2019년 남북한의 준수율은 20.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998년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된 로테르담 협약(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 통보승인(PIC) 절차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은 국제무역에서 특정 유해화학물질과 농약의 잠재적 유해 영향으로부터 소비자와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을 포함 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⁶⁰⁾ 2010~2014년 북한의 준수율은 56.86%에서 2015~2019년 50.00%로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남한의 준수율도 72.55%에서 67.24%로 하락하였다. 2001년 채택되어 2004년 발효된 스톡홀름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은 독성, 생물농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협력을 촉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⁶¹⁾ 2010~2014년 남북한은 33.33%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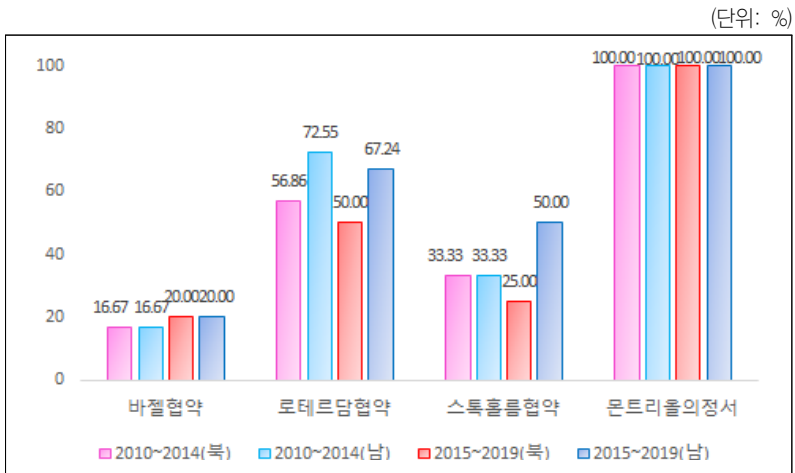
259)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정책 “바젤협약 개요 및 전문” 참고,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jsessionid=BD7Arg9JeAfFkuX2oGvXJ6Xc.mehome1?pagerOffset=514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92&orgCd=&condition.deleteYn=N&seq=1404> (검색일: 2021.8.2.)

260)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보건 “로테르담협약 전문(국문)” 참고,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76&seq=2362> (검색일: 2021.8.3.).

261)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정책 “스톡홀름 협약 원문과 번역문(2019년 개정 반영)” 참고,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59&orgCd=&condition.deleteYn=N&seq=7713> (검색일: 2021.8.2.).

2015~2019년 북한은 25.00%로 하락한 반면, 남한은 50.00%로 상승하였다. 1987년 채택되어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여 오존층의 파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²⁶²⁾ 동 협약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행률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남북한 역시 이행률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은 2008년 바젤협약, 2004년 로테르담 협약, 2002년 스톡홀름 협약, 1995년 몬트리올 의정서에 각각 가입한 바 있다.²⁶³⁾

〈그림 III-10〉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 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 준수율 (남북한 비교)



출처: 국가통계포털 국제·북한통계,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wcd=MT_BUKHAN&menuId=M_02_02&outLink=Y&entrType=#content-group> (검색일: 2021.8.3).

26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참고,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1=1&searchPageRowCnt=10&A=A&AST_SEQ=309&code=700205&searchType=all&CTS_SEQ=12262&ETC=8> (검색일: 2021.8.2.).

263)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and DPRK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 참고.

북한은 세부목표 12.5의 이행지표인 국가 재활용 비율에 관한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북한도 VNR을 통해 국가 재활용률과 재활용 물질의 양에 대한 측정 능력이 미흡하다고 밝히며, 폐기물의 목록화 및 조사, 재활용과 관련한 경험과 기술, 방법에 대한 타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자평하고 있다.²⁶⁴⁾ 이와 함께 북한은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채택한 재자원화법에 의해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은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와 슬래그는 건축자재로, 석탄재는 비료와 건축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폐지·폐목재·폐플라스틱 등도 대부분 재활용되며 유독성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양농폐기물과 가축폐기물도 거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가 재활용 수준은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⁶⁵⁾

〈표 Ⅲ-41〉 재자원화 품종 및 제품개발 현황

재활용 재료	재활용 제품	개발 단위	성능
폐수지	수지휘틀(벽돌틀)	금속건설사업소	12~15회 반복사용가능
	연유생산	김일성종합대학	폐수지열분해공정확립
	대체연유	평안남도 성천군	농기계연유보장
	종이생산	자강도	원료자재 절약
폐가스	발동발전기동력	평안남도 성천군	전기 생산
폐수지 + 편직부산물	칠감생산	해주화학공장	건축 외장 및 내장재
페타이어	콘베어벨트	탄광/ 광산	자재 절약
	재생고무생산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열스크류탈류기 및 재생고무
페그물	양식용 밧줄	청진어구공장	당김 세기 1배 이상
페말프랙	건재재료	동림군과학기술위원회	건재제품의 결합세기, 경화도문제 해결

26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9.

265) 위의 글, p. 38.

재활용 재료	재활용 제품	개발 단위	성능
연재	단열벽돌생산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원가 및 노동력 절약, 전국 금속공장들에 도입
폐신발창	신발생산	전국	원료지재 절약
비닐봉지/ 1회용 도시락/ 마대	침목방부제	자강도	원료지재 절약
폐고무	피대생산	자강도	탄광/기계공장
각종 짐승뼈	집짐승먹이첨가제	자강도	전국 도입
패트병	기초화학제품 (에틸렌글리콜, 테레프탈산, 유기용매 등)	국가과학원 건축재료연구소	합성수지, 점착제, 칠감 생산
공업폐설물	탈지제	평양가족이김공장	가족이김공정에 도입

출처: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213~214.

북한의 경우 세부목표 12.6과 관련한 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북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작성 가능할 정도의 기업 분권화 (decentralization)가 진전되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경우 기업에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기업분권과 지방정부에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지방분권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²⁶⁶⁾ 북한은 지방경제의 분권화를 위한 조건으로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브랜드화), 지방예산제의 강화(수요충족),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질적 향상) 등을 강조한다.²⁶⁷⁾ 지방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군 단위 정책 방향은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 6개 이상, 지방산업 공장들의 원료·자재의 국산화 및 현대화, 시·군 단위 양묘장 건설, 양로원 등 복지시스템 구축, 식품가공공장 건설,

266)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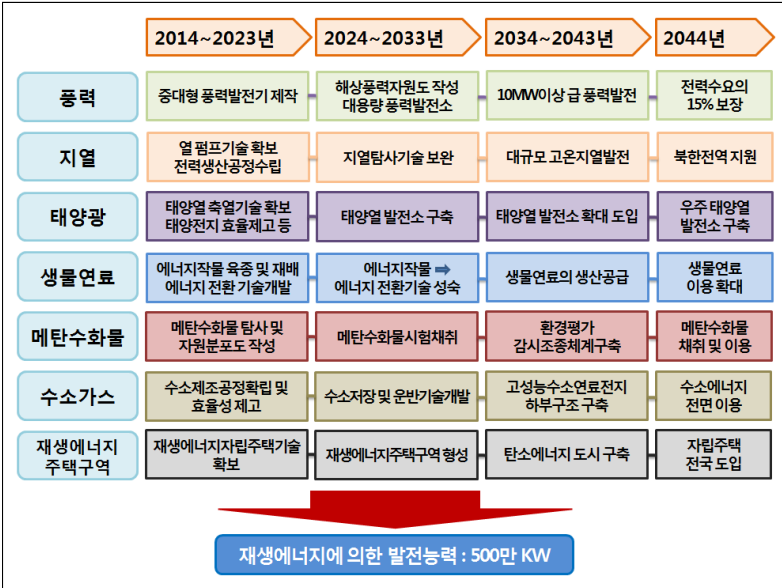
267) 고인훈,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 『경제연구』, 176호 (2017), pp. 20~21, 재인용: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 212.

지역브랜드 경공업 제품개발 등이다. 그러나 인적·물적·기술적·제도적 한계로 지방경제의 발전 및 분권화 진전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나) 정부

북한은 VNR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수력발전을 위주로 하고 이를 화력과 합리적으로 결합하여 발전하고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3년에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2044년까지 총 30년 간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44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500만kW로 확충하고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 수요의 15%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림 III-11〉 북한의 재생에너지 활용 장기계획(2014~20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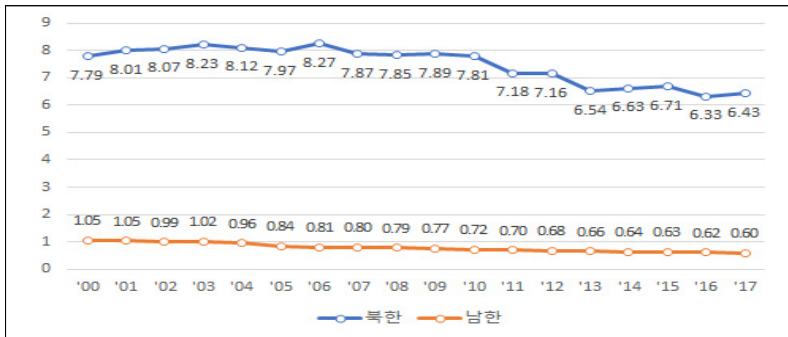


출처: 이해정·이용화,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 16-25호 (2016), p. 13.

효율적 자원 활용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물질 발자국과 국내 자원 소비량(DMC)은 감소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남북한의 관련 지표는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북한은 VNR을 통해 물질 발자국에 대한 측정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기술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향후 북한과의 인적·기술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2〉 남북한 물질 발자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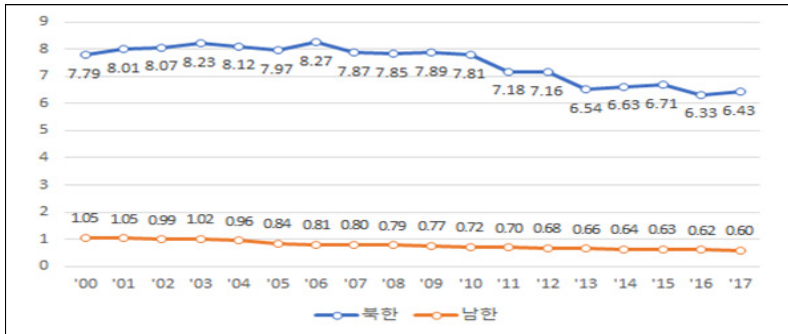
(단위: GDP 단위 당 kg(2010년 실질 USD 기준))



출처: “SDG Country Profile: RO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kor#goal-12>);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12>) (Accessed August 3, 2021).

〈그림 III-13〉 남북한 국내 자원 소비량 비교

(단위: 1인당 톤)



출처: “SDG Country Profile: RO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kor#goal-12>); “SDG Country Profile: DPRK”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12>) (Accessed August 3, 2021).

세부목표 12.7과 관련하여 북한은 재자원화에 기반을 둔 원가절약운동을 추진하되 ‘수매 사업’을 통해 전 사회적·조직적 책임과 의무에 따른 동원과 시스템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다.²⁶⁸⁾ 수매사업은 학교, 인민반, 직장 등 기관·기업소·단체를 통해 월별 과제 형태로 실행되기도 하고, 주민생활의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별 폐기물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군에 위치한 수매소에 폐기물 확보를 할당하고, 현장수매, 위탁수매, 이동수매, 계약수매 등 수매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²⁶⁹⁾ 또한, 계약한 공장에서 생산한 생산품들을 소비자들이 가져온 폐기물이나 유휴 자재와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수매품 교환소를 설치하여 폐기물 수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평양시에 70여 개의 수매품 교환소를 설치하여, 수매품 교환소에서 기업소 및 공장과의 주문계약을 통해 제품을 확보하고 수집한 폐기물 및 유휴자재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강원도, 함경남도, 자강도에서 유휴자재 수집을 통해 지방 공장들에 생산자재와 원료를 제공한 바 있다.²⁷⁰⁾

세부목표 12.8과 관련하여 북한은 절약형 생산공정을 확립을 통해 적은 지출로 보다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료·자재의 절약과 함께 전기절약형, 노력절약형, 물질절약형 공업을 경제건설의 항구적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⁷¹⁾

268)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p. 212~213.

269) “공장은 생산 정상화, 인민에게는 생활 편의 도모,” 『조선신보』, 2020.3.30., 재인용: 최은주,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21-04호 (2021), p. 14.

270) “재자원화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0.7.15., 재인용: 홍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p. 360.

271) “절약형공업창설은 경제건설의 항구적 원칙,” 『노동신문』, 2019.11.18., 재인용: 위의 책, p. 173.

절약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절약과 자원화를 장려하기 위해 연말에 한 해 동안의 과학기술성과를 종합하고 우수한 기술자들을 선정하며 실적에 따른 평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²⁷²⁾ 또한,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에 따라 전국적인 재난관리 제도화, 국민 인식 제고, 재재 공급능력 제고 등을 통해 재난위험 최소화를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2022년까지의 1차 목표로 삼고 있다.²⁷³⁾ 이처럼 북한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어 이러한 북한의 관심을 반영한 남북 협력 과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협력

북한은 VNR을 통해 2020년, 2026년, 2030년까지 2019년~2030년 국가환경보호전략·국가재해위험감소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하고 있다.²⁷⁴⁾ 이에 따르면 북한은 지속적인 자연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2년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ssion: SPC) 산하에 방재국을 설치하고 2014년 국가비상재해위원회(State Committee of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 SCEDM)를 통해 전국 단위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UNDP, UNESCAP, FAO 및 UNDRR과 협력하여 재해 위험 관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국제협력 체계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030년까지 자체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방출량은 16.4% 감축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 의한 국제 협조가 추진

272) “기술발전으로 찾은 절약예비,” 『노동신문』, 2020.9.2., 재인용: 위의 책, p. 361.

27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7, pp. 40~41.

274) *Ibid.*, p. 37, pp. 40~41.

될 경우 36% 더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²⁷⁵⁾ 이와 관련하여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은 2019년 말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해 72.2만 달러(약 8억 7천만 원) 규모의 능력배양 사업(Readiness)을 승인하기도 했다.

세부목표 12.a 재생에너지 설비용량과 관련하여 북한의 VNR을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2020년 기준 28.7 GJ/1,000\$이며,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0.8%를 차지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중은 2017년 기준 10.3%이다.

세부목표 12.b 지속가능 관광과 관련하여 북한은 VNR을 통해 관광의 발전을 장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등 명승지에 대한 국내 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완공을 위한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을 수립하고 강원도를 관광지구로 설정하여 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세부목표 12.c와 관련하여 북한은 VNR을 통해 국가 녹색성장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건조 건축 방식, 제로 에너지, 탄소 제로 건축 및 지능형 건설 기술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연간 계획에 따라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산림건설 총계획(2013~2042)을 통해 산림녹화 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까지 168만 ha의 산림을 조성하고, 연 10억 본의 묘목 생산을 추진하고자 하였다.²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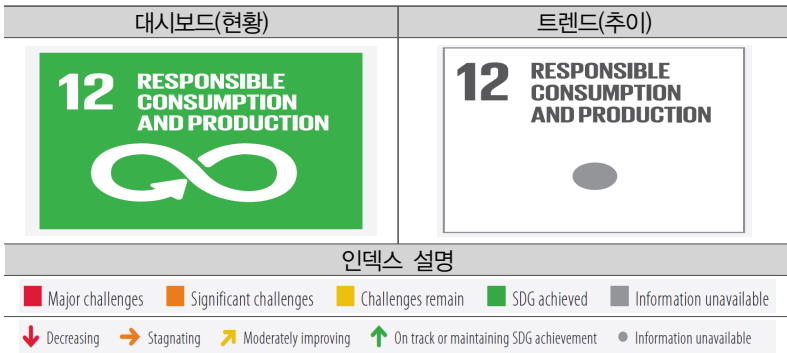
275) “북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16.4% 감축 목표” 재확인,” 『연합뉴스』, 2020.2.13.,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3139600504>> (검색일: 2021.8.4.).

276) 최현아,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p. 5.

(3) 목표 및 지표 평가

2021년 기준으로 북한의 SDG 12는 “SDG 달성(SDG achieved)”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SDG 목표를 향해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작년 대비 성과를 평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10~2012년도에 해당하는 자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010~2012년 기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 및 질소 발생량과 수입에 함유된 아황산가스 및 질소 배출량은 SDG 목표 달성이 가능한 수치이다.

〈그림 III-14〉 북한의 최근 SDG 12 현황 및 추이



출처: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274.

〈표 III-42〉 북한의 SDG 12 지표별 달성 현황

지표명	수치	연도	현황	추이
도시고형폐기물(kg/capita/day)	NA	NA	●	●
전자폐기물(kg/capita)	NA	NA	●	●
생산기반 아황산가스(SO ₂) 배출량(kg/capita)	24.5	2012	●	●
수입에 함유된 아황산가스(SO ₂) 배출량(kg/capita)	0.1	2012	●	●
생산기반 질소 배출량(kg/capita)	5.5	2010	●	●
수입에 함유된 질소 배출량(kg/capita)	0.1	2010	●	●

출처: *Ibid.*, p. 275.

SDG 12 지표 13개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집 가능성은 ‘추세 양호’ 지표 2개, ‘현황 양호’ 지표 1개, ‘현황 제한’ 지표 1개, ‘자료 없음’ 지표 9개로 수집 가능성이 양호하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43〉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13)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SCP) 국가 실행계획이나 SCP를 주류화하는 계획을 국가정책 우선순위 혹은 세부목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의 수				V
12.2.1 물질 발자국(=자원의 범위), 1인당 자원의 범위, GDP당 자원의 범위	V			
12.2.2 국가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가 자원 소비량	V			
12.3.1 (a) 식량 손실 지수 (b) 식량 낭비 지수				V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환경 다자 협약에 참여해 각 규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전달의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자의 수		V		
12.4.2 (a) 1인당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b) 유형별로 처리되는 유해 폐기물의 비율			V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재활용되는 다수의 물질				V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의 수				V
12.7.1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정책들과 실행계획들을 이행하는 국가들의 수				V
12.8.1 (i) 세계시민의식 교육 (ii) 기후변화 교육을 포함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a) 국가 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그리고 (d) 학생평가 등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범위				V
12.a.1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				V
12.b.1 합의된 모니터링과 평가수단을 가진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나 정책 그리고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				V
12.c.1 GDP 단위(생산과 소비)당,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국가지출 총액 중 화석연료 보조금 비율				V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Appendix II : List of SDG indicators by tier classification and availability status, pp. 30~36.

SDG 12의 목표에 따른 지표는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목표는 지표별 수집 가능성에 따라 티어 1그룹 5개(12.2.2, 12.4.1, 12.a.1, 12.b.1, 12.c.1), 티어 2그룹 8개(12.1.1, 12.2.1, 12.3.1, 12.4.2, 12.5.1, 12.6.1, 12.7.1, 12.8.1)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분류를 통해 SDG 12 13개 지표는 수집 가능성이 대체로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지표 가운데 12.c.1은 티어 3에서 티어 1로, 12.2.2는 티어 2에서 티어 1로, 12.3.1, 12.5.1, 12.6.1, 12.7.1, 12.8.1은 티어 3에서 티어 2로 변경되어 수집 가능성이 높아졌다.

SDG 12에 대해 북한은 12.2.1, 12.2.2, 12.4.1 총 3가지 지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는 UNEP를 통해 수집 가능하다. SDG 12에 관련된 북한의 데이터는 많지 않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수집 가능성이 양호하지 않아 북한이 특별히 데이터 수집이 힘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한편, VNR에서는 SDG 12에 관한 지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²⁷⁷⁾

〈표 III-44〉 SDG 12 지표 수집 가능성 및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Reviewed at 6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UNEP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 부재
12.2.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당 물질 발자국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at 9th IAEG-SDG meeting. Agreed methodology only at global level. Not for country level monitoring (classified as 티어 2) Reviewed at Jan. 2019 WebEx meeting: request UNEP to do additional methodological work and 	UNEP	OECD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질 발자국 (https://country-profiles.unstats.org/prk#goal-12)

27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1.

SDG 1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부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복합	
						보유 여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wait approval as international standard before indicator reclassified. (classified as 티어 3) IAEG-SDG 3rd meeting: There is no established methodology for the indicator (classified as 티어 3) 8.4.1/12.2.1 are repeats 				
12.2.2 자원 소비량, 1인당 자원 소비량, GDP당 자원 소비량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8.4.2/12.2.2 are repeat 	UNEP	OECD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유형별 1인당 국내산원료소비량(KOSIS 국제통계) 원료 유형별 GDP단위당 국내산원료소비량(KOSIS 국제통계) 원료 유형별 국내산 원료 소비량(KOSIS 국제통계)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Part (b) reviewed at Nov./Dec. 2019 WebEx (classified as 티어 2) UNSC 50 refinement; Part (a) reviewed at 8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Reviewed at Webex meeting in Nov. 2017 following 6th IAEG-SDG meeting: Request more clarification on methodology and metadata as well as results of pilot studies 	FAO, UNEP		X	자료 부재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하는 당사국 수	1	1		UNEP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비철 협약이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률(KOSIS 국제통계)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관한 약속

SDG 1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과 의무 이행률 (KOSIS 국제통계)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로테르담 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 이행률 (KOSIS 국제통계) 유해 폐기물 및 기타 화학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정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KOSIS 국제통계)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 유형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Reviewed at Nov./Dec. 2019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IAEG-SDG 3rd meeting: There is no established methodology for the indicator (classified as 티어 3) 	UNSD, UNEP	OECD, Eurostat, UNU	X	자료 부재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Reviewed at Nov./Dec. 2019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IAEG-SDG 3rd meeting: There is no established methodology for the indicator (classified as 티어 3) 	UNSD, UNEP	OECD, Eurostat, UNU	X	자료 부재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at Sep. 2019 WebEx meeting(classified as 티어 2) 	UNEP, UNCTAD		X	자료 부재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Reviewed at Feb. 2020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with a revised list of subindicators) Reviewed at Nov./Dec. 2019 WebEx meeting: IAEG to work with UNEP on suggestions for simplifying methodology (classified as 티어 3) 	UNEP	UNEP	X	자료 부재

SDG 12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복합	
						보유 여부	비고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 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finement 4.7.1/12.8.1/13.3.1 are repeats Reviewed at Nov./Dec. 2019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Reviewed at Dec. 2018, WebEx meeting: request additional work on questionnaire methodology (classified as 티어 3) Reviewed at 8th IAEG-SDG meeting: request additional work on methodology 	UNESCO-UIS		X	자료 부재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placement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7.b.1/12.a.1 are repeat 	IREN		X	자료 부재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placement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UNWTO		X	자료 부재
12.c.1 GDP 단위당 화석 연료보조금액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finement of the indicator name approved by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 on 13 March and 2 April 2020. Final approval pending the 52nd sess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in March 2021 UNSC 51 refinement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Oct. 2019(classified as 티어 1) Reviewed at Sept 2018 WebEx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UNEP		X	자료 부재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Accessed May 21, 2021);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

다. SDG 13: 기후변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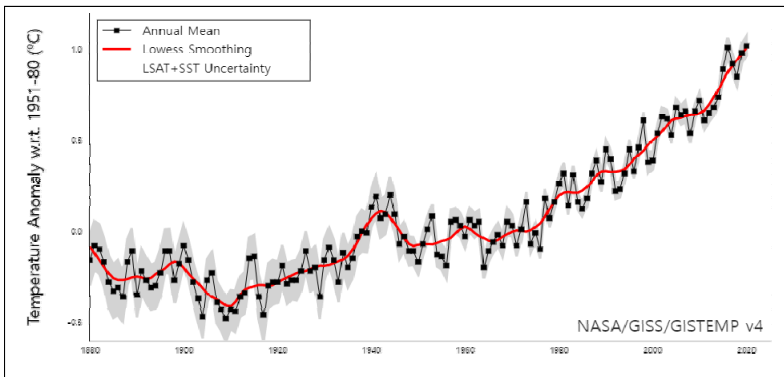
(1) 목표 및 지표 개관

(가) 목표: Goal 13과 세부목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SDG 13의 기후 변화 대응은 지구온난화를 감축하고 온난화 영향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1880년부터 약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3°C 가량 증가한 반면, 이후 40년째인 2020년까지 약 0.9°C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 원인이 온실가스의 증가와 화석연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에너지, 산업, 운송, 건물, 농업, 토지이용, 쓰레기 등 모든 것이 오염의 배출원이다.

기후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이 절실한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지구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식량, 경제 등 모든 시스템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제어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가 없고 국제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기술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III-15〉 전 세계 연평균 기온 변화(1880~2020년)



출처: NASA Goddard Institute for Space Studies, "Global Mean Estimates based on Land and Ocean Data," <https://data.giss.nasa.gov/gistemp/graphs_v4/> (Accessed October 3, 202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세기에 해수면 온도가 평균 3도 이상 상승하고 전 세계 인구의 20%는 홍수를 직면해야 하며 기후 위기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준다. 기후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공동의 도전 과제이며 개발도상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국제협약으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유엔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와 UNEP에 의해 1988년 설립된 조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현재 2014년 5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었고,²⁷⁸⁾ 2022년 6차 평가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6차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올해 발간된 실무그룹1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 즉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 여하를 막론하고 지구온난화 1.5°C 상승에 도달할 것이며 산업화 이전 50년에 한 번 정도의 극한 고온은 8.6배 빈도로 늘어나고 강도 역시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하였다.²⁷⁹⁾

또한 1992년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기후 변화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UNFCCC가 채택되어 1994년부터 실질적인 당사국총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²⁸⁰⁾ 유엔기후협약 1997년 제3차 협약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고, 2015년 제21차 협약에서 실질적인 이행력을 갖춘 파리협정을 채택하였다.

278) WMO·UNEP, 기상청 역,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2015.5., <https://www.ipcc.ch/site/assets/uploads/2018/02/ar5-syr-spm_korean.pdf> (검색일: 2021.10.4.).

279) IPCC Working Group 1, “Climate Change: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21, p. 18, p. 23, <https://www.ipcc.ch/report/ar6/wg1/downloads/report/IPCC_AR6_WGI_Full_Report_smaller.pdf> (Accessed October 4, 2021).

280) 회원국은 197개국이며 현재 25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함.

〈표 III-45〉 파리협정의 특징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1차: 5.2%, 2차: 18%)	산업화 이전 대비 2°C이내(1.5°C 목표달성 노력)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재원마련/기술이전/역량 강화/투명성 등 포괄함
감축의무국가	선진국(기후변화협약 Annex 1 그룹)	모든 당사국
목표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불이행시 징벌여부	징벌적(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비징벌적
목표설정기준	특별한 언급없음	진전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 종료시점이 있어 지속가능성 저하	종료시점 없어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출처: 이형중, “파리협정 발효, 그리고 대응과제” 『전기저널』, 통권 제481호 (2017), p. 50.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산업화 시대 이전과 비교하여 2°C 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나아가 1.5°C로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전지구적인 장기 목표 아래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이러한 기후 행동에 참여하면서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이행하되 자원조성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²⁸¹⁾

이와 같이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추진방향과 내용은 조속히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가 정책에 기후 변화 조치의 통합, 교육 개선,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적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이슈는 이미 1992년 리우 회의의 ‘우리가 원하는 미래(Future We Want)’에서부터 모든 국가가 지

281) 손인성·김동구, 『파리협정 이행규칙과 국내 감축정책 이행에의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pp. 13~15.

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SDG 13의 세부목표는 모두 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 세부목표 13.1은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 세부목표 13.2는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세부목표 13.3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을 개선하는 것이다.

네 번째 세부목표 13.a는 유의미한 기후변화 완화조치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선진국이 매년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마련하겠다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기후 변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섯 번째 세부목표 13.b는 여성, 청년, 그리고 지역 및 소외 공동체를 초점에 두고, 최빈국과 군소도서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SDG 13의 일부 세부목표를 수정하여 채택하고 있는데, 유엔의 세부목표 13.1, 13.2, 13.3은 반영하되 13.a와 13.b는 채택하지 않고 13.4를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부목표 13.1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 능력을 강화한다, 세부목표 13.2는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세부목표 13.3은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경보 등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그리고 인적·제도적 역량을 강화함을 말한다. 신규로 반영된 세부목표 13.4는 지구의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에 비

하여 2°C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1.5°C 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SDG 13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면 2010년 제정되었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하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기반이자 국가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 및 지역재난 위험감소전략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2011-2015)』를 수립한 이후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²⁸²⁾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체계는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유효기간을 거쳐 2022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동 법에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²⁸³⁾ 더불어 2021년 4월, 「기후변화대응기금

282)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p. 34.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촉진에 필요한 조치들이 10월부터 적용된다.²⁸⁴⁾

〈표 III-46〉 유엔 SDG 13과 K-SDG 13의 세부목표

UN SDG 13		K-SDG 13	
13.1 국가차원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13.1.1 국가·지역적 재해 위험 감축전략 수립한 국가 수 13.1.2 100,000명당 재난 피해(사망, 실종, 피해) 인구수	13.1 기후변화에 의한 위험감소, 자연재해회복 및 적응력 강화	-(신규)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13.2 기후변화대응을 국가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반영	13.2.1 식량생산을 저해않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후 회복력 제고, 기후변화의 부정 영향 적응력 개선을 위한 통합 정책/전략/계획의 수립·운영하는 국가 수 (국가적응계획, 국가 차원의 분담·홍보·격년 보고서 등)	13.2 기후변화 조치계획의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신규)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건수(건) -(신규) 친환경차 확대수(만대)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변화제고, 인적역량 및 제도적 역량 강화	13.3.1 완화, 적응, 영향 감소, 조기 경보를 1차, 2차, 3차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국가수 13.3.2 적응, 완화, 기술이전 및 개발이행 위한 기관, 시스템, 개인역량 강화 등 홍보한 국가 수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경보 등에 관한 교육, 인식제고,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신규)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283) 법제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시행 2022.3.25., 법률 제18469호, 2021.9.24. 제정), <[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https://www.law.go.kr/법령/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18469,20210924))> (검색일: 2021.10.4.).

284) 법제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시행 2021.10.21., 법률 제18469호, 2021.4.20. 제정), <[https://www.law.go.kr/법령/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18072,20210420\)](https://www.law.go.kr/법령/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18072,20210420))> (검색일: 2021.10.4.).

UN SDG 13		K-SDG 13	
		13.4 (신규)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대비 2°C이하 유지, 온도 상승 1.5°C 까지 제한	-(신규)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 (MCO ₂)
13.a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 공약 이행: 유의미한 완화조치와 이행투명성을 위해 개도국의 수요와 빠른 자금출자로 녹색변화기금을 운용,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공동지원	13.a.1 1,000억 달러 투입 위한 실제 연도별 모금액(2020년까지)		
13.b 여성/청년, 지역 및 그외 공동체 기반의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계획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촉진	13.b.1 여성·청소년 및 지역·소외 공동체 중심의 효과적인 기후 변화계획과 관리역량 메커니즘 개발을 위해 금융·기술지원 등 특별지원을 받는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 수		

출처: UN SDGs, <<https://sdgs.un.org/goals>> (Accessed July 1, 2021);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p. 48.

UNESCAP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DGs 지표들에 대한 수집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티어 1에 해당하는 지표는 전혀 없으며 재해위험 경감전략국가 및 전략수립 2개 지표에 있어서만 티어 2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티어 3으로 평가 되었다. 수집 가능성 측면에서도 ‘추세 양호’는 전혀 없으며 재해위험경감전략 국가에 있어서 1개 지표에 대해 50% 이상 국가에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현황 양호’에 해당되며 대다수인 7개 지표는 모두 ‘자료 없음’으로 확인된다.²⁸⁵⁾

285)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표 III-47〉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3 지표 티어와 수집 가능성

지표	티어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3.1.1 재해위험 경감전략 국가	2		V		
13.1.2 국가 재해위험 경감 전략 수립	2				V
13.1.3 지역 재해위험 경감전략	3				V
13.2.1 기후변화 적응 정책/전략	3				V
13.3.1 기후변화 통합교육	3				V
13.3.2 기후변화 수용 건물	3				V
13.a.1 선진국의 1천억달러 모금	3				V
13.b.1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의 기후변화 특별지원	3				V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나) 지표

유엔 SDG 13의 지표는 총 7개로 구성된다. 세부목표 13.1의 지표는 2가지로 첫 번째 지표인 13.1.1은 국가·지역단위의 재해 위험 감축 전략이 있는 국가의 수이며, 두 번째 지표인 13.1.2는 인구 100,000명당 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인구수를 포함한다. 본 지표의 글로벌 모니터링 기구는 UNDRR이다.

13.1.2 지표에서 사망은 재해 중, 또는 그 직후에 위험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말하며, 실종의 경우 위험 사건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수로서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 시신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사람, 공무·법률보고서가 관할 당국에 접수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피해는 직접 피해와 간접피해로 구분되며 직접 피해란 부상, 질병 또는 기타 건강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피난, 피난, 이주, 또는 그들의 생계, 신체, 사회, 문화 및 환경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수를 이르고 간접피해란 경제,

중요 인프라, 기본 서비스, 상업 또는 업무, 또는 사회, 보건 및 심리적 결과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 이외의 또는 추가적 결과를 겪은 사람들을 말한다.

지표 13.1.1과 13.1.2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제69차 유엔총회는 글로벌 재해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센다이 재해위험감소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of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를 채택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재해 사망률과 피해 인구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것으로 7가지 성과달성목표와 4가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²⁸⁶⁾ 센다이 재해위험감소 프레임워크에서는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해 글로벌 지표를 사용하여 대규모 재해 영향과 국가별 재해사건을 다루기도 한다.²⁸⁷⁾

세부목표 13.2의 지표 13.2.1는 식량 생산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 회복력을 기르며 기후 변화로부터 악영향에 대해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통합 정책이나, 전략, 혹은 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국가의 수로써 국가대응계획, 국가차원의 재정부담과 홍보, 주기적인 보고서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²⁸⁸⁾

세부목표 13.3의 지표 13.3.1는 지표 4.7.1과 12.8.1과 관련이 있

286) 7가지 성과달성목표로 2005~2015년 대비 2020~2030년의 사망률과 피해인구수를 경감시키는 것, 2030년까지 GDP대비 재해 경제적 손실 경감과 회복력 강화, 2020년까지 국가/지역의 재난발생 국가수 감소, 2030년까지 국가별 실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30년까지 재난경보·정보·평가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며, 4가지 우선순위는 재해위험 이해, 재해위험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해위험 투자, 더 나은 재건을 위한 재난계획 등임. 김명희,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 및 전략의 시사점,” p. 215.

287)
$$X = \frac{(A_2 + A_3 + B_1)}{\text{GlobalPopulation}} \times 100,000$$

 A_2 : 재해 사망자수
 A_3 : 재해 실종자수
 B_1 : 재해의 직접피해자수

SDG Indicator Metadata 중 SDG13의 지표13.1.1 및 13.1.2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검색일: 2021.6.15.).

288) SDG Indicator Metadata 중 SDG 13의 지표 13.2.1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검색일: 2021.6.15.).

으며 글로벌 시민교육과 지속가능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 교육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그리고 학생 평가를 지표로 한다. 글로벌 모니터링을 비롯 관련 국제기구 조직으로서 유네스코 통계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NESCO-UIS), 유네스코 하부조직으로서 교육지부(UNESCO-Education Sector), 평화&지속가능발전부(UNESCO-Division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섹션(UNESCO-Sect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 있다.²⁸⁹⁾ 본 지표로는 국가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와 수업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측정한다.

정책, 커리큘럼, 교사 교육, 학생 평가의 4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여러 기준을 측정한 후 이를 조합하여 각 구성 요소에 대해 0과 1 사이의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글로벌 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이 교육시스템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교사의 커리큘럼과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성과를 이룰 수 있다.²⁹⁰⁾

세부목표 13.a의 지표 13.a.1은 2025년까지의 1,000억 달러의 기존 집단 동원 목표와 관련하여 매년 USD 단위로 제공되며, 유엔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1,000억 달러의 동의에 대한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다만 16차

289) SDG Indicator Metadata 중 SDG 13의 지표 13.3.1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검색일: 2021.6.15.).

290) 글로벌 시민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모두를 존중하고, 공동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며, 공유된 행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학습자가 보다 평화롭고 관용적/포괄적/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민이자 능동적인 기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전 연령의 학습자가 지역과 세계의 문제에 대하여 공동 대응할 수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환경 무결성, 경제적 생존력,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의사결정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SDG Indicator Metadata 중 SDG 13의 지표 13.3.1 참조, <<https://unstats.un.org/sdgs/metadata/>> (Accessed June 15, 2021).

당사국총회에서 설립한 재정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SDF)에서 기후변화 자금조달, 합리적인 재정 매커니즘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세부목표 13.b의 지표 13.b.1은 여성, 청소년 및 지역 및 소외공동체 중심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계획, 관리역량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의 특수한 지원 및 수혜를 받고 있는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 개발도상국 등의 국가수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SDG 13 지표는 유엔에서 제시한 지표를 모두 변경하여 총 6개 지표를 적용하였다. 세부목표 13.1은 기후변화 적응능력 대표지표 개선율(%), 세부목표 13.2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산업계·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이행지원 건수(건), 친환경차 확대수(만대)를, 세부목표 13.3은 기후변화 적응 인지도(%), 세부목표 13.4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MtCO₂)을 지표로 정하였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기구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에서 가장 많은 기후변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연평균강수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률, 매탄배출량, 아산화질소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기타 온실가스배출량, PM2.5미세먼지 대기오염, 가뭄/홍수 및 극한지역 인구비율에 관한 것이며, OECD에서는 재생에너지 데이터를, 그리고 국제적십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FRC)에서는 재해사망자 및 피해자 수에 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²⁹¹⁾

291) 통계청, “북한 통계포털 국제기구별 북한통계,” <https://kosis.kr/bukhan/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_02&vwcd=MT_BUKHAN&rootId=101_101B_UKHANI01#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21.10.1.).

(2) 북한 현황

북한의 극심한 기후 변화는 농업생산량 감소, 농업기반 시설붕괴, 토양과 수자원 악화 등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15년 연평균 기온이 평균보다 1°C 높은 9.7°C로 기상관측 이래 2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2016년 8월말 두만강 유역은 태풍 관측 이후 가장 많은 강우량이 쏟아져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수십일 간의 폭염과 가뭄, 태풍과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으며 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²⁹²⁾ FAO에 따르면 수년간 지속된 기후 변화와 심각한 식량 위기로 당시 1,0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어려움을 겪었다.²⁹³⁾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재해에 의한 사망자수에 있어서 2007년부터 9년간 우리나라는 733명, 북한은 1,055명으로 높고, 피해자수 역시 엄청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5년과 2016년에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었음을 이 피해현황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상생활, 산업경제환경 등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제, 에너지 등 많은 지속가능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표 III-48〉 남북한 재해 사망자수 및 실종자수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사망										
자수	남한 33	50	17	68	143	27	-	390	5	-
	북한 720	-	-	30	74	147	51	-	33	-
피해										
자수	남한 740	23	14	41,571	31,003	6,298	-	420	125	-
	북한 1,172,167	-	-	95,785	57,592	3,137,550	848,690	-	18,003,541	10,100,000

출처: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do>〉 (검색일: 2021.10.10.).

292)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39~40.

293) IFRC, “DPR Korea: Drought and Food Insecurity,” 2019,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orea-drought-and-food-insecurity-information-bulletin>〉 (Accessed September 20, 2021).

북한의 SDG 세부목표 13.1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국가 응급재난관리위원회(State Committee of Emergency and Disaster Management: SCEDM) 소관사항이다. 국가적 차원의 인명은 물론 재해위험을 줄이고 재해 예방을 위해 북한은 인명과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한 ‘2019-2030 국가 재난경감전략(National Disaster Reduction Strategy: NDRS)’을 설정하고 2022년, 2026년 및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가재난경감전략의 일차적 목적은 국가차원의 재해관리를 제도화하고 국민의식을 제고하며 자재공급능력을 향상시켜 재해 위험을 줄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조기경보와 잠재적 재해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였다.²⁹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세부목표 13.2는 기후 변화와 재앙적 기후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국가전략과 국가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실제로 파리협정을 비준하던 2016년, 1차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2030년 목표로 자체 8%, 국제사회 지원을 조건으로 40.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며 2019년에는 자체 15.63%, 국제사회 지원 시 50.34%까지 감축 수준을 대대적으로 수정 반영하는 등 UNFCCC 이행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²⁹⁵⁾ 이 외에도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국가산림전략(2015-2044), 국가환경보호전략(2019-2030), 부문별 전략 및 연간 국가경제 실행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세부목표 13.2는 국가계획위원회(State Planning Commission: SPC)와 국토환경보호성

29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0.

295) 김경원,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북한리포트, 2021.5.17.), p. 4, <https://rd.kdb.co.kr/FLTAST05N01.act?_mnuId=FYERER0023> (검색일: 2021.7.30.).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MoLEP)에서 관리한다.

세부목표 13.3은 북한의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ssion: EC) 소관사무로 기후변화 적응, 영향경감과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사항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되며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후 변화 완화, 적응 및 조기 경보; 대중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강조되는 기후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재난관리공무원 참고서, 조기 경보 및 각종 재난 대처방법에 관한 도서 및 소책자의 발간 및 보급을 통해 경각심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UNFCCC와 파리협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산림과 토지의 온실 가스 배출 및 흡수에 대한 정확한 추적 및 감소 활동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후 변화와 관련한 지표 외에 SDSN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화석연료 연소 및 시멘트생산으로 인한 1인당 CO₂ 배출량(1.5tCO₂/capita, 2019년 기준)이며 수입에 포함된 CO₂ 배출량 지표 값(0.0tCO₂/capita, 2015년 기준)이 반영되어 있다.²⁹⁶⁾

〈표 III-49〉 북한의 SDG 13 목표와 소관기관

목표	세부목표	소관기관
13. 기후 변화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운동	13.1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SCEDM Each level
	13.2 기후 변화 대응을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반영	SPC MoLEP
	13.3 기후 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인적 및 제도적 역량 향상	EC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3.

296)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p. 83, p. 275.

〈표 III-50〉 북한의 SDG 13 지표와 수치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13.1.1 10만 명당 사망/실종/피해인명수(합계)	합계	0.43	0.59	0.47
- 사망	명	0.34	0.29	0.42
- 실종	명	0.09	0.3	0.05
13.1.2 국가재난위험경감전략	연	-	2019	
13.1.3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지역재난위험 경감계획 수립현황	%	0	0	100
13.2.1 격년별 온실가스배출 국가계획 수립		2차 제출 (2012)	1차 제출 FNDC (2016)	업데이트 중 NDC (2021)
13.3.1 기후변화 통합교육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3).

UN SDG 홈페이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SDG 13 지표의 이행 실태에 따르면 비교적 SDG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1인당 화석연료 및 시멘트 생산에 따른 CO₂배출량, 수입에 내재된 CO₂배출량은 모두 SDG를 성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의 정책성과라기보다 상대적인 취약국가로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까닭으로 분석된다.

〈표 III-51〉 유엔 보고서상 북한 SDG 13의 지표 성과

지표	수치	연도	현황	추이
1인당 화석연료연소 및 시멘트생산에 따른 CO ₂ 배출량	1.5	2019	●	↑
수입에 내재된 CO ₂ 배출량	0.0	2015	●	↑
화석연료 수출시 내재된 CO ₂ 배출량	NA	NA	●	↑

출처: DPRK, Performance By Indicator,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rk>> (Accessed September 5, 2021).

(3) 목표 및 지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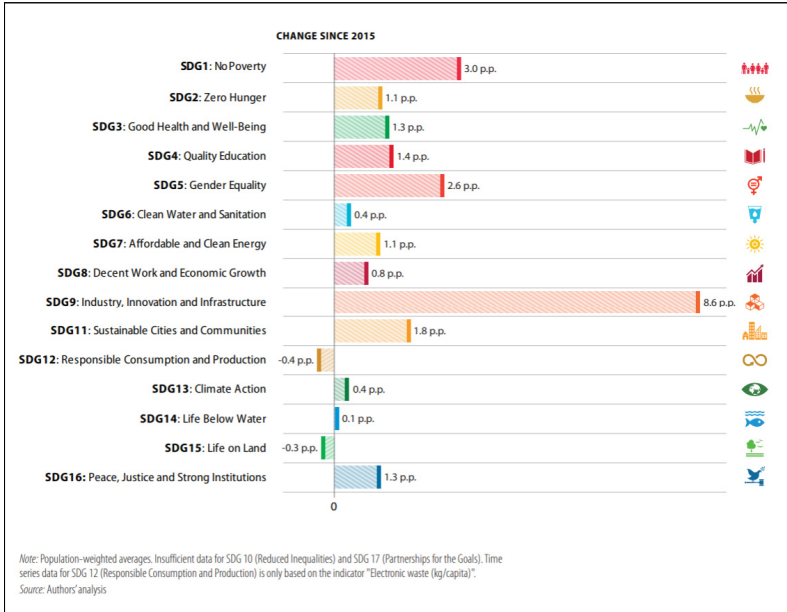
SDG 13 기후 변화는 강력한 규제, 인센티브 혹은 보완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 단위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기후 변화의 원인을 명확하게 계량화할 수 없고 책임 소재의 분담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또한 기후 변화는 인류 공존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투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효과는 오랜 시간 서서히 나타나고 재원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는 반드시 기대할 수 없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능동적이거나 자발적이지 못한 이유이다. 그 결과, 2015년 SDGs 발표 이래 목표별 진행수준을 살펴보면 17개 목표 가운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 수치를 보여주는 SDG 12와 SDG 15 외에 SDG 13은 SDG 14, SDG 6과 함께 가장 진전속도가 늦은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북한의 SDG 13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세부목표와 지표 데이터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유엔에 제출된 VNR과 최근 국가 동향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국가차원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살펴볼 수 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이기도 하지만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고 국제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인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목표치 대비 국제사회의 지원, 국가 재정투입 규모와 온실가스 저감실적 등에 대한 지표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SDG 13과 관련한 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① 홍수, 태풍, 감염병, 폭염, 가뭄 등 각종 재해 유형별 현황 데이터, ② 재해 유형별 피해 현황 데이터, ③ 기후변화 대응에 미치는 분야별 국가수준: 국제협력, 도시단위의 대응, 제도와 정책, 대중의식, 거버넌스,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④ 기후 대응을 위한 공동과제:

지구온난화 온도상승 1°C 미만,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 배출량, 친환경차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등, ⑤ 미래산업으로써 기후 환경의 잠재력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림 III-16〉 SDG 목표별 2015년 이후 진행수준



출처: Jeffrey D. Sachs,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p. 19.

라. SDG 15: 육상생태계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 손실 방지

(1) 목표 및 지표 개관²⁹⁷⁾

SDG 15는 육상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산림은 홍수, 가뭄, 산사태 및 기타 극심한 자연 재해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산림은 탄소

297) UN SDG 홈페이지, <<https://sdgs.un.org/topics/forests>> (Accessed June 4, 2021).

격리를 통해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공기 중 산소, 이산화탄소 및 습도의 균형에 기여하며 전 세계 담수의 75%를 공급하는 유역을 보호한다.

산림은 육지에서 가장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생태계로 육상 동물, 식물 및 곤충 중의 80% 이상이 서식하는 곳이다. 또한 산림에 의존하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며 일자리를 제공한다. FAO와 UNEP에 따르면,²⁹⁸⁾ 전 세계에서 8천 6백만 명이 숲과 관련한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8억 8천만 명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나무를 채집하거나 석탄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산림 벌채와 파괴, 지속적인 생물다양성의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인간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생물다양성을 위협함으로써 인류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확대하고, 주요 생물다양성 영역의 범위를 확대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조약에 합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SDG 15는 육상 생태계에서 서식하는 인간과 동식물의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국제적인 규약과 협력을 목표로 한다.²⁹⁹⁾ 산림 면적의 비율은 2000년 전체 토지 면적의 31.9%에서 2020년 31.2%로 감소하여 전 세계 산림의 거의 1억 ha가 손실되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 면적은 아시아, 유럽 및 북아메리카에서 증가했지만 중남미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크게 감소했다. 산림 면적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ha당 지상 산림 바이오매스, 보호 지역 및 장기 관리 계획에 따른 산림 면적의 비율은

298) FAO and UNEP,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20. Forests, biodiversity and people* (Rome: FAO, 2020), p. xvii.

299) UN SDG 홈페이지,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biodiversity>> (Accessed June 4, 2021).

물론 인증 산림 지역이 모두 전 세계 수준에서,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곧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육상 주요 생물다양성 지역(KBA)의 43%, 담수 KBA의 42%, 산림 KBA의 41%가 보호 지역 내에 있으며, 이는 2000년 이후 약 13~14% 증가한 수치이다. 2021년 2월 현재 127개국이 토지 황폐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목표를 설정하기로 약속했으며, 68개국 정부는 해당 목표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토지 복원 목표 면적은 약 10억 ha로써, 이 중 4억 5천만 ha가 토지 황폐화 중립 목표를 통해 복원될 예정이다.

위성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산림의 피복 범위(숲, 초원, 경작지 및 습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2000년과 2018년 기간 동안 약 73%를 유지하고 있다. 산림 피복은 해발 2,500m 미만의 산악 지역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오세아니아는 100%, 북아프리카 및 서아시아 지역은 68%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적색목록 지수(멸종 위험이 없음을 나타내는 값 1부터 모든 종이 멸종되었음을 나타내는 0까지의 범위)는 1993년 0.81에서 2021년 0.73으로, 지난 30년 동안 약 10% 악화되었다.

2021년 2월 현재 전 세계 128개국과 EU가 접근성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프로토콜(ABS, 2016년 이후 60개국 증가)을 비준했으며, 이 중 67개국과 EU는 ABS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식량 및 농업에 대한 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 조약과 관련하여 현재 148개 당사국이 있으며 57개국이 ABS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막대한 피해는 야생 동물 거래(합법, 불법 모두 포함)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아(2013년 이후 3.5배 감소)와 같이 불법 야생 동물 제품에 대한 특정 시장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범죄자

들이 천산갑 비늘과 같은 더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초점을 이동함에 따라 다른 종들은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98%)가 침입성 외래종의 예방 또는 통제와 관련된 국가 법률을 채택했지만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부문별로 다양하다. 침입성 외래종 관련 목표를 글로벌 목표에 맞추는 국가의 비율이 2016년 74%에서 2020년 84%로 증가했다. 2021년 3월 현재 89개 국가에서 2017년 대비 29% 증가한 환경·경제 회계시스템을 채택했다.

2019년 DAC 회원국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ODA 지원은 66억 달러로 2018년에 비해 14%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62개국에서 총 232개의 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표 Ⅲ-52〉 SDG 15의 세부목표 및 측정지표

구분	세부목표	측정지표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상의 의무에 따라 육지 내륙 담수생태계 및 서비스, 특히 산림, 습지, 산지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생태계 형태별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해 지속가능한 관리를 이행하고, 산림 파괴를 중단하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신규조림과 재조림을 대폭 확대한다.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15.3	203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는 토지를 포함한 훼손된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훼손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3.1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산림 생태계의 수용력을 증진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보존을 보장한다.	15.4.1 산림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15.4.2 산림 녹지 피복 지수(Mountain Green Cover Index)

구분	세부목표	측정지표
15.5	자연 서식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 긴급하고 의미미한 행동을 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방지하며, 2020년까지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한다.	15.5.1 적색목록 지수 (Red List Index: RLI)
15.6	국제적 합의에 따라, 유전자원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를 촉진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방법의 접근을 장려한다.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15.7	동식물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끝내기 위해 빠른 대처를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상품 수요와 공급에 맞서 대응한다.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동물의 거래 비율
15.8	2020년까지 육상 및 수중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그로 인한 영향을 현저히 감소시키며, 우점종을 통제하거나 제거한다.	15.8.1 외래 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역 계획, 발전 과정, 빈곤감소 전략과 회계에 통합한다.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아이치(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15.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대폭 확대한다.	15.a.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 대한 자원 마련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주요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고 개발도상국이 보존 및 재조림을 위한 산림관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5.b.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 지출
15.c	지속가능한 생계 향상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증진함과 더불어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 방지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 동식물의 거래 비율

출처: UN SDGs 홈페이지, <<https://sdgs.un.org/goals/goal15>> (Accessed June 10, 2021).

UNESCA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SDG 지표별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였다.³⁰⁰⁾ 동 보고서에서는 50%가 넘는 대상 국가들이

300)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 29.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를 두 개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추세 양호’, 50% 이상 국가들이 오직 하나의 지표 데이터가 수집 가능하면 ‘현황 양호’, 50% 이하 국가들이 최소 하나의 지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면 ‘현황 제한’, 모든 대상 국가에서 지표 가능성 수집이 아예 불가능할 경우 ‘자료 없음’으로 구분하였다.³⁰¹⁾ 이러한 기준에 따라 SDG 15의 세부목표별 이행지표를 살펴보면 <표 III-53>와 같다.

<표 III-5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SDG 15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14)	티어 그룹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5.1.1 총 육지면적중 산림 면적의 비율	1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을 위해 생태계 형태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요 지역의 비율	1	√			
15.2.1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에서의 진전	2	√			
15.3.1 총 토지 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3				√
15.4.1 산림 생물다양성을 위한 중요 장소 보호구역 범위	2	√			
15.4.2 산림 녹지 회복 지수	2		√		
15.5.1 멸종위기종 지수	2	√			
15.6.1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정책적인 기반을 채택한 국가의 수	2		√		
15.7.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2				√
15.8.1 외래 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3				√
15.9.1 2011-2020 생물 다양성 전략계획의 Aichi 생물 다양성 목표2에 따라 수립된 국가 목표의 진전도	3				√
15.a.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3			√	
15.b.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한 ODA 및 공공지출	1/3			√	
15.c.1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밀렵된 야생생물의 거래 비율	2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1~39.

301)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p. 78.

SDG 15의 전체 14개 지표 중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집 가능성이 ‘추세 양호’ 5개, ‘현황 양호’ 2개, ‘현황 제한’ 0개, ‘자료 없음’ 5개로 수집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2) 북한 현황

북한의 산림은 전체 국토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1976년 국토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개조 5대 방침’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³⁰²⁾ 김정은 정권에서는 2012년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교시를 발표하고, 산림 조성 및 보호관리 사업을 통해 수림화, 원림화(조림, 재조림)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림은 SDG 15뿐만 아니라 식량안보(SDG 2), 물(SDG 6), 에너지(SDG 7), 일자리(SDG 8), 기후변화(SDG 13) 등 다양한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내 이행과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 북한 개발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계획이 중요하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산림분야는 국내외적으로 우선순위의 전략 목표이며,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산림분야의 지원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은 산림을 보존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하나의 발전 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 전략목표는 크게 정치군사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의 3가지로 설정되었으며, 경제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히 경공업의 원료기지가 되는 경제림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림녹화를 ‘자연과의 전쟁’

302) 박경석, “북한의 산림현황 및 산림정책,” 『KREI 북한농업동향』 15(3) (2015), pp. 3~23.

으로 규정하고 산림녹화사업을 ‘산림복구전투’로 명명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휘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발전5개년전략(2016-2022)에서는 산림복구전투, 양묘장 조성, 환경보호 사업 등의 산림녹화사업이 포함되었으며, 국토환경보호성과 임업성으로 나뉘어서 산림 관련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산림건설총계획(2013-2042)’, ‘림농복합경영 방식의 산림복원 10개년 계획(2013-2022)’을 포함한 산림 복구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 황폐화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2018년 2월 ‘산림복구 및 국토환경보호부문 일군회의’에서는 산림복구전투 1단계(2015-2017)의 성과로 180여개 양묘장 건설 및 재건,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등 전국의 시, 군모체 양묘장간의 원격 협의체계와 양묘장 운영 지휘 확립, 산불감시정보 봉사체계 확립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303)

〈표 III-48〉에서는 북한의 SDG 15 목표의 지표별 달성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육지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비율, 담수 지역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비는 2019년 현재 0%로 위험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적색목록 지수는 2020년 현재 0.9로 목표 달성을 한 상태이나, 영구 산림 벌채율은 0.1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수입품에 포함된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위협은 인구 백만 명 당 0%로, 목표 달성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III-54〉).

303)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권 2호 (2018), pp. 101~133.

〈표 III-54〉 북한의 SDG 15 지표별 달성 현황

지표명	수치	연도	현황	추이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육지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0.0	2019	위험	→
생물다양성에 중요한 담수 지역에서 보호되는 평균 면적(%)	0.0	2019	위험	→
적색목록 지수(최악 0-1 최고)	0.9	2020	달성	↑
영구 산림 벌채(산림 면적의 %, 5년 평균)	0.1	2018	유지	●
수입품에 포함된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위협(백만 명 당)	0.0	2018	달성	●

출처: SDG Dashboard 홈페이지, 〈<https://dashboards.sdgindex.org/profiles/prk>〉 (Accessed October 18, 2021).

〈표 III-55〉는 SDG 15의 지표 현황 및 관리기구, 그리고 북한의 공식적인 지표 보유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FAO가 관리하는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15.1.1)만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발표된 VNR에서는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15.2.1),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15.3.1) 등의 일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표 III-55〉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5 지표	기준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	1		FAO	UNEP	○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1	1		UNEP-WOMC, UNEP, IUCN	Ramsar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상황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IAEG-SDG 4th meeting: There is agreement on the components of the indicator, with limited data availability for some components (classified as 티어 2) 	FAO	UNEP, UNFCCC	

SDG 15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복한 보유 여부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IAEG-SDG 4th meeting: There is agreement on the components of the indicator, with limited data availability for some components (classified as 티어 2) 	UNCCD	FAO, UNEP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IAEG-SDG 3rd meeting: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classified as 티어 2) 	UNEP-WCMC, UNEP, IUCN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FAO	UNEP	
15.5.1 적색목록지수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IAEG-SDG 3rd meeting: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classified as 티어 2) 	IUCN	UNEP, CITES	
15.6.1 공정하고 공명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Data availability reviewed in Nov. 2017 (classified as 티어 1) IAEG-SDG 4th meeting: There is an agreed methodology, but low data availability (classified as 티어 2) 	CBD-Secretariat	FAO, UNEP	

SDG 15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 생물 비율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3rd meeting: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classified as 티어 2) 15.7.1/15.c.1 are repeat 	UNODC, CITES	UNEP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한 수단을 채택 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viewed at 6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IUCN	UNEP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 20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 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 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vision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Reviewed at 10th IAEG-SDG meeting (classified as 티어 2) 	CBD-Secretari at, UNEP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 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 금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placement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15.a.1/15.b.1 are repeats 	OECD, UNEP, World Bank		
15.b.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 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 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 금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UNSC 51 replacement included in the 2020 comprehensive review 15.a.1/15.b.1 are repeats 	OECD, UNEP, World Bank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 생물 비율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3rd meeting: Lack of sufficient data coverage (classified as 티어 2) 15.7.1/15.c.1 are repeats 	UNODC, CITES	UNEP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Accessed May 21, 2021); UN (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4, 2021).

(3) 목표 및 지표 평가

2021년 7월 발표된 VNR에서 북한은 영해와 영토 내 지하수 생태계의 보존 및 회복, 지속가능한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유엔 사막화방지규약과 같은 국제 협약의 의무에 따라 숲, 습지, 산지, 황무지를 대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예를 들어 숲회복 캠페인을 2015년에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숲이 없는 지역이 2010년 10.6%에서 2019년 5.5%로 감소하였고,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매년 평균 1.7%의 나무숲 지대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여전히 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북한에서 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식량 및 에너지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전체 토지 면적 중 숲지대 비율은 2015년 67.3%에서 2020년 73.6%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숲의 비율 역시 2015년 67.3%에서 2020년 73.6%로 제시하고 있어, 북한의 모든 숲은 '보호숲'으로써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의 비율은 2015년 9.7%에서 2020년 7.2%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황폐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적색목록지수는 2015년 동물 0.89, 식물 0.94로 비교적 멸종위험에서 멀지만, 최근 자료가 부재하여 해당 지표의 현재 상황을 유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표 III-56〉 북한의 VNR에서 제시한 SDG 15번 목표 현황

지표	단위	2015	2018	2020
15.1.1 전체 토지 면적 중 숲지대 비율	%	67.3	69.9	73.6
15.2.2 보호구역이나 생태계방식에 의해 보호되는 육지와 담수의 주요 생물다양성 구역 비율	%	-	-	-
15.2.1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				
a) 보호 숲지대 비율	%	67.3	69.9	73.6
b) 매년 숲지대 증가율	%	-	1.3	1.7
c) ha 당 숲의 누적량	m ³ /ha	46	44	44
15.3.1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토지 비율	%	9.7	8.1	7.2
15.4.1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	%	4.6	-	-
15.4.2 산 녹화 지수	%	89		
15.5.1 적색목록지수				
동물		0.89		
식물		0.94		
하위 식물		-		
위기종		-		
15.8.1 외부침입종의 방지와 억제를 위한 관련 국가 법				
- “국경에서의 동물과 식물 검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1997.3.2.			
-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2003.7.29			
15.9.1 생물다양성 가치발전 계획의 통합	%	10		
15.a.1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정부 지출	-	-	-	-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6.

4.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가. SDG 16: 평화, 정의와 제도

(1) 목표 및 지표 개관

SDG 16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을 목표로 한다.³⁰⁴⁾ SDG 1에서 15까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영역에 대한 목표라면 SDG 16과 17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방법,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중 SDG 16은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불안, 취약한 제도나 정의에 대한 제한된 접근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위협이자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³⁰⁵⁾

〈표 III-57〉 SDG 16 개요

목표	세부목표	주요 내용
SDG 16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대폭 감소
	16.2	아동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3	국내·국제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
	16.4	2030년 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 대폭 감소,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 대폭 감소
	16.6	효과적, 책임적,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

304) 해당 번역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환경부, 2018), p. 80 참고.

305) UN, “Goal 16: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eace-justice/>> (Accessed May 10, 2021).

목표	세부목표	주요 내용
	16.7	호응적, 참여적,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 확대 및 강화
	16.9	2030년 까지 출생등록 비롯해 모두에게 법적지위 부여
	16.10	대중의 정보 접근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a	폭력예방과 범죄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등 모든 단계의 역량개발 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시행

출처: UN, “Goal 16: Promote just,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peace-justice/>> (Accessed May 10, 2021).

즉 SDG 16은 폭력과 분쟁의 예방, 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SDG 17과 더불어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전제조건이자 결과의 의미를 갖는다.³⁰⁶⁾ 특히 SDG 16은 인권, 평화, 안보, 발전이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강화한다는 인식에 기초한다.³⁰⁷⁾

SDG 16이 강조하는 것은 평화와 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발전을 위해 국내외의 위협과 폭력,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와 정의가 이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법에 의한 통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이 작용하고 있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매일 100명에 이르는 민간인이 무력갈등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코로나19 대확산은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³⁰⁸⁾ 평화가 부재한 상황, 즉 살인과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 아동의 출생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306)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 참고,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66/1117/page/0?> (Accessed May 30, 2021).

307)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https://www.un.org/ruleoflaw/sdg-16/>> (Accessed June 20, 2021).

308)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Goal 16,” <<https://sdgs.un.org/goals/goal16>> (Accessed May 30, 2021).

이런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제를 채택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은 평화와 안보 없이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는 지속가능발전 없이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³⁰⁹⁾ 또한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인권 존중과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법치 선정(善政) 및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포용적인 사회 건설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³¹⁰⁾

SDG 16은 12개 세부목표와 2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³¹¹⁾ 모든 형태의 폭력과 이로 인한 사망률 감소, 아동학대 및 관련 폭력에 대한 근절, 법치에 대한 존중과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불법 자금, 무기 거래, 부패 및 뇌물 감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 참여적이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보편적인 법적 지위 부여,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 보장 등이 세부목표로 제시되었다. 다른 목표들과는 달리 SDG 16은 생명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관의 존재 및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 것도 특징적이다.

〈표 III-58〉 SDG 16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6.1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 대폭 감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성, 연령별)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16.1.4 살고 있는 곳을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309)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ara 35, p. 9.

310) *Ibid.*

311) UN DESA,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Accessed May 30, 2021).

세부목표	지표
16.2 아동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성, 연령, 착취형태별)
	16.2.3 성인(18~29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 국내·국제 차원에서 법치를 증진하며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모두에게 보장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이나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 범죄피해자 비율
	16.3.2 교도소 수감자 중 미결수 비율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하거나 방법 유형에 의해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 방법에 접근 한 인구 비율
16.4 2030년까지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 대폭 감소, 불법취득자산의 환수와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 퇴치	16.4.1 불법금융거래 유출 및 유입 총액(US 달러)
	16.4.2 국제기구와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불법 원산지나 상황이 추적되거나 확립된 혹은 압수되거나 발견되거나 넘겨진 무기들의 비율
16.5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 대폭 감소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 1번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도록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 비율
16.6 효과적, 책임적, 투명한 제도를 모든 단계의 기관에 구축	16.6.1 최초 승인된 예산에서 정부의 주요 지출(예산코드별 혹은 상응하는)
	16.6.2 최근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 호응적, 참여적,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을 모든 단계에서 보장	16.7.1 국가적 분포와 비교하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내(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16.8 개도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내 기관 참여 확대 및 강화	16.8.1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이 회원국이며 투표권이 있는 비율
16.9 2030년까지 출생등록 비롯해 모두에게 법적 지위 부여	16.9.1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의 유아 비율

세부목표	지표
16.10 대중의 정보 접근 보장하고 기본적 자유 보호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강제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건수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 수
16.a 폭력예방 및 테러와 범죄 퇴치를 위해 모든 수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제도 강화	16.a.1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존재 여부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규와 정책 시행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된 인구 비율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문은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참고.

SDG 16은 국가로 하여금 평화와 발전,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구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 유용한 틀이다. 하지만 목표 자체가 광범위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 SDG 16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세부목표와 관련된 지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021년 3월 기준 SDG 16의 지표 중 티어 1은 6개(16.3.2, 16.5.2, 16.8, 16.9, 16.10.2, 16.a.1), 티어 2는 17개(16.1.1, 16.1.2, 16.1.3, 16.1.4, 16.2.1, 16.2.2, 16.2.3, 16.3.1, 16.3.3, 16.4.1, 16.4.2, 16.5.1, 16.6.1, 16.6.2, 16.7.2, 16.10.1, 16.b.1), 티어 1과 2의 혼합은 1개(16.7.1)이다.³¹²⁾ 티어 1은 개념이 명확하고 방법론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 국제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다. 티어 2는 개념적으로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방법론과 표준이 정립되어 있지만 국가들로부터 정기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하지 않은 지표이다.³¹³⁾ SDG 16에

312) UN DESA,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29 March 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May 30, 2021).

서 티어 2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행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실제 UNESCAP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수집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 국가에서 특정 지표의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추세 양호’는 4개로 파악된다. 50% 이상 국가에서 1개의 데이터만 가능한 ‘현황 양호’는 2개, 50% 이하 국가에서 1개 이상의 데이터가 가능한 ‘현황 제한’는 4개, 모든 국가에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자료 없음’은 12개로 확인된다. 비록 이는 58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기반한 통계이지만 SDG 16 지표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III-59〉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6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6.1.1 인구 10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 수 (성, 연령별)	√			
16.1.2 인구 10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 수 (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에 노출된 인구 비율				√
16.1.4 살고 있는 곳을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	
16.2.2 인구 10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 수 (성, 연령, 착취형태별)			√	
16.2.3 성인(18~29세)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이나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기관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

13) *Ibid.* “Indicator is conceptually clear, has an internationally established methodology and standards are available, but data are not regularly produced by countries.”

지표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6.3.2 교도소 수감자 중 미결수 비율	V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하거나 방법 유형에 의해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 방법에 접근 한 인구 비율				
16.4.1 불법금융거래 유출 및 유입 총액(US 달러)				V
16.4.2 국제기구와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불법 원산지나 상황이 추적되거나 확립된 혹은 압수되거나 발견되거나 넘겨진 무기들의 비율				V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 1번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주도록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V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해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 비율		V		
16.6.1 최초 승인된 예산에서 정부의 주요 지출(예산코드별 혹은 상응하는)				V
16.6.2 최근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V
16.7.1 국가적 분포와 비교하여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내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 및 인구집단별)				V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V
16.8.1 국제기구 내 개발도상국이 회원국이며 투표권이 있는 비율	V			
16.9.1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의 유아 비율		V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무역 노동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강제구금 및 고문으로 확인된 건수	V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 수			V	
16.a.1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존재 여부			V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고된 인구 비율				V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2) 북한 현황

북한의 경우 SDG 16에서 집계 가능한 지표는 16.2.1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 경험 아동 비율’과 16.9.1 ‘5세 미만 출생 등록 비율’ 2개이다.³¹⁴⁾ 북한의 16.2.1 지표는 UNICEF에서 2017년 실시한 MICS에서 확인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7년 한 해에 해당하는 59.2%만 제시하고 있어 시계열적인 추세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16.9.1 지표인 5세 미만 아동 출생 등록률은 100%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9년 실시된 MICS 자료에 근거한다. 이 또한 한 해에 해당하는 데이터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III-60〉 SDG 16 북한 가용지표

세부목표	지표	북한
16.2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아동(1~17세) 비율	59.2% (2017)
16.9	16.9.1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의 유아 비율	100% (2009)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

북한에 해당하는 세부목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이행 현황을 비교할 경우 북한에서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당한 아동 비율 59.2%는 최빈개도국 82.7%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북한에서 5세 미만 등록 비율은 100%로, 2020년 기준 유럽 및 북미와 같은 비율이며 어느 권역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314) UN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

〈표 III-61〉 북한 16.2.1과 16.9.1의 지역별 현황

(단위: %)

지표	지역	2020
16.2.1	세계(77개국, 전 세계 인구 29% 비중)	79.0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25개국, 59% 인구 비중)	84.9
	북부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11개국, 64% 인구 비중)	82.5
	최빈개도국(28개국, 59% 인구비중)	82.7
	북한	59.2(2017)
16.9.1	세계(164개국, 전 세계 인구 83% 비중)	73.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41개국, 97% 인구 비중)	44.8
	북부 아프리카 및 서아시아(19개국, 92% 인구 비중)	89.7
	유럽 및 북미(44개국, 100% 인구 비중)	100
	최빈개도국(41개국, 96% 인구비중)	44.1
	북한	100(2009)

출처: 북한을 제외한 기타 데이터는 UN Doc. E/2021/58 (30 April 2021) 참고.

〈표 III-62〉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6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 (성 및 연령별)	2	2		UNODC, WHO	DESA Population Division, UNICEF	X	각 단위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9차 IAEG-SDG 회의 검토(티어 2로 분류) 제3차 IAEG-SDG 회의: 지표에 대한 확립된 방법론 부재 (티어 3으로 분류) 	OHCHR	UNMAS, DESA Population Division	X	각 단위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1	2		UNOD	UN Women, UNFPA, WHO, UNICEF	X	각 단위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2	2		UNODC			각 단위

SDG 16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 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험을 경험한 적이 있 는 1-17세 아동 비율	1	2	• 제4차 I AEG-SDG 회의 : 합의된 방법론 부재, 낮은 데이터 가용성 (티어 2 분류)	UNICEF		O	UN DESA Statistics Division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 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	2	• 제3차 I AEG-SDG 회의: 데이터 범위의 불충분성 (티어 3으로 분류)	UNOD	UNICEF	X	자료 부재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2	2		UNICEF	UNSD, UNODC	X	자료 부재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2	2		UNODC		X	자료 부재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	1		UNODC		X	자료 부재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 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2	•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2020 종합검토에서 포함	UNDP, OECD, UNODC		X	자료 부재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3	2	• 제10차 I AEG-SDG 회의 (티어 2로 분류)	UNODC, UNCTAD		X	자료 부재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 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2	2	• 제8차 I AEG-SDG 회의 (티어 2로 분류) •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 개선: 제5차 I AEG-SDG 회의 (티어 2로 분류)	UNODC, UNODA		X	자료 부재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 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 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 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2	2		UNODC		X	자료 부재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 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 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 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의 비율	1	1	• 데이터 가용성 2019년 10월 검토 (티어 1로 분류) • 제3차 I AEG-SDG 회의: 데이터 범위의 불충분성 (티어 2로 분류)	World Bank, UNODC		X	자료 부재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 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 문 또는 예산코드별)	1	2	• 데이터 가용성 2019년 10월 검토 (티어 2로 분류)	World Bank		X	각 단위

SDG 16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복합	
						보유 여부	비고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3	2	• 제9차 IAEG-SDG 회의 (티어 2로 검토)	UNDP		X	각 단위
16.7.1 국가 전체 대비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인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 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3	2	• (b)와 (c) 일부 제9차 IAEG-SDG 회의 검토 (티어 2로 분류) • 제50차 유엔통계위원회 개선: 제8차 IAEG-SDG 에서 (a) 검토(티어 2로 분류)	IPU, UNDP	UN Women, OECD	X	각 단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3	2	• 제9차 IAEG-SDG 회의 검토(티어 2로 분류)	UNDP		X	각 단위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	1	• 10.6.1/16.8.1 반복	DESA/ FFDO		X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 (연령별)	1	1		UNSD, UNICEF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	0	사회 안전성 UN DESA Statistics Division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 구금 및 고문 건수	3	2	• 제6차 IAEG-SDG 회의 검토(티어 2로 분류)	OHCHR	ILO, UNESCO-UIS	X	자료 부재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1	• 데이터 가용성 2019년 10월 검토 (티어 1로 분류)	UNESCO-UIS	World Bank, UNEP	X	자료 부재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	1		OHCHR		X	자료 부재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3	2	• 제9차 IAEG-SDG 회의 검토(티어 2로 분류) • 10.3.1/16.b.1 반복	OHCHR		X	자료 부재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검색일: 2021.5.21.);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검색일: 2021.5.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6.

SDG 16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북한의 이행 현황은 2021년 7월 북한이 실시한 VN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은 2021년 7월 13일 ECOSOC 산하의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서 VNR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에 공개한 VNR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SDG 16을 ‘사회주의 체제 강화’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세부목표, 지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I-6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 현황

	SDG 16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 보장과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북한	사회주의 체제 강화
목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를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전환
정책우선 순위	1.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2. 인민에게 최대의 사회적 혜택 제공 3.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발전과 강화
세부목표	16.1. 모든 인민들에게 풍족하게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충분히 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며 최대의 사회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16.6 모든 단계에서 대중적인 제도 구축 16.7 모든 인민들이 국가 행정과 사회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단계에서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써 정치적 권리를 충분히 실현 16.9 출생 등록을 비롯해 모두에게 법적 지위 부여
지표	16.1.4 살고 있는 곳을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6.2 최근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 비율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믿는 인구 비율(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 인구집단별) 16.9.1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의 유아 비율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8~11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6 목표인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위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 ‘인민에게 최대의 사회적 혜택 제공’, ‘국가와 사회시스템의 발전과 강화’라는 3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유엔 SDG 16이 평화, 정의와 제도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이를 체제의 속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목표로 수정한 것이다. SDG 16의 세부목표로 4개가 제시되었는데 16.6과 16.9는 유엔의 세부목표를 그대로 수용한 반면 16.1과 16.7은 북한의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NDGs)와 연계되어 변경되었다. 지표는 4개 제시되었으나 이행 데이터가 공개된 것은 16.9.1의 5세 미만 유아 출생등록이 유일하며 2015년, 2018년, 2020년 모두 100%임을 밝혔다.³¹⁵⁾

〈표 III-6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6.9.1 지표 현황

지표	2015	2018	2020
16.9.1 출생 시 행정당국에 등록된 5세 미만의 유아 비율(%)	100	100	100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3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목표 및 지표 평가

북한의 VNR은 국제사회가 글로벌 규범 차원에서 채택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가,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로 치환되었음을 보여준다.³¹⁶⁾ VNR 보고서에서

31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3; 북한은 2019년 UPR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고취를 위해 인권 연구소를 설립하였다고 밝혔으나 이것이 16.a.1 파리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인권 기구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는지는 유보적이다.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p. 2.

316)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이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발전의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데 대한 정치리념”으로 규정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 국가의 참모습,” 『로동신문』 2020.6.23.

북한은 국가의 권력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인민에게 있고 인민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¹⁷⁾ 또한 북한은 모든 국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적정한 물질적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³¹⁸⁾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4조와 제64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근로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북한사회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곳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적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³¹⁹⁾ 즉 주체사상이 구현된 북한에서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할 권리, 휴식할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다는 것이다.³²⁰⁾

SDG 16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인권보장제도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이다.³²¹⁾ 북한은 사회주의보건제도가 평등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자부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는 ‘가장 인민적인’ 제도로 평가한다.³²²⁾ 즉 모든 인민이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보장받음으로 참다운 존엄과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임을 강조한다.³²³⁾ 특히 김정은 체제는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북한사회

317)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6.

318) *Ibid.*

319) “인류가 리상하는 참다운 인권,” 『로동신문』 2016.12.10.

320) “인권의 황량한 무덤, 숨막히는 독재사회,” 『로동신문』 2015.5.20.

3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6.

322)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 『로동신문』 2018.6.23.

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³²⁴⁾

SDG 16은 무력갈등, 범죄, 고문, 착취, 성폭력 등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VNR 보고서에 북한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착취, 인신매매, 뇌물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사회문제로 나타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³²⁵⁾

비록 김정은 체제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인권을 보장”한다고 자평하지만,³²⁶⁾ 국제사회의 평가는 이와는 다르다. SDG 16.1과 관련하여 비록 북한이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고문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구타와 같은 가혹행위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³²⁷⁾ 2020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고문과 비인간적 구금상태를 포함 처벌,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등이 지속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³²⁸⁾ 이는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과 사망률 감소에 대한 세부목표가 북한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고문 종식과 관련된 SDG 16.2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평가는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이 2016년 5월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유엔은 아동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나 처벌을 법률적,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금지할 것과 고문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회복 및

323)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워 주신 불멸의 업적 천만년 길이 빛나리,” 『로동신문』 2021.7.5.

324) “당조직들의 사업을 평가하는 시금석,” 『로동신문』 2021.7.31.

325)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6.

326) “조선에서 참다운 아동권리, 녀성권리의 실현을 보다,” 『로동신문』 2016.12.3.

327) 오경섭 외, 『북한인권백서 2021』, pp. 52~55.

328) UN Doc. A/RES/75/190 (28 December 2020), p. 5.

사회통합 방안 마련,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을 북한에 권고하였다.³²⁹⁾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2019년 5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3차 심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 아동의 성적 학대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교육 시설에서 체벌 금지 등을 권고 및 촉구하였다.³³⁰⁾ 부패와 뇌물에 대한 SDG 16.5와 관련해서 북한 사회는 뇌물이 상당히 일상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의 비중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능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³³¹⁾ 대중의 정보 접근 보장(16.10) 또한 북한의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0년대 후반 들어 북한 내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수단이 발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늘어나지만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의 유입과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문화 유입을 ‘불순’, ‘불량행위’, ‘반국가적·반사회주의적행위’로 간주하며 검열 통제 및 정보의 유입과 관련된 처벌 기준들을 강화하고 있다.³³²⁾

특히 이번 VNR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합의한 평화, 정의와 제도를 북한이 제한적이면서 선택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SDG 16과 관련해 북한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SDG 16.9 출생등록 등 모두에 대한 법적지위 부여이다. 즉 SDG 16에서 강조하는 비폭력에 대한 인권의 요소나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 등은 현재의 북한 체제에서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북한의 SDG 16의 선택적 이행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 규범이 북한

329) UN Doc. CRC/C/PRK/CO/5 (29 September 2017), pp. 6~7.

330) UN Doc. A/HRC/WG.6/33/PRK/2 (26 February 2019), p. 9.

33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사회변동』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p. 112.

332)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 150.

의 사회주의 체제의 지속과 강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SDG 16은 개인의 권리 보호 보다는 집단주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편적 담론으로서의 평화와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기보다 사회주의 체제 강화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SDG 16과 관련된 지표를 일부만 제시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해당 데이터를 수집, 집계, 처리하는 내부 역량과도 관계가 있다. 북한은 이번 VNR에서 SDG 16 관련 측정지표를 위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³³³⁾ 북한이 향후 글로벌 지표 수용이나 이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아동에 대한 폭력 금지 및 예방, 의료와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 등이다. 특히 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 및 폭력 예방은 UPR 1차 심의에서는 수용되었지만 2차 심의에서 거부되었고, 3차 심의에서는 보류된 권고이다. 북한은 다른 권리에 비해 아동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세부목표 SDG 16.2로도 제시되어 있는 만큼 모든 형태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부분 등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게 권고 및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접근 보장(16.10)은 개발협력 과정에서 인적 접촉, 지식공유, 북한 주민 참여 확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지표 개발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³³⁴⁾ 불법자금 및 무기거래 현황과 관련된 자료(16.4)는 북한이 집계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공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안지표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6.

334)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pp. 179~184.

나. SDG 17: SDGs를 위한 파트너십

(1) 목표 및 지표 개관

SDG 17은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는 것이다.³³⁵⁾ SDGs가 MDGs와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빈곤, 교육, 식량안보 및 영양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를 제안하는 것 뿐 아니라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약속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강조하는 것이다.³³⁶⁾ 이런 측면에서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모두를 위한 발전을 강조하고 이행 메커니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제안한다. 즉 다자협력에 의한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최빈국과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지원하고 SDGs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기술 이전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2015년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에서 합의된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Addis Ababa Action Agenda)’를 적극 반영한다는 취지와도 연결된다.³³⁷⁾ 개발도상국 발전을 위한 자원 마련과 이행수단, 데이터와 모니터링, 과학기술혁신은 아디스아바바

335) 해당 번역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 p. 80 참조.

336)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ara 17, p. 6.

337)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Addis Ababa Action Agenda)은 총 134개 항목을 합의하였고 7개 분야의 이행 분야(Action Areas)를 채택한다. 1) 국내공공자원(Domestic public resources), 2) 국내외 민간기업 및 투자(Domestic and international private business and finance), 3)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4) 개발 동력으로서의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as an engine for development), 5) 부채 및 부채 지속성(Debt and debt sustainability), 6) 제도적 이슈 대응(Addressing systemic issues), 7) 과학, 기술, 혁신 및 역량강화(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capacity-building). 박수영·오수현,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합의 분석,” pp. 1~59.

행동의제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SDG 17의 주요 세부목표와도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³³⁸⁾ 또한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에 있어 자원 의제뿐 아니라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역량구축 및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맥락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SDG 17은 5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는 재원(finance)이다. 개발도상국은 저성장, 인적자원의 문제, 제도적 취약성, 대외부채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표적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채로 인해 지속되는 대외원조에 관계없이 처음 받았던 원조 금액보다 많은 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³³⁹⁾ 전체적인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조 부담은 국가 미래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³⁴⁰⁾ SDGs 달성에 필요한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마련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³⁴¹⁾ 국제적으로 개발재원의 문제는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 2008년 ‘도하선언(Doha Declaration)’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³⁴²⁾ SDG 17에서는 국내 자원 동원 강화(17.1), 선진국 ODA 규모 국민총소득

338)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ara 40, p. 10.

339) Anna Lanoszk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 108.

340) *Ibid.*, p. 107.

341) 개발재원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여전히 논의 중이나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개발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혹은 민간 자금을 이른다. 공공분야에서는 국내 공적재원인 조세수입, 국외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을 들 수 있다. 민간재원으로는 국내 저축재원, 국외송금, 무역, 해외직접투자(Foreign Development Investment: FDI)를 포함한다. 외교부, “제3차 개발재원총회 개최 보도자료” (2015.7.9.); 박수영·오수현,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함의 분석,” (2015), p. 4.

342) UN, “Financing for development,” <<https://www.un.org/en/development/desa/financial-crisis/financing-for-development.html>> (Accessed June 15, 2021).

(GNI) 대비 0.7% 확대(17.2), 개발도상국을 위한 금융재원 동원(17.3)과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 지원(17.4) 및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17.5) 등이 세부목표로 제시되었다.

둘째는 기술(technology)이다.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과 지식공유(Knowledge-Sharing)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기회가 된다. 특히 STI는 생산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접근, 직업훈련 확대, 친환경에너지자원 확보 등 경제성장과 환경문제 대응,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라는 교육 문제에 핵심적인 연결 고리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이러한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내생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식공유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지식이 이동하는 행위로서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의 구축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³⁴³⁾ 자본 뿐 아니라 지식 및 노하우가 부족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발전을 위해 형태화 된 인프라와 선진국의 무형화 된 경험과 지식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중요하다.³⁴⁴⁾ 이런 배경에서 SDGs에서는 남북·남남·삼각협력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가들 간의 기술 및 지식격차를 좁히고 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게 기술이전과 지식공유를 강화하고자 한다.³⁴⁵⁾ SDG 17에서는 기술증진을 위해 상호합의에 의한 지식공유 증대(17.6), 친환

34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37; UNECE, "What is Technical Cooperation?" (<https://unece.org/what-technical-cooperation>) (Accessed June 15, 2021);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UNDP, OECD, and World Bank,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Washington D.C.: World Bank Organization, 2015).

344) World Bank, *Ibid.*, p. 1.

34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para 41, p. 10.

경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보급(17.7), 그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의 이용과 활용 강화(17.8)를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부족한 R&D 지출, 불충분한 연구기관에 대한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는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이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전반에서 수용되고 있는 목표이다.³⁴⁶⁾ 역량강화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술 및 지식의 획득, 개선, 유지 등에 관한 과정을 뜻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는 SDGs 목표를 이행하는 능력과 함께 양자, 남북·남남·삼각 협력에서 타국가의 제도와 정책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협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³⁴⁷⁾ SDG 17.9는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세부목표로 개발도상국의 사회발전을 지원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지원과 국제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는 무역(trade)에 관한 것이다. SDG 17에서는 무역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2030 의제를 실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는 개발 분야에서 있어서 중요한 논쟁 중 하나이다.³⁴⁸⁾ 무역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경제적 부는 다른 사회적, 환경적 영역의 목표 이행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용기회 창출 및 빈곤층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낮춤으로 빈곤감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³⁴⁹⁾ 초창

34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서 ‘역량’에 대한 표현은 여러 영역과 주제에 걸쳐 표현되어 있다(para 3, 5, 21, 23, 25, 27, 28, 32, 37, 41, 48, 51, 55, 57).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347) 홍문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량개발의 전략모색,” 『국제개발협력』, 제10권 3호 (2015), p. 41.

348) DFID, “Growth: Building jobs and prosperity in developing countries,” January 2008, p. 3, <<https://www.oecd.org/derec/unitedkingdom/40700982.pdf>> (Accessed December 27, 2021).

349) WTO, *Mainstreaming trade to at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ève: WTO, 2018), p. 1.

기 경제성장은 빈곤감축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강력한 도구로 인지되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체적으로 수용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석유파동과 환경오염에 대한 지구적인 우려가 커지면서 경제성장은 사회적 공정성과 환경적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와 ‘포스트 2015 개발 의제(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³⁵⁰⁾ 경제성장은 빈곤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보다 균형적인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용된 것이다.³⁵¹⁾ 이러한 배경에서 SDGs는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하고(17.10), 개발도상국의 수출 증대와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 두 배 증가(17.11),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 접근 이행(17.12) 등을 요구한다.

여섯째는 제도적 문제(systemic issues)이다. 여기서 세 가지 이행이 강조된다. 1) 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2)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3)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이다. SDG 17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국의 정책 일관성과 함께 각 국가들의 역량과 개발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각국의 리더십을 존중할 것을 강조한다(17.13, 17.14, 17.15). 또한 글로벌 파트너십 및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도모할 것과(17.16, 17.17), 개발도상국의 양질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가용성을

350) Anna Lanoszk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p. 179.

351) *ibid.*, p. 180.

높이고 통계역량강화를 지원한다(17.18, 17.19)고 명시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는 국가 내의 자체적이고 구조적인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총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SDGs는 지속가능한 경제, 번영하는 사회, 건강한 환경이 상호 연결성에 기반하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민사회, 학계, 기업, 유엔 등 다자 행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³⁵²⁾

〈표 III-65〉 SDG 17 개요

목표	주제	세부 목표	주요 내용
SDG 17	재원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재원 동원 강화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규모를 GNI 대비 0.7% 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ODA를 GNI 대비 0.15-0.20% 까지 제공하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재원 동원
		17.4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기술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이전 촉진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운용
	역량강화	17.9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
	무역	17.10	WTO 체제 하 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17.11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을 두 배 증가

352) Darian Stibbe, Dave Prescott, *The SDG Partnership Guidebook: A practical guide to building high-impac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The Partnering Initiative and UN DESA, 2020), pp. 10~12.

목표	주제	세부 목표	주요 내용
	제도적 문제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고, WTO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5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 각국의 리더십 존중
		17.16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17.18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
		17.19	지속가능발전 이행 측정방법 대안적 개발 도모 및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출처: UN DESA,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Accessed June 15, 2021).

SDG 17는 19개 세부목표와 24개 이행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³⁵³⁾ 자원 관련이 7개, 기술 3개, 역량강화 1개, 무역 3개, 제도적 문제가 10개의 이행지표를 각각 가지고 있다. 티어 1은 15개(17.1.1, 17.1.2, 17.2.1, 17.3.2, 17.4.1, 17.6.1, 17.8.1, 17.9.1, 17.10.1, 17.11.1, 17.12.1, 17.18.2, 17.18.3, 17.19.1, 17.19.2), 티어 2는 8개(17.5.1, 17.7.1, 17.13.1, 17.14.1, 17.15.1, 17.16.1, 17.17.1, 17.18.1)이며 티어 1과 2의 혼합은 1개(17.3.1)이다.³⁵⁴⁾ SDG 17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30 의제의 이행 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발재원을 마련하고 과학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며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증진하는 것은 지속가

353) UN DESA, "SDG Indicator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Accessed June 15, 2021).

354) UN DESA,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29 March 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Accessed June 14, 2021).

능발전 이행에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이는 개별국가의 제도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SDGs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 기술, 제도, 자원들을 조합하고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³⁵⁵⁾

〈표 III-66〉 SDG 17 세부목표와 지표

세부목표	지표
17.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지원 등을 통한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1.1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의 비율
	17.1.2 예산대비 국내 조세 비율
17.2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규모를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고, 최빈국에 대한 ODA를 GNI 대비 0.15-0.20% 까지 제공할겠다는 공약 달성을 포함하여 ODA에 대한 책무를 완전히 이행. ODA 공여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최소 0.2% 제공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 비율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17.3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금융자원 동원	17.3.2 GDP 대비 해외송금액 비율(US달러 기준)
	17.4.1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
17.4 부채조달, 부채탕감, 부채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도국이 장기적인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17.4.1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
17.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증진계획을 채택하고 이행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17.6.1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³⁵⁶⁾
17.7 개도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친환경기술의 이전 촉진	17.7.1 개발도상국에게 친환경기술 개발·이전·보급·확산을 위한 총 승인 금액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운용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355) Darian Stibbe, Dave Prescott, *The SDG Partnership Guidebook: A practical guide to building high-impac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 12.

세부목표	지표
17.9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 수립된 개도국의 국가계획을 지원	17.9.1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
17.10 WTO 체제 하 평등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	17.10.1 국제 기준 관세 평균치
17.11 개도국의 수출을 대폭 증가시키고,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수출량을 두 배 증가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17.12 최빈개도국 수입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 원산지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촉진에 기여하고, WTO 결정에 부합하도록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을 적시 이행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7.13 정책조정과 정책일관성을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자료(Dashboard)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강화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17.15 지속가능발전 이행에 있어 각국의 리더십 존중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 체계 및 계획수단을 사용하는 범위
17.16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기반의 지속가능발전의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이해관계자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17.17 효과적인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장려	17.17.1 민-관협력에 약정된 US달러 금액 ³⁵⁷⁾
17.18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확대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가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 통계법을 갖는 국가의 수
	17.18.3 전적인 재정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재원별)
17.19 지속가능발전 이행 측정방법 대안적 개발 도모 및 개도국의 통계역량 강화 지원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17.19.2 a)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고, b) 100%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출처: UN DESA,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CN.3/2021/2)을 기준으로 하였고, 국문은 박영실 외,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을 참고함.

356) 이전에는 17.6.2였으며 당시 17.6.1 국가 간 협력의 형태별 과학기술협력 합의와 프로그램의 수는 현재 제외됨.

357)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civil society partnerships)은 현재 제외됨.

UNESCAP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표 수집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SDG 17에서 50% 이상 국가에서 특정 지표의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한 '추세 양호'는 6개, 50% 이상 국가에서 1개의 데이터만 가능한 '현황 양호'는 1개로 나타난다. 50% 이하 국가에서 1개 이상의 데이터가 가능한 '현황 제한'은 4개, 모든 국가에서 데이터 집계 어려운 '자료 없음'은 12개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SDG 17 지표에서 접근 가능한 것도 있는 반면 데이터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II-67〉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SDG 17 지표 수집 가능성

지표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7.1.1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의 비율				√
17.1.2 예산대비 국내 조세 비율				√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공여국의 전체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순지출 비율			√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
17.3.2 GDP 대비 해외송금액 비율(US달러 기준)	√			
17.4.1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대비 채무 원리금 상환 비율	√			
17.5.1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
17.6.1 인구 100명 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 ³⁵⁸⁾				√
17.7.1 개발도상국에게 친환경기술 개발·이전·보급·확산을 위한 총 승인 금액				√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			
17.9.1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	√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치	√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율	√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

지표	추세 양호	현황 양호	현황 제한	자료 없음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자료(Dashboard)				√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마련한 국가의 수				√
17.15.1 개발협력 제공자가 국가소유의 성과체계 및 계획수단을 사용하는 범위			√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이해관계자 개발효성과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내에서의 진전을 보고한 국가의 수		√		
17.17.1 민-관협력에 약정된 US달러 금액 ³⁵⁹⁾				√
17.18.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가 단위에서 생산된 완전히 세분화된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비율				√
17.18.2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을 갖는 국가의 수				
17.18.3 전직인 재정지원을 받고 이행 중에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가진 국가의 수(재원별)			√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
17.19.2 a) 지난 10년 동안 최소한 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했고 b) 100%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	

출처: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pp. 30~36.

(2) 북한 현황

현재 북한의 경우 SDG 17에서 활용 가능한 지표는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17.9.1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과세’,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로 5개이다.³⁶⁰⁾

358) 이전 17.6.2였으며 당시 17.6.1 국가 간 협력의 형태별 과학기술협력 합의와 프로그램의 수는 현재 제외됨.

359)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십은 현재 제외됨.

360)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goal-9>> (Accessed June 15, 2021).

〈표 III-68〉 SDG 17 북한 가용지표

세부목표	이행지표	북한
17.3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	52.0 million dollars (2018) * FDI 기준
17.8.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	0% (2012)
17.9	17.9.1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	2.6 million dollars (2018)
17.12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	4.1%(2018) * 최혜국대우
		4.1%(2018) * 일반대우
17.19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377,000 (2017)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III-69〉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7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	1		IMF	OECD,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	1		IMF		X	자료 부재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 ODA 비율	1	1		IMF		X	자료 부재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	1	•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2020 종합검토에서 포함	OECD, UNCTAD		O	UN DESA Statistics Division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	1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	1		World Bank	UNCTAD	X	자료 부재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 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2020 종합검토에서 포함 • 2019년 11월, 12월 WebEx 회의에서 검토 (티어 2로 분류)	UNCTAD		X	자료 부재

SDG 17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속도별)	1	1	• 현재 17.6.1 지표는 이전에 17.6.2 였고 이전 17.6.1 지표는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종합검토 과정에서 삭제됨	ITU	UNEP	X	자료 부재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3	2	•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개선 • 2019년 11월, 12월 WebEx 회의에서 검토 (티어 2로 분류)	UNEP-C TCN		X	자료 부재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	1		ITU		O	UN DESA Statistics Division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1	1		OECD		O	•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 정보산업성 • 중앙통계국 • 외무성 • 대외경제성
17.10.1국제 가중 관세 평균	1	1		WTO, ITC, UNCTAD		X	자료 부재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	1		WTO, ITC, UNCTAD		X	자료 부재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	1	•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개선	WTO, ITC, UNCTAD		O	UN DESA Statistics Division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2	• 제8차 IAEG-SDG 회의 검토 (티어 2로 분류)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3	2	• 2020년 2월 WebEx 회의에서 검토(티어 2로 분류) • 2019년 11월, 12월 WebEx 회의에서 검토: • IAEG 파일럿 결과가 티어 분류 결정(티어 3으로 분류)	UNEP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2	2		OECD, UNDP		X	자료 부재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2	2		OECD, UNDP	UNEP	X	자료 부재

SDG 17 지표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비고 (티어 변경 이유 및 리뷰 시기)	가능한 관리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보유 여부	비고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 정한 US달러 금액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2020 종합검토에서 포함 파트(a)는 2018년 12월 WebEx meeting에서 검토: 예를 들어 인프라, 교육, 건강 등 파트(a)의 모든 부문들이 포함될 때 까지 티어 3으로 유지 제6차 IAEG-SDG 회의: 시민사회파트너십에 약정한 달러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18.1 SDGs 모니터링 위 한 통계역량지표		2	제51차 유엔통계위원회 2020 종합검토에서 포함			X	자료 부재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 을 준수하는 국가 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 가용성 2019년 10월 검토 (티어 1로 분류) 제6차 IAEG-SDG 회의 검토(티어 2로 분류) 	PARIS21		X	자료 부재
17.18.3 자원이 충분히 확보 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 유한 국가의 수(재 정지원 출처별)	1	1		PARIS21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X	자료 부재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 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1	1		PARIS21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O	자료 부재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 한 번의 인구 주택총조사를 진행 했고, b) 100%의 출 생등록과 80%의 사 망등록을 달성한 국 가의 비율	1	1		UNSD	UNFPA, DESA Population Division, other involved agencies in the inter- agency group on CRVS	X	자료 부재

출처: UN, "Provisional Proposed Tiers for Global SDG Indicators, draft as of March 24, 2016," p. 2, <<https://unstats.un.org/sdgs/files/meetings/iaeg-sdgs-meeting-03/Provisional-Proposed-Tiers-for-SDG-Indicators-24-03-16.pdf>> (검색일: 2021.5.21.); UN(2021),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검색일: 2021.5.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56.

현재 가용한 지표 중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FDI), ODA 및 남남협력의 비율’은 북한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으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1990년부터 2018년까지(1995년, 1997년, 1999년 제외) 시계열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에서 집계되었다. 2018년 북한의 해외직접투자는 5,197만 달러³⁶¹⁾로 같은 해 한국의 직접투자 144억793만 달러의 0.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는 군서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의 36억 6330만 달러와 비교할 때 1.4%에 해당된다.

〈표 III-70〉 17.3.1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세계	선진국	개도국	최빈개도국	군서도서개도국	북한
2018	1,297,152.8	556,892.0	706,042.8	23,833.4	3,663.3	52.0
2019	1,539,879.7	800,239.1	684,723.3	21,147.3	4,125.7	25.7

출처: 북한을 제외한 기타 데이터는 UN Doc. E/2021/58 (30 April 2021) 참고. 2019년 북한 FDI 수치는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 (Accessed June 15, 202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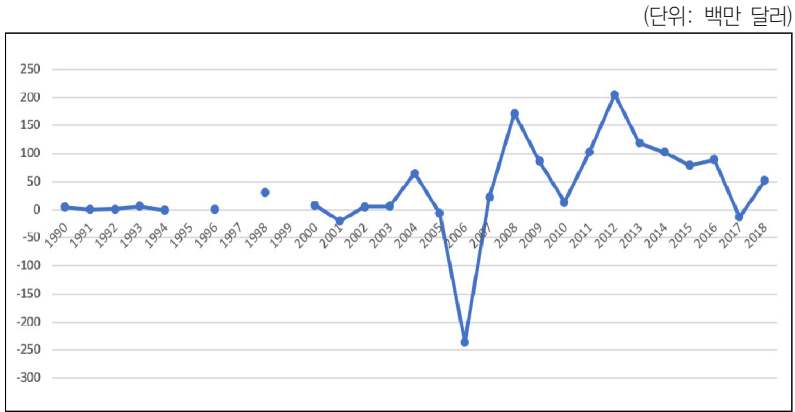
1991년 12월 북한의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이 자유경제무역지구로 선정된 이후 1997년 말까지 직접투자가 일부 이루어졌으며,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금강산관광지구 및 개성공업지구 사업으로 인해 남한의 투자가 북한에 이루어졌다.³⁶²⁾ 2000년대 후반 대부분의 대북투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⁶³⁾ 다만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제재는 대북투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61) 유엔 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의 국가별 프로파일에 의하면 2018년 북한의 해외직접투자는 5,197만 달러로 나타나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는 79만 달러로 집계함.

362) 강우철, “북한개발협력과 개발재원,” 박지연·손희상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p. 538.

363) 정형근 외,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KIEP 브리핑』 11권 21호 (2011), p. 3.

〈그림 III-17〉 북한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 UNCTAD, FDI/MNE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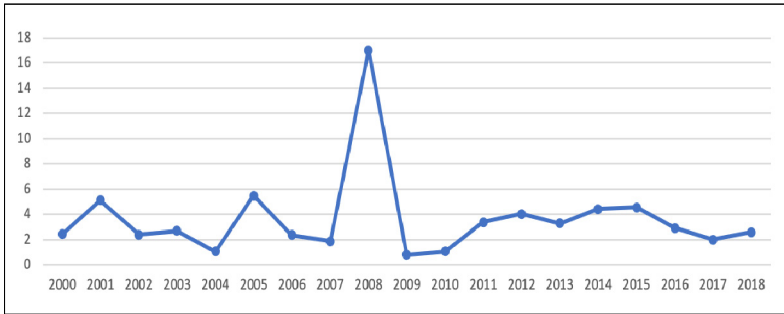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를 바탕으로 재구성.

17.8.1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사실상 북한에 적합한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에서는 내부용 인트라넷은 가능하나 외부로 연결되는 개인 인터넷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은 없는 것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컴퓨터, 이동전화, 노트북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정보화기기 이용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대안 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7.9.1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하여 개도국에 지원되는 재정 및 기술지원의 달러 가치’는 역량강화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을 지원하는 기술협력 지원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OECD에서 집계 가능했던 2000년의 경우 244만 달러였지만 2008년에는 1,700만 달러로 약 7배 증가하였다. 2010년 대에는 대체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26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18〉 기술협력 ODA 총지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III-71〉 17.9.1 기술협력 ODA 지역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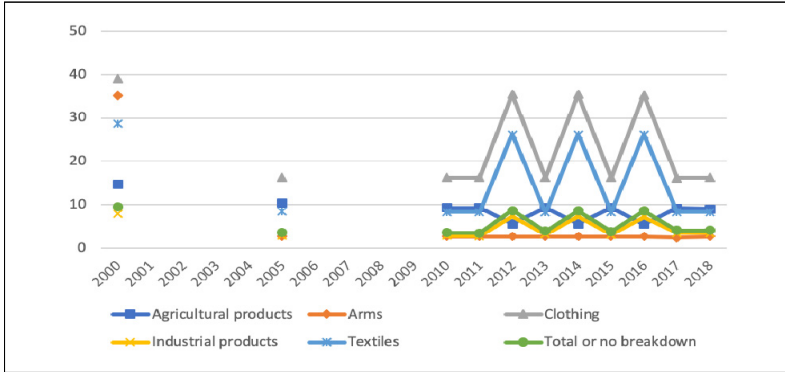
	ODA 총액	유럽	동아시아	최빈개도국	군서도서개도국	북한
2018	36,406.6	934.4	1,450.5	6,912.4	1,344.1	2.6

출처: 북한을 제외한 기타 데이터는 UN Doc. E/2020/57 (28 April 2020) 참고.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개도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도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상품 유형 별 최혜국대우 기준(the most-favored nation status)과 일반대우 기준(preferential status)으로 평균 과세가 집계되고 있으나 수치상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해당 지표는 국제 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ITC), UNCTAD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sation: WTO)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림 III-19〉 평균 과세, 최혜국대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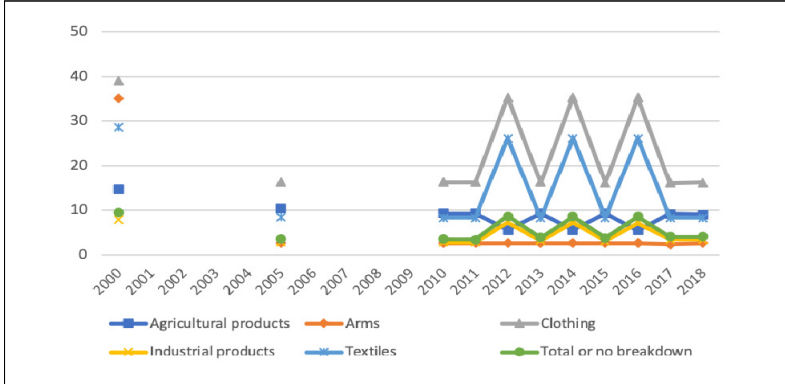


자료: ITC, UNCTAD, WTO출처: ITC, UNCTAD, WTO.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III-20〉 평균 과세, 일반대우

(단위: %)



자료: ITC, UNCTAD, WTO출처: ITC, UNCTAD, WTO.

출처: UN DESA Statistics Divisio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Accessed June 15, 2021)를 바탕으로 재구성.

끝으로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지표가 있으나 2017년 한 해에 37만7천 달러가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북한에서 SDGs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북한의 경우 공개된 데이터가 부족하다. 실제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서 제시한 네 번째 전략순위가 ‘데이터와 개발관리(Data and Development Management)’이며, 유엔은 유엔의 필요가 있거나 북한 정부가 요청할 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³⁶⁴⁾ 최근 한국 정부도 북한의 국제 통계 원칙 및 통계 이용성 향상을 위해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³⁶⁵⁾ 데이터와 통계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 및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만큼 향후 북한의 SDGs 이행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역량 강화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III-72〉 17.19.1 통계역량강화로 사용된 모든 자원의 달러 가치 지역별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세계	유럽 및 북미	동아시아	최빈개도국	군서도서 개도국	북한
2018	689.7	33.3	0.5	362.2	12.4	0.4

출처: 북한을 제외한 기타 데이터는 UN Doc. E/2020/57 (28 April 2020) 참고.

북한의 VNR은 SDG 17과 관련되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SDG 17을 ‘우호적 파트너십 발전’으로 규정하고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하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발전, 남남협력 증진’을 목표로 재설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우선순위, 세부목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364)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6.12.20.

365)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의결,」 (2020.5.27.).

〈표 III-73〉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 현황

SDG 17	
유엔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북한	우호적 파트너십 발전
목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 하에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발전, 남남협력 증진
정책우선 순위	1. 양자 및 다자협력 강화 2. IT 개발 3. 국가통계시스템 중앙집중화 강화
세부목표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지역적·국제적 협력과 접근을 강화하고, 현존 메커니즘 조정, 특히 UN차원에서의 개선과 세계 기술증진메커니즘 등을 통해 상호협약에 기초한 지식공유를 증대함
지표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및 프로그램 수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8~11을 바탕으로 재구성.

북한은 SDG 17 목표인 ‘우호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협력 강화’, ‘IT 개발’, ‘국가통계시스템의 중앙집중화 강화’라는 3가지 정책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SDG 17 목표는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임을 천명하고,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에 근거한다. 세부목표는 17.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남북·남남·삼각협력 등의 지역적·국제적 협력 강화’ 1개가 제시되었고 지표 역시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및 프로그램 수’가 유일하다.

〈표 III-74〉 북한의 VNR에서 제시된 SDG 17.6.1 지표 현황

지표	2015	2018	2019
17.6.1 국가 간 협력에서 과학기술 협정 및 프로그램 수(개)	9	7	8

출처: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63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목표 및 지표 평가

VNR을 통해 북한이 공개한 SDG 17의 상황을 본다면 북한이 SDG 17을 북한의 법제와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 제시된 SDG 17 지표 가운데 북한이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하거나 이행할 수 있는 지표는 사실상 없다. 북한이 유일하게 지표로 제안한 17.6.1 ‘국가 간 협력에서 과학기술 협정 및 프로그램 수’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UNSD 종합검토 과정에서 삭제된 지표이다. 북한이 SDG 17 이행 범위와 이행 방식을 상당히 자의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SDG 17의 관심은 사회적 빈곤 탈피와 발전수요, 체제안정화 등을 이유로 우호적인 외부환경 조성과 필요한 내부역량 발전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SDG 17의 세부목표 및 글로벌 지표는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에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개발재원의 확대, 기술이전의 촉진, 역량강화 추진, 무역에 대한 각종 시장 접근 확대 등 SDG 17의 주요 의제들은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이행하고 자료를 집계할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SDG 17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나 북한 사회에서 이러한 환경 조성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북한과 같은 저소득국가나 폐쇄적인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지표는 사실상 많지 않다.

다음으로, 과학기술혁신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은 북한의 주요 관심 영역이라는 점이다. 김정은 체제 들어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³⁶⁶⁾ 북한은 과학기술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자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보고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366)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pp. 29~41.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³⁶⁷⁾ 2018년 4월 북한은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통하여 “과학과 기술은 국가건설의 기초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강조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수준 향상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성취하는 수단이자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됨을 명시하였다.³⁶⁸⁾ 북한은 자신들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북한 체제의 존속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21년 1월 북한에서 새롭게 제시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1-2025)에서도 과학기술 중시 노선은 지속되고 있다.³⁶⁹⁾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은 북한이 SDG 17에서 관심이 높은 영역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현 상황에서 정치적, 경제적 필요성이 높은 영역이다.

북한은 SDG 17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협력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³⁷⁰⁾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확대시키는 것은 SDGs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행을 위한 자원 확보 및 기술협력을 통해 북한이 발전 도상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보편규범을 수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제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367) 임철웅,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추동력,” 『경제연구』, 제3호 (2018), p. 8, 재인용: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p. 104.

36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의 진행,” 『로동신문』 2018.4.21.

369) 최근 북한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우는 것은 올해를 명실공히 과학으로 들고일어나는 해,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5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해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로동신문』 2021.5.24.; “새로운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올해의 과업들 가운데서 핵심사항은 과학기술력을 키우고 과학기술의 실제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다.” 『로동신문』 2021.6.15.; “모든 당조직들이 과학기술을 단위발전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만큼 비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 수 있다.” 『로동신문』 2021.7.10.

370)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p. 48~49.

대외관계를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북한이 SDGs 이행에 있어 지속되는 제재와 봉쇄가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북한의 주권과 발전권에 도전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 점이다.³⁷¹⁾ 주지하다시피 2010년대 중반 한층 더 강화된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필요한 물자 유입, 외부 지원, 대외무역 및 투자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대북제재 국면에서 에너지, 농업, 식수위생, 환경 등 북한이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는 SDGs 목표 달성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SDG 17이 개발재원 증대, 과학기술 이전, 시장 접근 등을 직접 다루는 만큼 대북제재의 완화는 개발협력 확대 및 적극적인 파트너십 추진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 및 자급자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부로는 다자주의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점은 북한 발전 방향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³⁷²⁾ 즉 북한이 2030의제 및 SDGs 이행에 있어 양자 및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경제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누려야 할 발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표출하면서 대북제재 완화 및 적대정책 종식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노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국가 통계시스템 강화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제시한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SDGs 실행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세부목표들의 이행을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 산출과 이를 집계하여

371) *Ibid.*, p.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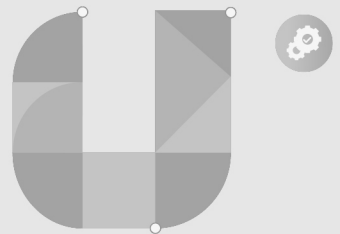
372) “새로운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다. 일군들은 오직 중앙집권적이며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에 정비전략, 보강전략을 실현하며 지속적인 발전단계에 이행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하는데 서 당의 새로운 자력갱생전략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로동신문』 2021.6.14.

분석하는 국가 통계역량이 필수적이다. VNR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글로벌 지표의 북한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내 각 단위 별 SDGs 이행을 위한 일관된 기준 제시 및 사회경제 발전의 촉진을 위해서 공식통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선진화된 국가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³⁷³⁾ 최근 김정은 정권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수행과 관련된 경제관리 개선 측면에서 통계시스템의 발전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³⁷⁴⁾ SDG 17에서 개도국의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확대(17.18)가 세부목표로 제시된 만큼 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은 향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있다.

373)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48.

374) “나라의 경제발전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분석평가하기 위해 통계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통계장악과 계산, 분석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통계의 전면성과 객관성, 과학성,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국가적인 일원화통계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실천적인 대책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경제작전도의 심화,” 『로동신문』 2021.1.31.

IV. 북한의 SDGs 지표 현황과 북한 적용 가능 지표 모색



IV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SDGs 10개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들의 국제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지표별로 북한이 VNR에 제시한 지표 현황과 그 특징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SDGs 지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IAEG-SDGs(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는 이들 232개 지표(SDGs 17개에 대한 지표수)가 여전히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SDGs 지표는 이미 수집 방법론이 존재하며 일정 수의 국가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티어 1 그룹의 지표들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향후 북한의 지표 역량 확대와 함께 티어 2 그룹의 지표 값을 생성하는 남북 및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IV장에서는 앞선 논의한 SDG 2, 7, 8, 9, 11, 12, 13, 15, 16, 17번 목표 관련 지표에 국한하여 북한의 SDGs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장의 1절에서는 이 연구가 다루는 SDGs 10개 목표와 관련하여 그 지표들의 특징 분석과 함께 북한이 2021년 7월 공개한 VNR 상의 지표 현황을 매칭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2절에서는 SDGs 10개 목표에서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의 신뢰성을 북한의 통계 역량, 북한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제시한 지표의 엄밀화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선별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표의 지속적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측정 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북한이 이번 VNR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원조를 받는 개도국으로서 북한이 지표 측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 금번 VNR에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으나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의 중요성, 북한의 역량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적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VNR 지표 현황

유엔은 SDG 지표를 데이터 수집 가능성을 바탕으로 티어 1~4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티어 1은 ‘수집 방법론이 이미 존재하며 일정 수의 국가로부터 데이터 수집이 가능’ 한 지표 그룹으로, 총 93개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티어 2는 ‘수집 방법론은 존재하나 실제 수집되지 못하는 지표’로, 72개 지표가 있다. 티어 3은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으며,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지표’ 그룹이다. 이들 지표는 총 62개에 달한다. 끝으로 다중티어(Multi-Tier)는 지표의 하위 구성요소 간에 티어 유형이 다른 경우로 총 5개의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티어 1’과 ‘티어 2’에 해당하는 지표의 경우 북한 역시 내부적 역량이 마련될 경우 산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티어 3’과 ‘다중티어’의 경우 국제사회 역시 동 지표의 산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적용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추가적으로 유엔이 지표별로 이들 지표의 관리 및 데이터 형성이 가능한 국제기구를 매칭하고 파트너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해당 데이터 수집 및 형성에 있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장에서는 각 지표별로 관리 가능한 국제기구들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1〉 SDGs 지표 분류

구분	내용	관련 통계(비율)
티어 1	개념이 명확하여 방법론 및 표준이 정립되어 있고, 해당 지역 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지표	93(40.1)
티어 2	개념이 명확하여 방법론 및 표준은 정립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지표	72(31.0)
티어 3	지표 측정 방법론 및 표준이 없거나 현재 개발 단계인 지표	62(26.7)
다중티어	지표의 하위 구성요소 간에 티어 유형이 다른 경우	5(2.2)
합계		232(100.0)

출처: 박영실·이영미·김인겸,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p. 9.

가. SDG 2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2번 목표는 13개 세부목표와 이에 해당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지표 가운데 지표정의와 측정방식이 명확한 티어 1그룹의 지표는 8개이며, 지표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식이 명확함에도 정기적으로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고 있는 티어 2그룹의 지표는 5개에 해당한다.

〈표 IV-2〉 SDG 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2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지표 값		
					2015	2018	2020
2.1.1 영양 부족 현황(POU)	1	1	-	식량부족(1,000)	1,147	1,486	-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1	1	• 2019년 데이터 리뷰 (티어 2→ 티어 1)	부재	-	-	-

SDG 2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지표 값		
					2015	2018	2020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1	1	-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 (키 <-2) (%)	27.9	19.1	17.4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1	1	-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 (키에 대한 몸무게 >+2 또는 <-2) (%)	- (2012)	4.8 (2017)	4.5
2.3.1 노동단위 당 생산량 (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WebEx 회의 (티어 3 → 티어 2) IAEG-SDG 6차 회의: “소규모 식량생산자” 정의에 대한 추가 작업 필요성 확인 	부재	-	-	-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WebEx 회의 (티어 3 → 티어 2) 	부재	-	-	-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 면적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차 IAEG-SDG 회의 (티어 3 → 티어 2) IAEG-SDG 6차 회의: 지표 재분류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와 연구와 파일럿 스터디에 대한 검토 필요성 확인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농업 면적 비율 (%)	95	96	95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리뷰 (티어 2 → 티어 1) IAEG-SDG 4차회의 (티어 3 → 티어 2) 	식량과 농업 안보를 위한 유전자원의 수(종)	168	265	-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리뷰 (티어 1→ 2)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리뷰 (티어 2→ 티어 1) 	멸종위기 수준이 위험, 비위험 또는 알려지지 않음으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종)	60,374 (2014)	86,268	-

SDG 2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지표 값		
					2015	2018	2020
2.5.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리뷰티어 2 → 티어 1) • IAEG-SDG 3차 회의 (티어 1 → 티어 2) 	부재	-	-	-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 (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1	1	-	부재	-	-	-
2.5.b2 농업 수출지원금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SC 48차: 2.5.b.1 지표 삭제 	부재	-	-	-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G-SDG 5차 회의 (티어 3 → 티어 2)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주관 번역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이하 북민협 번역본)"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제사회가 티어 1 그룹으로 정의한 지표 중에서 북한이 지표 값을 제시한 목표는 SDG 2번 세부목표의 13개중 6개에 달하며, 세부목표 또한 국제사회가 정의한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였다. 특히 국제사회가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 제시한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 면적 비율(%)', '2.5.2 멸종위기 수준이 위험, 비위험 또는 알려지지 않음으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중)'에 대해서 북한이 해당 지표 값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제시된 6개 지표 중에서 '2.2.1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키 <-2)(%)', '2.2.2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키에 대한 몸무게 >+2 또는 <-2)(%)',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

업에서 농업 면적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표가 2020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자료가 제시되지 못한 이유로 전 지구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료 측정의 어려움과 통상적으로 이들 지표 값을 측정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현재 2021년에 VNR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데이터는 아직 측정 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3개 지표에 대한 2020년 데이터 값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지표 정의와 측정방식이 명확하며, 국제적으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티어 1그룹에 해당하는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5.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2.5.b.2 농업 수출지원금’의 경우 지표 값을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2.5.b.2’의 경우 북한 내부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는 제외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나. SDG 7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7번과 관련하여 유엔은 2019년 IAEG-SDG가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을 티어 3에서 티어 1로 변경하면서 국제사회의 SDG 7번의 6개 세부목표의 모든 지표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표 IV-3〉 SDG 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7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지표 내용 (단위)			지표 내용		
						2015	2018	2020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1	1	-	부재	-	-	-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1	1	-	청정 연료 및 기술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10,3 (2017)	-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1	1	-	전체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12,1 (2016)	9,3	10,8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1	1	-	1차 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GJ/1,000\$)	35	31,5	28,7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0월 데이터 가용성 검토(티어 1로 분류됨) • 제6차 IAEG-SDG 회의에서 검토(티어 2로 분류) • UNSC 48 개선 제5차 IAEG-SDG 회의에서 검토 :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 및 표준 개발 필요(티어 3으로 분류됨) 	부재	-	-	-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종합 리뷰에 포함된 UNSC 51 대체 • 7.b.1/12.a.1 중복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동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목표와 관련한 최근 지표 값을 모두 제시하였다.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은 2017년 지표 값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측정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북한은 SDG 7의 총 6개 지표 가운데 단 3개만 측정하고 있어 ‘에너지’를 중요한 이행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의 수준에 미달하는 데이터 구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한 삶 영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과 관련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북한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체제중심의 국가전략이 인민 개인생활의 질과 연계되는 지표로 확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7.a.1’과 ‘7.b.1’의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관련 지표 값이 전무하나 북한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대북제재 및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발전 역량을 고려할 때 향후 북한 에너지 문제 해결에 있어 재생 및 청정에너지 의존율이 높아질 것이므로 점차 데이터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SDG 8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8의 지표는 경제관련 세부목표와 관련되어 있어 16개에 달한다. 하지만 북한이 금번 VNR에서 제시한 지표 값은 5개로 북한의 경제 관련 통계 시스템 및 역량이 저발전 상태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이들 지표 값의 측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IAEG-SDG가 티어 1로 분류한 지표들 중에서 북한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가 6개에 달한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관련 통계역량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표 IV-4〉 SDG 8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8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1	1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4	4.0	4.3 (2019)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1	1	-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GDP 성장률	7.4 (2016)	4.0	1.4 (2019)
				정부 지출에서 R&D 비율(%) ³⁾	8.8	9.3	9.9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2	2	• 2020년 UNSC 51차 회의에서 포괄적 검토 수행	부재	-	-	-
8.4.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당 물질 발자국	2	2	• IAEГ-SDG 9차 회의: 국제 차원에서 방법론에 대한 합의, 국가 단위는 미합의 (티어 2로 분류) • 2019년 WebEx회의에서 UNEP으로 하여금 국제기준으로서 지표 재분류 이전에 방법론에 대한 추가 작업을 요청함	부재	-	-	-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2	1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회의 (티어 1로 분류) • 8.4.2와 12.2.2 중복 확인	부재	-	-	-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2	2	• UNSC 51차 수정 회의	고용 대 인구 비율 ³⁾	53.8 (2014)	-	55.3 (2019)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1	1	-	부재	-	-	-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15~24세)의 비율	1	1	-	부재	-	-	-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1	2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 (성 및 이주 상태별)	1	2	• UNSC 51차 회의 데이터 확보 가능성 회의(티어 2로 분류)	부재	-	-	-
8.8.2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 (성 및 이주 상태별)	1	2	• 2018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Г-SDG 5차 회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과 기준에 대한 승인 필요성 확인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SDG 8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2	2	-	전체 GDP 및 성장률에서 관광업 비율	0.16 (2016)	0.23	0.0063
8.10.1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1	1	-	부재	-	-	-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15세 이상) 성인 인구 비율	1	1	-	부재	-	-	-
8.a.1 무역원조 약속 및 지불	1	1	-	부재	-	-	-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WebEx 회의(티어 2로 분류) • IAEG-SDG 5차 회의(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북한이 추가한 성과지표.

반면에 IAEG-SDG가 지표 정의와 측정방법이 존재하나 정기적으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 분류한 티어 2그룹의 지표 7개 중에 북한이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을 '고용 대 인구 비율'로 수정 제시하고, 그 지표 값을 제시한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티어 2에 해당하는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과 관련한 2015, 2018, 2020의 지표 값을 제시한 것은 북한의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이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과 관련하여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GDP 성장률'에 추가하여 자체적으로

‘정부 지출에서 R&D 비율(%)’ 지표를 추가하고 해당 지표 값을 제시한 것은 북한이 SDGs 성과지표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라. SDG 9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9번 관련 지표수는 12개로, 이 중 북한은 VNR을 통해 4개의 지표 값을 제시하였다. SDG 9번 목표에서 티어 1에 해당하는 지표는 9개이며 북한이 제시한 4개 지표는 이 9개에 해당한다. 북한이 제시하지 못한 8개 지표 중에서 타 국가들도 정기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티어 2에 해당하는 2개를 북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6개 지표는 사실상 국가의 미시경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지표 값이 부재하다는 것은 북한의 기본 통계역량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들 미시경제 지표는 북한의 세금 수입 확보에 있어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단순 통계역량의 미흡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의 발전에 필수적인 국내 자원 확보를 위한 기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지표 값의 경우 OECD CRS를 통해 확보 가능하며,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의 경우 북한의 핸드폰 사용률 및 인터넷 접근률 관련 지표 값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음 북한의 VNR에서 지표 값 확인이 가능한 목표로 추정할 수 있겠다.

〈표 IV-5〉 SDG 9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9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3	2	• 2018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1	1	-	부재	-	-	-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1	1	-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40.18	40.06	38.60 (2019)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1	1	-	부재	-	-	-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	3	2	• IAEГ-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Г-SDG 5차 회의: 소규모 산업의 정의에 대한 추가 작업 요청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3	1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회의(티어 1로 분류) • IAEГ-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Г-SDG 5차 회의: 소규모 산업의 정의에 대한 추가 작업 요청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	1	-	GDP당 CO ₂ 배출량 ³⁾	9.7	-	9.4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	1	-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8.2	8.7	9.6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자 수	1	1	-	인구 백만 명당 연구자 수(인)	2,326	2,534	2,966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 (ODA와 기타 공적지원)	-	-	-	부재	-	-	-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 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1	1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 여부 검토(티어 1로 분류)	부재	-	-	-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1	1	-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북한이 국가개발목표와 통합한 성과지표.

마. SDG 11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11의 목표 지표는 14개이며, 이 중에서 북한은 7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7개 지표 중 ‘11.3.1 인구증가율 대비 토지 소모율 비’,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1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의 경우 티어 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당 지표 값을 제시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SDG 11번의 경우 14개 지표 중에 11개가 티어 2에 속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표 개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지표 값을 제시하지 못한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은 적은 노력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이며,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의 경우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미세먼지 이슈가 중요한 환경문제라는 점에서 측정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과 관련된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역시 국제사회가 중요시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북한의 관심이 요구되며,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의 비율’ 역시 중요한 요소이나 이 두 지표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표 IV-6〉 SDG 11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1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1	1	-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³⁾	0.8	0.6	0.5 (2019)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2	2	-	부재	-	-	-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모율 비	2	2	-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율 비율(%)	1.26	0.67	0.67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의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G-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2017년 WebEx 회의: 추가 파일럿 조사 및 도시에 대한 정의 및 방법론 보완 요청 • 메타데이터 요청 및 파일럿 조사결과 요청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자연보호구역 수(개수) ³⁾ 천연기념물 수(개수) ³⁾	4 415	4 429	4 429
1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G-SDG 5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1.5.1/11.5.1/13.1.1 중복 확인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 (전체) 사망 실종	(0.43) 0.34 0.09	(0.59) 0.29 0.3	(0.47) 0.42 0.05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2로 분류)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부재	-	-	-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품 폐기물 비율(도시별)	2	2	-	부재	-	-	-

SDG 11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기준)	1	1	-	부재	-	-	-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 (성, 연령 및 장애별)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2017년 WebEx 회의: 도시에 대한 정의 및 방법론 보완과 파일럿 조사 추가 요청 IAEG-SDG 3차 회의: 지표에 대한 방법론 부재 확인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 (성, 연령, 장애 및 발생 장소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10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1.a.1 인구증가예측과 소요 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도시규모별)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WebEx 회의: 도시에 대한 정의 및 방법론 보완과 파일럿 조사 추가 요청 	도시 거주 인구 비율(%)	61	-	62.3 (2019)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샌다이프레이밍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2로 분류)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1.5.3/11.b.1/13.1.2 중복 확인 	국가 재해 위험 감소 전략	-	수립 (2019)	-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1.5.4/11.b.2/13.1.3 중복 확인 	국가 전략에 따라 채택된 지역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비율(%)	0	0	100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3) 북한이 추가한 성과지표.

바. SDG 12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s 17개 목표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어떠한 지표 값도 제시하지 못한 목표가 SDG 12번이다. SDG 6번 물과 관련한 목표의 경우 미흡하나마 2개의 지표에 대해 2018년 데이터를 제시하였고, SDG 14번 해양과 관련한 목표의 경우 한 개의 지표에 대한 2015년 데이터를 제시하였지만, 어떠한 지표 값도 제시하지 못한 목표는 SDG 12번이 유일하다. SDG 12번 목표의 지표는 총 13개로 지표에 대한 정의와 방법론이 명확함에도 실제 측정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 분류된(티어 2) 8개를 제외하고, 지표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측정되고 있는 지표로 간주되는 티어 1그룹의 5개로 지표에 대해서 북한은 해당 지표들을 측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SDG 12에 관한 지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티어 1그룹에 해당하는 지표를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용이하며, SDGs의 특성이 권고된 목표와 지표를 이행하는 국가의 특성에 맞게 수정 제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국제기구의 지원하에 쉽게 개발이 가능한 분야(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그리고 체제 특수성 측면에서 덜 민감한 목표와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V-7〉 SDG 12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2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2	• IAEG-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2.2.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당 물질 발자국	2	2	• IAEG-SDG 9차 회의: 국제 차원의 방법론은 합의되었으나 국가 차원의 합의 필요 (티어 2로 분류) • 2019년 WebEx 회의: UNEP에 방법론 보완 요청 및 지표 재분류 전에 국제기준으로서 승인 대기 (티어 3으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지표에 대한 방법론 부재 (티어 3으로 분류) • 8.4.1/12.2.1 중복 확인	부재	-	-	-
12.2.2 자원 소비량, 1인당 자원 소비량, GDP당 자원 소비량	2	1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8.4.2/12.2.2 중복 확인	부재	-	-	-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지수	3	2	• 2019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6차 회의: 방법론에 대한 명확화 및 메타데이터와 파일럿 조사 결과 요청	부재	-	-	-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	1	-	부재	-	-	-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2	2	• 2019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합의된 방법론 부재 (티어 3으로분류)	부재	-	-	-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3	2	• 2019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합의된 방법론 부재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3	2	• 2019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SDG 12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WebEx 회의 (수정된 하부 지표와 함께 티어 2로 분류) • 2019 WebEx 회의: UNEP에 방법론 간결화 요청을 위한 추가 작업 요청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7.1/12.8.1/13.3.1 중복 확인 • 2019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2018 WebEx 회의: 방법론 질문지 보완 요청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b.1/12.a.1 중복 확인 	부재	-	-	-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틀 이행		1	-	부재	-	-	-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 보조금액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IAEГ-SDGs 52차 회의에서 지표명 개선 필요성 확인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2018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출처: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 SDG 13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13번의 8개 지표는 단 2개만 티어 2였던 것에서 8개 모두가 티어 2로 진전되었다. 다만, 안정적이고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값인 티어 1은 전무하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며 8개 지표 가운데 6개 지표가 여타 SDGs 지표와 중복되고 있다.

해당 지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네 가지 지표 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북한의 현실적 대응으로써 재난감축을 위한 북한 당국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 왔고 다음 VNR에서는 이러한 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는 관련 지표 값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재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4개 지표 값 가운데 2개가 SDG 11번의 목표 및 지표와 중복된다. 즉, ‘11.5.1 인구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수’는 ‘13.1.1’과 같고,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와 ‘13.1.2’의 지표는 일치한다. 재난감축과 함께 SDG 13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는 지구온난화에 관한 지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경우 북한이 ‘13.2.1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 장기 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에서 2016년 첫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020년 업데이트 중이다. 다만 목표와 전략, 계획의 수립여부만 판단하고 있지만,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해야 하므로 현재 부재하는 지표인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지표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8〉 SDG 13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3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13.1.1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5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1.5.1/11.5.1/13.1.1 중복 확인 	10만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실종자 수(전체) 사망 실종	(0.43) 0.34 0.09	(0.59) 0.29 0.3	(0.47) 0.42 0.05
13.1.2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2로 분류) IAEG-SDG 5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1.5.3/11.b.1/13.1.2 중복 확인 	국가재난위험감축 정책 (년도)	-	수립 (2019)	-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 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IAEG-SDG 5차 회의 (티어 3으로 분류) 1.5.4/11.b.2/13.1.3 중복 확인 	국가정책에 적용된 지역재난경감계획 비율(%)	0	0	100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2.1/13.b.1 다소 수정이 있으나 중복됨 확인 	격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가계획 보고서 수	두 번째 보고서 (2012)	첫 번째 보고서 FNDC (2016)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업데이트 중 (2021)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	-	부재	-	-	-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된 정도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7.1/12.8.1/13.3.1 중복 확인 	부재	-	-	-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2	-	부재	-	-	-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2.1/13.b.1 다소 수정이 있으나 중복됨 확인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아. SDG 15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15는 14개 지표로 이중 8개가 티어 1에 속하며 4개는 티어 2에 속하고 나머지 2개는 티어 구분이 없는 지표이다. 이 중 북한은 8개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이 금번 VNR에서 제시한 SDGs 17개 목표 중 가장 많은 지표 값을 제시한 분야이다. 이는 북한이 자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남측과의 협력 사업으로 산림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 따른 축적된 역량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15.5.1 적색목록지수’의 경우 최근 데이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협력을 통해 인공위성 촬영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측정이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지표는 ‘15.b.1’과 지표가 동일하고 IAEG-SDG가 중복지표의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들이 지표를 채택하고 지표 값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표 IV-9〉 SDG 15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5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	1	-	전체 토지면적 중 숲지대 비율(%)	67.3	69.9	73.6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1	1	-	부재	-	-	-

SDG 15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4차 회의: 지표 구성요소 합의(다만 여전히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 확보 제약 있음 확인 (티어 2로 분류))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 a) 보호 숲지대 비율(%) b) 매년 숲지대 증가율(%) c) 헥타르 당 숲의 누적량(M2ha)	67.3 46	69.9 1.3('15~'18) 44	73.6 1.7('15~'20) 44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4차 회의: 지표 구성요소 합의(다만 여전히 일부 구성요소에 대한 데이터 확보 제약 있음 확인)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땅 비율 (%)	9.7	8.1	7.2 (2019)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	4.6	-	-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산 녹화 지수(%)	89	-	-
15.5.1 적색목록지수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적색 목록 지수 동물 식물 하위 식물 위기종	-	0.89 0.94 - -	-
15.6.1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4차 회의: 방법론은 합의되었으나 데이터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제약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 15.7.1/15.c.1 중복 확인 	부재	-	-	-

SDG 15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할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외부침입종의 방지와 역제를 위한 관련 국가 법령 “국경에서의 동물과 식물 검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1997. 3. 2 2003. 7.29	-	-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 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10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생물다양성 가치 발전 계획의 통합 (%)	10	-	-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조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a.1/15.b.1 중복 확인 	부재	-	-	-
15.b.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조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a.1/15.b.1 중복 확인 	부재 (위와 동일지표)	-	-	-
15.c.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15.7.1/15.c.1 중복 확인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자. SDG 16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16은 평화·정의·제도에 관한 목표로 정치적 이슈 영역에 대한 국제협력 목표를 배제하여 왔던 국제사회가 2015년 SDGs 채택 당시 야심차게 포함시키고, 정치적 영역의 넓은 영역을 포함한 목표라는 점에서 24개의 세부목표와 이에 대응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사회개발 영역을 벗어나는 목표라는 점에서 지표 역시 6개(티어 1)를 제외하면 티어 2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대부분이며, 이 중 북한은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연령별)’에 대한 지표만 제시하고 있다.

SDG 16은 평화·정의·제도 영역의 목표들로 향후 북한의 목표 개발 및 지표 제시 측면에서 다른 목표들에 비해서 가장 더딘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부목표들을 중심으로 세부목표와 지표 개발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들로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을 들 수 있다.

〈표 IV-10〉 SDG 16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6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2	2	-	부재	-	-	-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AEG-SDG 9차 회의(티어 2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지표에 대한 방법론 부재(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1	2	-	부재	-	-	-

SDG 16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2	2	-	부재	-	-	-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	2	• IAEG-SDG 4차 회의: 지표에 대한 방법론은 합의하였으나 데이터 가용성은 낮음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수(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1	2	•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2	2	-	부재	-	-	-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 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2	2	-	부재	-	-	-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	1	-	부재	-	-	-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가구 유형별)		2	-	부재	-	-	-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3	2	• IAEG-SDG 10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 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2	2	• IAEG-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5차 회의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2	2	-	부재	-	-	-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기업의 비율	1	1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 IAEG-SDG 3차 회의: 충분한 데이터 부족 확인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	2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SDG 16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변경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 (단위)	2015	2018	2020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3	2	• IAEG-SDG 9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3	2	• IAEG-SDG 9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IAEG-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3	2	• IAEG-SDG 9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	1	• 10.6.1/16.8.1 중복 확인	부재	-	-	-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 (연령별)	1	1	-	출생시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 비율	100	100	100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 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3	2	• IAEG-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1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 (티어 1로 분류)	부재	-	-	-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 인권기구의 존재	1	1	-	부재	-	-	-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3	2	• IAEG-SDG 9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 10.3.1/16.b.1 중복 확인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차. SDG 17의 지표 특성 및 북한 지표 현황 분석

SDG 17은 16개에 달하는 SDGs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다룬 목표로 사실상 선진국의 의무적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에 속한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지표는 많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24개 세부목표 및 지표 중에 1개의 지표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SDG 17에는 지표에 대한 정의와 측정방법론이 명확하나 정거적으로 측정되지 못하고 있는 지표로 8개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SDG 17의 목표와 관련한 북한의 향후 지표 제시에 대한 로드맵은 첫째, 24개 지표 중 이미 제시한 1개와 티어 2 그룹의 8개를 제외한 15개 세부목표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공여국으로서 의무적 목표에 관한 세부목표를 제외하고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 지표’ 등이 그것이다.

〈표 IV-11〉 SDG 17 지표 현황 및 관리 기구와 북한의 지표 보유 여부

SDG 17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 (항목별)	1	1	-	부재	-	-	-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	1	-	부재	-	-	-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1	1	-	부재	-	-	-

SDG 17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	1	-	부재	-	-	-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	1	-	부재	-	-	-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	1	-	부재	-	-	-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 촉진 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2	• 2019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속도별)	1	1	• 기존 17.6.2 지표가 동 지표로 대체됨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PCS)	9	7	8 (2019)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3	2	• 2019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	1	-	부재	-	-	-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1	1	-	부재	-	-	-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	1	-	부재	-	-	-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	1	-	부재	-	-	-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중 관세 평균	1	1	-	부재	-	-	-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2	• IAEГ-SDG 8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3	2	• 2020년 WebEx 회의 (티어 2로 분류) • 20120년 WebEx 회의 (티어 3으로 분류)	부재	-	-	-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2	2	-	부재	-	-	-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2	2	-	부재	-	-	-

SDG 17 지표	티어 변경 현황 ¹⁾			북한 VNR ²⁾			
	기존 티어	현재 티어	변경 논의 현황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 달러 금액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WebEx 회의: Part (a)의 모든 구성요소에 포함될 때 까지 티어 3으로 분류 (티어 3으로 분류) • IAEГ-SDG 6차 회의: 시민사회협력에 사용된 달러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필요 	부재	-	-	-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2	-	부재	-	-	-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데이터 확보 가능성 검토(티어 1로 분류) • IAEГ-SDG 6차 회의 (티어 2로 분류) 	부재	-	-	-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	1	-	부재	-	-	-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	1	-	부재	-	-	-
17.19.2 지난 10년 동안 a) 최소한 번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했고, b) 100%의 출생등록과 80%의 사망등록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	1	1	-	부재	-	-	-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2.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제출 지표에 대한 분석

이 절에서는 북한이 2021년 7월 VNR에서 제시한 지표들을 대상으로 해당 지표의 신뢰성과 지속적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내외부 기관에 의해 VNR 이전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제시된 지표 값 혹은 과거 어떤 경로로든 제시된 적이 없다가 이번 VNR에 처음으로 제시된 지표 값의 경우 신뢰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VNR에서 지표 값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속적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를 필요로 하는 지표는 이번 VNR이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지표 값을 제시하였는데 3개년 지표 값이 모두 제시되지 못했거나, 향후 해당 지표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표의 지속적인 측정이 요구되는 지표를 대상으로 한다.

〈표 IV-12〉 북한 SDG 2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2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지표 값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2015	2018	2020		
2.1.1 영양 부족 현황 (POU)	식량부족(1,000)	1,147	1,486	-	○	○
2.2.1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연령 대비 신장이 WHO 아동 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미만인 발육 부진 현황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유병률 (키 < -2)(%)	27.9	19.1	17.4	○	○
2.2.2 5세 미만 아동 중에서 신장 대비 체중이 WHO 아동성장표준 중간 값으로부터 표준편차가 >+2 또는 <-2 인 영양 불량 현황 (형태별: 저체중, 과체중)	5세 미만 아동의 영양실조 유병률 (키에 대한 몸무게 > +2 또는 < -2)(%)	- (2012)	4.8 (2017)	4.5	○	○

SDG 2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지표 값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2015	2018	2020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면적 비율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농업 면적 비율(%)	95	96	95	X	O
2.5.1 식량 및 농업을 위해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되어 있는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의 수	식량과 농업 안보를 위한 유전자원의 수(종)	168	265	-	O	O
2.5.2 멸종 위기에 있는 멸종 위기에 있지 않는, 혹은 알려지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지역품종의 비율	멸종위기 수준이 위협 비위험 또는 알려지지 않음으로 분류된 지역 품종의 비율(종)	60,374 (2014)	86,268	-	X	O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2의 목표는 북한의 식량난과 함께 국제기구의 협력 하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그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적 정례적으로 해당 지표들을 측정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지표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북지원 과정에서 과연 북한에 인도적 상황이 존재하느냐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와 함께 국제기구의 측정 방식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2.1.1 영양부족현황, 2.2.1 5세 미만 아동의 연령대비 신장과 2.2.2 5세 미만 아동의 신장 대비 체중 지표의 지속적인 엄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평가에 있어 유일하고 핵심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지속적 측정이 가능한 북한 내 제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이외에 2.5.1 중장기 보존 시설에 확보된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 수는 보존 종의 수가 적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존

시설의 확보 및 보전 기술과 같은 역량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측정 방식이 명확하고 단순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4.1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지비율과 2.5.2 멸종 위기 품종과 관련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중요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한 지표로 분류하였다.

〈표 IV-13〉 북한 SDG 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7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지표 내용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7.1.2 청정연료 및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청정 연료 및 기술에 1차적으로 의존하는 인구 비율(%)	-	10.3 (2017)	-	○	○
7.2.1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전체 에너지 소비 최종단계에서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12.1 (2016)	9.3	10.8	X	○
7.3.1 1차 에너지와 GDP로 측정되는 에너지 집약도	1차 에너지와 GDP 차원에서 측정된 에너지 집중도(GJ/1,000\$)	35	31.5	28.7	X	○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7은 화석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있어 익숙하지 않은 지표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세 지표 모두 지표 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특히 인구 통계와 관련한 SDG 7.1.2번의 경우 북한은 인구 통계 자체의 정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 통계 시스템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주제별 연계 지표(청정연료

및 기술 의존도)에 대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7.21. 재생 에너지 비율과 7.3.1 1차 에너지에 대한 GDP 대비 에너지 집약도 지표는 북한이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해당 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 자체가 고무적이며, 또한 해당 지표에 대한 측정 노하우를 구축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량강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V-14〉 북한 SDG 8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8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4	4.0	4.3 (2019)	○	○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	근로자 1인당 연간 실질 GDP 성장률	7.4 (2016)	4.0	1.4 (2019)	○	○
	정부 지출에서 R&D 비율(%)	8.8	9.3	9.9	X	○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성 연령 직업 및 장애별)	고용 인구 비율	53.8 (2014)	-	55.3 (2019)	X	○
8.9.1 총 GDP 및 성장률에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	전체 GDP 및 성장률에서 관광업 비율	0.16 (2016)	0.23	0.0063	○	○

출처: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하여 8.1.1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과 8.2.1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연 성장률은 북한의 경제 상황 파악에 있어 기초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지속적인 파악이 필요한 지표이다.

8.2.1의 두 번째 지표인 정부 지출에서 R&D 비율은 측정 방식이 명확하고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국가의 예산 배분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측정이 더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8.5.1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측정 방식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보다는 북한의 경제 발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관련한 사회발전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측정이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8.9.1 총 GDP 및 성장률에서 관광분야 직접 기여 비율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측정 방식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동 분야의 빠른 발전과 변화 경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확성 제고와 지속적 평가가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표 IV-15〉 북한 SDG 9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9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9.2.1 GDP 대비 제조업 부가 가치 비율,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GDP 대비 제조업 부가 가치 비율(%)	40.18	40.06	38.60 (2019)	○	○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GDP당 CO2 배출량 ²⁾	9.7	-	9.4	○	○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GDP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	8.2	8.7	9.6	○	○
9.5.2 인구 1백만 명당 (상근상당) 연구자 수	인구 백만 명당 연구자 수(인)	2,326	2,534	2,966	X	X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2) 북한이 국가개발목표와 통합한 성과지표.

SDG 9, 혁신과 인프라 지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제조업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9.2.1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비율 지표는 동 분야의 발전에 따른 해당 지표의 엄밀화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성장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같은 맥락에서 9.5.1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왔으나, 향후 시장경제의 확산을 가정할 때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하 중앙에 의한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다양한 경제 및 사회 주체들에 의한 연구개발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규범적 성격의 지표로 북한이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평가와 지속적인 평가 노력이 모두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9.5.2 인구 1백만 명당 연구자수는 북한이 다년도에 걸쳐 이미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 역시 어렵지 않은 지표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확성 제고 노력과 평가 노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표 IV-16〉 북한 SDG 11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11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²⁾	0.8	0.6	0.5 (2019)	○	○
11.3.1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소모율 비	인구증가를 대비 토지 소비율 비율(%)	1.26	0.67	0.67	X	X
11.4.1 모든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배정된 1인당 총 지출액 (자금원천(공공, 민간), 유산종류(문화, 자연), 정부 유형(중앙, 광역, 시군)별)	자연보호구역 수 (개수) ²⁾	4	4	4	X	X
	천연기념물 수(개수) ²⁾	415	429	429	X	X

SDG 11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1.5.1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인구 10만 명당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 수(전체) 사망 실종	0.43 0.34 0.09	0.59 0.29 0.3	0.47 0.42 0.05	○	○
11.a1 인구증가예측과 소요자원을 통합하여 수립된 도시 및 지역개발계획을 이행하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도시규모별)	도시 거주 인구 비율(%)	61	-	62.3 (2019)	○	○
11.b.1 「재난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국가 재해 위험 감소 전략	-	수립	-	X	○
11.b.2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	국가 전략에 따라 채택된 지역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비율(%)	0	0	100	○	○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2) 북한이 추가한 성과지표.

SDG 11 지속가능 도시 지표는 북한이 가장 많은 지표를 제시한 분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표의 정확성과 지속적 측정을 위한 역량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겠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정할 때 도시화는 피할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11.1.1 빈민가, 임시거처 또는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도시 인구 비율 지표는 엄밀한 측정을 위한 역량 강화와 함께 해당 지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에

11.3.1 인구 증가율 대비 토지소모율 비는 북한의 인구 증가율이 완만하며 토지 소모율 또한 사회 문제가 될 때까지는 아직 많은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표의 엄밀성과 지속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지표로 평가하지 않았다. 또한 11.4.1의 자연보호구역 수와 천연기념물 수 역시 단순 측정지표이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측정해왔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지속적 측정을 위한 추가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았다.

11.5.1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 및 실종자 수 지표는 재난에 취약한 북한이 과거 재난 피해자 규모 파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동 지표의 엄밀성 제고 노력과 함께 지속적인 평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1.a.1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의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상징할 때 빠른 도시화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바, 해당 지표의 정확성 제고와 지속적인 평가 역량 구축이 필요하다. 11.b.1 국가 재해 감소 전략의 경우 북한이 재난 취약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수립이 필요한 지표로 평가할 수 있으며, 11.b.2 국가 전략에 따라 채택된 지역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비율 지표는 과거 두 번의 비율이 전무하다가 2020년 100%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지표 자체의 신뢰성이 의심되고 따라서 보다 엄밀한 평가가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다만 지표의 지속적 측정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국가 재해 감소 전략과 지역 재해 위험 계획을 일치시키는 조치(2020년 비율이 100% 달성)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향후에도 지속적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IV-17〉 북한 SDG 13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13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3.2.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국가의 수	격년마다 제출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가계획 보고서 수	두 번째 보고서 (2012)	첫 번째 보고서 FNDC (201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업데이트 중 (2021)	X	O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한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 주: 13.1.1 ‘1십만 명당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직접적 피해를 입은 인구 수’, 13.1.2 ‘재난 위험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 (2015-2030)에 따라 국가재난위험 감축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3.1.3 국가의 재난위험감축전략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전략을 갖추고 있는 비율은 SDG 11에서 제시된 지표와 동일하므로 생략.

SDG 13 기후변화 대응 지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총 4개 지표를 제시 하였으나 3개 지표는 SDG 11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에서 제시한 지표와 중복지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목표에서는 분석을 생략 하였다. 따라서 SDG 13에서는 북한은 13.2.1 격년마다 제출하는 온실 가스감축에 대한 국가계획 보고서를 2015년에 제출하고 2020년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으로써 해당 지표를 만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립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핵심 이슈로 북한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지표라는 점에서 지속적 수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겠다.

〈표 IV-18〉 북한 SDG 15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15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전체 토지면적 중 숲지대 비율(%)	67.3	69.9	73.6	X	O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향한 진전 a) 보호 숲지대 비율(%) b) 매년 숲지대 증가율(%) c) 헥타르 당 숲의 누적량(M2ha)	67.3 46	69.9 1.3 44	73.6 1.7 44	O	O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전체 육지면적 중 황폐화된 땅 비율(%)	9.7	8.1	7.2 (2019)	O	O
15.4.1 산악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	4.6	-	-	X	O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산 녹화 지수(%)	89	-	-	O	O
15.5.1 적색목록지수	적색 목록 지수 동물 식물 하위 식물 위기종	-	0.89 0.94 - -	-	O	O
15.8.1 외래침입종의 유입 예방과 통제를 위해 국가 차원의 법률과 적당 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비율	외부침입종의 방지와 역제를 위한 관련 국가 법령 “국경에서의 동물과 식물 검역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1997. 3. 2, 2003. 7.29.	-	-	X	X
15.9.1 (a)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아이치목표 타겟2에 따라 국가 차원의 목표를 수립한 국가의 수와 그 목표에 따른 보고 진전도 (b) 환경경제계정 구현을 위한 국가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생태다양성의 통합	생물다양성 가치 발전 계획의 통합(%)	10	-	-	O	O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5 육상 생태계 관련 북한의 지표는 정확성 제고와 지속적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 모두 다 필요한 지표와, 지표 자체의 정의가 명확하고 과학적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히 측정 가능한 지표의 특성상 지표의 정확성보다는 지속적인 측정이 더 중요한 지표로 구분하였다.

먼저, 지표의 정확성 제고와 지속적 측정을 위한 역량강화가 둘 다 필요한 지표로 ‘15.2.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상황’, ‘15.3.1 황폐화된 국토면적 비율’, ‘15.4.2 산악녹색피복지수’, ‘15.5.1 적색 목록지수’, ‘15.5.1 적색목록지수’, ‘15.9.1 생물다양성 가치 발전 계획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위성 촬영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교적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나, 지표의 엄밀성을 위한 현장 조사를 수반하는 지표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산림파괴 문제의 심각성과 이로 인해 재난 취약성이 심화되는 문제를 고려할 때 해당 지표의 지속적인 평가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지표 자체의 정의가 명확하고 과학적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비교적 정확히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수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추정되나 지표의 특성상 지속적인 측정이 더 중요한 지표로 ‘15.1.1 총 국토면적 중 산림 면적의 비율’, ‘15.4.1 산악지역 생물다양성을 위한 주요 구역 중 보호구역 범위(%)’를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는 북한의 정책에 대한 지표들이며, 지표의 엄밀성 보다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들 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IV-19〉 북한 SDG 16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16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6.9.1 5세 미만 중 행정 당국에 출생 등록된 자의 비율 (연령별)	출생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100	100	100	X	X

출처: 1) 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6 평화·정의·제도 목표는 북한이 체제 특성상 부담을 가지는 세부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유일하게 ‘16.9.1 출생 시 행정 당국에 등록된 5세 이하 유아비율’ 목표에 대해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 지표 모두 100%로 제시하였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 값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지표는 북한이 SDG 16에서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긍정적 지표라는 점에서 향후 동 지표의 지속적인 측정 및 제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V-20〉 북한 SDG 17번 해당 지표의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SDG 17 지표	북한 VNR ¹⁾				신뢰성 및 지속성 평가	
	지표 내용(단위)	2015	2018	2020	정확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지속적 측정 역량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표
17.6.1 인구 1백 명당 유선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속도별)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 (협력 형태별, PCS)	9	7	8 (2019)	X	X

출처: 1) 북북한 지표는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의 북민협 번역본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7번 파트너십은 많은 목표가 선진국의 의무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위에 있는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지표는 많지 않다. 북한은 유일하게 ‘17.6.1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과 프로그램의 수와 관련한 지표’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지표의 성격상 측정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지표가 아니고, 북한이 향후 타 국가와 과학기술 관련 협정 체결이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속적 측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 또한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3. SDGs 10개 목표 상의 북한 미제출 지표 도출 가능성

이 절에서는 북한이 VNR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 및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해당 지표의 제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SDGs는 국내 이행 목표를 포함하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역시 SDGs의 이행 성과를 VNR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게 되어 있었으나, 특정 지표의 경우 선진국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북한과 같은 개도국의 목표라고 보기 어려운 세부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을 판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VNR에서 북한이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특정 지표가 북한에게도 해당한다고 할 때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있어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지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 및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성과 역량,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주요 규범이나 개발 목표(환경, 평화, 정의, 인권 등)들을 고려했을 때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있어 시간적 선후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끝으로, 북한이 미제출한 지표를 개발한다고 할 때 IAEG-SDG는 국제기구 내 해당 지표의 관리 가능 기관과 파트너 기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국내 SDGs 지표 관련 국내의 주요 통계 관리 부처를 확인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의 미제출 지표 개발 및 측정에 있어 우리 정부 내 어떤 부처와의 협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IV-21〉 북한 SDG 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2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현재 tier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단기	중기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1	FAO	-	○	○		농림축산식품부
2.3.1 노동단위 당 생산량(농업, 축산업, 산림업 사업체 규모별)	2	FAO	-	○	○		농림축산식품부
2.3.2 소규모 식량 생산업자의 평균 소득 (성별, 토착상태별)	2	FAO	World Bank	○	○		농림축산식품부
2.5.a1 정부 지출의 농업 편향 지수	1	FAO	-	○	○		농림축산식품부
2.5.a2 농업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전체 지원금(공적개발원조와 다른 공식적인 지원금을 합한 금액)	1	OECD	FAO	○	○		농림축산식품부
2.5.b2 농업 수출지원금	1	WTO	-	X			-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PA)	2	FAO	-	○	○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2번 목표는 식량안보와 관련한 지표들로 북한 내부의 식량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농업 수출지원금 관련 지표인 2.5.b.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부목표와 해당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기적 측면에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지표 측정이 필요한 목표로 ‘2.1.2 식량 불안 경험 척도(FIES)를 기준으로, 중간 혹은 극심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에 처해있는 인구 현황’, ‘2.5.c.1 식품 가격의 이상치 지표(IPA)’를 선정하였다. 이들 지표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 판단의 대안지표라는 점 때문이다. 이 외에 2.3.1, 2.3.2, 2.5.a.1, 2.5.a.2 지표는 북한의 농업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지표들로 시간적 여유를 가진 지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표의 측정과 관련하여 농업관련 지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IAEG-SDG는 UN FAO를 지표 관리 기관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OECD를 지명하였다. 국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표들의 측정에 있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22〉 북한 SDG 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7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1	World Bank	IEA, UN-Energy	○	○		산업통상자원부	
7.a.1 개도국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생산을 지원하는 국제 자금 흐름	1	OECD, IRENA	IEA, UN-Energy	○		○	환경부	
7.b.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	IRENA		○		○	환경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7 에너지 목표와 관련하여 ‘7.1.1 전기 접근성이 있는 인구 비율 지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수준과 직결되는 지표로 빠른 시일 내에 지표 측정이 필요하며, IAEG-SDG는 동 지표 관리 가능 기관으로 세계은행을 지목하였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지표 측정의 파트너 역할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관련 지표는 북한의 현재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역량을 고려할 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지표 측정 역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중기’로 분류하였다. 지표 관리 가능 기관은 IRENA이며 국내 파트너 기관으로 환경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3〉 북한 SDG 8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8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 (부문 및 성별)	2	ILO		○	○		고용노동부	
8.4.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당물질 발자국	2	UNEP	UNEP	○		○		
8.4.2 국내 자원 소비량, 1인당 국내 자원 소비량, GDP당 국내 자원 소비량	1	UNEP	OECD	○		○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1	ILO		○	○		고용노동부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1	ILO		○	○		고용노동부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 (성 및 연령별)	2	ILO, UNICEF		○	○		고용노동부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 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 주 상태별)	2	ILO		○	○		고용노동부	

SDG 8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8.8.2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대별)	2	ILO		○	○		고용노동부	
8.10.1 (a) 성인 1십만 명당 시중은행 지점 수와 (b) 성인 1십만 명당 ATM의 개수	1	IMF	UNCDF	○		○	금융위원회, 통계청	
8.10.2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혹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계좌 보유 (15세 이상) 성인인구 비율	1	World Bank	UNCDF	○		○	금융위원회, 통계청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	1	OECD	WTO-EIF	X			-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 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1	ILO	World Bank, OECD	○		○	고용노동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와 관련하여 ‘8.a.1 무역원조 약정 및 지불’은 원조 공여국의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북한에 대한 관련성이 당분간은 낮다는 점에서 지표 측정의 필요성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 측정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다. 특히 이들 지표 중에서 ‘8.5.2 실업률(성, 연령 및 장애별)’, ‘8.6.1 교육, 취업, 혹은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15~24세)의 비율’, ‘8.7.1 5~17세 아동노동 인구수와 비율(성 및 연령별)’, ‘8.8.1 근로자 1십만 명당 치명적 및 비치명적 산업 재해 건수(성 및 이주 상대별)’ 지표는 북한 주민, 특히 청년, 아동, 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한 인권적 측면과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시급한 측정이 필요한 지표라고 하

졌으며, 이들 지표의 측정 및 관리 가능한 기구는 ILO이며 국내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표들에 대한 북한의 역량강화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8.3.1 총 고용 중 비공식 고용 비율(부문 및 성별)’, ‘8.b.1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8.8.2 ILO 협약과 국내입법에 기초한 노동권(집회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국가별 준수 수준(성 및 이주 상태별)’은 북한의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며 이에 병행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는 위의 지표(8.5.2, 8.6.1, 8.7.1)들이 측정된 후 자연스럽게 북한이 이행할 필요성과 측정이 가능한 지표들로 보인다. 이들 지표들의 관리 가능 기구는 ILO이며 국내는 고용노동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물질소비와 관련한 8.4.1, 8.4.2와 금융인프라와 관련한 8.10.1과 8.10.2는 북한 당국에게 있어 시일이 필요한 목표로 보이며 지표 측정 역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표들의 관리 가능 기관은 물질소비 관련 지표는 UNEP이며 금융인프라는 IMF와 세계은행이다. 국내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통계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4〉 북한 SDG 9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9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9.1.1 사계절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2	World Bank	UNEP, UNECE, ADB	○		○	국토교통부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1	ICAO, ITF-OECD	UPL, UNEP, UNECE	○		○	국토교통부	

SDG 9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1	UNIDO		○	○		산업통상자원부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	2	UNIDO	UNCDF	○	○		산업통상자원부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	1	UNIDO, World Bank	UNCDF	○	○		산업통상자원부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 지원)	-	OECD		○	○		국무조정실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 산업 부가가치 비율	1	UNIDO	OECD	○	○		산업통상자원부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기술별)	1	ITU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9 산업, 혁신, 인프라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기초 데이터 수집의 관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이 필요한 지표로 ‘9.2.2 총 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 비율’, ‘9.3.1 총 산업 부가가치 중 소규모 산업 비율’, ‘9.3.2 부채 혹은 대출한도가 있는 소규모 산업 비율’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UNIDO이며, 국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급성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아니나 북한과 국제사회가 단순 측정이 가능한 ‘9.a.1 인프라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 공적지원(ODA와 기타 공적지원)’ 지표는 OECD CR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집계 가능하며, ‘9.c.1 무선네트워크 사용 가능 인구 비율

(기술별) 역시 어렵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9.c.1 지표는 국제 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과 국내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 가능한 지표라고 하겠다.

이 외에 북한 사회발전 측면의 지표로 구분할 수 있는 ‘9.1.1 세계 철 도로 2km 반경 내 거주하는 농촌 인구 비율’, ‘9.1.2 승객 및 화물 운송량(운송수단별)’ 지표는 중기 지표로 분류하였으며, ‘9.b.1 총 부가가치 대비 중고급기술산업 부가가치 비율’ 역시 북한의 산업구조 상 중고급기술산업 육성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중기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들 지표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지표 순서대로 세계 은행,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와 UNIDO이며, 국내 협력 가능 부처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 자원부가 있다.

〈표 IV-25〉 북한 SDG 11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정

SDG 11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단기	중기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2	UN-Habitat	UNEP, UNECE	○	○		국토교통부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의 비율	2	UN-Habitat		○		○	국토교통부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2	UNDRR	UNEP	○	○		국토교통부

SDG 11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 서 수가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2	UN-Habitat, UNSD	UNEP	○		○	환경부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 수준(인구수 가중)	1	WHO	UN-Habitat, UNEP, OECD	○		○	환경부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2	UN-Habitat		○		○	국토교통부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2	UNODC	UN Women, UN-Habitat	○	○		여성가족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1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목표와 관련해 북한이 미제출한 모든 지표들은 향후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측정이 필요한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1.2.1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연령, 성 및 장애별)', '11.5.2 중요 기반시설 피해 및 기본적인 서비스의 중단 등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GDP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1.7.2 지난 12개월 동안 신체적 혹은 성적 괴롭힘을 당한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발생장소별)' 지표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표들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지표들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표들의 관리 가능

국제기관은 지표 순서대로 UN-Habitat, UNDRR과 유엔마약범죄 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등이며, 국내적으로는 대중교통 및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지표는 국토교통부, 성적 괴롭힘 관련 지표는 여성가족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업생산 분야 및 주민 삶에서 가전제품 의존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11.6.1 지자체 발생 총 폐기물 중 처리시설에서 수거, 관리되는 고형 폐기물 비율(도시별)’ 지표 역시 향후 북한 경제가 인도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면 측정이 필요한 지표이며, 같은 맥락에서 발전 속도의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심화되는 ‘11.6.2 도시 미세먼지의 연평균수준(인구수 가중)’ 역시 측정이 필요한 지표로 보인다. 이 두 지표의 국제 관리 가능 기관은 UN-Habitat와 WHO, 국내적으로는 환경부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끝으로, ‘11.3.2 정기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도시의 비율’와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일이 소요되는 지표이며, ‘11.7.1 도시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개방된 공간이 차지하는 평균비율(성, 연령 및 장애별)’ 지표는 비필수적 지표라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측정이 필요한 지표로 분류하였다. 이들 두 지표의 국제 관리 가능 기구는 UN-Habitat, 국내는 국토교통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26〉 북한 SDG 12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정³⁷⁵⁾

SDG 12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2.1.1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개발, 채택, 이행하고 있는 국가 수	2	UNEP		○		○	환경부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식량폐기 지수	2	FAO, UNEP		○	○		농림축산식품부	
12.4.1 유해 폐기물과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국제 다자간 환경협약에 요구하는 정보 제공에 관한 약속 과 의무를 이행하는 당사국 수	1	UNEP		○		○	환경부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2	UNSD, UNEP	OECD, Eurostat, UNU	○	○		환경부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2	UNSD, UNEP	OECD, Eurostat, UNU	○	○		환경부	
12.6.1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수	2	UNEP, UNCTAD	UNEP	○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12.7.1 지속 가능한 공공 조달 정책과 실행 계획 이행 정도	2	UNEP		○		○	조달청	
12.8.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 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	2	UNESCO-UIS		○		○	교육부	
12.b.1 경제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 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틀 이행	1	UNWTO		○	○		문화체육관광부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	1	UNEP		○	○		환경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375) '12.2.1 물질 발자국, 1인당 물질 발자국, GDP당 물질 발자국', '12.2.2 자원 소비량, 1인당 자원 소비량, GDP당 자원 소비량 지표'는 SDG 8의 8.4.1, 8.4.2와 중복된 지표임으로 생략하였음; '12.a.1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지표도 SDG 7의 '7.b.1' 지표와 중복 지표로 생략하였음.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직결되는 ‘12.3.1 (a)식량손실지수 및 (b) 식량폐기지수’는 시기를 요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FAO와 UNEP, 국내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할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지는 않으나 지구 온난화와 같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준비가 필요한 지표로 ‘12.4.2 (a) 1인당 발생시키는 유해폐기물 발생량과 (b) 유해폐기물 처리 비율(처리유형별)’, ‘12.5.1 국가 재활용 비율, 물질재활용 톤’, ‘12.c.1 GDP 단위당 화석연료보조금액’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각각 UNSD와 UNEP이며 국내 관리 가능 기구로는 환경부를 들 수 있다. ‘12.b.1 경제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 회계 톨 이행’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간주되는 관광 산업이 경제발전 국가들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역시 관심이 높아 중기적 관점에서 지표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지표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세계관광기구(UNWTO), 국내 관리 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지표(12.1.1, 12.4.1, 12.6.1, 12.7.1, 12.8.1)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 북한의 역량과 발전적 측면에서 시급성 등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지표 측정이 필요한 지표라고 하겠다.

〈표 IV-27〉 북한 SDG 13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³⁷⁶⁾

SDG 13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1)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tier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	2	UNFCCC		0	0		환경부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	2	UNFCCC		0		0	환경부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3 기후변화 목표와 관련하여 북한은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 모든 지표 값 제시가 가능하다. 북한이 미제출한 지표는 총 4개 지표로, 이중 한 지표는 SDG 12와 중복지표로 이미 앞서 논의하였고, 추가적으로 3개 지표가 측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SDGs 지표에서 13.2.1의 지표와 ‘13.b.1 국가감축기여목표(NDCs), 장기전략, 국가적응계획 등을 보유한 최빈국 및 군소도서국 수’ 지표가 같은 지표이고 북한은 해당 지표에 대해서 그 현황을 이번 VNR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2개 지표를 측정할 경우(13.3.1을 포함하면 3개) 북한은 SDG 13번 목표의 모든 지표 값을 제시하게 된다. 먼저, ‘13.2.2 연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국제사회의 주된 화두라는 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필요하며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UNFCCC, 국내 대응 기관은 환경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표는 ‘13.a.1 2025년까지 1천억 달러 자원 조성을 위해 매년 제공 혹은 모금되는 금액’에

376) ‘13.3.1 (i) 세계시민교육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이 (a) 국가교육정책 (b) 교육과정 (c) 교사교육 (d) 학생평가 영역에서 주류화 된 정도’는 SDG 12번의 12.8.1과 중복되므로 생략.

관한 지표로 북한의 경제 여건상 동 재원의 조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장기간 준비가 필요한 지표로 분류하였다.

〈표 IV-28〉 북한 SDG 15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15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tier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	1	UNEP-WCMC, UNEP, IUCN	Ramsa	○	○		환경부	
15.6.1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	1	CBD-Secretariat	FAO, UNEP	○		○	환경부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 생물 비율	2	UNODC, CITES	UNEP	○		○	환경부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 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	-	OECD, UNEP, World Bank		X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5 육상 생태계와 관련해 북한은 5개 지표를 미제출하였는데, 이 다섯 개 지표 중 15.7.1과 15.c.1이 중복 지표로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4개 지표를 제시할 경우 북한은 SDG 15번의 모든 지표 값을 제시하게 되는데,

15.a.1이 사실상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의무와 관련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어 북한은 3개의 지표를 제시할 경우 SDG 15번의 모든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1.2 육상 및 담수 생물다양성 중요 지역 중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비율(생태계 유형별)’은 북한 당국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보호지역을 지정하면 된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단기에 해결 가능한 지표로 구분하였다.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감시센터(UNEP-WCMC)이며, 국내 협력 가능 기관은 환경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6.1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입법, 행정 및 정책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국가의 수’와 ‘15.7.1 불법 거래 혹은 밀렵된 야생생물 비율’은 북한의 내부 역량과 주제의 중요성에 기반을 둔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지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15.a.1 (a)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ODA, (b) 생물다양성 관련 경제기구로부터 발생한 이윤과 모금 재정’과 관련한 지표는 사실상 선진국 원조 공여국의 의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북한에 대한 적실성이 떨어지는 지표라고 하겠다.

〈표 IV-29〉 북한 SDG 16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16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2	UNODC, WHO	DESA Population Division, UNICEF	○	○		통계청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2	OHCHR	UNMAS, DESA Population Division	○	○		통계청	

SDG 16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타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2	UNODC	UN Women, UNFPA, WHO, UNICEF	○	○		통계청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2	UNODC		○	○		통계청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2	UNICEF		○	○		국가인권위원회	
16.2.2 인구 1십만 명당 인신매매 피해자(성, 연령 및 착취형태별)	2	UNODC	UNICEF	○	○		국가인권위원회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2	UNICEF	UNSD, UNODC	○	○		국가인권위원회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2	UNODC		○	○		국가인권위원회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	UNODC		○	○		국가인권위원회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 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 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 (기구 유형별)	2	UNDP, OECD, UNODC		○	○		국가인권위원회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2	UNODC, UNCTAD		○	○		금융위원회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2	UNODC, UNODA		○	○		법무부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2	UNODC		○		○	통계청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1	World Bank, UNODC		○		○	통계청	

SDG 16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2	World Bank		○			○	기획재정부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2	UNDP		○			○	통계청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2	IPU, UNDP	UN Women, OECD	○			○	통계청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2	UNDP		○			○	통계청
16.8.1 국제기구에서 개도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1	DESA/FFDO		X	-	-	-	-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중사자, 노종조합원 및 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2	OHCHR	ILO, UNESCO-UIS	○	○			국가인권위원회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	UNESCO-UIS	World Bank, UNEP	○			○	국가인권위원회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1	OHCHR		○	○			국가인권위원회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	2	OHCHR		○			○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6 평화·정의·제도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역량으로 인해 지표 측정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목표이며, 실제로 북한은 체제 특수성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지표의 값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DG 16에서 시간적 시급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써 북한 당국의 거부 반응이나 체제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인권 및 인도주의 관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목표와 그 지표는 ‘단기’ 지표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인간의 생명 유지 및 핵심적 인권 요소와 다소 거리가 있으며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목표는 ‘중기’ 지표로 구분하였다. 끝으로, 인류가 지향하는 곳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국가의 특징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기’로 분류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핵심적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지표인 ‘16.1.1 인구 1십만 명당 고의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수(성 및 연령별)’, ‘16.1.2 인구 1십만 명당 분쟁관련 사망자수(성, 연령 및 사유별)’, ‘16.1.3 지난 12개월간 (a) 신체적, (b) 정서적, (c) 성적 폭력에 노출된 인구비율’, ‘16.2.1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체벌이나 심리적 위협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 ‘16.2.3 18~29세 인구 중 18세 이전에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인구 비율’, ‘16.3.2 교정시설 수용자 중 형 미선고자 비율’, ‘16.10.1 지난 12개월 동안 언론인, 관련 미디어 종사자, 노동조합원 및 인권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실종, 강제구금 및 고문 건수’, ‘16.a.1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에 따른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지표라는 점에서 ‘단기’로 구분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핵심적 인권보호와 관련한 지표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인 ‘16.4.1 국내외 불법금융거래의 총 가액’, ‘16.4.2 압수, 적발, 회수된 무기 중 국제법제에 따라 유관당국에 의해 불법성이 추적, 확인된 비율’ 역시 북한 당국의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구하는 지표들이라고 하겠다.

반면에 북한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실현을 위한 치안 확보, 법치주의 확립, 인권보호 제도 및 정책 수립과 관련한 지표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비핵심적 이슈들이며, 북한의 특수성과 의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중기’ 지표들로 분류하였다. ‘16.1.4 살고 있는 동네를 홀로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 비율’, ‘16.3.1 지난 12개월간 관할 당국 혹은 기타 공식적인 분쟁해결수단에 피해신고를 한 폭력범죄피해자 비율’, ‘16.3.3 지난 2년간 분쟁을 경험한 인구비율, 공식 혹은 비공식 분쟁해결기구를 이용한 인구 비율(기구 유형별)’, ‘16.b.1 국제인권법 차별금지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차별 또는 괴롭힘 경험을 보고한 인구 비율’이 ‘중기’ 지표에 해당한다.

끝으로, 비핵심적 인권 요소로 평가되며, 경제 발전 및 체제전환기에 확인되는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 그리고 보다 나은 민주주의 실현의 요소로 평가 할 수 있는 ‘16.5.1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 받았던 인구 비율’, ‘16.5.2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의 비율’, ‘16.6.1 최초 승인된 예산 중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부문 또는 예산코드별)’, ‘16.10.2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헌법, 법률,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6.6.2 가장 최근에 경험한 공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인구비율’, ‘16.7.1 국가전체 대비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내 보직분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집단별)’, ‘16.7.2 의사결정이 포용적이고 대응적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성, 연령, 장애 및 인구 집단별)’은 ‘장기’ 지표로 구분하였다.

SDG 16은 평화·정의·제도 분야의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가능 국제기구도 매우 다양하다. 주요 국제기구는 UNOD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NICEF, 세계은행 등이다. 반면에 국내 협력 가능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통계청이 대부분의 지표 측정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IV-30〉 북한 SDG 17번 미제출 지표 도출 과제

SDG 17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 (항목별)	1	IMF	OECD, World Bank	○	○		기획재정부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	IMF		○	○		기획재정부	
17.2.1 OECD 개발원조위원회 공여국의 GNI 대비 1) 순ODA의 비율 2) 최빈개도국에 대한 순ODA 비율	1	IMF		X			-	
17.3.1 GNI 대비 해외직접투자, ODA 및 남남협력 비율	1	OECD, UNCTAD		X			-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	World Bank		○	○		기획재정부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1	World Bank	UNCTAD	○	○		기획재정부	
17.5.1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을 위한 투자 촉진제도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국가의 수	1	UNCTAD		X			-	
17.7.1 개도국에 친환경 기술의 개발과 이전,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총 금액	2	UNEP-CT CN		X			-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	1	ITU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9.1 개도국에 지원하는 (남북, 남남, 삼각협력 포함) 재정 및 기술지원금액	1	OECD		X			-	
17.10.1 국제 가중 관세 평균	1	WTO, ITC, UNCTAD		X			-	
17.11.1 전 세계 수출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비중	1	WTO, ITC, UNCTAD		X			-	

SDG 17 지표	국제기구 내 지표 관리 ¹⁾			북한			우리 정부 내 해당 지표 협력 가능 부처 ²⁾	
	현재 티어	가능한 관리 기관	파트너 기관	북한 해당 여부	지표 개발 및 측정의 우선순위			
					단기	중기		장기
17.12.1 개도국, 최빈개도국 및 군 소도서 개발국에 부과되는 가장 관세 평균	1	WTO, ITC, UNCTAD		X			-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	2	World Bank		○	○		기획재정부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	2	UNEP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		○	국무조정실	
17.15.1 개발협력사업 공여자가 개도국 주도 성과체계 및 기획수단을 사용하는 정도	2	OECD, UNDP		X			-	
17.16.1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개발효과성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에서 진전을 보고한 국가 수	2	OECD, UNDP	UNEP	X			-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간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	2	World Bank		○		○	기획재정부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2			○	○		통계청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1	PARIS21		○	○		통계청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 지원 출처별)	1	PARIS21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	○		통계청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	1	PARIS21	UNSD, Regional Commissions, World Bank	○	○		통계청	

출처: 1)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s," as of 17 July 2020, <https://unstats.un.org/sdgs/files/Tier%20Classification%20of%20SDG%20Indicators_17%20July%202020_web.v2.pdf> (Accessed July 30, 2021); 2)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p. 47을 바탕으로 재구성.

SDG 17번은 SDG 1~16의 목표 실현을 위해 원조를 받는 개도국과 원조를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의무를 담은 목표로 23개 목표 중에서 10개 목표가 원조 공여국인 선진국의 의무와 관련한 지표들로 북한에 대한 해당성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나머지 13개 목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지표 제시가 필요한 목표에서 ‘17.1.1 GDP 중 정부 총수입 비율(항목별)’, ‘17.1.2 정부예산 중 국내 세금으로 충당되는 비율’, ‘17.3.2 총 GDP 중 송금액 비율’, ‘17.13.1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지표’는 북한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개발재원 확보 및 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단기’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들 경제 관련 지표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는 IMF, 세계은행 등이며, 국내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지표 측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7.18.1 SDGs 모니터링 위한 통계역량지표’, ‘17.18.2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국가통계법령을 갖춘 국가의 수’, ‘17.18.3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이행되고 있는 국가통계계획을 보유한 국가의 수(재정지원 출처별)’, ‘17.19.1 개도국에서 통계역량 강화에 사용되는 모든 자원의 달러가치’는 북한의 SDG 이행 및 국가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통계역량 강화와 관련한 지표들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 지표의 관리 가능 국제기구로는 PARIS21이며, 국내로는 통계청이 북한의 해당 지표 측정을 위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17.8.1 인터넷 이용자 비율’은 실제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며, 부재하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측정 가능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관리 주체로는 ITU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 지표로 구분된 목표는 ‘17.17.1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에 약정한 US달러 금액’으로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이행

에 있어 부족한 개발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인 민관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중장기적으로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함께 해당 데이터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관리 가능 국내외 기관은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7.4.1 재화 및 서비스 수출 대비 부채상환 비율’ 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 조달을 위해 부채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 측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국내외 관리 가능 기관은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될 수 있다.

끝으로 ‘17.14.1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일관성 증진 메커니즘을 갖춘 국가의 수’는 ‘장기’ 지표로 구분하였다. 이 목표는 국제사회가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공여국과 개도국 각각 정책일관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북한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부 정책 메커니즘을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노력을 측정 제시함으로써 공여국 원조 유입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지표에 대한 관리 가능 국제기구인 UNEP가 지정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무조정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소결: 북한의 SDGs 지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함의

IV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루는 SDGs 10개 목표에서 북한 VNR 상의 지표 현황을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했다. 특히 SDGs의 지표 정교화 메커니즘인 IAEG-SDGs가 제시한 SDG 목표별 지표의 성격을 고찰하고, 북한이 VNR에서 제시한 지표가 어느 티어에 해당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자체적인 한계와 역량 제약에 따른 지표 값의

미제시인지 아니면 국제사회 역시 해당 지표 제시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가 다루는 10개 지표에 대한 북한의 VNR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10개 SDG 목표 중 어느 목표에 대해서 북한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표 값을 제시하였는지 비교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IV장에서는 SDGs 10개 목표에서 북한 VNR이 제시한 SDG 지표 값의 신뢰성을 북한의 통계 역량, 북한의 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해 엄밀화가 필요한 지표들에 대한 선별화 작업을 시도하였고, 아울러 북한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표의 지속적 측정을 위해 추가적인 측정 역량 강화가 필요한 지표들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북한이 이번 VNR에서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한이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지표들에 대해서 지표의 중요성, 북한의 역량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적 우선순위를 구분 제시하였으며, 이들 지표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IAEG-SDGs가 제시한 국제기구를 확인함과 동시에 각각의 지표에 대한 국내 소관 부처를 매칭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북한은 이번 VNR을 통해 제시한 SDGs 17의 목표별 지표 값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는 SDGs 10개 목표에 대한 지표 값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SDGs 세부목표들에 대한 지표 값 제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짧은 시간동안 SDGs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북한의 SDGs 이행 성과를 담은 VNR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도 세부목표에 대한 북한의 지표 값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노력과 의지를 지속시키고 정교화하기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표값의 성격상 지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고 측정 방식 또한 보편화된 경우, 동 지표의 북한 적용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 반면,

특정 지표의 경우 측정 주체의 역량에 영향을 받는 지표들이 많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들에 대한 북한의 측정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2021년 7월 공개한 VNR에서 2015년, 2018년, 2020년도의 지표 값을 제시하였는데, 2020년 지표 값의 부재가 빈번하였다. 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측정의 어려움과 통상적으로 국가 데이터의 경우 측정에 1~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재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표에서 비연속성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여러 통계 여건과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적인 검증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지표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리하면, 북한이 공개한 VNR에서 제시한 지표보다 제시하지 못한 지표들이 더 많으며, 이들 지표들 중 상당수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필수적인 지표들이기에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계 및 지표 측정 역량과 관련한 제도 및 정책 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인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함께 지표 관리 가능 기구로 지목된 국제기구들과 북한 간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우리 정부 부처는 부처 소관 분야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및 장기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 데이터 파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SDGs의 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산하 기구와 국책연구기관들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유엔의 SDGs와 북한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이행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북한 SDGs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III장에서는 SDGs 17개 목표 중 10개를 선정하여 각 목표별 지표를 살펴본 뒤 북한의 현황에 적용하여 파악했다. IV장에서는 SDGs 10개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들의 국제적 현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각 지표별로 2021년 7월 북한이 VNR에 제시한 지표 현황과 특징들을 비교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 ‘환경과 생태계 분야’,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 등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SDGs 10개의 연구 요약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사회발전 분야’의 SDG 2번은 기아의 극복과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한다. 총 8개의 목표와 13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1년 7월 북한이 발표한 VNR에서는 이 중 총 6개의 세부지표만이 발표되었다. 영양결핍 유병률(2.1.1)은 식량 부족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1,486,000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저신장 및 영양결핍(2.2.1, 2.2.2) 등 영양관련 지표는 공동 육아(탁아소)시설에서 식량제공을 통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은 개선되는 등 대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FAO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민 전체의 영양결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2019년 47.6%의 국민이 영양결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³⁷⁷⁾ 또한 FAO와 WFP의 공동조사에서는 2019년 현재 159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어,³⁷⁸⁾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

377) FAO 세계 식량안보 및 영양 홈페이지, <<http://www.fao.org/publications/sofi/en/>> (Accessed June 5, 2021).

378) FAO and 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p. 4.

게 된다. 이 지표는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없고 발표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련 국제기구(FAO, WFP, UNICEF)의 공동 조사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수집 방안을 논의해보는 것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면적 비율(2.4.1)의 경우 역설적이게도 화학 비료의 공급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95%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멸종 위기에 처한 품종을 등록하고 종자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업인데, 북한의 경우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류되는 품종이 2014년 60,374종에서 2018년 86,268종으로 조사되었다. 자연환경의 특성상 국가별로 양적인 목표를 정해 놓는 것이 어렵거나 무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북한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생태계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번영과 경제발전 분야’는 SDG 8, SDG 9, SDG 11을 분석했다. 우선 SDG 8 지속가능성장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때 북한이 VNR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협력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통계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VNR에서 통계 구축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통일부도 국제 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2020년 5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북한의 통계 역량 지원 사업에 6년간 남북협력기금 49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의결한 것이다.³⁷⁹⁾ 이러한 통계 역량 지원 사업은 북한의 국제금융질서로의

379)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의결(2020.5.27.)”,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737> (검색일: 2021.7.28.).

편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 간 하나의 시장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북한 경제관료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 관련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 교환, 세미나 공동 주최, 공동 연구, 교육 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UNDP, UNESCAP과 같은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도 없다”는 격언과 같이 통계시스템 구축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임을 고려하여 통계 역량 제고와 연계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행정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³⁸⁰⁾ 다만, 북한이 VNR에서 계획, 가격, 통화 및 재무 관리 개선 관련 경제 행정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사회주의 경제법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효율화 등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 및 북한 경제 현황, NDGs 등을 충분히 반영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광 잠재력 개발을 위한 협력도 추진 가능하다. 북한은 VNR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광의 GDP 기여도가 낮고 관광 잠재력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및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이 가능한 부분부터 북한의 관광 역량강화에 보탬이 되는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우선 남북한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학술회의 개최, 국제관광기구 및 국제 NGO를 활용한 관광 인력 교육 협력, 국제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제재의 일부 완화 및 면제를 획득할 경우 관광자원

380) 이종무·김태균·송정호,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97.

공동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과 관련 법·제도 보완, 남북연계 관광 상품의 시범 운영 등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생태관광 등 UN SDGs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개발협력 의제와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SDG 9, 11에 관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이 국제규범으로서의 SDGs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1년 VNR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북한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신뢰할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분야별 국가 개발 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에 대한 관련 정보가 파편화되어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북한의 수요(Needs)에 기초한 분야별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여러 제약요소가 수반된다.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이후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과 공여국의 개발의제 및 시스템 일치(alignment)의 원칙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북한에 적용하려면 여러 정책 과제들을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북한이 발표한 VNR은 북한의 분야별 현황과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기서 분야별 정보는 북한개발협력의 우선순위 및 북한의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게 하여 북한의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SDG 9, 11에 관한 북한의 대응은 그들이 UN SDGs 프레임워크에 맞춰 관련 추진현황과 계획에 관한 정성스러운 자료를 제공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과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이 눈길을 끈다. 환경의 경우 SDG 13, 14, 15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SDG 9, 11의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관련 국내 법·제도

를 개선하거나 향후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이를 이행하려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도시와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도 기후변화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국가적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SDGs의 내재화라는 특징이 있다. 북한은 VNR 발표를 비롯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던 개발협력이슈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SDGs의 내재화에 대한 부분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SDG 9에서는 산업화에 있어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SDG 9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안에서 어느 정도 제조업 육성 및 소규모 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전체 북한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DG 11의 경우, UN SDGs는 전 국민에 대한 주거와 정주환경 개선에 주목함과 동시에 불량거주지 거주 인구,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와 관련된 지표 선정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SDG 9, 11의 지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한계로 꼽히고 있다. 북한은 UN SDGs 목표와 지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지표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지표 값의 부재, 과거 추이를 파악하기에 제한적인 지표 값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무엇보다 SDG 9, 11은 구체적인 북한개발협력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개발협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원칙, 정부의 한반도 정책, 북한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SDG 9, 11 관련 지표 값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북한의 수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SDG 9, 11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교통인프라의 현대화, 통계역량 강화, 제도 구축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교통인프라의 현대화를 북한개발협력 분야의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대부분의 안전 난간과 표지판을 재설치할 것, 평양-신의주, 평양-남양 라인을 포함한 동해안과 서해안의 국제 철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할 것을 언급하였다.³⁸¹⁾ 또한 통계 역량에 대해서는 9.1.1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농촌 인구 비율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³⁸²⁾ 9.4.1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장비, 기술의 도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유엔과의 협력,³⁸³⁾ 11.2.1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제시하였다.³⁸⁴⁾ 제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11.b.1 재난위험 감축을 위한 센다이프레임워크의 이행에 따른 국가 재난위험 감축 전략의 추진, 11.b.2 지자체 수준의 재해 위험관리 전략의 도입을 강조하였다.³⁸⁵⁾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과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환경과 생태계 분야’는 SDG 7, SDG 12, SDG 13, SDG 15를 분석했다. 유엔 SDG 7의 세부목표 가운데 7.1은 개발도상국 수준의 목표이며 7.2와 7.3은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루어져야 할 목표이고, 7.a와 7.b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국제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

38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34.

382) *Ibid.*, p. 34.

383) *Ibid.*, p. 34.

384) *Ibid.*, p. 37.

385) *Ibid.*, p. 37.

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설비, 그리고 이용관리가 중요하다. 다만 전 세계의 지역 간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고 대부분의 목표에 대한 성과도출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국제사회 협력과 상생노력이 강하게 요구된다. 유엔 SDG 13의 세부목표의 경우 기후변화 등의 재해로부터 입은 인명피해와 같이 양적 지표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정책, 국가계획, 교육 프로그램 등의 시행 여부를 지표화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일부 보완하여 친환경차량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반영하고 있다. 13.a 및 13.b 관련 세부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와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유엔 SDG 7과 SDG 13에 있어서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지역별 변화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만 SDG 7의 접근 가능한 청정에너지 지수는 오세아니아, 서남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세계 평균 지수대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 13에 있어서는 OECD 국가가 선진국으로서 녹색기후기금 지원 등 의무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성과가 있어 기온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지수가 다른 지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북한의 SDG 7과 SDG 13의 지표 데이터는 대부분 지난 6월 유엔에 제출된 VNR에 따라 최초로 명시되었으며 미흡하나마 북한의 에너지 여건과 기후 변화에 대한 지표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현황과 정책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2019년에 국가재난 위험 경감전략, 2020년에 지역재난위험경감계획을 수립했고 격년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계획에 따라 상당히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다만, 북한은 에너지 빈곤국인 만큼 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기능과 재생에

너지 관련 설비에 취약한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기반여건을 마련하거나 데이터 값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북한의 VNR은 북한의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하여 자국 내 소관부처를 각각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목표와 데이터 관리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지표 데이터값의 정확성과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과 북한의 국가 여건에 부합하는 지표의 보완 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SDG 12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보장과 관련하여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때 먼저 북한의 지역 고유의 지역산업 개발목표를 고려하여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VNR을 통해 지역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여 원자재를 공급하며 지역 자원과 농산물과 부업품 등 소비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 생산기술공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수요를 고려할 때, 지역별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 교육기관이나 연구소 등과의 교류를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시대 북한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재자원화와 관련한 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산업 단지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력도 가능하다.³⁸⁶⁾ 그리고 북한의 환경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VNR에서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적 틀을 개선하고 관련 데이터의 수

386) 이두희·이승엽,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세종: 산업연구원, 2015), p. 146.

집, 분석,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며 종합적인 관리 전략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폐기물 처리장을 확충하고 환경 감시, 측정, 평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한의 협력 수요와 필요성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 및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에 기반한 해당 지역 환경 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 관광 협력을 위한 단계적 추진 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북한이 VNR을 통해 지속가능 관광 전략 수립 및 강원도의 관광지구화, 관광 상품 개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수요를 고려한 관광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 관광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역량 강화와 함께 2018년 9.19. 평양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 추진과 관련한 남북 간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을 지속가능관광 실현 및 환경 보호·녹색성장과 연계한 협력모델 지역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예컨대 고성군 화진포~금강산 등 남북 간 개발 공감대가 있는 강원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남북 접경지역의 주요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관광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하고, 이러한 협력 경험을 토대로 남북 공동의 DMZ 유네스코 접경 생물권 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TBR) 지정 추진을 위한 남북 간 논의를 추진할 수 있다.³⁸⁷⁾

SDG 15를 보면 VNR에서 북한은 2015~2024년 기간 동안 ‘숲 회복 목표’를 설정하여, 2024년까지 약 140만 ha의 조림을 통해 국토 대부분의 산을 녹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1,000

387) TBR은 전 세계 31국에 걸쳐 21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아시아는 지정된 사례가 없음.
 <<http://www.unesco.org/new/en/natural-sciences/environment/ecological-sciences/biosphere-reserves/transboundary-biosphere-reserves/>> (Accessed July 21, 2021).

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능력을 창출하게 되며, 국가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육묘장 건설을 통해 과학적이고 산업화된 수준의 묘목을 생산함으로써 조림과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생물다양성을 보장하고 보호 구역을 선정하여 이를 단계별로 확대해나가기 위해 국가 숲 조성 정책, 생물다양성 정책과 행동계획을 이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북한 역시 신뢰할만한 데이터의 생성과 수집을 위해 2020년부터 생태계 환경에 대한 국가 차원의 측량을 시행할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의 보급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태계, 숲,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보호, 관리, 활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음을 언급하며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종의 도입을 통해 숲을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혼농임업(Agroforestry)을 의미하며, 경제림 조성을 통해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경제적 성과에도 무게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평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분야’를 보면 국제사회는 SDG 16을 ‘평화, 정의와 제도’로, SDG 17은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으로 채택하였다. SDG 1부터 15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영역과 분야에 대한 목표라면 SDG 16과 17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방법, 글로벌 파트너십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SDG 16과 17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전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SDG 16은 평화와 모두를 위한 정의, 강력한 제도를 위한 체계 구축, 여타 SDGs 이행이 원활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를 제공한다. SDG 17은 개발자원, 기술, 역량강화, 무역, 제도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루면서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파트너십과, 기업, 사회, 환경 간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SDG 17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2030 의제의 핵심 원칙을 실천하는 수단인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채택한 보편적 개발 규범을 수용하고 있지만, SDG 16을 ‘사회주의 체제 강화’로 17을 ‘우호적 파트너십 개발’로 규정함으로써 유엔의 SDG를 북한의 법제도와 상황에 맞게 지역화(localization)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강화를 평화와 정의 대신에 내세운 것은 글로벌 규범 수용과 SDGs 이행이 북한 체제의 근본가치 보존과 체제 공고화라는 핵심 이익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SDG 16과 17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지표를 수용하기보다 북한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지표만 제시하고 있다. 대신 북한은 SDG 16과 17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과 제재의 완화, SDGs 이행을 위한 양자 및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SDG 16과 17은 북한이 글로벌 규범을 ‘우리식 SDGs’로 전략화한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북한이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와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⁸⁸⁾ 비록 내부적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고수하고 자립경제 발전을 우선 시 하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글로벌 규범에 동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및 국제협력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북한이 지표 설정, 데이터 집계 및 처리를 포함한 국가 통계역량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북한 사회에 특화된 지표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SDG 16, 17 관련된 다자협력 가능성은 존재한다. 과학기술 협력 확대, IT 개발, 친환경기술 이전, 해

388)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KINU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pp. 4~5,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a0774f72-dded-4c48-aaf9-451f3fdbc200>> (검색일: 2021.10.1.).

외직접투자 및 차관 공여 등은 현재의 제재국면에서 이행하기 어렵지만 향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SDG 17과 관련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북한에게 중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모든 형태의 폭력 감소, 아동 권리에 대한 보호와 모니터링, 대중의 정보 접근 보장,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 감소 등 SDG 16이 담고 있는 주요 목표들이 북한에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신겸·최영국·김성진·윤양수.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안양: 국토연구원, 2004.
- 강인수·송유철·유진수.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고용노동부. 『ILO 주요협약』. 과천: 고용노동부, 2012.
- 권율·정지원·정지선·이주영.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김경원 외. 『북한의 산업 I』. 서울: KDB산업은행, 2020.
- 김수암·강채연·박진아·윤보영.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김지현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5.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의 ISO 26000 활용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2013.
- 문경연·정구연. 『SDGs와 한반도 평화』.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 박세훈·김태훈·김성수·송지은.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2016.
- 박영실·이영미·김인겸. 『글로벌 렌즈로 본 한국의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19.

- 박영실·홍현정·진유강·윤민희·이은경.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1.
- 박지연 외. 『북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20.
- 박형중 외.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사회과학출판사. 『일군들을 위한 경제개발구 지식』.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6.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북한사회변동』.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서종원. 『북한 교통물류인프라 통계의 이해와 한계』.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6.
- 서종원 외. 『교통물류분야 남북협력 구상』.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19.
- 손인성·김동구. 『파리협정 이행규칙과 국내 감축정책 이행에의 시사점』.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 송철중 외. 『북한의 복지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 안병민·성원용. 『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자원조달 방안 연구』. 고양: 한국교통연구원, 2006.
- 오경섭·홍석훈·홍제환·정은미·이지순. 『북한인권백서 2021』. 서울: 통일연구원, 2021.
- 오상봉·박제성·양문수·이철수·정은미·홍제환. 『북한 노동시장의 현황』.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8.
- 오수현·임한나·이경선. 『포용적 금융 전략 방안 연구』.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2017.
- 윤영관·양운철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경제와 사회』. 서울: 한울, 2009.
- 이두희·이승엽. 『지역산업역량분석을 활용한 북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 세종: 산업연구원, 2015.

- 이 석. 『북한의 시장: 규모 추정과 구조 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석기·변학문·나혜선.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산업 및 산업정책』. 세종: 산업연구원, 2018.
- 이성태. 『10YFP 지속가능한 관광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동향 분석 및 아젠다 개발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 이시욱·최석준·차용석. 『개도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ODA 전략』. 세종: 산업연구원, 2016.
- 이일형 외.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 G20을 통한 우리의 역할』.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이종규.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및 향후 전망』.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 이종무·김태균·송정호.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해정·김성환·강성현.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 동향과 남북 관광협력에 대한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 이희선 외.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연구(I)』.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 임영훈·이주량·박환일·추수진. 『식량안보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 정책구상』.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 임원혁 외. 『국제협력 비전,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9.
- 정지원·송지혜.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정지원·유애라. 『Aid for Trade: 현황과 주요 이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정지원·정지선.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제프리삭스 지음. 홍성완 옮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대』. 파주: 21세기북스, 2015.
- 조성은 외. 『남북한 복지 분야의 정책 비교와 교류협력 방안 연구 - 대상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 조정아·이춘근·엄현숙.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진유강·박영실. 『SDGs 데이터 국제기구 제공체계 구축 방안 연구』.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2020.
- 최상희·최대식·이종권·홍성원. 『북한주택 현황조사·분석 연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5.
-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3.
-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성남: 시공미디어, 200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환경부 제출 최종보고서, 2013.
- 홍 민 외.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서울: 통일연구원, 2020.
- 홍석훈·김주리·조원빈·박지연.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보고서 2019』. 서울: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9.
- _____. 『2020 국가지속가능 보고서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점검 및 지표평가 결과』. 최종보고서, 2020.9.
-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목표』. 서울: 환경부, 2018.
- _____.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세종: 환경부, 2020.
- _____.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세종: 환경부, 2020.

- FAO and UNEP. *The State of the World's Forests 2020. Forests, biodiversity and people*. Rome: FAO, 2020.
- FAO and 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Rome: Fao and WFP, 2019.
-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Transforming food systems for affordable healthy diets*. Rome: FAO, 2020.
- ILO. *Global estimates of child labour: Results and trends, 2012–2016*. Geneva: ILO, 2017.
- Lanoszka, Anna. *International Development: Socio–Economic: Theories, Legacies, and Strateg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Modi, Vijay, Susan McDade, Dominique Lallement, and Jamal Saghir, *Energy Service for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ashington, D.C.: ESMAP Report, 2005.
- OECD and WTO. *Aid for Trade at a Glance 2019: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Empowerment*. Paris: OECD Publishing, 2019.
- Sachs, Jeffrey D., Christian Kroll, Guillaume Lafortune, Grayson Fuller, and Finn Woelm.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1 Includes the SDG Index and Dashboards The Decade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
- Stibbe, Darian and Dave Prescott. *The SDG Partnership Guidebook: A practical guide to building highimpact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New York: The Partnering Initiative and UN DESA, 2020.
- Task Team on South–South Cooperation, UNDP, OECD, and World

- Bank. *Scaling Up Knowledge sharing for Development: A Working Paper for the G-20 Development Working Group, Pillar 9*. Washington, D.C.: World Bank Organization, 2015.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New York: United Nations, 2010.
-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Bangkok: UN ESCAP, 2018.
- UN-Habitat.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Emerging Futures*. Nairobi: UN Habitat, 2016.
- UNIDO. *Rebooting Quality Infrastructure for a Sustainable Future*. Vienna: Department of Trade, Investment and Innovation (TII), 2020.
- UNESCAP.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7: Measuring SDG progress in Asia and the Pacific: Is there enough data?*. Bangkok: UNESCAP, 2018.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8/99: Knowledge for Development*.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World Bank and ESMAP. *2020 Regulatory Indicators For Sustainable Energy*. Washington, D.C.: World Bank, 2020.
- World Food Summit. *Declaration on World Food Security*. Rome: FAO, 1996.
- WTO. *Mainstreaming trade to atta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ève: WTO, 2018.

2. 논문

- 김기섭 외.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국제정치 연구』. 제23집 1호, 2020.
- 김수진. “인도적 지원-개발-평화연계(triple nexus) 논의 현황 및 한국 ODA 시사점.” 『개발과 이슈』. 제44호, 2018.
- 곽태중. “북한에너지·전력 현황과 남북 태양광분야 협력방향.” 『KIET』. 18-27, 2018.
- 김명희. “유엔의 재난위험 감소 추진체계 및 전략의 시사점.” 『한국융합 학회논문집』 제11권 제1호, 2020.
- 김민정·문성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북한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BOK 경제연구』. 제2021-6호, 2021.
- 김석진.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전망.” 『KDI 북한 경제리뷰』. 2020년 3월호, 2020.
- 김재형.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점유율 배가를 위한 2030년 로드맵.” 『KOSEN Expert Review』. 2013.
- 김태균·김보경·심예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국제·지역연구』. 제25권 제1호, 2016.
- 남수정. “제4차 유엔 최빈개도국회의의 주요 내용과 평가.” 『국제개발협력』. 제6권 3호, 2011.
- 박경석. “북한의 산림현황 및 산림정책.” 『KREI 북한농업동향』. 제15권 3호, 2015.
- 박세훈. “해비타트III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의 성립 배경과 의의.”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2016.
- _____. “해비타트III와 새로운 도시의제: 주요 내용과 의의.” 『국토』. 제421호, 2016.
- 박세훈·송지은. “북한의 시장화와 도시계획행정의 변화.” 『국토계획』. 제52권 제7호, 2017.

- 박수영·오수현. “제3차 개발재원총회와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의 합의 분석.” 『개발과 이슈』. 제24호, 2015.
- 박후건.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진화과정에 대한 고찰.” 『현대북한 연구』. 제21권 제2호, 2018.
- 서소영. “북한 ICT 정책동향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32호, 2019.
- 손혁상·김선주.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취약국 지원 전략 유용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59집 1호, 2019.
- 안병민. “북한의 교통 인프라 실태와 한반도 교통망 구축방향.” 『국토』. 제443호, 2018.
- 양문수·윤인주. “북한 기업의 사실상의 사유화: 수준과 추세에 관한 정량적 분석.” 『통일연구』. 제20권 제2호, 2016.
- 양운철. “북한의 자발적 국가 리뷰(VNR) 보고서 평가.” 『세종정책브리프』. No. 2021-18, 2021.
-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14권 2호, 2018.
- 이석기. “북한산업의 현황과 관련 연구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12월, 2016.
- 이인식. “자연에서 답을 찾는 순환경제.” 『나라경제』. 11월호, 2014.
- 이춘근.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협력에 대한 제언.” 『STEPI Insight』. 제230호, 2019.
- 이해정·이용화.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 16-25호, 2016.
- 이형중. “파리협정 발효, 그리고 대응과제.” 『전기저널』. 통권 제481호, 2017.
- 이효정. “식량 손실과 낭비 감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SDGs 12) 달성.” 『Sectoral Issue Report』. 2017-3호, 2017.
-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기업 관리 방식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1호, 2019.

- _____. “김정은 정권의 첨단기술개발구 추진실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3호, 2019.
- 정유석. “VNR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SDGs 현황.” 『Weekly IBL 경제브리프』. 제781호, 2021.
- 정정현. “북한의 협동농장 생산체제에 있어 분조관리제의 변화와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협동조합경영연구』. 제48호, 2018.
- 정형근·김지연·이중운·홍익표.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 『KIEP 브리핑』. 제11권 21호, 2011.
- 정창현. “김정은 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통일인문학』. 제77집, 2019.
- 최규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북한연구학회보』. 제24권 1호, 2020.
- 최선경. “북한 주민의 휴대폰 사용과 시장 활동에서의 ‘신뢰’ 네트워크.” 『현대북한연구』. 제24권 1호, 2021.
- 최용호.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KREI 현안분석』. 제83호,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 최은주.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세종정책브리프』. 2021-04호, 2021.
- 최장은. “우리나라의 산·재생에너지 보급 실태와 향후대책.” 『전기저널』. 통권 제330호, 2004.
- 최현아. “남북한 산림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사회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도하 개발재원 평가회의의 결과: 몬테레이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개발재원 관련 후속 국제회의.” 『국제개발협력』. 제4권 1호, 2009.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Special Issues』 제74-2호, 2012.

홍문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역량개발의 전략모색.” 『국제개발 협력』. 제10권 3호, 2015.

홍은경. “SDGs 최종 지표 내용과 이행의 실제: 환경보호.” 『국제개발 협력』. 제11권 2호, 2016.

황수환. “자연재해 대응 관련 북한의 정책과 법·조직체계.”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2017.

Dabla-Norris, Era, Kalpana Kochhar, Nujin Suphaphiphat, Frantisek Ricka, and Evridiki Tsounta,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taff Discussion Notes*, No. 15/13, 2015.

3. 기타 자료

언론·인터넷

『로동신문』.

『연합뉴스』.

『전기신문』.

『프레시안』.

『VOA Korea』.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제노동기구(ILO) <<https://www.ilo.org>>.

국제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https://www.konetic.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법제처 <<https://www.moleg.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유네스코 <<https://www.unesco.or.kr>>.
유엔글로벌콤팩트 <<http://unglobalcompact.kr>>.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환경부 <<https://www.me.go.kr>>.
KDB미래전략연구소 <<https://rd.kdb.co.kr>>.
NASA <<https://www.nasa.gov>>.
Enerdata <<https://yearbook.enerdata.co.kr>>.
FAO <<http://www.fao.org>>.
Fragile States Index <<https://fragilestatesindex.org>>.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ttps://www.ipcc.ch>>.
IRENA <<http://irena.org>>.
OECD <<https://www.oecd.org>>.
ReliefWeb <<https://reliefweb.int>>.
The Fund for Peace <<https://fragilestatesindex.org>>.
Sustainable Energy for All <<https://www.sefotall.org>>.
The SDG Index & Dashboards <<https://www.dashboards.sdgindex.org>>.
Tracking SDG7 <<https://trackingsdg7.esmap.org/>>.
UN <<https://www.un.org>>.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
UN DPR Korea <<https://dprkorea.un.org>>.
UN-Habitat <<https://unhabitat.org>>.
UN SDG Country Profile <<https://country-profiles.unstatshub.org/prk>>.

UN SDGs <<https://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
UN Statistics Division <<https://unstats.un.org>>.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
UNECE <<https://unece.org>>.
UNESCO <<https://en.unesco.org>>.
UNEP <<https://www.unep.org>>.
UNEP 한국협회 <<https://www.unep.or.kr>>.
UNICEF <<https://www.unicef.org>>.
UNWTO <<https://unwto.org>>.
World Bank <<https://worldbank.org>>.

국제규약 및 법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

유엔 문서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June 2021.
UN Country Team in DPRK, “Strategic 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7–2021.” 2016.12.20.

UN Doc. A/HRC/42/10 (25 June 2019).
UN Doc. A/HRC/WG.6/33/PRK/1 (20 February 2019).
UN Doc. A/HRC/WG.6/33/PRK/2 (26 February 2019).
UN Doc. A/RES/70/1 (25 September 2015).
UN Doc. A/RES/75/190 (28 December 2020).
UN Doc. CRC/C/PRK/CO/5 (29 September 2017).
UN Doc. E/2020/57 (28 April 2020).
UN Doc. E/2021/58 (30 April 2021).

기타

기획재정부·외교부. “취약국 지원 전략.” 2017.6.3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 2021.
외교부. “제3차 개발재원개최 보도자료.” 2015.7.9.
정구연. “SDG와 대북 개발협력 전망.” 통일연구원 서면자문, 2021.7.1.
최규빈·홍제환. “북한의 SDGs 이행 동향: ‘자발적 국별 리뷰(VNR)’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KINU Online Series CO 21-22, 2021.7.20.
통계청 보도자료. “2020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2021.2.26.
통일부 보도자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UNESCAP의 「지속가능 발전 역량지원사업」 기금 지원(안) 의결.” 2020.5.27.
IFRC. “DPR Korea: Drought and Food Insecurity.” 2019.
IPCC Working Group 1. “Climate Change: The Physical Science Basis.” 2021.
Sangmin Nam, “SDGs Implementation in DPRK,” North-East Asian Multistakeholder Forum, October 15~16, 2019.
WMO·UNEP. 기상청 역.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2015.5.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보고서

2019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9-01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 미국의 적대국 관계정상화 사례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이기태 외	8,000원
2019-02	남북관계 2023: 도전요인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김갑식 외	17,500원
2019-03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	도경욱, 안준형	8,500원
2019-0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이재영, 김주리	8,000원
2019-05	화해협력 이론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서보혁 외	12,000원
2019-0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중협력방안	이재영 외	11,500원
2019-07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과 젠더정치	조정아 외	11,000원
2019-08	북한 변화의 변수와 경로: '핵문제'와 '개혁·개방'의 조합을 중심으로	박영자 외	11,000원
2019-09	남북연합 연구: 이론적 논의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무철 외	15,000원
2019-10	뉴노멀시대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대북·통일전략	신중호 외	18,000원
2019-11	남북한 인도협력 방안과 과제: 인도·개발·평화의 트리플 넥서스	홍석훈 외	9,000원
2019-12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류거버넌스 구축방안: 체육교류를 중심으로	이우태 외	9,000원
2019-13	분권형 대북정책 추진 전략과 실천과제: 대북교류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나용우 외	10,000원
2019-14	북한 외교정책: 정책패턴과 북핵외교 사례분석	김진하 외	10,000원
2019-15	김정은 정권 핵심집단 구성과 권력 동학	오경섭 외	9,500원
2019-16	북한이탈주민 가치적응 실태연구: 지역사회통합 중심으로	김수경 외	7,500원
2019-17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개선과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14,500원
2019-18	남북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의 신변안전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사접견 기능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9-19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대북 정책	이상신 외	24,000원
2019-20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 총론: 평화·경제·화해 협력 구상	서보혁	10,000원
2019-21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쟁점과 이행방안	서보혁 외	14,000원
2019-22	2019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9-22-01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8,500원
2019-22-02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4,500원
2019-23	평화교육의 실태와 쟁점: 통일교육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조정아 외	12,000원
2019-24	북한 실태 연구: 도시경제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홍 민 외	10,500원
2019-25	김정은 시대 서부 주요 도시의 기업현황 및 가동률 결정요인 분석	정은외	14,000원
2019-26	남북경협 발전 잠재력과 정책 과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19-27	한반도 평화·변영 실현을 위한 국경 협력	현승수 외	14,000원
2019-28	한반도 접경국과의 초국경 관광·교통 협력	최장호 외	10,000원
2019-29	주변국의 사이버 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채재병 외	8,500원
2019	제3세대 인권과 북한	인도협력연구실	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9-01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	김상기 외	
2019-02	국제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신남방정책	이기태, 배정호	
2019-03	국제 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김석진, 홍제환	
2019-04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가 한국인의 주요 인접국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신 외

<Study Series>

2019-01	North Koreans' Current Living Conditions Based on UNICEF Survey Results: With a Focus on the Status of Infant Nutrition	Hong, Jea Hwan	
2019-02	The Impact of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Do, Kyung-ok · Baek, Sangme	
2019-03	South Koreans' Perception on Peace: With a Focus on Peace, War, the Way Peace is Realized, and the Attitude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	Kim, Kap-Sik · Park, Juhwa	

2020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0-01	평화경제 실현방안: 국제협력을 중심으로	김석진, 홍제환	10,000원
2020-02	남북한 주민 왕래 및 이주와 혼인에 관한 법적 연구	이규창, 문선혜	10,000원
2020-03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김수암 외	9,000원
2020-04	평화-인권-발전의 트리아앵글: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홍석훈 외	11,000원
2020-05	중·러 협력과 한반도 평화·변영	현승수 외	11,500원
2020-06	한반도 평화변영과 북일관계 연구	이기태 외	8,000원

2020-07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외	8,500원
2020-08	남북기본합정 체결방향과 과제	도경옥 외	9,000원
2020-09	남북연합 구상과 추진방안	이무철 외	11,000원
2020-10	새로운 한반도 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김갑식 외	13,000원
2020-11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박주화 외	12,500원
2020-12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성윤 외	15,500원
2020-13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정은이 외	11,000원
2020-1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나용우 외	14,500원
2020-15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나용우 외	17,500원
2020-16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4,500원
2020-16-01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분석	박주화	16,500원
2020-16-02	2020 한국인의 평화의식: 문항별 테이블	박주화	16,500원
2020-17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주화 외	12,500원
2020-18	평화경제의 비전과 추진방향: 남북 육상·해양협력을 중심으로	서보혁 외	20,000원
2020-19	국제 평화경제 사례와 한반도	조한범 외	11,500원
2020-20	북한의 발전전략과 평화경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홍민 외	18,000원
2020-21	강대국 경쟁과 관련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000원
2020-22	북한의 인구변동: 추세, 결정요인 및 전망	홍제환 외	14,000원
2020-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인구구조 변화 연구	최창호 외	7,000원
2020-24	'지식경제시대' 북한의 대학과 고등교육	조정아 외	13,000원
2020-25	KINU 통일외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이상신 외	24,500원
2020-26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 변화: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오경섭 외	14,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01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인도협력	이규창 외
2020-02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분석과 국내외 정책 전망	민태은 외

〈Study Series〉

2020-01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Legal Issues and Challenges Do, Kyung-ok·Ahn, Jun-hyeong
2020-02	Variables and Pathways of Changes in North Korea: Focused on Different Combination of 'Nuclear Issues' and 'Reform·Opening' Park, Young-Ja·Jeong, Eun Mee·Han, Ki Bum
2020-03	Daily Lives of North Korean Women and Gender Politics Cho, Jeong-ah·Yee, Ji Sun·Yi, Hee Young
2020-04	2019 Annual Reports of Attitude of Koreans toward Peace and Reconciliation Park, Juhwa et al.

2021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21-01 남북 민생협력의 효율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사업기획 및 성과관리	김석진·홍제환 8,000원
2021-02 북한의 사회불평등 연구: 건강 및 교육 불평등과 인권	최규빈 외 9,000원
2021-03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이지순 외 9,000원
2021-04 남북 지식협력: 현황 및 추진방향	김수암 외 9,500원
2021-05 유네스코 공동등재를 활용한 남북 문화유산협력	이우태 외 11,000원
2021-06 미국의 평화정책과 전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미관계	민태은 외 10,000원
2021-07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개선방안: 주변 4국을 중심으로	전병곤 외 14,500원
2021-08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비전통 안보 협력	이재영 외 11,500원
2021-09 국제협력 성패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연구	정성윤 10,500원
2021-10 북한의 정보화와 주민생활 변화	정은미 외 10,500원
2021-11 김정은 지배체제 구축과 권력 안정화	오경섭 외 10,500원
2021-12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김진하 외 18,000원
2021-13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홍제환·김석진 10,000원
2021-14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정책: 복지와 통제를 중심으로	정은미 외 9,500원
2021-15 KINU 통일외식조사 2021: 통일·북한 인식의 새로운 접근	이상신 외 22,500원
2021-16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	황수환 외 16,000원
2021-17 남북 재해재난 공동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추진방향	나용우 외 16,500원
2021-18 남북 접경지역 재해·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재전이공간(TSDP)' 조성방안 기본 연구	김형수 외 9,500원
2021-19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 여성과 섹슈얼리티	박영자 외 13,500원
2021-20 북한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II: 모성과 양육	이윤진 외 11,000원
2021-21 평화의 인권·발전 효과와 한반도	서보혁 외 11,000원
2021-2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신종호 외 23,500원
2021-23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주변국 협력 방안	이기태 외 13,000원
2021-24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민국 협력 방안	최희식 외 11,000원
2021-25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	박은주 외 19,000원
2021-26 북한발전모델과 한반도 컨센서스	이재영 외 23,000원
2021-27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 정착	장철운 외 14,000원
2021-28 한반도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방향 모색	최지영 외 16,500원
2021-29 북한 일상생활 공동체의 변화	최지영 외 12,000원
2021-30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김갑식 외 12,000원
2021-31-01 평화공감대 확산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박주화 외 10,000원
2021-31-02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박주화 외 11,500원

2021-32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이무철 외 14,000원
2021-33	한반도 신경제구상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정은이 외 14,000원
2021-34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근미래 전략과 주요사업 추진방안	조한범 외 16,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21-01	2020년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이상신 외
---------	--------------------------------	-------

<Study Series>

2021-01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uk-Jin Kim
2021-02	North Korea's Income-Population Puzzle	Jea Hwan Hong · Suk-Jin Kim
2021-03	North Korea's College and University and Higher Education System in an 'Era of Knowledge Economy'	Jeong-ah Cho · Choon Geun Lee · Hyun-suk Oum
2021-04	A Study on the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	Soo-Am Kim et al.

KINU Insight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1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19-02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정은미
2019-03	미국의 INF조약 탈퇴 의미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	김주리
2019-0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이지순
2019-05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북한에 주는 함의	이재영
2019-06	한반도 국제정세의 역동성과 한국의 대응 방향	서보혁
2019-07	신한반도 체제 구상의 이해	조한범
2019-08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김갑식 외
2020-01	북한의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2020-02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장철운
2020-03	미국의 對北성공 관계정상화 프로세스와 대북정책	김유철
2020-04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북중무역 감소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최지영
2021-01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홍 민 외
2021-02	김정은 시대 주요 전략·정책용어 분석	홍 민 외
2021-03	2014~2020년 북한시장의 소비자물가 및 환율 변동: 추세, 특징, 시사점	최지영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한동호 외	24,000원
북한인권백서 2019	김수경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9	김수경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20	이규창 외	21,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0	이규창 외	27,000원
북한인권백서 2021	오경섭 외	21,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오경섭 외	27,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8	2019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19	2020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0	2021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2021	2022 한반도 정세 전망	통일연구원

정기간행물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1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1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8권 2호 (201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8, No. 2 (201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1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9권 2호 (202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9, No. 2 (202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30권 2호 (202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30, No. 2 (2021)	10,000원

기타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화, 윤혜령 53,500원
2018	북한의 건강권	이금순 외
2018	The Right to Health in North Korea	Lee, Keumsoon et al.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디렉토리	김진하 외
2020	동서 화해사상으로 본 통일공동체의 상과 과제	김범수 외
2020	DMZ 접경지역의 비평화 실태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전략촌을 중심으로	정근식 외
2021	국제 평화문서 번역집	서보현·옹혜민 엮음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3,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준비를 위한 북한의 SDGs 소개와 지표분석